발표자료집

2022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1.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22. 9. 14.(수) - 9.15.(목) | 그랜드 하얏트 서울

14. (Mi.) - 15. (Do.) September 2022 | Grand Hyatt Seoul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Bundeskanzleramt

2022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1.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Bundeskanzleramt

행사개요

Tagungsübersicht

2022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1.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일시 DATUM	2022. 9.14.(수) - 9.15.(목) 14. (Mi.) - 15. (Do.) September 2022
장소 TAGUNGSORT	그랜드 하얏트 서울 Grand Hyatt Seoul
주최 GASTGEBER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Bundeskanzleramt

일정

일정	시 간	구 분	세부 내용
9.14 (수)	09:00-09:30	개회식	개회사	김기웅 차관 환영사	슈나이더 차관 축 사	미하엘 라이펜쉬툴 주한 독일대사
	09:30-11:00	SESSION 1.	최근 정세 발표
		1-1.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신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 김준표 통일정책협력관
		1-2.	· 독일통일 현황 보고 | 마티하스 플라첵 前브란덴부르크주 총리
	14:00-17:00	SESSION 2.	동독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2-1.	· 짤츠기터기록보존소의 과제와 역할 | 한스-요하임 로헨 前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 근무
		2-2.	·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과제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00-21:00	만찬	슈나이더 차관 답례 만찬
9.15 (목)	09:00-13:00	SESSION 3.	분단시기 체육 교류
		3-1.	· 동서독 스포츠교류 현황 | 베르노 바로 포츠담대학 교수
		3-2.	·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 성문정 前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ESSION 4.	통일 후 체육정책 통합
		4-1.	· 동서독 체육정책 전환 및 통합 | 라이너 힙 前 바덴-비텐베르크주 체육연맹 대표
		4-2.	· 통일과정에서 체육정책 추진 방향 |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14:30-16:00	SESSION 5.	통일문제 관련 한독간 문화교류
		5-1.	· 동서독 문화교류 | 기테 조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
		5-2.	· 남북 문화교류 |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19:00-21:00	만찬	김기웅 차관 환송 만찬

* 한-독 동시통역

Tagesordnung

Datum und Uhrzeit		Inhalt
14. 09. (Mi.)	09:00–09:30	**Eröffnung** Eröffnungsworte I **Kim Ki Woong,** Vizevereinigungsminister Grußworte I **Carsten Schneider,** Staatsminister beim Bundeskanzler Glückwunschrede I **Michael Robert Reiffenstuel,** Deutscher Botschafter in Südkorea
	09:30–11:00	**Session 1 : Aktuelle Entwicklungen*** **1-1.** (Kr)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Richtung der Nordkorea-Politik der neuen Regierung I **Kim Jun Pyo,** Referent für politische Zusammenarbeit beim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1-2.** (De) Überblick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I **Matthias Platzeck,** ehem. Ministerpräsident Brandenburg
	14:00–17:00	**Session 2 :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der DDR und Nordkorea*** **2-1.** (De) Aufgaben und Roll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I **Hans-Hermann Lochen,** ehem. Oberregierungsrat in der Ständigen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DDR **2-2.** (K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Nordkorea und Politik der neuen Regierung zu den Menschenrechten im Norden I **Lee Kyu Chang,** leitende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19:00–21:00	Abendessen auf Einladung des Staatsministers Carsten Schneider
15. 09. (Do.)	09:00–10:30	**Session 3 : Sportaustausch während Teilung*** **3-1.** (De) Stand der innerdeutschen Sportbeziehungen I **Berno Bahro,** Mitarbeiter am Lehrstuhl Trainings-und Bewegungswissenschaft **3-2.** (Kr)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I **Seong Mun Jeong,** ehem. leitender Wissenschaftler am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0:30–12:00	**Session 4 : Sportpolitische Integration nach Wiedervereinigung** **4-1.** (De) Transformations-und Vereinigungsprozess der Sportpolitik in der BRD und DDR I **Rainer Hipp,** ehem. Hauptgeschäftsführer des Landessportverbandes Baden-Württemberg **4-2.** (Kr) Richtung der Sportpolitik im Vereinigungsprozess I **Kim Dong Sun,** Professor bei der Abteilung Sportwissenschaft an der Kyonggi University
	14:30–16:00	**Session 5 : Deutsch-Koreanischer Kulturaustausch zu Wiedervereinigungsfragen*** **5-1.** (De) Innerdeutscher Kulturaustausch I **Gitte Zschoch,** Generalsekretärin des ifa **5-2.** (Kr) Interkoreanischer Kulturaustausch I **Park Carey,** Professor am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19:00–21:00	Abschiedsessen auf Einladung des Vizevereinigungsministers Kim Ki Woong

* Deutsch-Koreanisch mit Simultanübersetzung

목차

SESSION 1 I 최근 정세 발표

SESSION 1-1 ·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신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10
| 김준표 통일정책협력관

SESSION 1-2 · 독일통일 현황 보고 34
| 마티하스 플라첵 前브란덴부르크주 총리

SESSION 2 I 동독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SESSION 2-1 · 짤츠기터기록보존소의 과제와 역할 40
| 한스-요하임 로헨 前 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 근무

SESSION 2-2 ·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과제 50
|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SSION 3 I 분단시기 체육 교류

SESSION 3-1 · 동서독 스포츠교류 현황 62
| 베르노 바로 포츠담대학 교수

SESSION 3-2 ·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74
| 성문정 前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ESSION 4 I 통일 후 체육정책 통합

SESSION 4-1 · 동서독 체육정책 전환 및 통합 90
| 라이너 힙 前 바덴-비텐베르크주 체육연맹 대표

SESSION 4-2 · 통일과정에서 체육정책 추진 방향 98
|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SESSION 5 I 통일문제 관련 한독간 문화교류

SESSION 5-1 · 동서독 문화교류 112
| 기테 조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

SESSION 5-2 · 남북 문화교류 122
|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INDEXIERUNG

SESSION 1 | Aktuelle Entwicklungen

1-1. (Kr)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Rich ung der Nordkorea-Politik der neuen Regierung 132
| Kim Jun Pyo, Referent für politische Zusammenarbeit beim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1-2. (De) Überblick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160
| Matthias Platzeck, ehem. Ministerpräsident Brandenburg

SESSION 2 |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der DDR und Nordkorea

2-1. (De) Aufgaben und Roll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170
| Hans-Hermann Lochen, ehem. Oberregierungsrat in der Ständigen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DDR

2-2. (K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Nordkorea und Politik der neuen Regierung zu den Menschenrechten im Norden 186
| Lee Kyu Chang, leitende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SSION 3 | Sportaustausch während Teilung

3-1. (De) Stand der innerdeutschen Sportbeziehungen 204
| Berno Bahro, Mitarbeiter am Lehrstuhl Trainings-und Bewegungswis senschaft

3-2. (Kr)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216
| Seong Mun Jeong, ehem. leitender Wissenschaftler am Korea Instit Institute of Sport Science

SESSION 4 | Sportpolitische Integration nach Wiedervereinigung

4-1. (De)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prozess der Sportpolitik in der BRD und DDR..... 232
| Rainer Hipp, ehem. Hauptgeschäftsführer des Landessportverbandes Baden-Württemberg

4-2. (Kr) Richtung der Sportpolitik im Vereinigungsprozess 244
| Kim Dong Sun, Professor bei der Abteilung Sportwissenschaft an der Kyonggi University

SESSION 5 | Deutsch-Koreanischer Kulturaustausch zu Wiedervereinigungsfragen

5-1. (De) Innerdeutscher Kulturaustausch..... 256
| Gitte Zschoch, Generalsekretärin des i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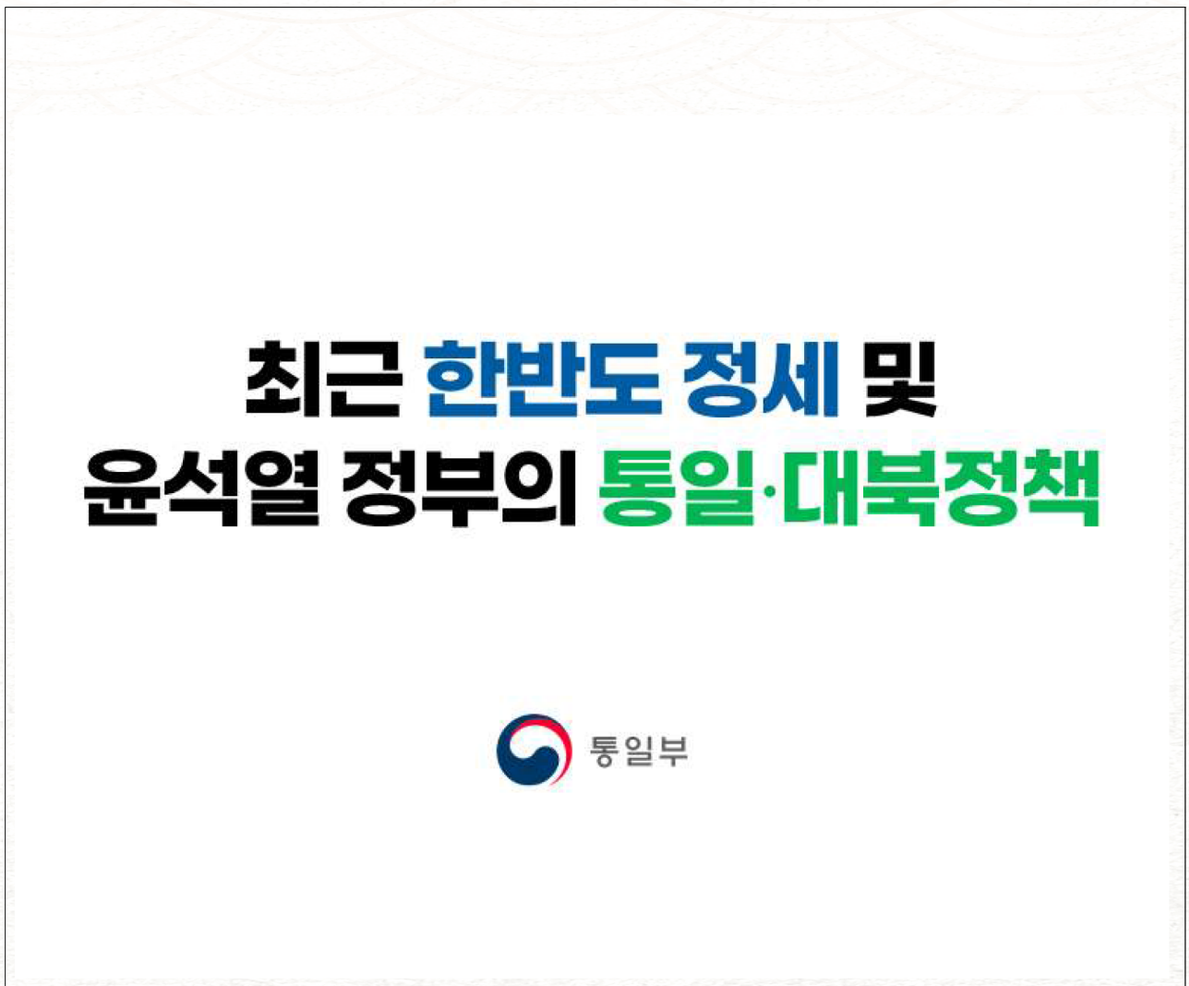
5-2. (Kr) Interkoreanischer Kulturaustausch..... 270
| Park Carey, Professor am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SESSION 1 I 최근 정세 발표

SESSION 1-1.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신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준표 통일정책협력관



o 반갑습니다. **통일정책실장 김준표**입니다.

o 오늘 2022년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o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오신 카스텐 슈나이더 정무차관님을 비롯한 독일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이번 발표에서는 앞으로 5년 간 추진하게 될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사항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Ⅰ. 최근 한반도 정세
Ⅱ. 도전과 과제
Ⅲ.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o 먼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o 다음으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간략히 말씀드린 후

o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최근 한반도 정세

o 최근 **한반도 관련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❶ 한반도 관련 국제 정세

미중 전략경쟁 심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연대 강화	VS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 질서 재편 추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블록화 경향 확산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

-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



4

o 최근 국제정세의 핵심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그에 따른 경제·보건·기후 등 **비전통적 위협의 증가입니다.**

o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중억제**를 행동으로 **본격화**한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 진영 간 연대**를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o 한편, **중국은** 경제성장과 AIIB, '일대일로' 전략 등
중국 중심의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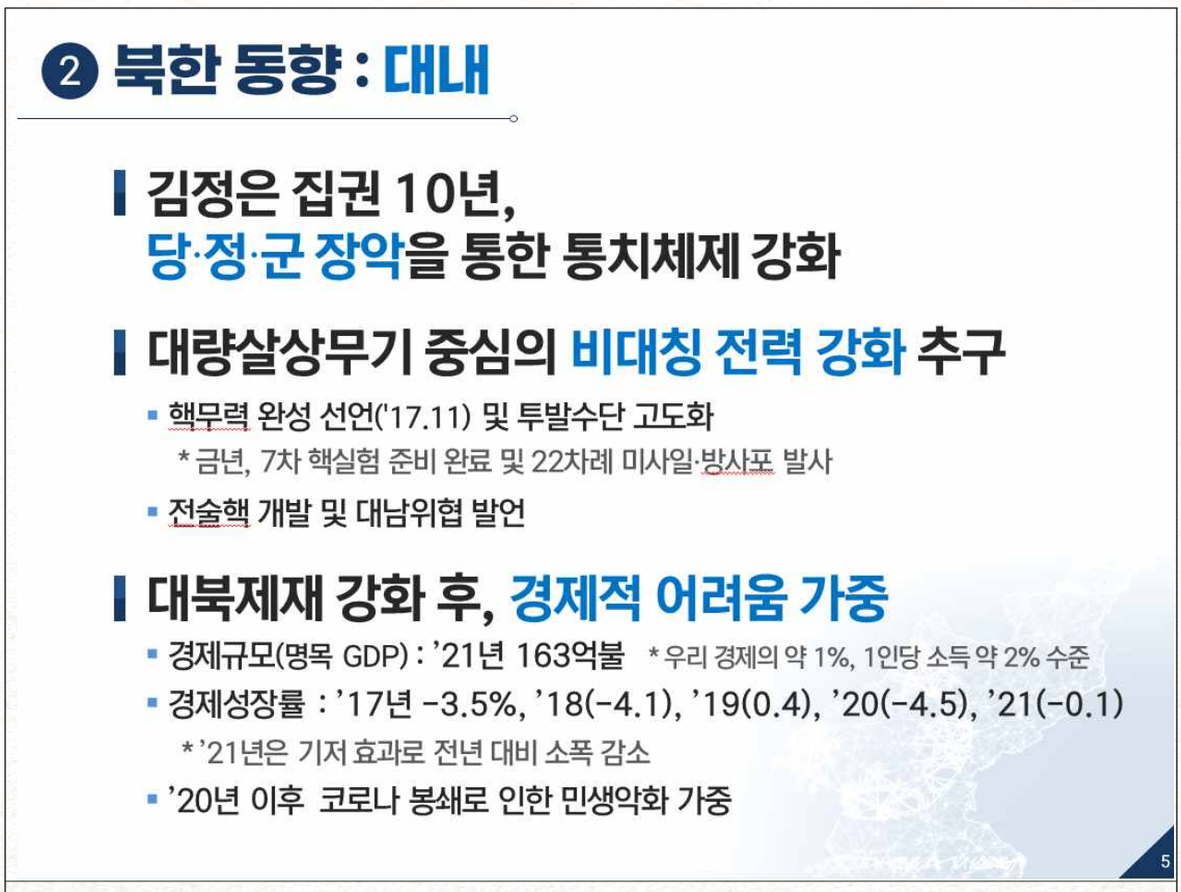
* (덩샤오핑)도광양회(韜光養晦)→(장쩌민)유소작위(有所作爲)→(후진타오)화평굴기(和平崛起)→(시진핑) 신형 대국관계

o 이에 더해,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중심의 블록화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위협 이외의 감염병, 경제안보(공급망 재편 등),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구조적 변수들은, 발전적 남북관계를 이끌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고 전략적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아직 방향성은 불분명하지만,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o 다음으로, **북한 정세를 대내 부문과 대외 및 대남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o 우선 북한 정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10년동안 **당·정·군을 나름대로 장악**해 나가면서
자신의 **통치체제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 초기에는 **장성택의 숙청**과 같은 방식으로 통제력을 높였으나,
최근에는 **공식기구를 통해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지난 6.8~10. 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회의 전원회의에서와 같이
당의 **주요보직을 자주 교체**(문책성 인사 등)하고 있습니다.

- 이는 **대내 장악력을 강화**하고 **내부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o 다음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군사** 부문입니다.

-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총 6차례의 북한 핵실험 중 **4차례가 김정은 집권기**에 이뤄졌습니다.

- **'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탄도미사일의 다종화 및 소형화를 통해 **핵전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핵무력 사용 가능성과 전술핵 운용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금년도만 보아도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16회, 순항미사일 2회, 방사포 4회 등 **20여회**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도 **7차 핵실험의 기술적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로 평가됩니다.

- 특히, 북한이 전술핵을 개발하고 대남위협 발언 등을 하는 것은 **북한핵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며 우리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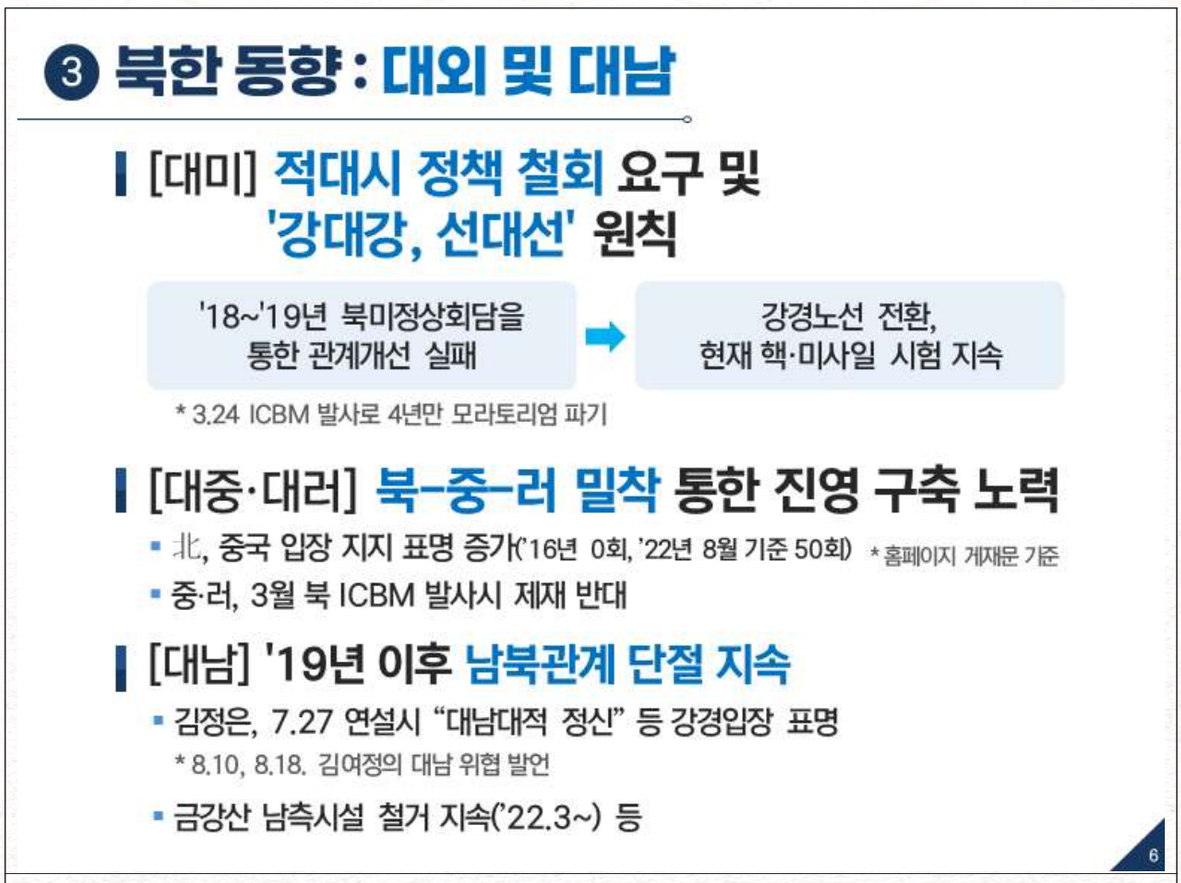
o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입니다.

- '21년 기준 북한의 총 경제규모는 약 **163억달러* 수준**(1인당 GDP는 637달러)으로,
  같은 해 **우리나라 경제규모**(16,465억달러)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치**입니다.

  * 출어 : '21년 UN 통계

-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집권 초기 1%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다,
  대북제재로 '17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 '17년 이후 강화된 **제재의 효과**가 누적되고, 최근 2~3년간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로 대외 무역이 급감하면서 **원부자재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올해는 **내부 봉쇄**까지 겹쳐,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 다음은 북한의 **대외·대남 부문**입니다.

o 북한은 '핵무력 완성' 주장 후,
경제재건을 위해 대외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18.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듯했으나, '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무산 이후 다시 강경노선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및 '강대강, 선대선' 원칙 고수

o **중·러**와 관련해서는, 신냉전의 기류 속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하고자 **북-중-러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북한은 최근 외무성을 통해 중국, 러시아의 외교적 입자에 지지를 표명하고 고위급 축전 발송도 늘리고 있습니다.

- 또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노동자 파견** 동향 등이 보도되는 등 **중러 관계 강화 동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o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19.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도 단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한편, 새 정부 들어 **80일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북한은
  지난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발언을 하는 등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지난 **8월 10일**에 코로나 유입을 **우리의 전단 탓**으로 돌리면서 **보복위협**을 한 데 이어
  8월 18일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강경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o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 먼저, 현재 우리는
미·중·러 전략경쟁 등 국제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남북 간 적대적 분단 상태가 장기화되고 **고착화**될 우려 속에 놓여 있습니다.

-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은 핵개발과 다종의 미사일 역량을 지속 강화하며, **남북간 대결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① 첫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신뢰구축이 상호 선순환**을 이루어 **남북관계**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하겠습니다.

② 두 번째 정책적 도전과 과제는

- 북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접근**이 **강화**되면서, 그만큼 한반도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 공간이 축소**되고 있는 점입니다.

- 북핵문제 해결 등에 있어 미북 관계가 핵심적 축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북핵문제**를 **미북 간 협의 의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며 국제사회의 북핵 협상에만 맡겨 놓고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 **공고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조율**의 바탕 위에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③ 끝으로,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상황과
국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지속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o 통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통일 정책은 동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30세대 청년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o 이러한 정책적 고려 아래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토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o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유 및 인권**에 **기반한 연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 통일정책이 공고한 한미공조에 기반할 때,
북한에 대한 실효성도 높아지고 추동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한미동맹**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건설적인 대북협력 기반**을 제공합니다.

- 중국과도 대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 한미공조가 공고할 때,
중국도 북한문제에 대해서 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우리와 협력에 임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o 다음은 **대내적** 토대로서,
초당적 대북정책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관된 대북정책**이 매우 필요한데,

- 이는 우리 장관님이 자주 쓰는 표현인 **'이어달리기'**이기도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진보·보수의 이념적 구분을 넘어서,
원칙을 지키되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초당적 대북정책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o 이러한 **정책적 토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o 먼저,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

o 이를 구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정립하였는 바,

o 첫째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입니다.**

- 이는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입니다.

- 아울러, 이러한 억제 위에서,
  상호 불가침 및 비핵화,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o 둘째는,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 이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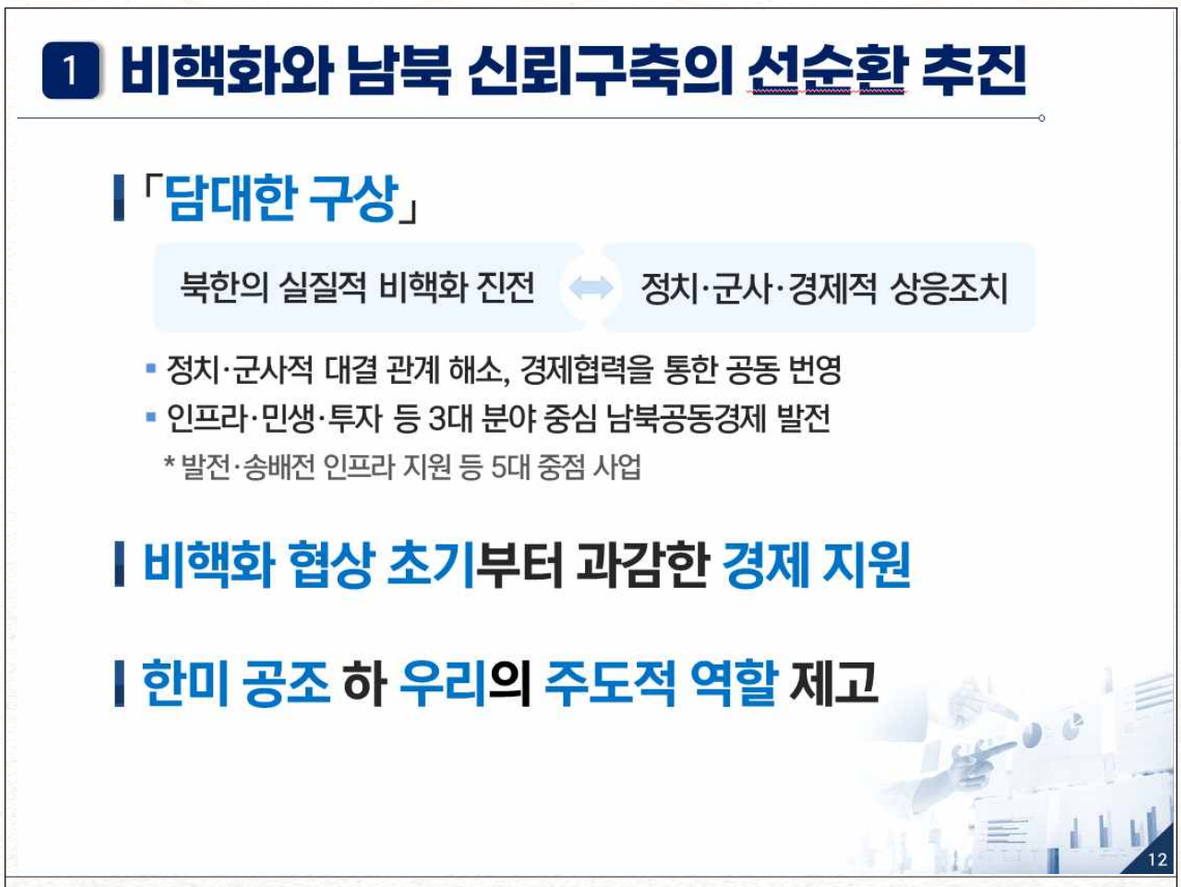
o 셋째는,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 이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입니다.

3.

o 정부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 하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첫째,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 둘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 넷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 다섯째,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입니다.



o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의 5대 핵심 과제에서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o 첫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정부는 **확고한 한미 동맹** 아래 **북한의 핵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지(deterrence)**하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셈법을 단념(dissuasion)**시키는 한편 **대화(dialogue)와 외교**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o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발표한 「**담대한 구상**」입니다.

- 「**담대한 구상**」은 **경제·정치·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총합적 계획**으로서 세 분야에 대해 **남북 및 유관국이 서로 논의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비핵화 과정 또한 동시적으로 합의하고,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플랜입니다..

- 「담대한 구상」에는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지 않는 **초기 단계에 가능한 사업**부터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추진하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의료·식수·산림 등의 민생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비핵화 협의 초기에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포괄적인 핵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인프라·민생·투자 등 3대 분야에서 **발전·송배전 인프라 등 5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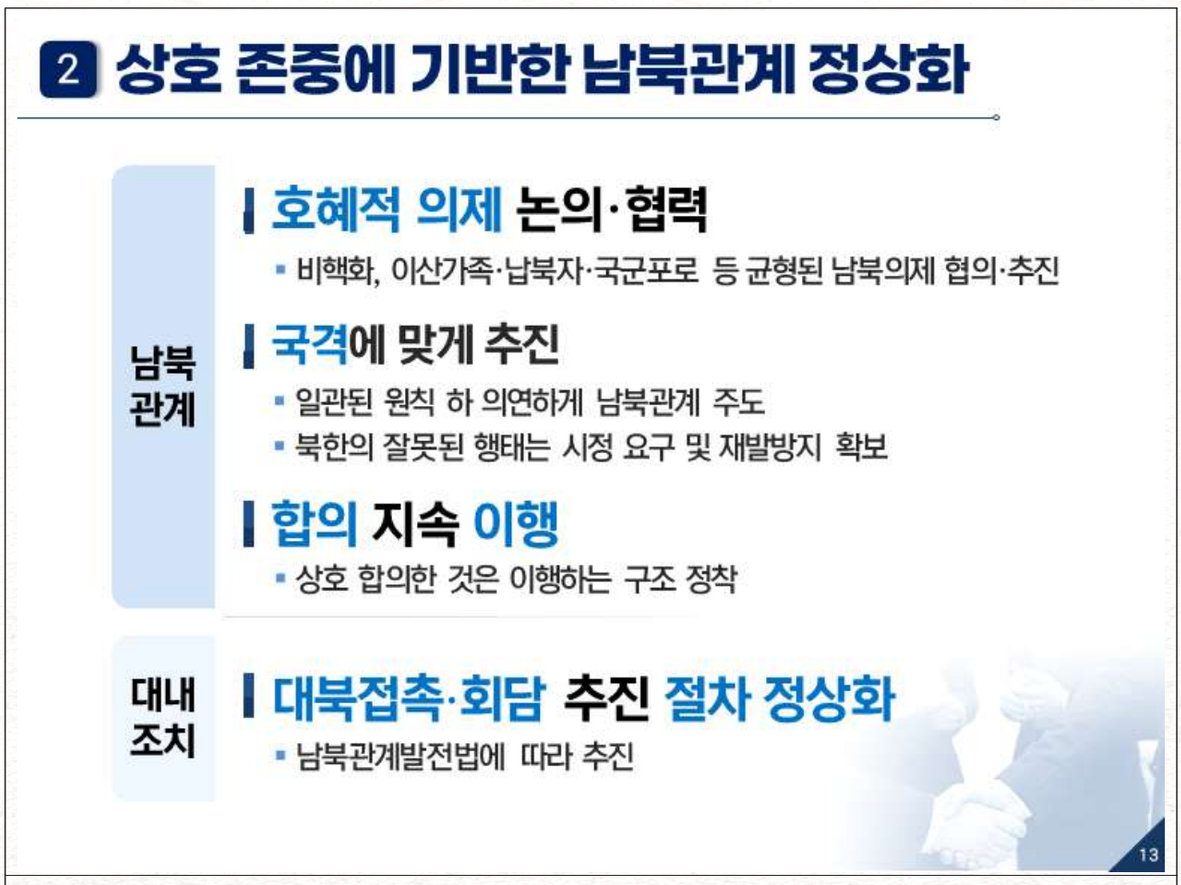
o 다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우리가 우선시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제발전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춰 제안했습니다

- 실제로는 **정치·군사 분야의 협력사항들도 모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대화가 시작되면, 세 분야의 계획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하나씩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o 아울러, **확고한 한미 공조** 아래,
우리는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담대하게 그 구상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o 한편, 지난 8.1. 북한 **김여정은 거친 언사를 동원한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고 폄하하며 **거부 입장**을 나타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의 길을 의연하고 일관되게 걸어감으로써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o 둘째,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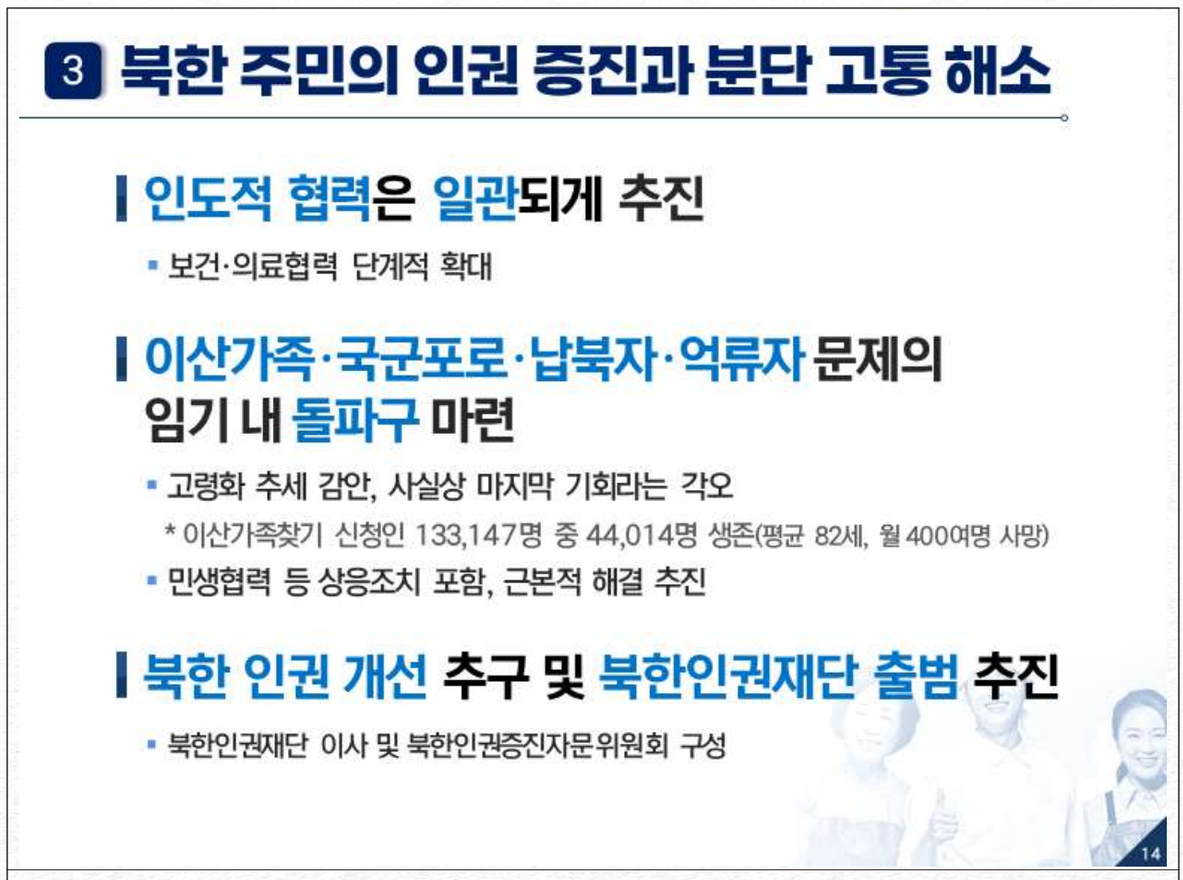
o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호혜성**'이란,
대화 재개 시 북한이 원하는 교류·지원 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교류협력, 인도지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의 의제를 호혜적으로 균형 되게 협의해 나가는 것이고

-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며,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는
일관된 원칙 아래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남북이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구현할 것입니다.

o 아울러,
대북접촉이나 남북회담도 **남북관계발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책임 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o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입니다.

o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o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이분들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인식 하에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북 보건의료·민생 협력 등의 상호조치를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o 또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여
금년 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o 넷째, **남북 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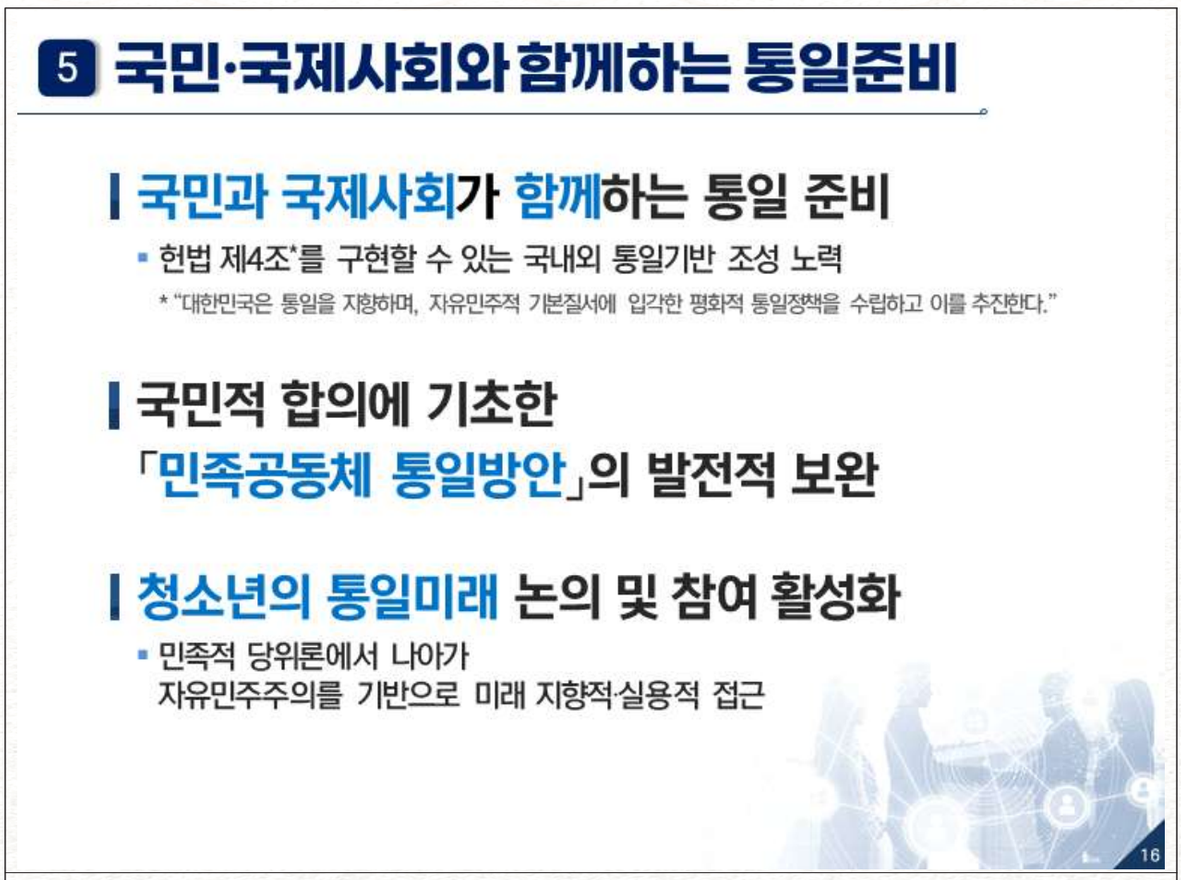
-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일관되게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o **소식을 전하는 사업(방송, 언론, 통신 등)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습니다.

o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마지막은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입니다.

o 그 핵심은

첫째, 1994년에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계승·발전시키는 방안,

둘째,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헌법 제3조 및 제4조를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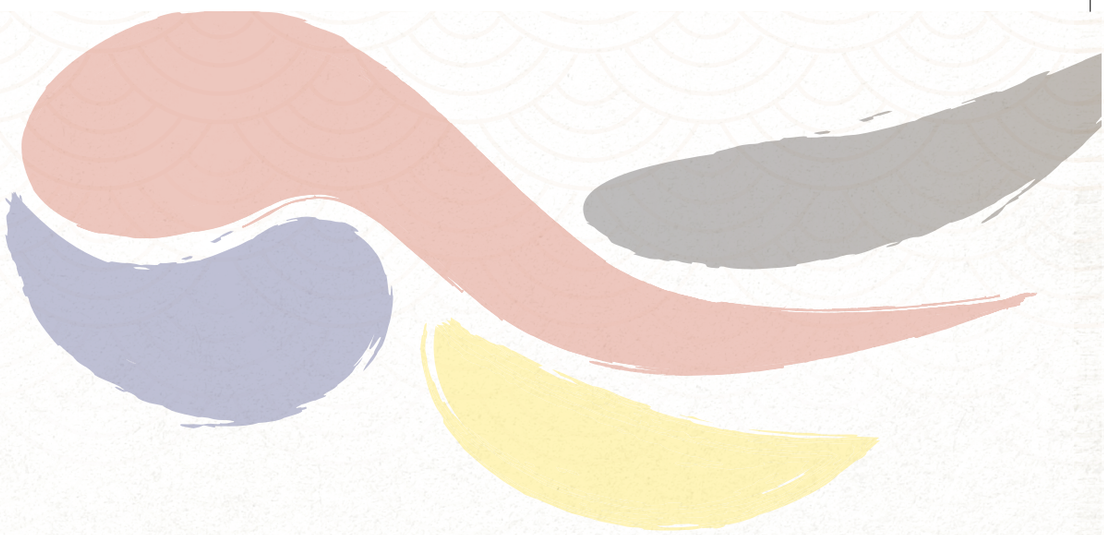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셋째, 대외적으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o 특히 **2030 미래세대 대상으로 통일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o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SESSION 1 I 최근 정세 발표

SESSION 1-2.

독일통일 현황 보고

마티하스 플라첵 前브란덴부르크주 총리

인사말,

독일 통일이 완성된 지 어느덧 32년이 흘러 한 세대도 더 지난 지금, 통일 과정의 현황을 제 관점에서 간략히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먼저 현 상황을 사실적인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구동독 연방주의 경제력은 현재 독일 전국 평균의 약 80%에 도달했고, 동독 일부에서 한때 20%가 넘던 실업률은 이제 모든 지역에서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규모의 테슬라 기가팩토리, 인텔 반도체 칩 공장, 유럽 최대 리튬 정제 공장, 대규모 배터리 제조사들의 공장이 동독 지역에 들어서는 등 최근에 있었던 여러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산업이 쇠퇴했던 지역 전반에 큰 추진력을 제공하고 인구변화 추세가 반전되는 데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미 경제적 수치뿐만 아니라 동독 지역의 분위기에서도 처음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예측 불가한 향후 흐름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올 헤아릴 수 없는 결과 또한 지금 싹트고 있는 낙관론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수치를 넘어 지난30년간의 사회적 과정, 예측 가능했거나 한편으로 예상치 못했던 발전 과정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던 연방정부의 '평화 혁명과 독일 통일 30년 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전환(통일) 과정의 경제적 측면 외에 문화, 정신, 정서적 측면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앞으로의 통합을 위한 54개의 권고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중요한 제안은 '독일 통일과 유럽의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 설립에 관한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는 독일과 유럽의 전환 과정에서 맞닥뜨릴 도전과제에 폭넓은 학제 간 역량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만남과 토론의 장이자 사회 전환 문제에 대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논의할 국제적 센터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권고안을 만들 당시, 독일 통일은 정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가령 기후변화나 그와 관련된 에너지 전환도 우리 삶에 적어도 그 정도의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길잡이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도전에 점점 더 많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더 잘 이해하고 꿰뚫을수록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바라건대 더 나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센터가 여러분께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미 부지선정 공모를 시작했으며, 곧 센터 구축팀이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을 분석하면서 전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적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90년 위대한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가 국가 개혁과 경제 개혁은 단 몇 년 만에 초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만 비바람에 견디는 민주주의를 위한 포괄적인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60여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냈고, 저 또한 그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언어도 같고, 역사도 대부분 같을뿐더러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 잘못될 것은 없으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역사 속에서 보면 짧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동서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양독 간 국경 체제가 엄격했음에도 친척들은 항상 서로 연락하며 지냈고, 서독 라디오와 TV 방송은 꽤 많은 동독 가정에서 일상생활의 일부였다는 점입니다.
30년 전, 결과적으로 운이 좋았던, 독일 통일과 유럽 내 철의 장막 붕괴를 가능케 한 여러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소련은 점점 경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소련군의 불명예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수로 인해 내부 사기가 붕괴하였으며, 소련 내 다른 국가 간 갈등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행히 이전 소련의 행보와 달리 저항하는 위성국가에 처음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서기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에서 수 년간 시민운동이 잇따랐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심지어 개혁 정치인들이 정권을 축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시민운동의 주요 주제는 인권존중, 평화유지, 환경보호 등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대부분의 동유럽 시민들에게 무의미하고 공허한 문구로 전락한 지 오래였지만, 정권들은 여전히 모든 권력 수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36년간 동독에서 살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인 '녹색 동맹(Grüne Liga)'을 창립했습니다. 1989년에는 구동독의 '중앙 원탁회의(Zentraler Runder Tisch)'에 참석했으며 1990년에는 한스 모드로 내각의 '국가적 책임 정부(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에서 장관직을 맡았습니다.
모드로 전 총리는 동독이 몰락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생각해 1990년 초에 이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구 권력의 기존 정부에 시민운동 대표 8명을 임명했고, 이들의 주요 임무는 동독 역사상 최초의 자유 선거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저희를 체포하려던 사람들과 갑자기 내각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다는 사실은 정말 특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 동독에서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불과 몇 년 후에 통일된 독일에서 살게 되리라 예측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모든 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러한 초기 조건을 고려한다면 많은 일이 결국에는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89/90년 평화혁명 당시 저희 원탁회의에서 가장 중요시한 점은 무력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력 금지'라는 핵심 모토를 실천하는 것은 사회 격변기에는 항상 민감한 사안이고 그 자체로 충분한 토론 거리가 될 정도입니다.
독일 통일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겨주며 진행되었기 때문에 청사진도 모방할 본보기도 없었습니다. 많은 영역에서 '시행착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일부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 측 위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 있으실 것으로 추측합니다.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영향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들입니다. 그러니 이것만 해도 이미 실질적인 전환 연구를 살짝 맛본 셈입니다. :-)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유 선거로 선출된 동독 최고인민회의에서, 이후에는 연방하원에서 어떻게 큰 혼란 없이 국민 경제를 통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에서 좋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는 '보상보다 반환 우선(Rückgabe vor Entschädigung)' 원칙이었습니다. 원소유자나 많은 경우 원소유자의 상속인들, 그중 일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서독이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사업체, 토지, 주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법정 소송과 투자 지연, 큰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습니다. 일례로 동독에서 수년 전 그들이 생각하기에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이제 그 집을 떠나야 했던 주택 소유자들 간 갈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독의 국영기업 관리를 넘겨받은 신탁관리청의 업무 원칙이었습니다. 이 '구조조정보다 사유화 우선(Privatisieren vor Sanieren)'의 기본원칙은 뒤늦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대 초반 동독의 산업 지형이 붕괴되었고,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붕괴는 경쟁력 부족과 소련 등 주요 시장의 몰락으로 인해 분명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방향을 보다 확실히 정했다면 붕괴를 완화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산업의 핵심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는 되살리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까지 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기본 뼈대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후 새로운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동독 산업의 이러한 붕괴는 동독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경험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정치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동독이 사라진 지금 동독의 정체성이 부활하는 이유로 보는 사회학자도 적지 않습니다. 폐업,

하염없는 대기 시간, 단기 노동, 실업, 미래 전망 부족 등은 동독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경험이었고, 친구나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몇 년 동안 빠지지 않는 이야깃거리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독 경제는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나마 동독의 꽤 많은 지역에서 개척하기 쉬운 새 판로를 찾은 덕에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교육을 잘 받은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전례 없이 동독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독과 전 세계로 갔고, 오직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문제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동독은 특히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독일의 다른 지역보다 전문 인력이 훨씬 부족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고령화된 사회는 더 대담하지 않으며 불안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적 속삭임에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측면입니다.
당시 우리는 사회 환경 전체가 하루아침에 급변하는 것이 개개인에게는 엄청난 도전 과제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두고 사계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졌다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습니다. 회사, 학교, 관청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던 규칙이 적용되었고, 기존의 친숙한 사회 기술들이 많은 경우 갑자기 그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급격한 경험 역시, 더 작고 사회정치적으로 뒤처진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크고 사실상 더 성공적인 사회로 갈 때 몇 가지 정신적 지지대를 주었다면 다소 완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진정으로 받아들여지고 포용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지대를 주었다면 말입니다.
공공 보육, 전일제 학교, 공중 보건의 조직 형태 등 동독에서는 일상이었던 구조적 요소들이 바로 그러한 지지대였습니다. 이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거추장스러운 짐을 벗겨보면 상당히 유용했고, 동독 주민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통일 독일에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느낌을 주었을 것입니다. 수년 후, 그중 많은 부분이 연방공화국에 도입되었지만, 그때는 더 이상 동독 주민이 기여한 것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오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왜 여기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독 출신 주민의 2/3가 2등 시민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훨씬 더 복잡한 이유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동독 사회의 상당 부분이 독일의 정치 사회 체제에 회의적이며, 극우 정당과 극우 운동은 서독보다 동독 지역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로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유럽의 전환을 위한 미래센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예상치 못했던 전개에 직면한 것은 우리 동독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국가인 폴란드와 헝가리의 정치 상황을 살펴

보면 그곳에서도 꽤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 정계에서 민족주의적 측면이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고, 헝가리 총리는 정치 목표로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추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영향력이 큰 사회 전환은 우리가 종종 예측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고려하지 못하는 여러 과정을 초래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 완전히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 얻은 깨달음은 다른 역사, 문화, 정신을 가진 사회에 선의라 하더라도 똑같은 미래 발전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들은 그 누구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모조품이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기를 원하며, 모방하면 불행해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고 지적합니다.
1990년 이후의 동유럽을 보며 발전 상황을 평가하려면 이러한 깨달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미래에도 필요할 발전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려 한다면 앞만 보고 달려서도 안 되고 희망적 사고도 제외한 채 이런 과정을 다뤄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계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영향을 받는 사회와의 긴밀하고 편견 없는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새로운 유형의 학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센터도 학문, 대화와 만남, 문화라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일 통일의 현황에 관한 몇 가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SSION2 I 동독과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SESSION2-1.

짤츠기터기록보존소의 과제와 역할

한스-요하임 로헨 前동베를린 서독상주대표부 근무

잘츠기터 소재 주 법무성의 중앙기록보존소

머리말

1950/60년대 독일의 정치적 관계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냉전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던 용어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독에서는 독일민주공화국(DDR)을 동부지역,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판코프 정부, 독일민주공화국의 서쪽경계선을 군사분계선 또는 지역경계선이라 표시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독일 국적법을 '서독 연방공화국의 단독 월권', 기민당(CDU) 정치가를 '본(Bonn)의 교황 전권론자' 등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동 종류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인용하거나 진술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덧붙여 1969년 가을부터 연방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Ⅰ. 중앙기록보존소 설립 전의 역사

1948년 초 반(反) 히틀러 연합이 최종 결렬된 후, 서독에서 동독 공산주의 통치하의 폭력행위 및 부당한 판결을 기록하고 문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당시 기대를 하였던 정치적 관계가 변화된 후 이를 벌하고 및 보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한 이니셔티브는 개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나왔습니다. 정당의 동독사무소, 개신교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업단, 카톨릭 카리타스 협회, 독일 적십자사와 같은 여러 기관 외에도 다수의 민간 단체 및 기구가 독일 내 다른 한쪽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대부분 정치범들의 운명을 확인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정당과 국가기구의 행위자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뒤따랐습니다.

이 정보를 가능한 한 완전하게 수집하고, 색인카드 및 문서에 체계화하여 평가하고 실제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히 두 곳에서 책무로 삼았습니다 이 두 곳이 기록보존소의 전신이며,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 자유 법률가 조사위원회

1949년 10월 동독이 국가를 설립함과 거의 동시에 베를린의 서쪽 지역에 '자유 법률가 조사위원회(UfJ)'가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동독에서 이주한 법률가로 구성된 민간 연합으로 동독 주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법치국가적 원칙을 이해시키고, 소련 점령군 및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책임하에 행해지는 불법 조치를 '자유 세계'에 밝히며 서독 관청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을 책무로 삼았습니다.

이후 10년 간 약 500,000명의 동독 및 동베를린 주민들이 제흘렌도르퍼 리마슈트라쎄 29에 위치한 자유 법률가 조사위원회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이 곳에서 민법, 노동법 및 형법 문제에 관한 무

료 상담 및 정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자유 법률가 조사위원회는 방문자들로부터 동독 및 동베를린 내 인권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불합치하는 행정절차 및 국가명령에 대한 내부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국가 및 당 간부들의 정보를 등록 및 색인카드에 포함시켰으며, 1961년 4월 색인카드에는 약 123,000개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 및 객관적 증인의 진술에 따라 법치국가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비난받는 형사 재판관, 검사, 교도관, 국가보안부 및 인민경찰의 구성원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향후 서독으로 도피할 경우, 그곳에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1969년 자유 법률가 조사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연방내독관계부 산하 연방기관인 전독연구소가 약 80명의 직원 중 일부 직원들과 광범위한 문서, 특히 수많은 참조사항이 기록된 이름색인카드를 인수했습니다.

2. 전독부 법률보호사무소

기존의 전독일문제성으로 명시되었던 관할국은 1950년대 초부터 서베를린에 이른바 '법률보호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이곳은 법률회사로 동독에서 정치적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소속 변호사들이 피의자에게 무료로 법률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사건을 의뢰받아 법률변호를 맡고, 형을 선고받은 후 사면청원을 신청할 지역담당 변호사도 고용하였습니다.

1963년 동독 검찰총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권을 위임받은 볼프강 포겔 동베를린 변호사는 법률보호사무소에 상당한 외화의 대가를 전제로 동독 형무소에 억류되어 있는 정치범의 석방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콘라드 아데나워(CDU, 기민당) 총리가 인도적 이유로 이 거래에 동의한 이후, 법률보호사무소는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12.000개 이상의 구금기록을 단시간 내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후 수감자 석방거래는 서베를린 및 동베를린의 변호사 사무실 두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1989년 가을까지 33.0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이 석방되었습니다. 동독은 대가로 약 35억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물자를 받았습니다.

1972년 법률보호사무소는 해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서베를린 법률사무소에서 석방거래 및 가족상봉, 동독 내 형사변호인 중개 및 동독 법과 관련된 민법사례를 위해 일했습니다. 노령연금수령자 또는 상이군인연금수급자로서 서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었던 동독 주민은 이 곳에서 정보, 조언 및 도움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Ⅱ. 잘츠기터 소재 주 법무성의 중앙기록보존소

1. 1961년 창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면서 다수의 동베를린 및 동독 주민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도주자들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다치면서, 서베를린 경찰은 단 몇 주 만

에 약 50건의 법률수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훗날 연방 총리이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빌리 브란트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 다른 주총리들에게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연방차원의 일관적이며(bundeseinheitlich) 포괄적인 형사 소추를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브란트가 1958년 루드비히스부르크에 설치된 '국가사회주의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한 중앙사법행정원'에 공산주의 책임하의 시행된 폭력조치 등록을 맡기고자 한 것은 냉전의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현재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이 해당 지역 및 동베를린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국가사회주의의 방법이 사실상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밝혔습니다.

1961년 10월 서독 법무장관회의는 '판코프 정권의 지지자와 부역자들의' 폭력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자는 브란트의 제안에 찬성으나 동독과 가장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니더작센 주에 위임하였으며 고유의 시설을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니더작센주 법무장관은 새로운 관청을 '잘츠기터 소재 주 법무성의 중앙기록보존소'로 명명하며 잘츠기터-바트 지방법원 부지에 설립하였습니다. 1961년 11월 24일 이곳에서 중앙기록보존소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 업무배치

검사가 기록보존소를 이끌어 나갔지만, 기록보존소의 초반 업무는 피고인을 직접 형사 소추가 아닌 내독 국경을 넘어 범죄행위를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앞서 체포되지 않은 피고인을 검거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중앙기록보존소는 예비수사기관으로서 사실을 수집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관계당국이 피고인을 형사 소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예비수사가 종결된 후 기록보존소가 시작할 권한이 없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해야만 하는 경우, 연방검찰총장을 통해 대법원이 결정하며, 대법원은 관할 지방법원 및 담당 검찰을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정의된 기록보존소의 예비수사 권한은 우선 서베를린 및 내독 국경 주변의 폭력행위로 제한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연방법무부의 발의로 서독법무장관회의는 기록보존소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이제 다음의 항목이 등록되어야 했습니다.

- 사회주의통일당의 정치적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 없이 인간존엄성을 경시한 명령 또는 허용된 살인, 신체상해 및 자유박탈
- 정치적 이유로 인권 및 법치국가의 원칙에 불합치하는 과도한 처벌을 내린 법원판결('테러 판결')
- 수사과정 또는 형사법적 수사를 핑계로 자행된 학대 또는 '동독의 정치적 폭력시스템의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형의 집행을 정지시킨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법적 근거

기록보존소의 관할 영역은 서독에서 범죄로 기소될 수 사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충족 여부는 지역 간 형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법 영역 내(예: 연방공화국의 연방주) 서로 다른 규정이 있으면 범행 장소의 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서독의 법 원칙(공서; ordre public))과 합치하지 않을 경우 동독에 비해 많이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우 동독 내에서 행해진, 체제에 동의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범행에는 서독의 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은, 서면상 명시된 난민에 대한 총격 명령은 출국금지 명령으로 작용하며 국가적 행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삶에 대한 기본권이 국경선 확보를 위한 규정보다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서독의 법 해석에 따르면 동독의 총격 명령이 피난민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독 국경선에서의 폭력 행위는 서독에서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되었으며 잘츠기터에서도 이에 상응하게 기록되었습니다.

1968년 연방 및 주 법무부 장관들은 폭력 행위라는 용어를 '미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살인 행위로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되거나 동독 정권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며 행해지고, 명령 또는 용인되는 행위'로 새롭게 최종적으로 정의 내렸습니다.

또 다른 범죄는 납치(제234a조)로 1951년 특정한 이유에서 형법에 포함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도 여전히 빈번했던 서독 및 서베를린인의 강제적인 동독 납치에 대해(총 약 400건) 1960년대에도 국가보위부에서 계획이 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는 실제로 기록보존소에서 더 이상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서독 형법 제241a조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혐의 역시 잘츠기터의 관할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1951년 개인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이 처벌 규정은 타인을 정치적 동기가 있는 박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밀고자에게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법치주의 원칙과 모순되고 폭력 및 독단적 조치로 확인된 모든 박해가 포함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기록보존소는 이 범죄와 관련해 약 3,000건을 등록했습니다.

1972년 12월 동서독 간 체결한 기본조약으로 인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동독의 불법 행위를 기록하는 일에 있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동서독은 주권을 각자의 영토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연방대법원은 서독사법부는 여전히 동독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보관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방 공화국의 법원은 해당 행위가 동독에서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 서독 형법에 따라 동독에서 저지른 범죄를 계속해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1968년 이후 법무부는 기록보존소의 관할영역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1973년 이후부터는 기본조약의 체결 내용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1975년 동독에서의 강제 입양 사례가 알려졌을 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사자들은 대부분 도피 준비 또는 도피 실패로 인해 체포된 부모를 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입양시켰으며 당에 충성하는 위탁 가정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접촉이 없던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기록보존소 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할 영역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을 했으나, 1976년 3월 서독법무장관회의는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통일 이

후 진행된 연구는 이러한 비극적인 개인의 운명을 더 이상 배상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정보의 출처

기록보존소는 다음의 합법적 출처만을 사용했습니다.

(1) 본부가 4대 국경수비특공대(해안, 북, 중, 남)로부터 접수하여 형법상 관련된 사건의 근거를 주의깊게 조사한 연방국경수비대의 일일 상황 보고서를 평가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동서독 국경을 다루었습니다. 국경 울타리의 자체 발사 장치 및 죽음의 띠에 있던 지뢰밭과 관련된 그간의 사건들은 국경 수비에 있어 대규모의 정기적인 수사를 동반시켰으며, 동 업무는 기록보존소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국경의 길이(1,378km)로 인한 특성상 국경수비순찰대의 보고서는 상황의 전체적인 그림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2) 베를린 장벽(총 길이 156.4km, 그 중 동베를린과의 섹터경계 43.7km)에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은 그곳 보호 경찰 및 범죄수사대가 담당했습니다. 그들은 기록보존소에 가장 풍부하고도 충격적인 사진과 문서자료를 보냈습니다.

(3) 잘츠기터는 종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공산주의 통치하의 인권 침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동 출처를 통해 증인 진술, 피해자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풍부한 그림자료를 수집했습니다.

(4) 동독 주민 개개인도 주변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기록보존소에 보냈습니다. 동독에서 '계급의 적'인 당국과의 접촉은 '불법 접촉'으로 동독 형법 제219조에 따라 최대 5년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심지어 동독 형법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른 국가 범죄로,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지인, 친척을 통한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5) 기록보존소는 국가인민군의 국경부대에서 탈출한 군인들의 진술을 통해 특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인민군은 서독으로 탈출하여 탈출시도를 막고, 이 과정에서 투입되었을 수 있는 저격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보기관이 심문을 진행하며, 이 때 사용되는 특별 설문지는 기록보존소에서 작성했으며, 답변이 작성된 후 되돌려 받았습니다.

(6)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는 주로 동독에서 석방거래를 통해 풀려난 정치범들로부터 동독의 가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통제해 내린 결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정치범들은 기센 및 베를린-마리엔펠데 긴급 수용소에서 진행되는 심문에서 그들의 유죄판결에 참여한 판사, 배심원, 검사, (의무)변호인, 국가보위부 심문관, 밀고자, 교도관, 동료 수감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기록보존소는 이 정보를 철저히 평가하고 동료 수감자들이 이미 한 진술과 비교하여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했습니다.

동독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감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독과의 교류에 대체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수감자들이 동독에서의 판결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법치국가 절차을 통해 무효화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로 처벌이 해제된 이후에는 수형자보호법에 따라 통합지원(보상)에 대한 요구권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감되었던 자들은 형사사건 관련 내독 사법공조에 대한 법에 따라 동독의 형 집행이 법치국가적 이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대검찰청에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거주했던 연방 주의 행정 관청은 수감에 대한 보상을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독 정치범들이 서류 없이 서독으로 풀려나며, 이는 행정절차에서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공식 서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은 동독의 형 집행 시설에서의 석방을 증명했고(체포 이유에 대한 정보 없음), 다른 한 장은 1967년 이후 동독 국적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서독의 법에 따르면 그들은 '전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형의 선고를 받았던 이들이 동독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운명에 대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독 관청은 잘츠기터에 신청인에 대한 정보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문의해야 했습니다. 기록보존소가 관청에 정보를 통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기록보존소는 관청의 문의를 통해 사건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접하게 된 만큼, 자신의 책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정보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 시설

기록보존소는 소장 외에 검사장 1명과 검사 1명, 법무관 3명, 속기사 2명이 속한 매우 작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슈바이크 고등지방법원의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있었습니다. 1989년 기준 예산은 25만 독일 마르크(약 12만 8,000유로)였습니다.

기록보존소의 핵심 업무는 다양한 컬러의 색인카드에 기록된 피해자, 피고인, 증인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끊임없이 보완 및 확대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전기로 작동되는 기계식 카드통을 통해 색인카드 업무가 쉬워졌습니다. 1990년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든 데이터는 전자식으로 저장되었습니다.

6. 동독에 의한 직원들의 범죄화

1989년 가을, 동독의 정치적 전환이 있을 때까지 동독 정부는 '적의 조직' 기록보존소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1962년 10월 동독 각료회의는'동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직간접적 침략 행위를 기록하고 체계적인 처벌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 그룹을 검찰총장 곁에 구성하게 합니다.

1986년에 알려진 것처럼 이 기록보존소에는 (실제로는 국가보안부의 일부였던) 약 40명이 근무하며 정

권의 정치적 반대자를 '위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색인카드에 기록하였습니다. 서독의 정치인, 언론인, 판사, 검사, 고위 공무원, 사법 및 경찰 공무원, 난민 및 추방자 협회의 직원 그리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동독책임자들이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모든 사람과 기관이 기록되었습니다.
1966년 동독은 특히 잘츠기터 관청 직원들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이는 '동독 시민들의 시민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의 제1조는 개정되어 1968년 동독 형법에 포함되었습니다. 제90조는 1977년 개정판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을 위반하여 크게, 또는 특정 활동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관할권을 확장하여, 헌법상의 시민권을 행사한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을 소추하거나, 소추를 요구, 명령 또는 개시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더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잘츠기터의 기록보존소 직원들은 동독이나 동독과 범죄인 인도 협정을 체결한 공산주의 영향권 국가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이름이 동독 수배 목록의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서쪽)을 통과하는 길조차도 차단되었습니다.

7. 중앙기록보존소 존속에 대한 싸움

법적 근거(3. 법적 근거 참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미 1970년대에 중앙기록보존소의 업무가 기본조약 제6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약에 의하면 동서독은 국내외 문제에 있어 계약당사국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서독 사법부는 각자의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보존소도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변함없이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1980년 10월 호네커 사회주의통일당 총서기가 게라에서 개최된 당행사에서 내독관계 개선을 위해 서독에 네 가지 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록보존소는 갑작스럽게 서독에서 국내 정치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잘츠기터 기록보존소의 폐쇄도 요구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사민당(SPD), 자유민주당(FDP)의 주요 독일 정치인들은 이를 기회삼아기록보존소 폐쇄에 찬성했습니다다. 1988/1989년 사민당(SPD)이 관할하는 6개의 연방주에서 기록보존소의 재정을 위한 기부금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헬무트 콜(CDU) 연방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연방 기부금을 두 배인 십만 독일 마르크로 늘려 기록보존소를 보존했습니다.

8. 동독에서 기록보존소가 갖는 의미

앞서 설명한 논쟁의 본질적 측면은 기록보존소의 업무가 동독에 어떠한 정치적,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록보존소는 사회주의통일당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한 희망의 신호일 뿐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동독정부의 국가기관 내 가해자들을 위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몇 해가 지나며 점점 더 회의감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사민당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는 만장일치로 기록보존소가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스 요헨 포겔 사민당(SPD) 당대표와 같은 저명한 정치인들은 통일 후 기록보존소 폐지를 요구한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잘츠기터 사무소가 그 존재만으로 동독 정당 및 동독 국가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이에 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저지하는 역할을 했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호네커가 게라에서 했던 요구에 기록보존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것만 기록보존소가 동독 지도부에게 눈엣 가시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1974년 동독 외무부는 소련 언론 기사의 지원을 받아 기록보존소를 '공개적으로 보복주의적 관점으로…국제법에 노골적으로 모순되는' '스파이 센터'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왔듯이 동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외부의 모든 시도는 '내정 간섭'이라는 전형적인 비난으로 응수했습니다. 기록보존소에 대해 동독지도부가 벌여온 수 년간의 투쟁은 기록보존소가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9. 1992년 최종 성과

기록보존소는 1989년까지 내독 국경에서의 사망사건 121건, 베를린 내부 및 주변에서의 사망사건 80건을 문서화했습니다(실제로 베를린 장벽에서만 최소 140명이 사망했으며, 발트해를 넘은 탈출 시도에서는 800명 이상이 사망했을 것입니다). 1992년 기록보존소가 해체되면서 약 4만 2,000건의 사건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32입방미터에 달하는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카드에는 약 7만명의 희생자와 약 1만명의 가해자 이름이 포함되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는 그들의 관할 지역에 놓인 인권 침해 사례 중 일부만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인력 및 재정 면에서 열악했던 기관의 정치적 의미를 감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10. 1990년 이후의 자료 사용

기록보존소의 서류들은 독일 통일 후 무엇보다 가해자를 기소하고 항소, 회생, 보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법을 왜곡한 판사 및 검사를 조사하고 공직에 지원한 동독 주민들의 안전성을 검토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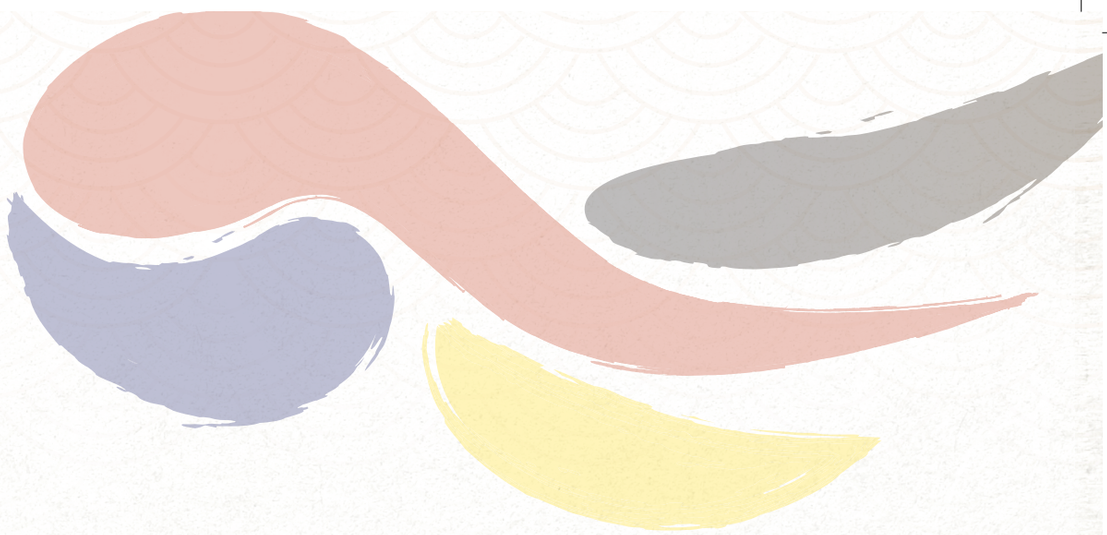
잘츠기터 자료에서 제공된 정보는 일명 '장벽 총격병 재판'에서도 국가인민군 파견대의 국경 근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난민 총격으로 인해 베를린과 포츠담에서 246명의 피고가 법정 앞에서 해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중 약 절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그 중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 10명, 고위 장교 42명, 군인 80명을 포함한 132명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밖에 노이루핀에서 기소된 31명의 저격수 중 19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록보존소의 조사 결과는 법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판검사를 수사할 때에도 한몫했습니다. 그 결과는 매

우 실망스럽습니다. 동독 형사사법기관은 40년 동안 정치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약 25만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1990년 이후 1만 2,000건의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으나 이 중 274건만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수사는 곧 중단되었습니다. 274건의 재판 중 59건만 평결로 종결되었으며, 이 중 무죄 32건, 벌금형 2건, 집행유예 23건, 집행유예 없는 구속 2건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치국가를 위반하는 많은 유죄 판결을 고려했을 때, 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해 보입니다.
2007년 이후 기록보존소의 자료는 독일연방기록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 곳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며, 오늘날까지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 청산에 역할을 보태고 있습니다.

Ⅲ. 중앙기록보존소의 정치적 의미

법치국가의 관할 당국이 인권 및 법치국가에 대한 노골적인 규정 위반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조사하고 기록하며 추적하고 벌해야만 하는 것은 명백한 정의의 원칙입니다. 이 깨달음은 냉전 시대 유럽과 특히 분단된 독일에도 해당되었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기본법 전문에 명시된 통일 조항에 따라)항상 동독 주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 잘츠기터 소재 주 법무성의 중앙기록보존소 설립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옳은 것 같습니다.
많은 공로를 세운 기록보존소의 업무에 광범위한 대중들이 산발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기록보존소는 1988년 7월이 되어서야 부소장의 형태로 대변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록보존소는 기록보존소와 관련 있는 이들에게 항상 존재했습니다. 기록보존소가 그 존재를 통해 얼마나 많은 난민들을 사망과 부상으로부터 구했다든지, 정권 비판가들을 타락, 기소, 체포로부터 구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보존소의 과업 및 활동에 (대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독일 내 정치적 관계가 언젠가는 정상화될 수 있으며 국가적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항상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1990년 평화와 자유 속에서 독일 통일을 이루면서 채워졌습니다.



SESSION2-2.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과제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이규창(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북한에서의 인권개념과 사상적 기초

북한은 2009년 4월 9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조문을 명시하였다(제8조). 그 이전에도 북한은 변호사법(1993년 제정),[1] 형사소송법(1992년 제정)[2] 등의 법규에 인권을 명시하는 조문을 두고 있었다. 또한 여성권리보장법(2010년), 아동권리보장(2010년), 해외동포권익옹호법(2022년) 등 인권 관련 법규를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제2차 국가별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수검을 위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북한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성과를 많은 비중을 할애하여 기술하였다.[3] 특히,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정규 교육기관과 법일꾼 연수 장소에서의 인권교육 외에 여러 형태의 특별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저명한 인권학자와의 대담 프로그램 방영, 국제인권법 및 기타 인권 교재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의 날, 국제부녀절, 국제 아동의 날, 국제 장애인의 날에는 언론 매체들이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문서의 주요 내용과 원칙을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4]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1. 전체주의적 인권관

첫째, 보편적 인권 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되는데 비해 북한은 '전체'로서의 인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63조). 북한은 2014년 9월 13일 발표한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권이 개인의 권리인가 집단의 권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개인의 권리문제는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의 권리문제이다. 사회적집단을 떠난 고립적인, 개별적인 사람들의 권리문제란 있을수 없다."[5]

---

1) 북한 변호사법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
2) 북한 형사소송법 제6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3) UN Doc. A/HRC/WG.6/19/PRK/1(30 January 2014), paras. 30~124.
4) Ibid., paras. 20~22.
5)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평양: 조선인권연구협회, 2014), p. 8.

2. 주체사상에 기초

둘째, 북한의 인권관은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다.[6] 주체사상은 북한이 1972년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면서 활동지침으로 명시한 이래(제4조)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통치이념으로 작동하여 왔다. 이를 북한에서는 '주체의 인권론'이라고 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개정시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되었다(북한 헌법 제3조).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노동당규약과 10대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북한 당국과 노동당은 이를 유지·계승하기 신앙과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위해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을 통해 주민통제를 하고 있으며, 체제유지를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금수산태양궁전법(2013),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1), 청년교양보장법(2021) 제정을 통해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소와 재판소도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를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북한 헌법 제156조, 제162조).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제정한 비상방역법(2021)은 방역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부과하고 있다(제65조, 제68조).

3. 국권 강조: 내정간섭 및 국가자주권과 연계

셋째, 북한에서의 인권의 개념은 국권(國權), 즉 국가의 권리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국가자주권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인권 관련 문제는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내정간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 "인권은 철저히 내정문제이고 국권이 보장되는 조건하에서의 인권이며 결코 내정간섭의 대상으로 되거나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될 수 없다. 이로부터 공화국은 인권은 곧 국권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이 국권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국가자주권을 말하는 것이다."[7]

Ⅱ.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태도

1.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체제 관련 인권 문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2000년대 초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구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여 2006년 설립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유엔 총회는 2005

6) 위의 보고서, p. 7.
7) 위의 보고서, p. 9.

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오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일본이 「납치 문제, 기타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문제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은 201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던 북한은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공세적인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그 이유는 COI 보고서가 북한인권 침해에 책임있는 북한 당국자의 형사처벌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COI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북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8]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인민보안부(현 사회안전성), 검찰 및 재판소 제도, 조선인민군, 조선노동당,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 등이 기관책임(Institutional accountability)이 있다고 결론지었다.[9] COI는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위반자들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situation)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0] 특히, COI 상세보고서는 '최고지도자'가 노동당 및 국방위원회와 별도로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함으로써[11]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형사책임을 언급하였다. 이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책임규명(accountability)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COI 보고서가 북한 당국자들의 ICC 회부 또는 유엔 특별재판소 설립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반하는 것이다. COI 보고서가 고위 관리, 특히 최고지도자의 국제형사책임을 언급한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북한 체제의 전복(顚覆)을 의도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전에 없이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이 같은 태도는 COI 보고서 발표 직후 북한의 공식 반응,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 발언, 조평통 성명, 북한 외무상의 발언 등에 반복되었다.

첫째, 2014년 2월 17일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인 같은 달 2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COI 보고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인권을 구실로 국제형사재판소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요 뭐요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생억지를 부리며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열을 올리는 것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감히 깎아내리고 압력도수를 높여 우리 제도를 허물어 보려는 극히 위험한 정치적 도발…"

8)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para. 80.
9) UN Doc. A/HRC/25/CRP.1(7 February 2014), paras. 1166 1190.
10) UN Doc. A/HRC/25/63(7 February 2014), para. 87.
11) UN Doc. A/HRC/25/CRP.1(7 February 2014), para. 1191.

둘째,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해 COI 보고서 발표로 북한에 대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한층 노골화"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조선인권연구협회 보고서 발표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였다.[12)]

> "적대세력들이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하여 인권문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진실을 밝히고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셋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2014년 9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을 "우리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위태로운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넣은 극히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4년 9월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뉴욕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고위급 회담에서 인권을 지키려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북한의 주장을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리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은 2014년 9월 27일 "특정한 국가의 제도 전복에 도용하려는 온갖 시도와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고 하였다.

북한은 더 나아가 체제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는 등 새로운 양태를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2016년 11월 23일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016년 11월 15일 채택한 북한인권결의를 강력 비난하면서 이례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질문장을 유엔에 발송하였다.[13)] 또한 2016년 12월 7일에는 국제문제연구소 명의의 공개질문장을 통해 북한에 와서 북한인권실상을 직접 목격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14)] 이후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등의 구금시설, 책임규명 논의(북한 지도부의 형사책임 논의) 등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주권을 침해하고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며 반발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22년 9월 2일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또다시 감히 우리의(북한의) 신성한 제도와 국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망발을 늘어놓았다," "우리는(북한은) 제도 전복을 노리는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 모략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15)]

2. 취약계층 문제 및 SDGs에 대해 적극적

이에 비해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

12) , 2014. 9. 13.
13) 조선중앙통신, 2016. 11. 23.
14) 조선중앙통신, 2016. 12. 7.
15) 조선중앙통신, 2022. 9. 2

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30일 사회주의노동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산전 60일, 산후 90일이던 종전 출산휴가를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15년 11월 23일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3개 유보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의 유보를 철회하고, 2016년 4월 11일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둘째, 아동 문제의 경우에는 2010년 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2014년 11월 10일 「아동 매매·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5월 13일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제5차 및 제6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셋째,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2013년 11월 21일 장애자보호법 개정, 2016년 11월 23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같은 해 12월 6일 비준서 유엔 사무국 기탁 조치를 취하고, 2018년 12월 19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은 불허하면서도 2017년 5월 유엔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방북은 허용하였다. 2012년 하계 런던장애인올림픽,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2016년 하계 리우장애인올림픽, 2018년 동계 평창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SDGs 이행과 관련하여 2021년 6월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작성하여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 제출하였다. 북한은 유엔 SDGs 항목에 따라 자국의 17대 목표와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를 기술하고 있다. 특히 VNR 보고서는 목표-5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3.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선별적 수용과 협력

북한은 김정은체제 출범 이후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였다. 이에 비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이행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이행보고서도 2002년 이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은 비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선별적 수용·협력 양태는 UPR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UPR은 모두 3차례 있었다(2009년, 2014년, 2019년). 북한은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 부분 수용, 유념, 거부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제유지, 책임규명과 관련된 권고는 수용을 거부하였고 상대적으로 체제유지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표-1> 북한의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비준 및 보고서 제출 현황

	가입/비준 (통보/기탁일 기준)	보고서 제출	비고
자유권규약	1981.9.14. 가입	최초 보고서: 1983.10.24. 2차 보고서: 2000.3.20	
사회권규약	1981.9.14. 가입	최초 보고서: 1984.12.18. 2차 보고서: 2002.4.12	
아동권리협약	1990.9.21. 비준	최초 보고서: 1996.2.13. 2차 보고서: 2002.5.16. 3·4차 통합보고서: 2007.12.10 5·6차 통합보고서: 2016.5.13	
여성차별철폐협약	2001.2.27. 가입	최초 보고서: 2002.9.11. 2·3·4차 통합보고서: 2016.4.11	제29조 제1항 유보
장애인권리협약	2016.12.6. 비준	최초 보고서: 2018.12.19	

4. 시사점: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 + 북한의 수용성 고려

북한인권정책은 여러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자유권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문제, 사회권인 측면이 강조되는 문제가 있다. 인권 개념은 평화권, 발전권, 자결권 등 제3세대 인권까지 확장되고 있다.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고,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 북한인권 관련 행위자는 남북한 외에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별 국가, 국내/국제 NGO 등 다양하다. 국내에도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업무를 다루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적인 북한인권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여러 행위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여 접근해야 할지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북한인권정책은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하여 수립·추진되어야 한다.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위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침해 조사가 기록·보존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출범하여야 한다. 한편,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문화적 상대성 및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국가적·지역적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남북인권대화를 임의 사항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태도는 남북(인권)대화 시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Ⅲ. 북한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병행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 마을 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북한인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과 발전, 평화는 유엔의 3대 기둥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인권의 개념은 발전권, 평화권 등 제3세대 인권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의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해·재난,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남북 그린데탕트, 남북접경협력과 접목하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는 생태계 및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 감염병, 경제, 주거, 식수 등 인간 삶의 상당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재해·재난의 빈도 및 강도의 증대로 이어져 최근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후재앙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8년 3월 28일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문제로 전지구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이에 OHCHR은 2009년 1월 15일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관한 OHCHR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6]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를 2009년 3월 25일, 2011년 9월 30일, 2017년 6월 22일, 2018년 7월 5일, 2019년 7월 12일 지속적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2021년 10월 8일에는 결의 채택을 통해 3년 임기의 「기후변화 맥락에서의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이하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 제도를 신설하였다.[17] 유엔 기후변화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제50차 회기에 첫 번째 보고서 『임무에 대한 최초 계획과 비전(Initial planning and vision for the Mandate)』을 제출하였다.[18]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향후 활동을 통해 중점적으로 다룰 분야를 밝히고 있다.[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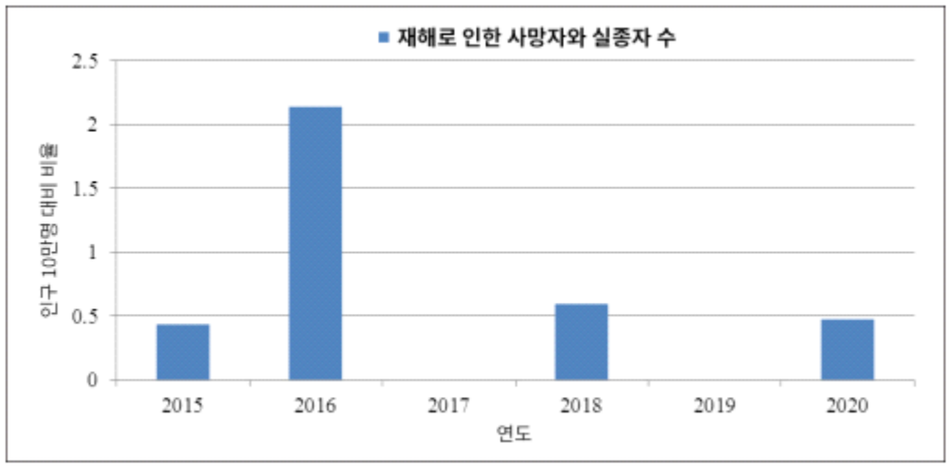
북한은 2014년 6월 27일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을 제정하여 재해·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재난 대응에 있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취약하여 기후변

16)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 Doc. A/HRC/10/61(15 January 2009).
17) Human Rights Council,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UN Doc. A/HRC/RES/48/14(13 October 2021), para. 2.
18) Human Rights Council, *Initial planning and vision for the Mandate*, UN Doc. A/HRC/50/39(3 June 2022).
19) *Ibid.*, paras. 8~45.

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INFORM의 2022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재난 대응능력결여는 6.3점으로 조사 대상 191개국 가운데 38위를 차지하였다. 10점에 가까울수록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밖에 재난에 대한 위험노출은 4점으로 71위, 재난에 대한 취약성은 4.9점으로 50위를 차지하였다.[20]

기후변화·기후위기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6월 제출한 VNR에서 연이은 기후 관련 자연재해는 인민들의 생활과 건강,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기술하고 있다.[21] 특히 북한은 2021년 VNR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수를 밝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는 홍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22] 기후변화·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주민의 생명권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림-1>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주민 사망자·실종자 수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p. 40.

기후변화·기후위기로 인한 물 문제는 남북한 간에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여러 차례 남북공유하천을 무단방류하여 남한 주민에 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생명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은 것이다. 2022년 6월 만해도 북한의 황강댐 수문 개방 정황에 대해 남한 당국이 사전 통지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북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4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비준, 2005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20) INFORM, INFORM RISK COUNTRY PROFILE 2022 SCORES : North Korea, <https://web.jrc.ec.europa.eu/dashboard/INFORMRISK/?no-header=1&v-vISO3=AFG&no-scroll=1> (검색일: 2022.9.6.).
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2021), p. 39.
22) 위의 보고서, pp. 39~40.

on Climate Change)」 비준, 2016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비준,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국가 자발적 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등 기후변화 국제 동향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법적으로도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3호로 「재생에네르기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VNR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 국가재난위험경감정책 이행,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세 가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23] 기후변화·기후위기, 재해·재난에 대한 남북공동대응과 협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

Ⅳ. 북한 변화를 위한 정보유입 확대와 자결권

ㅇ아울러 소식을 전하는 사업(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습니다.(2022년 통일부 업무보고)

정치범수용소, 집결소·구류장·노동단련대·노동교화소 등의 구금·교정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 신앙·양심·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인권 문제, 탈북자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 당국의 변화가 요구된다. 북한체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의 관여와 함께 주민들의 의식 개선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정보 및 문화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 변화의 핵심은 정보접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폐쇄적이어서 일반주민들의 정보접근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 정보 및 문화의 북한 유입 확대는 헌법 제4조가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는 동독 주민들의 자결권 행사를 통해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서독은 '접근을 통한 변화', 즉 교류협력과 방송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통일친화적 자결권 행사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통일 이전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하였고, 그 결과가 베를린장벽 붕괴로 나타났다. 1990년 독일통일 과정은 동독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통일도 북한 주민들이 남한체제를 선택하는 다시 말해 북한주민들의 자결권 행사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제도와 이념, 사상이 아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족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이란 일정한 영토 내에 사는 민족이 그들 스스로의 국가를 세우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일부로 편입되는 방법을 택하든지 그 영토의 정치적 그리고 법적 체제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북한 주민들의 통일친화적 자결권 행사, 다시 말해 대남 친화력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가

23) 위의 보고서, p. 41.

지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적인 외부 정보 및 문화의 북한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 스스로 북한 실상과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방송 교류와 인적접촉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방송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점에서 통일부가 2022년 업무보고에서 '소식을 전하는 사업(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추진 과제의 하나로 제시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국가보안법, 특히 회합·통신죄와 찬양·고무죄의 개폐도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NOTE

SESSION3 I 분단시기 체육 교류

SESSION3-1.

동서독 스포츠교류 현황

베르노 바로 포츠담대학 교수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동서독 스포츠 교류

베르노 바로 박사
포츠담 대학교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동서독 스포츠 교류의 단계 구분

- ‘국경에서의 작은 스포츠 교류’
- 동서독 공식 스포츠 교류
- 국제 무대에서의 시스템 경쟁

초기 상황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초기 상황

연합국 점령지역, 서독	소련 점령지역, 동독
자유로운 협회체제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스포츠 체계	
1950년: 연방주 단위 주 체육 연맹, 주 종목별 체육 협회 상급 기관: 국가 단위 *독일 체육 연맹(DSB)*	
민주적인 의사 결정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초기 상황

연합국 점령지역, 서독	소련 점령지역, 동독
자유로운 협회체제를 기반으로 한 독립적인 스포츠 체계	체육공동체와 체육클럽을 기반으로, 지시에 의거한 스포츠 체계
1950년: 연방주 단위 주 체육 연맹, 주 종목별 체육 협회 상급 기관: 국가 단위 *독일 체육 연맹(DSB)*	1957년부터: 독일 체조 및 체육 연맹 하위 지역조직 상급 기관: 국가 최상위 기관으로서 *독일 체조 및 체육 연맹*(DTSB)
민주적인 의사 결정	중앙집권적 '명령 연쇄구조 '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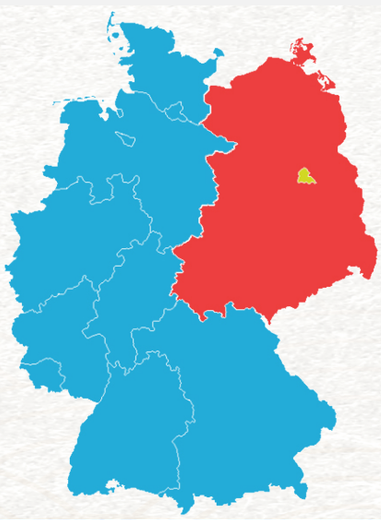
동서독 스포츠 교류 단계별 구분

1. 1961년까지의 '국경에서의 작은 스포츠 교류'
2. 1961년~1973년 '단절기'
3. 1974년~1989년 '체육행사 개최계획'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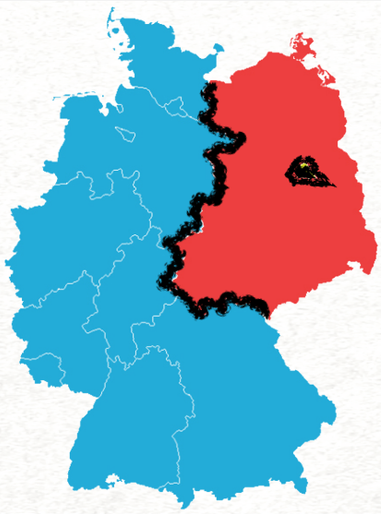
‘국경에서의 작은 스포츠 교류’ 1961년까지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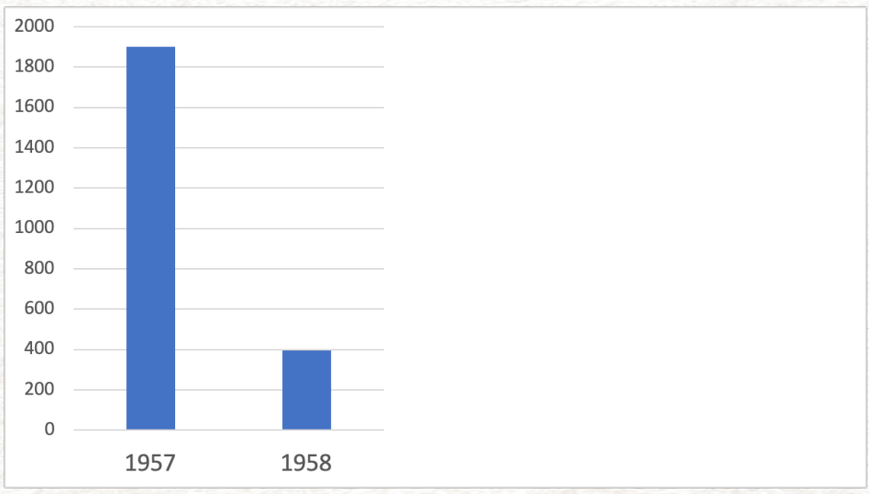
'국경에서의 작은 스포츠 교류' 1949/1950년



본인 도표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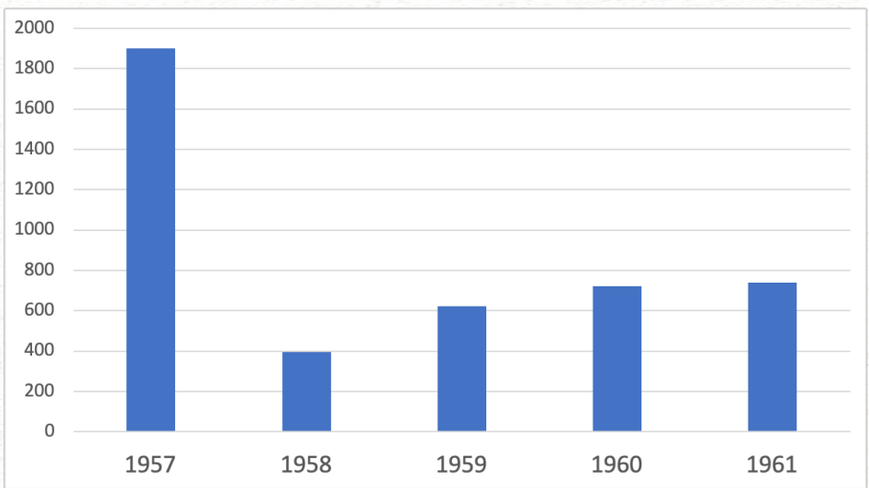
스포츠 교류 상황
1957~1961년



본인 도표, 자료 참조: '스포츠 – 정치의 매체', Ulrich Pabst 저.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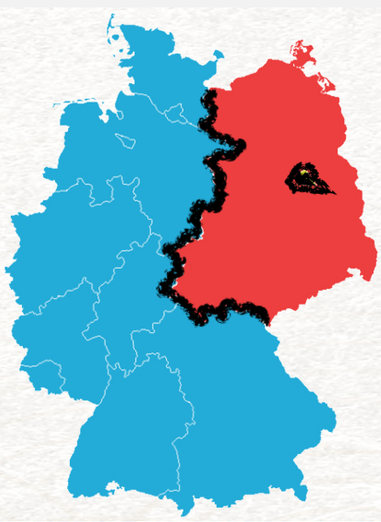
스포츠 교류 상황
1957~1961년



본인 도표, 자료 참조: '스포츠 – 정치의 매체', Ulrich Pabst 저.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국경에서의 작은 스포츠 교류' 1949/1950년



본인 도표

Universität Potsdam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본인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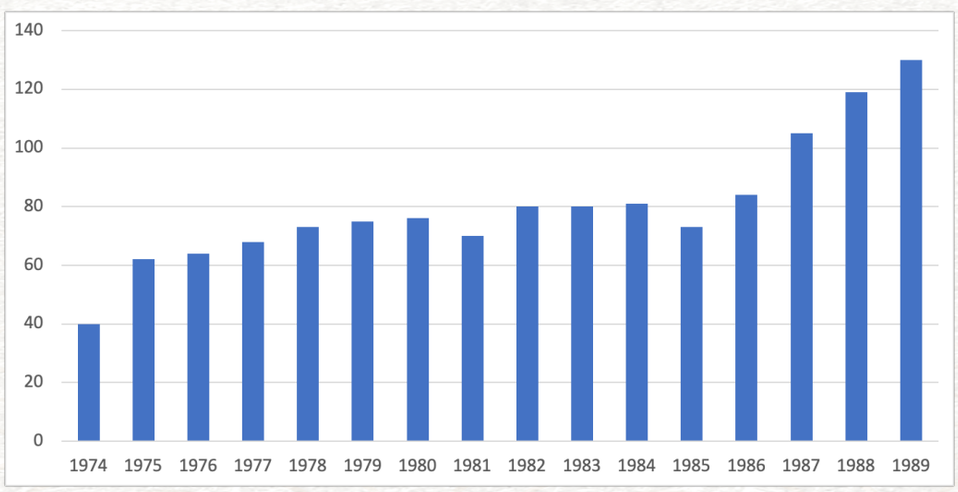
Universität Potsdam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상대적 '단절기'
1961년~1973년

‘체육행사 개최계획’
1974년~1989년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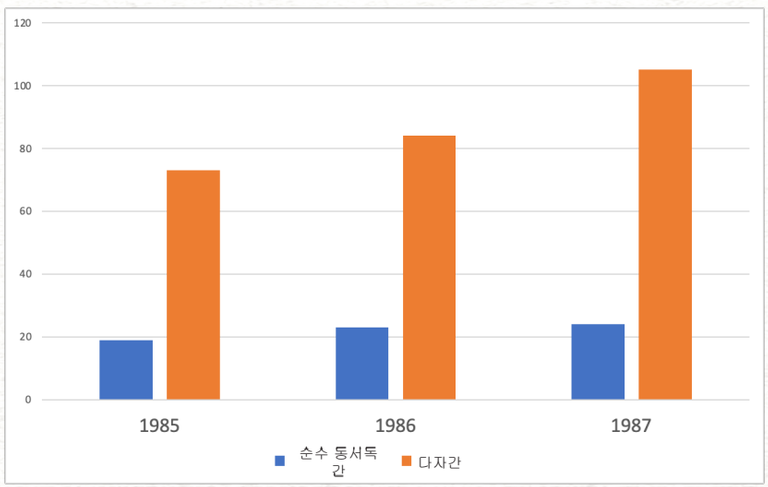
동서독 스포츠 교류 상황 1974~1989년



본인 도표, 자료 참조: ‘동서독 스포츠 의정서’, Hans-Dieter Krebs 저.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동서독 스포츠 교류 상황 1985~1987년



본인 도표, 자료 참조: '경기장 불빛 아래 계급투쟁', Jutta Braun저.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체육행사 개최계획' 내 동서독 체육교류의 실제

‘비교 시합’ 또는 ‘선발팀 경기’





프로그램 안내장 / 축구 경기 및 리턴 매치 동베를린 vs. 서베를린, 왼쪽: 1953/12/25, 오른쪽:1954/12/26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결론

NOTE

SESSION3 I 분단시기 체육 교류

SESSION3-2.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성문정 前 한국스포츠정책과학연구원 수석연구위원

2022.09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성 문 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1 남북 체육교류의 가치

02 남북 체육교류의 특성

03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한계

04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1
남북 체육교류의 가치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 체육교류의 가치

01 분단 70여년의 결과

-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 이질화 심화
- 체육분야 남북간 수준격차 심화

  남한 : 스포츠과학 기반 경쟁력
  세계 최상위 수준

  북한 : 체력, 정신력 강조 종목 육성

02 이질화 극복대안으로서 스포츠

- 스포츠 : 세계적으로 통일된 시스템
  - 남북체육 : 용어만 다를 뿐
    동일 규칙 적용
- 관람객 : 하나의 몸짓에 따라
  희노애락 표현
  - 공동응원으로 민족정서 공동체 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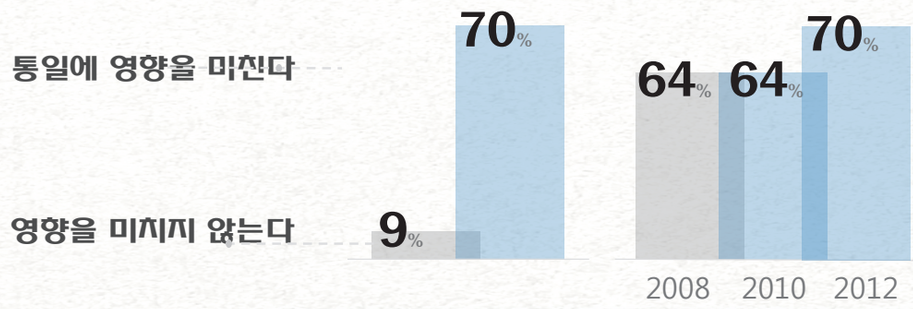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 체육교류의 가치

03

남북체육교류관련 국민 인식

2012 생활체육실태조사



02

남북 체육교류의 특성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 체육교류의 특징

역사성
문화체육행사로의 전통 유지
- 경평전(1929년 시작)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대중성
스포츠에 대한 국민 관심도
- 국민들의 삶 속 중요 친밀 소재
- 축구 남북 대결시 시청률 20%대 이상 점유

동질성
동일 규칙은 스포츠만의 고유 속성
- 스포츠간 교류는 룰에 따른 신체적 표현
- 남북간 비이질성으로 교류 쉬움

중재성
남북간 교류이나 국제체육단체가 중재역할 가능
- IOC :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구성 조정자 역할 수행
- FIFA: 남북단일팀 구성 승인, 지지 등

03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01 교류 현황

1. 주요 회담

1960 제 17회 로마올림픽 협상 시작

1964 도쿄올림픽(1차 로잔, 2 · 3차 홍콩) 결렬
– IOC가 회담 불응시 북한을 대표로 참가시킨다고 통고)

1979 제 35회 평양세계탁구대회 (4차례 회담, 판문점)
– 단일팀 구성 논의 : 결렬

1984 LA올림픽대회 (3차례 회담, 판문점)
– 단일팀 구성 논의 : 결렬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1985~87 88서울올림픽대회 (4차례 회담, 로잔)
–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논의 : 결렬

1989~90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 (9차례 회담, 판문점)
– 단일팀 구성 논의 : 결렬

1990~91 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대회 (4차례 회담, 판문점)
– 단일팀 구성 논의 : 결렬

1991 탁구 (일본, 지바) 및 청소년축구(포르투갈, 리스본)
– 남북 최초 단일팀 구성 성사(2건)

2007 2008 북경올림픽대회(4차례 회담, 개성)
–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4차 회의 후 단절
– 부분 합의 : 올림픽 출전티켓 취득자나 기준기록 통과자, 세계랭킹 우수 선수 우선 선발 조건 등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등 6건 성사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2. 국제대회 공동입장 & 응원

- 2000년 시드니올림픽
  ~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11회**
  - 2000 김운용-장웅 NOC위원장간 합의가 시초
  - 2000 시드니올림픽,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5마카오동아시아대회, 2006도하아시안게임은 개회식만 공동입장
- 2008 북경올림픽부터 단절
  - 민간차원 공동응원 시행
    (남한 400, 북한 500여명 참여)
-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재개
  - 응원단 및 예술단 500여명 참가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3.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운영 (8건)

- 1991. 세계탁구선수권 우승, 청소년축구대회 4강
- 1999. 청소년축구대회 8강
- 2011. 피스앤드스포츠컵 우승 (탁구)
- 2018. 평창동계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여자농구, 드레곤보트, 카누 등)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 (수영, 탁구)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스웨덴 할름스타드, 여자단체전 동메달)
  코리아오픈탁구선수권대회 (대전)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덴마크 코펜하겐, 첫승)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4. 남북한지역 개최 대회 상호 참가 (총 11회)

- 종합대회 :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 단일대회 : 2019 아시아주니어역도대회, 월드컵예선전(평양)
  2018 대전 코리아오픈탁구대회,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등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7 여자아이스하키선수권대회
  2017 AFC여자아시안컵 예선전
  2013 평양 아시아 역도 클럽
  2013 동아시안컵여자축구 등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5. 지방자치단체 교류

- 제주도
  – 2003 민족평화통일체육문화축전
- 강원도
  – 아이스하키 친선(2006), 태권도시범(2007, 2018),
  남북유소년 축구대회 (2018) 등
- 인천광역시, 경기도
  – 2013, 2015 남북유소년 축구대회
-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 전국체전 북한선수단 초청 추진, 실패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기금조성 운용중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5. 기타 친선 교류

- 축구교류
  - 통일축구(1990평양/서울, 2002평양, 2005/서울,) 노동자축구대회(1999, 2001, 2007, 2015, 2018), 유소년축구(2007/서울 등6곳 평양, 2008쿤밍 등)
- 농구교류
  - 통일농구(1999/서울평양, 2003정주영체육관기념평양, 2018평양)
- 태권도 시범 등
  - 태권도시범단교환(2002 서울평양), 합동공연 시범(2018평창 서울), 합동공연(2019 비엔나 제네바)
- 기타 종목교류
  - 권투(2007개성), 양궁(2015남경), 마라톤(2019쿤밍) 등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평가

02 시기별 교류사업 평가

1. 1990년 이전의 교류

- 단일팀 구성 제안 중심의 체육 회담 위주의 교류
- 1960년대 : 6.25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 통틀어 남북간 첫 공식 접촉 (64도쿄올림픽전 IOC의 강요로 시작, 불참시 북한에게 대표권 부여)
- 1970년대 :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재 추진 (72.9 서독 뮌헨, 남북체육공동성명 채택, 체육교류회담 위해 남북대표 서울과 평양 상호방문 초청합의)
- 1980년대 : 84LA, 88서울올림픽 단일팀 구성 및 공동개최, 1990년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협의를 위한 체육 회담 지속
- **평 가**
  - 체육 회담을 통해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과 친선 축구 경기 등을 논의 하였으나 남북의 신뢰부족으로 결렬 반복
  - 당시 남북한 체제경쟁 몰두로 체육교류협력을 이념대결의 도구로서 활용, 뚜렷한 교류 성과 불발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한계

02 시기별 교류사업 평가

2. 1990~2000년대 초(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

- 단일팀 구성(1991탁구, 청소년축구)시작으로 체육교류분야 활성화 시작
- 1988년 7.7선언,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대결과 적대관계 청산 위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시기와 연계
  - 서울-평양 축구, 서울-평양 사이클, 부산-신의주 역전마라톤대회 등 친선경기 제안, 북한이 축구 친선경기 수용, 남북통일축구대회 1990. 10월 서울 평양 개최
- 김대중정부 : 북한과 적극적인 교류협력 정책으로 체육교류 활기
- 노무현정부 : 남북 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이란 정책 기조 아래 지속
- **평 가**
  -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교류사업에서 벗어나 민간차원 체육교류 시작
  - 2003년 10월 제주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으로 첫 순수 민간차원의 대규모 남북체육문화행사 실시 (북한 선수단 190명 참가)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한계

02 시기별 교류사업 평가

3. 2000년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교류 진전 불가
  -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제경기단체 회원 국가로서의 의무이행 수준
- 문재인정부 :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의 참가와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 해빙 유도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아시안게임과 탁구, 핸드볼 등 개별 종목의 단일팀 구성으로 지속적인 체육교류 흐름 유지
- 남북 정상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2020년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과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유치 합의
- **평 가**
  - 국제사회 대북제재 유지와 북미협상 난항으로 남북관계 교착상태진입, 체육교류 대부분 중단(북한 불참이 주요 요인)
  - 교류 재개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는 '스포츠 위에 정치가 있다'는 장웅 전IOC위원의 발언 실감하는 시기

그간 남북 체육교류 현황과 한계

03 시사점

- 메가스포츠 이벤트 공동입장과 소수종목 단일팀 구성으로 엄격한 의미의 남북당사자간 교류 미약
  - 남북 당사자간 친선교류 전체의 38% 수준으로 체육을 통한 남북간 소통 부족
- 민간 분야 친선교류사업도 특정 주체, 특정 종목 주도 특성 보유
  - 남북체육교류협회, 축구 종목, 북한의 4.25체육단 등
  - 축구, 탁구, 농구 등 소수 종목 집중 등
- 지속성 위해 민간교류 부분 확대 위한 강구책 마련 필요
  - 대한체육회 및 국내 종목단체 역할 미미
- 지방자치단체 남북체육교류 동력 활용 필요
  - 2019. 11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 활용 방안 강구 등
- 교류 안정화를 위한 '남북체육교류협정체결' 등 제도적 장치 강구
  - 필요시 '남북체육교류협력지원법' 제정으로 단일팀 구성시 탈락자에 대한 보상책 강구 등

<보론 : 혹시 이런 이유는 아닐까?>

➢ 체육회담시 단일팀 구성이 어려운 이유?

- 남한 : 선수 복지(군면제, 연금 등) 담보 불가
- 북한 : 경기력 무시, 동수 구성 원칙 양보 불가



<2008년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 합의 내용>

- 남한양보 :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대승적 양보
- 양측합의 : 올림픽 출전티켓 취득자나 기준기록 통과자, 세계랭킹 우수 선수 우선 선발 조건 등



04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의 교훈

01 참가를 둘러 싼 논의

- 문체부장관 :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할 것
- 문대통령 : 북한팀 올림픽 참여 요청
- 장웅 IOC위원 : 시기적으로 어렵다
- 바흐 IOC 위원장 : IOC정신과 부합
- 문 대통령–바흐 IOC 위원장 합의 : 남북 화해가 곧 올림픽 정신
- 김정은위원장 신년사 : 참가피력

02 참가 효과

- 단일팀 : 올림픽 최초
- 부대행사 : 남북합동 공연, 태권도시범
- 단일팀 구성에 대한 효과
  - 인식개선 : 반대 72.9%(SBS, 2018.1.9) ⇒ 잘한 일 56.8% (경향신문, 2018.2.13)
  - 북한 인식 변화 : 경계 또는 적 41.0% (17년) ⇒ 33.7%(18년). 7.3%p 개선
  - 2018자카르타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2020도쿄올림픽 단일팀, 2032남북공동 유치합의 등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1 선도적 교류 기반 조성 : 복원 및 재개

- **통일 축구 : 경평전 시작으로 1990년, 2005년 실시 등 경험 다수**
  - 국가대표나 프로팀, 실업팀 등 상호교환방문 실시 필요
  - 2013, 2014, 2015, 2017, 2018년 남북유소년 축구대회 교류 경험 다양
  - 노동자축구대회 지속화 : 1999(평양), 2007(창원), 2015(평양), 2018(서울)
  - 경평전은 유사한 사업 많다는 이유로 미승인 상태 : 서울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재개 가능성 상당
- **통일탁구 :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시작(일본)**
  - 2011년 카타르 피스 앤 스포츠컵 우승
  - 2018 대전 코리아오픈(혼복 우승)
  - 2018 할름스타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동메달)
  - 2020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부산개최) 단일팀 구성 가능성 상당
- **통일농구 : 1999(평양, 서울), 2003(평양), 2018(평양) 개최 경험**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1 선도적 교류 기반 조성 : 복원 및 재개

- **마라톤 교류 : 동호인, 선수 합동경기 가능 종목**
  - 매년 4월 평양국제마라톤 30여개국 1,600여명 참가 . 우리 선수 및 동호인 참가 필요(2019년 창원시 30명으로 구성된 참가의향서 제출 했으나 무산)
  - 2018년 시작 서울평양시민마라톤대회(서울개최)에 북한 참여 초청 필요
  - 60여년 전통 경부 역전마라톤 북한 팀 초청, 북한지역 노선 확장 필요
- **역도 및 유도 등 유사 경기력 종목 간 교류**
  - 역도와 유도는 올림픽대회 등 남북간 경기력이 비슷한 국제경쟁력 보유 종목
  - 역도 : 2013, 2019 평양개최대회 참가, 평양에 애국가 연주 실시 (2019 아시아 유소년 · 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 북한 금 55개, 남한 14개)
  - 유도 : 2012런던올림픽(남 금2 동1, 북 금1), 2016리우(남 은2동1, 북 금1)
  - 남북 상호간 기술교류 및 공동 전지훈련 실시, 실업팀간 초청 교류전 실시 필요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1 선도적 교류 기반 조성 : 복원 및 재개

➢ 태권도 및 씨름 등의 민속 종목 교류

태권도 : 북한 종주국 주장 (고조선의 발상지 평양 근거)

– ITF회원국인 북한 태권도종목 올림픽 출전 불가. ITF-WT 간 상호 이질성 심화

– 그럼에도 남북간 상호교류, 합동 시범 지속적

씨름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남북 최초 공동 등재(2018. 11. 26일)

– 남한 : 천하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대회 상당

– 북한 : 1960년대 민족체육경기로 지정,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대회 등 개최

– 추석 등 명절기 남북씨름대회 개최 및 지역대회 상호방문 교환경기 실시 필요 등

➢ 공동훈련으로 신뢰기반 형성

– 2018평창동계올림픽개최전 스키선수 공동훈련 실시 (마식령스키장. 1. 31~2. 1)

– 남한의 선진스포츠과학 기술과 북한지역의 지리적 환경 활용시 상승효과 상당

– 장기적 :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동전지훈련 실시(삼지연, 개마고원, DMZ등)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2 교류 영역 다양화의 출발 기재

➢ 지방자치단체 교류

– 북한 : 자주적 의사결정을 하는 지자체가 아니라는 한계 있으나 추진 필요

– 강원도민간 겨울철 체육경기대회(2006) 복원 및 확대 재생산 가능
(동시입장, 상위 한반도기 표식, 춘천빙상장에서 실시. 남북 선발팀 등 출전)

– 민속경기중심 가칭 남북고성군민통일체육대회 개최 추진 등 평창시설, 마식령스키장 등 기존 인프라 활용으로 시설 투자재정 절감

➢ 체육단체 교류

– 체육진흥재원의 대북 생활체육인프라 구축 : 공단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선결

– 개성공단 노동자 를 위한 체육관 등 여기체육시설 설치 지원 가능 등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2 교류 영역 다양화의 출발 기재

➢ 남북 NOC 교류

– 공동훈련 초청 교류
– 남북체육발전협의체 구성 운영 : 지도자, 선수, 스포츠과학자 교류 상시화 등
– 국제대회 공동입장 및 단일팀 구성 운영 편의 보장 지속화

➢ 민간단체 및 세계한인체육인단체 구성 운영

– 남북 · 제3국적 불문 세계 한인체육인단체 구성 지원 운영을 통한 인적교류 확대
– 지역별, 국가별 교류대회에 남북체육단체 또는 조직 상호 초청 정례화
– 세계한민족축전 남북공동개최 추진 등 (개성–파주, 남북 고성군 등)

➢ 학술 및 연구기관 교류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북한사회과학자협회(체육학자) 공동주관 학술대회 개최
(2005. 8월. 항일전쟁승리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연변대학교)
– 남북 민속경기 규칙 표준화 연구 작업 등 실시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남북교류에서 스포츠의 역할과 기능

03 한반도 평화 및 민족 동질감 형성 기여

➢ 한반도 화해협력 환경 조성

– 남북기본합의서 , 남북공동선언 구현의 중요한 수단
–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시 대회 준비를 위한 남북간 상시 접촉 지속
– 국제적으로 공표된 올림픽 개최 성공위한 한반도 위협 요소 완화
–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남북 기술인력 상주 및 교류 지속화 효과

➢ 민족 의식, 동질감 형성 기여

–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으로 상대 국가에 대한 이질감 해소
– 씨름, 태권도 등 다양한 민속경기 교류로 민족 동질감 형성
– 궁극적으로 민족 이질성 극복, 동질성 회복 기여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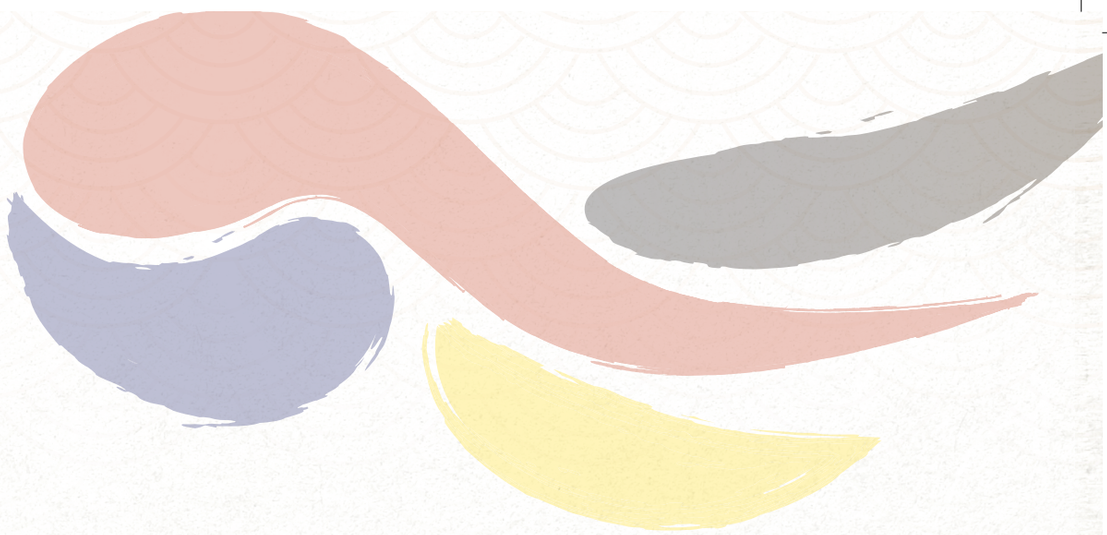
남북 체육교류의 과제

나가며

- 지속가능한 남북교류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필요
  - 남북체육교류협정서 체결 및 남북체육교류지원법(가칭) 제정 필요
  - 공동입장, 공동훈련, 단일팀 구성, 재원 분담 등 제반 사항 제도화 필요
  - 단일팀 구성시 팀구성 탈락 대표선수에 대한 보상책 강구 등
- 범 국가적 · 국제적 교류 굳거번넌스 구축 필요
  - 남북 NOC+IOC+UN+체육전문가 공동 참여 거버넌스 결성
  - 남북한 국회, UN, IOC 등 국제 기구 지지 연대 서명 보증
  - 스포츠를 통한 남북 평화 실현, 지역발전 견인, 국제체육행사 공동참여 보장 등







SESSION4 I 통일 후 체육정책 통합

SESSION4-1.

동서독 체육정책 전환 및 통합

라이너 힙 前 바덴-비텐베르크주 체육연맹 대표

독일 스포츠 통합: 체육정책 전환 및 통합 과정

동서독 통일조약 제 39조는 신연방주의 체육 조직구조는 '자치행정 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며, '담당 공공기관들은 기본법상 권한의 범위내에서 정신적 물적으로 스포츠를 지원 장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스포츠 조직을 위한 제도가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동독의 체육행정 체제가 서독 체제에 따라 군이나 시, 연방주, 국가 단위로 모두 재편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방주 단위의 체육 연맹과 종목별 체육 협회, 군과 시 단위의 스포츠 클럽이 설립되어 있는 서독의 체육 조직구조도 동독에 이전되어야 했습니다.

동독의 체육행정과 스포츠단체 구조는 독일이 통일되는 동안 이러한 전환을 통해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통합되었습니다.

독일의 체육 협회와 단체의 조직 체계(체육 자치행정)

통일 이후 동독의 체육 협회와 단체는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자치조직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자율성은 협회로 하여금 협회의 관심사를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부, 즉 국가 및/또는 정치의 시정 개입은 대체로 제한됩니다.

자치조직은 자체 자금조달(예산계획, 회비, 기부금, 문화예술 지원, 후원)과 자치행정(회원 관리, 직원 채용, 협회 관계법, 보험, 운동 기구, 체육시설, 스포츠 활동)을 의미합니다.

조직 인원은 '자발적 운영과 참여'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 부문에서는 적고 훈련과 스포츠 활동 분야에서 더 많은 편이며, 보통 겸업으로 활동하고, 정도는 적지만 본업으로 협회 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협회 관계자의 면책 특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회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협회 내부 결정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개인적으로, 즉 개인 자산을 담보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리성

체육협회와 스포츠 단체들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며(이익 지향이 아닌 사회적 임무 수행) 따라서 세제 혜택을 받고 비영리 조직의 특권을 누립니다.

또한, **모든 회원 조직의 독립성**과 연방제에 부합하는 구조(11개의 기존 연방주에 5개의 신연방주가 더해짐), **정치적 중립성**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독일 체육 시스템은 **보완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 기관은 스포츠 협회나 단체가 자체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동독의 스포츠 시스템

동독에는 이런 스포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동독의 기존 스포츠 단체는 독일체조체육연맹(Deutscher Turn- und Sportbund)의 각 지역 및 지부 조직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체는 지원기구의 조직 구조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지원기구는 이 스포츠 단체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기업과 생산협동조합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포츠 단체는 운영계획 변수로 규정되는 주체기구의 자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자치조직이라는 부담은 덜 수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설립될 체육협회들은 급격한 구조적 붕괴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전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말입니다. 동독의 체육시설 인프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부족했습니다. 체육시설은 몇 년 동안 보수되거나 현대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구동독의 경제 상황은 저소득 가구, 공공 예산 부족, 전반적으로 취약한 민간 부문이 두드러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동독이 특기종목체육(Leistungssport)에서 거둔 성공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기종목체육의 사회적 지배력과 국가를 받쳐주는 기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독은 스포츠 예산의 3분의 2를 특기종목체육에 투입했습니다.

학교 체육과 서독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견습 스포츠(Lehrlingssport)도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은 서독에서와 달리 동독에서는 항상 시간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건강 증진 및 예방 기능이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우수한 학교 체육 프로그램을 위해 훌륭한 교육을 받은 많은 체육 교사가 투입되었습니다.

동독의 특기종목체육

통일에 있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동독의 특기종목체육입니다. 서독 출신의 유명한 펜싱 코치 에밀 벡(바덴뷔르템베르크 주 타우버비쇼프하임 출생)은 특히 이곳 서울에서 열렸던 88올림픽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만,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동독에서는 특기종목체육이 여기(서독의) 경제처럼 운영됩니다. 우리 서독에서는 특기종목체육이 저기(동독의) 경제처럼 운영됩니다.'

선수들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파란 운동복을 입은 외교사절단'이라 불렸습니다. 권위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상근 직원 1만 명이 소위 '메달 제조'라 할 만큼 메달을 얻어오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약 3천명의 공무원이 약 5천명에 달하는 트레이너와 기술자를 가르쳤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유소년 체육 학교, 대학에서의 트레이너 양성, 성과 진단이 포함된 스포츠 과학 연구, 전 세계의 전지 훈련 캠프에서 체육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모습은 서독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와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독의 메달은 곧 인민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서독의 체육 정치인과 당시 독일체육연맹(DSB) 관계자들은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통일 독일에 편입시키는 데, 제대로 표현하자면, 이 시스템을 구조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과 구소련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특기종목체육 시스템 구조 작전'은 일부만 성공했습니다.

약속했던 것 중 실제로 이행된 것은 별로 없고, 시스템의 기초 부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전제가 서로 너무 상이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신연방주의 주정부들, 각 의회는 재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구동독 정부가 이전에 특기종목체육에서 해왔던 만큼 기여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및 체제 대표단으로서의 운동선수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는 동독 선수들에게 중요한 동기부여이자 '고립된 사회'에서 특권이었습니다. 모든 선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트, 월드 클래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직업 훈련이나 사회 보장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동독의 시스템은 특기종목체육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모두 수용했습니다. 더 성공할수록 개인의 미래도 더 안전했습니다. 사회적 인정, 재정적 이점, 높은 사회적 지위, 서독과의 만남은 개인의 부는 물론 스포츠에 대한 동기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부는 결핍된 경제 사회의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동독의 스포츠 시스템은 이념적으로 너무 큰 짐을 떠안았습니다. 70년대 중반, 동독에서 집중적인 도핑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마치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동독 선수들과 그들의 성공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또한, 선수, 코치, 공무원, 담당 직원이 비밀 경찰 슈타지에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도핑과 슈타지 기록은 독일 체육 시스템의 전환과 통합과정을 평가할 때 두드러지는 주제입니다.

전환 및 통합 과정

일부 체육사학자는 체육 시스템의 통합 과정이 동서독 간 기본 조약이 체결된 197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 스포츠 클럽들의 교류는 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지칭하는 용어만 봐도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50년대에는 '전독일' 스포츠 교류, 60년대에는 '내독' 스포츠 교류, 70년대에는 서독의 독일체육연맹은 '독-독' 스포츠 교류라고 불렀습니다. 동독의 독일체조체육연맹은 국제적으로 정치적 인정을 받은 두 독립 국가의 스포츠 조직 간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국제' 스포츠 교류라는 용어를 고집했습니다.

이때 베를린의 지위를 두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74년 5월 8일,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 간 스포츠관계의 규정에 관한 의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 의정서에서 두 연맹은 '매년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데 합의'하고 '스포츠교류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 체육단체의 규정 및 관례에 따라, 그리고 서베를린에 대해서는 1971년 9월 3일에 개최된 4대국협정 규정과 일치하도록 합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1989년 11월 9일은 모든 합의와 계약, 의정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장벽이 무너지면서 장벽 양쪽의 선수들과 체육 선수를 막는 것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동독 시민들은 희망 사항 중 같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을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교류 활동, 행사, 원조 및 지원 조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독의 상급 체육단체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통합 과정의 조율이 시급했습니다. 독일체육연맹과 연방주 체육연맹, 중앙 연맹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자문 및 지원 조치를 조율하고 합의하기 위해 11개의 연방주 체육연맹의 회장들이 독일체육연맹과 만났습니다. 지원 단체 간 내부 경쟁까지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를린(독일 스포츠 리더십 아카데미)과 프랑크푸르트(독일체육연맹 소재지)에서 연방주 스포츠 연맹과 동독 스포츠 연맹의 대표단의 만남이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두 스포츠 세계가 충돌했습니다.

서독 대표들은 자립적이고 비계층적이며 연방제를 따르는 산하 단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동독 대표들은 매우 전문적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은 중앙집권적이고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거의 권위적인 방식으로 상위 조직인 독일체조체육연맹에 의해 지도되고 통제되었습니다.

많은 논의와 상호 정보 교환,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친 끝에 다음과 같은 구상에 합의했습니다.

1. 동독의 연방주 재편 기간 동안 이에 따른 연방주 스포츠 연맹이 설립된다. 베를린의 경우, 동베를린 체육체조연맹이 베를린주 스포츠 연맹에 편입되면서 체육 통합이 진행된다.
2. 동독의 연방주 스포츠 연맹은 독일체조체육연맹과 합의하여 독일체육연맹 가입을 신청한다. 가입 허가는 국가 통일 이후 적용된다.
3. 독일체조체육연맹은 통일이 될 때까지 기능을 수행하며 이후 규약에 따라 해산을 결정한다.
4. 동독 연방주 스포츠 연맹의 독일체육연맹 가입 조건으로서, 기존 정관이 변경되어야 한다. 독일체육연맹의 구조 개편 위원회는 새 회원의 민주적 참여 기회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경을 준비한다.
5. 독일체육연맹 소속의 주요 연맹과 기타 산하 연맹은 동독 연맹과 각자 다른 시기에 다른 형태로, 그러나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제 규정 및 의무와 관련하여 협의한다.
6.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 대표 간 회담 후 필요 시 공동 조정위원회가 소집된다.

   이에 추가로 1990년 1월부터 활동한 4개의 전문위원회의 업무 결과가 요약되어 두 연맹 간 조정 회담에 제출되었습니다.

   - 구조/행정/재정/조직
   - 생활 체육
   - 특기종목체육
   - 교육/훈련/학문/보건

전문위원회는 국가 단위 연맹들, 연방주 스포츠 연맹들, 스포츠 단체들, 또 당시에는 나뉘어있었던 상위

단체인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올림픽위원회(2006년 5월 20일부터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으로 변경됨)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실무진의 성과는 신연방주 연맹 5개의 독일체육연맹 가입과 국가 단위 연맹들의 통합을 위한 법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1990년 상반기에만 1만 건에 달하는 동서독 스포츠 단체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 간 자매 결연을 통해 몇 년 전부터 동서독 스포츠 대표 간 교류가 있었지만 지자체 수준으로 국한되었습니다. 연방 내독 관계부는 이러한 교류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독일체육연맹 산하의 11개 주 스포츠 연맹이 거의 다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독일체조체육연맹 소속 지구에 대한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주 스포츠 연맹은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스포츠 정책을 조정하고, 관할 구역 내 공공 자금을 관리합니다. '구'연방주 스포츠 연맹은 '신'연방주 연맹이 설립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구연방주 연맹들의 파트너십과 조언은 효율적이었고, 또 독일체육연맹의 추후 협력에 있어 유용했습니다. 직업훈련과 연수와 관련한 대책(자문)은 협회법, 세법, 운영 및 조직, 인력, 재정 및 예산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상호 방문은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이게 했습니다. 이 점은 사람들이 '서독에서 온 아는 체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기를 원했고 또 그래야 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독일체육연맹과 독일체조체육연맹 산하에 올림픽 종목과 비올림픽 종목을 대표하는 국가 단위 연맹들은 통합을 위한 회담을 이어가다가 점차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동독 선수들에게 국제 경기 출전권을 주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5개의 신연방주 스포츠연맹의 독일체육연맹 가입은 1990년 12월 15일 하노버에서 열린 연맹 최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체육연맹 회장은 이에 대해 '1950년, 독일체육연맹은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990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일체육연맹은 40년 동안 큰 성과를 달성했음을 인식하고, 새로이 얻은 모든 독일인의 공동체에서 비롯된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 있게 다가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체육단체의 공동 성장

1990년은 통합의 해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 함께 성장했습니다. 문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992년, 독일체육연맹은 5개의 신연방주를 위한 15년 프로그램 '동독 황금기 계획(Goldener Plan Ost)'을 채택했습니다.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체육 분야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민주적인 단체 및 협회 구조 구축에 대한 필요성 대두
-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는 트레이너와 운동 전문 지도자, 학자들

- 연습과 대회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
- 사후관리 및 수리비용을 위한 자금 부족으로 인한 체육시설 폐쇄
- 동독의 국영기업 및 국가기관의 체육시설을 지자체 소유로 이전

독일체육연맹의 '동독 황금기 계획'은 통합 당시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로부터 반응을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주의회는 구연방주보다 스포츠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애정을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는 16개 연방주가 각자 스스로를 '스포츠의 주'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은 공식적인 합병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도핑과 슈타지 문제 조사는 체육계와 정계, 언론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동독 체육 시스템은 한편으로는 역사를 왜곡했다고 일반화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장된 신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는 통일 이후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드러납니다. 작센주, 튀링겐주, 베를린주에서 훈련 및 연수 과정을 진행할 당시 저는 이제는 순종적인 전 인민군 장교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해버린 야당 당원을 만난 적 있습니다. 의견 차와 각자의 신념이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신연방주에서의 앞으로의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 정책에 대한 두 생각/아이디어/의견에 모두 부합하게끔 하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당시 동독 체육단체의 많은 상근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일생의 업적이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특기종목체육에서는 서독 측 의사결정권자들에 의해 많은 것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유소년 체육학교, 인재 스카우트 및 육성 시스템, 유소년 스파르타키아다(구소련의 전국 스포츠대회, 요즘에는 '유소년 올림픽 훈련'이라는 축소된 규모의 대회가 개최됨), 훈련 아카데미(오늘날 올림픽 훈련센터에 적용됨), 라이프치히의 전설적인 동독 국립 체육대학(Deutsche Hochschule für Körperkultur) 부속 연구 기관 등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라이프치히의 응용트레이닝연구원(IAT)이나 베를린의 스포츠용기구연구원(FES) 등 일부는 재설립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동독 출신의 많은 성공적인 트레이너와 스포츠 과학자들이 현재 호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일 특기종목체육 분야는 이들을 잃었고, 이는 1992년부터 메달 획득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처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갈등은 참고 극복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동시에 공존하는 공공 지원에 대한 바람은 마치 줄타기와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일에 잇따른 여러 일과 상관없이, 통일은 독일에게 선물이었습니다. 체육계와 체육단체들은 이 독-독 통합을 위해 다함께 힘을 쏟고 있습니다.

NOTE

SESSION4 I 통일 후 체육정책 통합

SESSION4-2.

통일과정에서 체육정책 추진 방향

김동선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통일과정에서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방안

김동선(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Ⅰ. 서 론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 스포츠의 정치적 목적 역기능을 상쇄할 순기능
-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수단
- 대북 제재 powerful lever, 남북스포츠교류 cost effective means
- Soft power 발휘할 스포츠교류 활성화
- 평창동계올림픽 메마른 땅에 화해와 협력의 샘물을 솟게 한 마중물
-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스포츠교류 고찰
-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기조와 방안 모색

하드 파워(Hard Power)

-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힘. 강성(硬性) 역량

소프트 파워(Soft Power)

-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인간의 이성 및 감성적 능력을 포함하는 문화적 힘. 연성(軟性)역량

(하버드대 Joseph S. Nye 교수)

Ⅱ.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스포츠교류

역대 정부의 북방관련 정책
노태우정부 북방정책
김영삼정부 세계화정책
김대중정부 햇볕정책
노무현정부 평화번영정책(동북아평화협력정책)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정책(창조적 실용외교)
박근혜정부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노태우 정부

- 북방외교 수단으로 국제 스포츠교류 강화
- 서울올림픽의 소련과 동유럽 참가 계기로 공산권 스포츠교류 역점
- 헝가리, 폴란드, 소련, 중국 등과 수교
- 7.7선언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와 민족 공동번영의 동반자적 관계로 남북스포츠교류 제안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참가, 국가 아리랑, 국호 코리아
- 1991년 8월 유도선수 이창수 귀순 이후 스포츠교류 중단

구 분	내 용
1963.1.24~7.26	1964 도쿄올림픽 단일팀구성 체육회담(로잔)-본회의 3차, 실무 2차 회담
1979.2.27~3.12	제35회 평양세계탁구대회 단일팀 구성 체육회담(판문점) - 4차 회담
1984.4.9~5.25	1994 LA올림픽 단일팀구성 체육회담(판문점)-3차 회담 진행
1985.10.8~1987.7.15	1988 서울올림픽 분산 개최/단일팀구성 체육회담(로잔)-4차 회담
1989.3.9~1990.2.7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구성 체육회담(판문점)-9차 회담 진행
1990.11.29~1991.2.12	1992 바로셀로나올림픽 단일팀구성 체육회담(판문점)-4차 회담
1990.9.23	남북체육장관 회담
1990.11.29~1991.2.12	국제대회 단일팀구성 참가 체육회담-4차
1991.4.24~5.6	제41회 세계탁구대회 단일팀 참가(일본 지바)
1991.6.14~30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참가(포르투갈 리스본)

김영삼 정부

- 1993년 취임사, 남북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 의지 표명
- 핵사찰 거부, NPT 탈퇴 선언, 김일성 사망 등으로 남북관계 경색
-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연계 남북스포츠교류도 공백기



김대중 정부

- 접촉(교류협력), 제공(선공후득), 대화(당국간·비당국간 대화)를 통한 변화와 남북 화해협력과 공존공영 모색
- 6.15 남북정상회담
-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로 적대적 의존관계 양상이 협력적 상호의존 관계로 전환
- 1998년 현대와 아태 『실내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사업 분담(남한 설계 60%, 북한 노동력 등 40%)』 부속합의서 체결
- 1999년 민노총과 직업총동맹 간 노동자축구대회와 통일농구 서울평양 친선경기는 민간차원의 최초 스포츠교류
- 2000년 시드니하계올림픽 개막식 남북 공동입장
-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개막식 공동입장과 최초 인공기 게양



구 분	내 용
1999.8.10~14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평양)
1999.9.27~10.1	현대통일농구교환경기(평양)
1999.11.22~25	현대통일농구교환경기(서울)
2000.7.26~30	삼성통일탁구경기대회(평양)
2000.9.15	시드니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남북 각 90명)
2000.10.1	제81회 부산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재화
2002.9.14~17	태권도시범단교환(평양)
2002.10.14	태권도시범단교환(서울)
2002.9.22~10.15	부산아시안게임 공동입장, 선수단 316명, 응원단 288명 파견
2003.2.1~8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노무현 정부

-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 철도, 도로연결 등 남북 경협사업,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활성화
- 10.4공동선언
- 171회 회담, 역대 정부 가장 많은 대화와 남북스포츠교류 활발
- 미국과 스포츠 비롯 문화교류
- 2006년 춘천남북아이스하키 선수단 35명 참가, 분단 후 최초 동계 스포츠교류
- 7번 국제대회 출전 여섯 차례 남북공동입장, 국내 개최 2번의 국제대회 응원단 파견
- 남한 개최 국제경기대회 응원단 파견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288명),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327명), 2005년 인천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124명)

구 분	내 용
2003.8.20~9.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입장, 선수단 197, 응원단 288명 파견
2003.10.6~7	정주영 체육관 개관식 및 통일농구대회
2003.10.23~28	제주민속평화축전, 남녀축구 및 마라톤 등 선수단 190명 방남
2004.8.13~29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
2005.8.31~9.3	인천 아시아육상대회 북한 선수단 20명 응원단 124명 파견
2005.7.31~8.7	제2회 동아시아축구대회(대구/대전/전주) 북한 선수단 65명 방남
2005.8.14~16	남북통일축구대회(서울)
2005.10.29~11.6	마카오 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2006.2.10~26	토리노 동계올림픽 공동입장
2006.3.2~5	6·15공동선언실천 춘천아이스하키친선경기 선수단 35명 방남
2006.12.1~15	도하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2007.1.28~2.4	장춘동계아시안게임 공동입장
2007.4.6~9	북한 태권도시범단46명 방남
2007.4.29~5.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창원) – 북한 선수단 60여명 방남
2007.8.18~9.9	2007FIFA청소년월드컵(U-17) – 북한 선수단 38명 방남
2007.10.13~25	전남 강진 제2회 국제청소년친선축구대회 선수단 22명 방남
2007.11.9	평양시체육단축구장 준공식 남한대표단 145명 방북

이명박 정부

- 대북 강경기조가 고조되어 한반도정세 국제사회 쟁점
- 비핵 개방 3000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사망사건과 천안함 사건 발생
- 금강산사업 중단, 개성관광, 남북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축소, 개성공단에 대한 육로수송 통제 강화조치
- 당국차원의 식량 및 인도적 지원 거의 중단
- 남북관계 경색으로 가시적 성과 없는 남북스포츠교류 시기
-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이행합의,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동반 진출 활용하지 못하고, 스포츠교류 연속성 단절

구 분	내 용
2008.3.18~23	아시아시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제주) – 선수단 15명 방남
2008.4.26~27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제주) – 선수단 17명 방남
2008.3.26(상하이) 2008.6.22(서울)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전(남북한전)
2008.6.28~7.1	2008 남북태권도 교류행사(평양)
2008.9.10	2010 FIFA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상하이) – 남북한전
2008.8.10~14	2008 베이징 올림픽 코리아 응원단 400여명
2009.3.29~4.2	2010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서울) – 선수단 43명 방남
2011.11.22~23	피스앤스포츠컵(카타르 도하) – 남한 2명 북한 2명 참가

박근혜 정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드레스덴 구상,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 드레스덴 실천이행으로 스포츠교류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마련
- 7·7선언 이후 남북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사실 상 중단
- 인도적 지원과 민간단체 지원도 불허
- 2013년 평양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선수단 41명 참가, 분단 이후 최초 공식적으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 연주
-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273명 파견, 북한 3인방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방남

구 분	내 용
2013.7.20~28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 대회 여자선수단 26명 방남
2013.9.12~17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 역도선수권대회(평양) 선수단 17명 방북
2014.9.19~10.4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273명 참가
2014.10.18~24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 33명 참가
2015.10.28~31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평양) 남한 160여명 방북

문재인 정부

-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평화를 최우선 추구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 주도, 국제사회 협력 통해 추진, 제도화하여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베를린 구상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구 분	내 용
2017.6.24~30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ITF시범단 공연
2017.12.18~22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중국 쿤밍)-북한 2팀 참가
2018.2.9~25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 북한 선수 12명
2018.3.9~18	평창동계패럴림픽 –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24명 참가
2018.4.29~5.6	스웨덴 할름스타드 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18.6.18	남북체육회담(판문점 평화의집)
2018.6.28	남북체육회담 후속 4자회담(자카르타)
2018.7.3~6	통일농구대회 개최(평양) – 남한 남녀 대표팀 참가
2018.7.5~6	남북 체육실무회담(평양 고려호텔)
2018.8.10~12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서울) – 북한 64명 참가
2018.8.15~18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평양)-남한 2팀 참가
2018.8.31~9.15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 북한 선수단 22명 참가
2018.9.20~27	2018 세계유도선수권대회(아제르바이잔) 혼성단체전 동메달
2018.10.6~13	2018 자카르타장애인아시안게임 공동입장, 수영 및 탁구 단일팀 참가
2018.10.25~11.3	제5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춘천 등)-북한 2팀 참가
2018.11.2	남북체육회담 2032올림픽공동개최 의향서 IOC 제출 합의, 2019년 남자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참가문제 논의
2019.1.10~27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남북단일팀 구성)

윤석열 정부 기간 국제스포츠대회

2022	2023
베이징동계올림픽대회(2.4..~20, 베이징)	레이크플래시드동계세계대학대회(1.12.~1.22, 레이크플래시드)
버밍햄월드게임(7.7.~17, 미국 버밍햄)	동계아시아유소년국제대회(2.23~3.5, 러시아 쿠즈바스)
아시아유소년국제대회(7.27.~8.8, 블라디보스토크)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7.28.~8.8. 청두)
뉴질랜드동계대회(8.27.~9.11, 퀸스타운/와나카)	뉴질랜드동계대회(8월말, 퀸스타운/와나카/네이스비)
	동아시아청소년대회(8월 중, 울란바토르)
	항저우하계아시아대회(9.23.~10.8., 항저우)
	월드비치대회(8.5.~8.12., 발리)
	산야아시아비치대회(미정), 중국 산야)
	실내무도아시아대회(11.17.~26, 방콕-촌부리)

2024	2025	2026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1.19.~2.2, 강원)	동계세계대학대회 (1.13~1.23, 이탈리아 토리노)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2.6.~2.22, 밀라노·코르티나)
파리하계올림픽대회₩ (7.26.~8.11, 파리)	동계아시아대회(미정)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대회 (9.19~10.4, 아이치,나고야)
뉴질랜드동계대회(8월말, 퀸스타운/와나카/네이스비)	타슈켄트아시아청소년대회 (미정,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다카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미정, 세네갈 다카르)
아시아비치대회 (미정)	라인-루르하계세계대학대회 (미정, 독일 라인-루르)	
제8회 하계아시아유소년대회 (미정)	뉴질랜드동계대회(8월말, 퀸스타운/와나카/네이스비)	
	리야드실내무도아시아대회 (미정,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월드게임(8.7~8.17, 중국 청두)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스포츠교류에서 얻은 시사점

- 포용적 대북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스포츠교류 활발
- 수동적 대북정책을 기조로 한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스포츠교류 감소
- 북한의 긍정적 태도변화가 중요한 요인
- 기존의 경제적 시혜 개념의 교류나 단일팀구성의 표면적 성과보다 경기력 향상과 같은 호혜적이고 심화된 교류협력 형태로 확대발전

Ⅲ. 통일과정에서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방안



남북스포츠교류 추진 기조



- 『(가칭)한반도사회문화교류협력위원회』(문화분과위원회, 스포츠분과위원회)』 구성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체제 구축
- 실무회담을 정례화하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정치적 상황과 분리
- 선택과 집중의 원칙
- 체육계 주도 정부 지원체계
- 해외동포재단과 한인체육회 네트워 구축
- 과거의 성공적 대회 사례 복원

경기교류



- 남북스포츠교류 경험종목(축구, 탁구, 농구 등)
- 남북 간 국제 경기력 대등 종목
- 국제경기대회 공동입장 및 남북단일팀 구성
- 경평전 부활
- 2036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추진

스포츠교류협력 사업



- 남북 간 기울어진 운동장(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교정
- 취약 계층의 인도적 지원(스포츠 용품, 영양, 의료보건)
-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스포츠산업협력 사업 추진

Ⅳ.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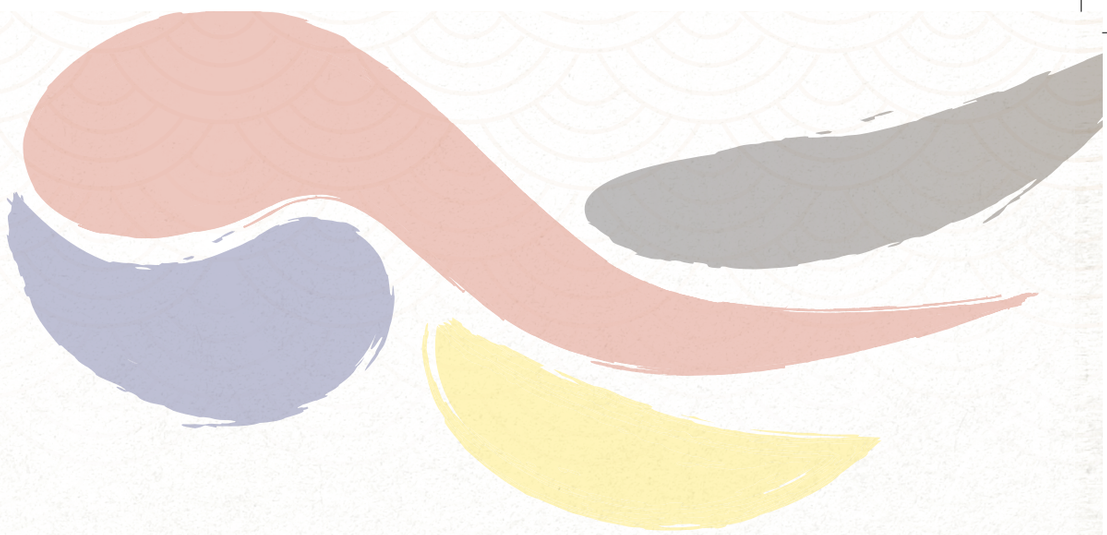


- 통일은 국민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현실이자, 미래
-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 과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정치·군사 상황과 연결시킨 정부의 간섭과 통제 최소화
- 남북 관계 진전 정도와 북한의 수용태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
- 대북포용정책을 기조로 인도적 지원은 정부에서 활발
- 북한이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동안 긴장이 완화되고 상호 동질감 형성
-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사업 추진
- 사회문화, 보건의료, 과학, 경제 등 분야와 융합된 교류형태 추진
- 2036 하계올림픽 남북공동 유치 추진
- Sport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North Korea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ESSION5-1.

동서독 문화교류

기테 조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

통일문제 관련 한독 간 문화교류 - 독일 관점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총 17억 5천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성공적인 한국 TV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드라마(2020년작)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중 회오리바람으로 인해 비무장 지대(DMZ)에 불시착한 성공한 남한의 비즈니스 우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그녀 주위로 북한군인들이 모여듭니다 – 드라마는 액션, 코메디, 러브스토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분단,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 통일의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날의 사회적 상상에 대한 통찰력을 열어줍니다.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그렇다면 ..." – 주인공의 많은 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그녀가 의식을 되찾아 북한 적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북한에서 어딘가로 넘겨져 종속되고 맙니다. 동시에 그녀의 지능, 미모, 비즈니스 기술은 그녀가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으로 힘의 관계가 바로 설명됩니다: 진취적이고, 똑똑하며, 매력적이고 장래가 밝은 곳은 당연히 남한입니다.

그러나 예전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북한의 형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드라마는 국내외 관객들에게 북한에 대한 상상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하며, 전체적으로 군인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의 모습을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하며 호감이 가도록 그립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상호 지식에 기여합니다.

상호 지식? 북한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을 볼 수 있나요?

드라마에는 의미 있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국경경비원이 부주의한 틈을 타 주인공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도망칠 뻔합니다. 그가 부주의했던 이유는 다른 데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90년대 컴퓨터로 한국 드라마에 빠져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알려주듯, 당연히 북한에서는 남한의 문화 상품을 대부분 사본 형태로 몇 년 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는 이를 통해 일반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엄청난 성공은 물론 비무장지대까지 퍼진 특별한 문화도 언급합니다. 한국 TV 드라마 및 음악은 1990년 이후 처음에는 아시아, 이후에는 세계를 정복한 한국 대중문화의 '파도'인 한류 덕분에 세계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2018년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편성한 이후 다시 한번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특히 중국에서도 마지막회 조회수가 4억6,00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는 중국의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 비공식 무역로를 통해 북한의 가정들로 가는 길도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큰 성공은 한국에서 분단국가라는 주제에 대해 갖는 관심은 물론 비무장지대를 넘어 소통하고 교류하며 북한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는 열망까지도 보여줍니다. 이것은 희망의 신호입니다. 서로에 대한 지식은 국제 문화 교류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뢰가 형성되고, 신뢰가 협업으로 이어집니다

문화 교류 - 역사, 유럽, 목표

문화 교류란 무엇입니까? 독일에서 문화 및 교육 교류는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AKBP) 분야의 일부로서 1960년 이후 독일 국제 정책의 '제3의 기둥'에 속하며, 이로써 국제 경제 정책과 전통적인 외교와 함께 독일 국제 정책을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 활동 분야를 '국제 관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 관계'라고 부릅니다.

2006년 독일 연방 의회 자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은 독일의 문화와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문화 전체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국가에서 스스로 특별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자신의 것 중 최고'로서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 전시, '공개 행사' 또는 문화 수출이라는 개념은 이후로 변화하였습니다. 2000년 연방외무부는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이 '사람과 문화 간의 대화, 교류 및 협업'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눈높이 대화'도 점점 가부장적 개념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은 국가 간 그리고 사람 간의 이해를 돕습니다. 사람 간의 요소, 소위 말하는 국제 관계에서의 '사람 대 사람'이라는 접근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원의 업무는 오히려 점점 더 협력적이고 공동 생산적인 접근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로서, 국가, 지역, 정체성 및 언어 경계를 넘어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국제교류처에서 우리는 양자 원칙(독일 대 주최국)에서 벗어난 국제적인 업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합니다.

국제 문화 관계의 형성은 유럽이 고안한 아이디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사이, 빈에 위치한 헝가리 아카데미 외에 가장 오래된 조직 중 하나인 독일국제교류처(1917년) 또는 영국 문화원(British Council, 1934년)과 같은 세계 평화의 문화를 알리는 최초의 조직이 등장했습니다. 독일국제교류처 외에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 및 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 또한 연방 정부에서 위임 받아 문화 및 교육 관계를 촉진하고 가꾸는 독일 기관입니다.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은 외무부에서 관장하지만 사법에 따라 조직된 독립된 조직으로, 소위 '중재자'로서의 외무부와 기본 협정을 통해 조직화되고 규정된 협업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조직에 속합니다. 독일문화원은 160개소가 조금 안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800개소가 넘는 프랑스 네트워크 다음으로 큽니다.

민간 주체를 통해 주최국의 시민 사회와 문화적 관계를 돌보는 모델은 지속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독립성으로 인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게 합니다. '신뢰 형성 및 이해'('신뢰 및 이해/지식 구축')은 유럽연합 국가문화원(EUNIC)에서 연합한 유럽 문화원들의 모토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이끄는 집행위원회가 구성된 이래로 막대한 후퇴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는 EU 차원의 외교 정책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EU 전략은 시대에 맞는 전략입니다. 이 EU전략은 독일국제교류처가 속한 유럽문화원의 조합의 권고로2016년

발표되었습니다. EU는 국제 문화 교류에 있어 그들의 참여의 기초가 되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문화 다양성은 EU가치의 견고한 구성요소입니다. EU는 평화, 법치 국가, 표현의 자유, 상호 이해 및 인권 존중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위해 확고히 서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한 다양성 촉진은 글로벌 플레이어로써 EU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 전략은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전파하는 것과 분명히 관련이 없으며, 다음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서로 경청하고 서로로부터 배우기(상호 경청 및 학습), 함께 역량을 구축하기(공동 역량 구축), 각 기본 조건에 맞는 조치의 설정(상향식 원칙), 상호성과 공동 형성. 이는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 이것은 탈식민지 맥락에서의 문화 교류의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협업을 통해 가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사람들 간에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기본 전제조건은 평화, 개인의 자유, 권리를 특징으로 하는 유럽의 생활 모델과 유럽 내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독일의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AKBP) 모델: 외교 정책의 역주행

글로벌 위기에는 글로벌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특히 시민사회의 각계각층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야 하며,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매우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에서 묘사한 모델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절대적 정당성과 함께 독일 정치가 국내 정치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미 2022년에 문화 교류와 관련해 대규모의 예산 삭감이 있었으며, 2023년에도 추가 삭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독일 의회 내 국제 문화 및 교육 정책 소위원회 위원장인 미셸 뮌터페링은 최근 이 시나리오를 '외교 정책의 역주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문화와 교육에 있어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하면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들의 가혹함을 강조합니다. "스마트한 글로벌 통합에 의존하는 독일과 같은 국가의 경우 글로벌 학문 및 문화 교류에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과 번영의 모델이 가진 장래성 중 상당한 부분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독일 재정 정책도 또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용감하게 절약하는 사람은 모든 이성에 맞선 채 외교정책을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정권

독재나 다른 어려운 정권의 지배를 받고 표현과 예술의 자유가 없는 곳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이에 해당될까요? 그러한 정권은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위협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곳은 문화 및 교육 교류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는 교류를 하고, 대화를 유지하며 아주 작은 구멍을 통해 다른 삶의 세계 및 가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베를린에서 자란 연극 감독 토마

스 오버렌더는 이때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 곳에서 프랑스문화원을 다니며 프랑스 문학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지적 지평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세계, 상상력, 가능성은 문화를 통해 열립니다. 자신의 통치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내용에 노출되어 있는지 강력한 검열을 실행하고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권보다 이것이 더 명확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창의성의 변형되는 힘을 특히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장려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공식 및 공식적 문화 교류

이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나오는 은밀한 방식으로 문화 상품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군인이 그 예시입니다. 이는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간 협약을 맺은 문화원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에게 중요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계속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볕정책 동안 이루어졌던 다음의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2004년 독일문화원은 평양에 도서열람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약 130제곱미터 크기의 도서열람실에는 약 4,000권의 책이 비치되었으며, 이 중 절반은 기술 및 과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한 최초의 이 외국 문화 시설에는 매일 약20~30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언론을 통해 일간지와 잡지 등 비판적 매체가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자료들은 치워지고 이어서 독일문화원은 도서열람실을 다시 폐쇄했습니다.

이후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뮌헨 캄머 오케스트라는 북한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한했으며, 독일 영화는 여러 차례에 걸쳐 평양국제영화축전에 참여하고 수상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독일문화원 업무의 일환으로 평양 중앙도서관에 종이복원작업소가 들어섰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독, 분단, 평화혁명을 내용으로 다루는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빌레 베르게만, 바바라 클렘, 아르노 피셔의 사진과 함께한 독일국제교류처의 동독 사진 순회전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부산 고은 사진 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국내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아르노 피셔 전시회는 최근 부산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183장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사진들은1927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진작가이자 사진학 교수였던 아르노 피셔가 평생 완성한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의 흑백 사진은 오늘날까지 동독작가들뿐 아니라 여러 세대의 사진작가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전시의 출발점은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던 도시 베를린에 초점을 맞추고 1961년 베를린장벽 건설과 관련하여 공개가 금지되었던 그의 초기 작품, '베를린 상황'입니다. 동독 문화 및 패션잡지 '지빌레'에 실린 그의 작품과 마를렌 디트리히와 같은 유명인들의 매혹적인 초상화도 선보입니다. 동독과 뉴욕, 인도 및 아프리카 대륙 등의 해외를 가로지른 수많은 여행사진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독일국제교류처는 1993년 이후 총 21차례의 순회 전시회를 한국에서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국제 예술 분야와 관련하여 세계 지도에서 중요한 나라입니다. 1995년 및1997년에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는 각각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 전시회였습니다. 비엔날레는 아이디어와 개념이 국내외적으로 교류되는 자리이며, 이러한 기능면에서 독일국제교류처 또한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독일국제교류처는 예술가들과 전시기관을 위해 '세계로 가는 창문'을 열어 서로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참가자 그룹을 한정하고 제한하지만, 효과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예술가와 기관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새로운 경험을 얻고, 다시 다른 장소에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일부 다른 가치 체계의 교류는 다른 삶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확장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부당함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그렇지 않았다면 숨겨져 있었을 주제들을 드러냅니다.

주한독일문화원 업무에서도 분단과 통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멜라니 보노 프로그램 팀장에 의하면 동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가 최소 매년 하나씩은 개최됩니다. 2021년에는 연극계와 공동 제작한 다큐-픽션 '보더라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독일과 한국 배우들은 이주와 정착, 분단과 통일에 관해 이야기하고 통합의 의미를 질문합니다. 연극평론가이자 작가인 위르겐 베르거가 수년간 독일과 태국, 한국을 오가며 진행한 조사 끝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다수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이경성 연출가와 소속 한국 극단 '크리에이티브 VaQi'와의 협업 하에 다수의 워크숍을 거쳐 탄생한 작품입니다.

'Throwback89'는 북부독일방송(NDR)이 인스타그램용으로 개발하고 독일문화원이 한국 관객을 위해 각색한 온라인 프로젝트입니다. 인스타그램이 1989년부터 존재했다면 어땠을까? 'Throwback89'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며칠 전 로스톡 출신 학생 노라 좀머펠드(가상의 인물)의 이야기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전합니다. 이것은 양국의 콘텐츠가 어떻게 교환되고 유사한 맥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예술 및 문화에서의 분단 및 문화 교류에서의 분단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문화 교류 단체가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도 분단과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리얼 DMZ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예술적 관점에서 남북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작가의 관점에서 보여주고자 예술가들을 비무장지대 인근 철원에 있는 여러 공간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밖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같이 DMZ를 타이틀에 실은 다양한 축제와 공간들이 있습니다.

외르그 하이저(독일), 크리스티나 리쿠페로, 박가희(서울) 전시감독이 기획한 2018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는 '비록 떨어져 있어도'였으며, 동시에 광주의 주제는 '상상된 경계들'로, 얼마나 강력하게 이 주제가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국제적 공감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경과 국경통과 또한 예술에서 세계적으로 되풀이되는 주제입니다. 예술은 정치적일 수 있으며 창의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미래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같지만 같지 않은: 문화교류에서의 통일

이것은 분단의 문제점 및 동서독에 열중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접점을 찾는 독일의 몇 안 되는 예술가

중 한 명인 헨리케 나우만(1984~)이 하는 일입니다.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위해 고안하고, 독일국제교류처가 후원한 작품 '프로토 네이션'에서 헨리케 나우만은 남북한의 상황에 대한 다음 장면을 찾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같지만 같지 않은.

얼핏 보면 매대 위에 힐과 부츠가 진열된 미니멀한 스타일의 흑백 공간이 실제 신발 가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펌프스 한 켤레는 굽이 세라믹 소재의 소금 및 후추통으로 되어 있고, 다른 켤레는 특대 벨트로 묶여 있어, 신기 힘든 신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미술 애호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오브제들의 조합을 통해 기묘함을 만들어낸 초기 초현실주의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 작품과 달리 '프로토 네이션'은 '부티크' 영상에서 드러나듯이 사회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부한 형식의 패션광고 비디오는 '고난의 행군', '종족 민족주의', '한류' 등의 텍스트와 함께 북한 엘리트 패션 관련 사진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북한의 기근을 말하며, '종족 민족주의'는 통일을 한민족의 가장 신성한 목표라고 주장하는 북한 정권 및 현 정부의 많은 한국 정치인들이 가진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비엔날레 가이드에 따르면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여 만든 '신발'은 '합의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만남 또는 강요된 통일의 시각화'일 수 있습니다. 중앙데일리 문소영 문화부장은 헨리케 나우만의 작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프로토 네이션'은 남북 간의 큰 차이로 인해 남북한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비판적이고 우려하는 젊은 한국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작품은 통일이 가져올 기대하지 못한 이상한 아름다움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예술가들도 분단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리얼 DMZ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임민욱은 2018년 부산 비엔날레를 위해 '내가 지은 이름이에요'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은 수수께끼 같은 추억의 물건과 마네킹으로 가득 찬 TV스튜디오의 세트를 모방한 설치물입니다. 화면에서는 한국전쟁 중 어린 시절 가족과 헤어진 한국인을 다룬 1980년대 TV 쇼의 가슴 아픈 내용을 담은 클립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들은 번호가 적힌 나무 칠판을 손에 들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오래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확한 나이, 이름 또는 가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세부사항에 대해 어린 아이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불확실한 기억으로 대답합니다. 끝없이 보여지는 영상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합니다.

헨리케 나우만과 임민욱의 작품에서와 같이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반영과 상상 속 북한 삶의 현실, 이 모든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직입니다. 반면 북한 예술 및 문화에 대한 접근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식 및 분류 지식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식민지 배경으로부터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 예술을 '다른 것', '부적절한 것',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가정하도록 이끕니다. 그러한 이유로 2018 광주 비엔날레에서 조선화, 한지에 그린 대형 수묵화, 야생 동물, 기념비적 전투, 극적인 탈출이 있는 댐 건설 현장, 도취상태의 조명 디자인 등 북한 예술이 전시

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참고로 북한은 만수대와 함께 아프리카 국가에 기념비를 세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

통일 - 이것이 옳은 단어입니까? 이 용어는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으며, 따라서 언어, 문화, 수 세기에 걸친 오래된 역사로 연결된 한민족의 두 부분이 어떻게 다시 합쳐질 수 있을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모든 토론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북한도 나중에 여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관상으로 북한은 명백히 덜 매력적인 시스템 및 그에 따른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모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수통일 또는 평화공존을 통한 통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1989년 독일과 같은 상황은 '기적'(랄프 브로벨)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독일의 과정에 대해 '합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독일 맥락에서 예측되는 학습요소를 전달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떠오릅니다. 문화 교류를 위한 EU 전략 원칙이 여기서 통합니다.

- 서로의 말을 경청하기: 양측의 경험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한국은 모든 분야, 특히 문화에 있어 북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함께 일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물론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에 대한 편향된 생각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북한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이미지가 자리잡도록 한국이 현명하게 일할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서는 남한의 다른 이미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이상 시인(1910~1937)에 대해 석사 논문을 썼을 때, 북한 출신의 작가 또는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신청을 하고 출석을 해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조차 겪는 이러한 어려움은 북한에 대한 다른 이미지를 얻는 것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점점 더 많은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북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동독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적극적인 정치 활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남북한이 국민들을 접촉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한은 강한 파트너로서 첫 발을 내딛고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개방 속도가 느리거나 빨라져도 북한은 자동으로 매우 빠르게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지만 이 역시 현명하게 동반되어야 합니다.

- 서로로부터 배우고 함께 역량을 키워갑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 박물관, 소장품, 건물, 영화관 등에 대한 향후 방향은 남북한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첫 단계에서는 인내와 경청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독에서 사회화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리고 지금도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폄하를 겪는 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한 예술 및 문화는 더 가치 없는 것

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차별화되고 비판적이며 존중하는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국제 전문가는 건강한 거리를 두고 전문 지식을 통해 유사한 맥락으로부터 배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0년 이상 서독을 위해 순회 전시회를 조직하고 개최한 독일국제교류처가 그 예입니다. 1991년 통일협정에 따라 동독을 위해 주로 자매 국가에서 순회공연을 조직한 예술전시회센터(ZfK)의 남은 지분도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독일국제교류처와 함께, 컬렉션을 인수하여 예술전시회센터를 기억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독의 헤르더 연구소와 같은 다른 많은 기관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30년 간 아무도 이 곳의 역사와 예술전시회센터(ZfK)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11,000점의 작품, 무엇보다 종이작품들은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위치한 우리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동독 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이 작품들을 차별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의 예술가, 학자, 큐레이터가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동독 큐레이터들 역시 이러한 '국가 예술'을 폄하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험은 한국의 맥락에서 예상되는, 피해야 할 경험 중 하나입니다. 즉, 지배 정당인 서독의 견해가 동독에 흡수되어 고민하는 과정 없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란츠 파농은 식민 지배의 영향과 관련하여 이러한 견해를 만들어냈으며, 이 원칙은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권력의 차이를 공개적으로 명명하며, 서로 접근하는 경우 기관의 미래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여기서 양쪽의 인식과 경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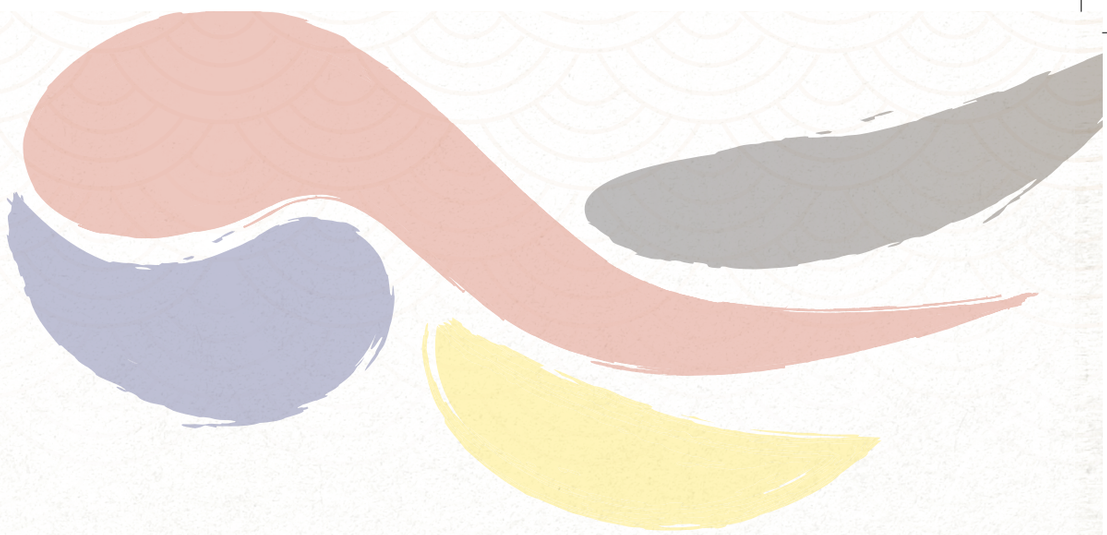
- 상향식 원칙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인가 입니다. 서울, 베이징 또는 워싱턴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은 덜 중요합니다.

- 공동형성

북한의 시스템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태도, 능력, 지식은 한국(남한)의 생활 및 경제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으로의 공동 전환이 성공할 것임을 태도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좋은 교육 기회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남한의 현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무엇보다 보상을 하려 할 것이고 제품들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려 하겠지만, 이는 조정과정을 천천히 진행하지 않으면 내면의 공허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의 참여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시민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권한 위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약한 국가 환경, 탈식민지 국가 또는 소위 '실패한 국가'에서 활동했던 조직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다른 맥락에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시야를 넓히고 국제적 관점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회 형성의 어떤 관점이 이전할 가치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가 아파르트헤이트가 끝난 후 매우 신속하게 이 기간의 청산을 계획하고 모든 측면

에서 시민사회를 폭넓게 참여시킨 것과 유사하게 정부에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8 부산비엔날레에 헨리케 나우만의 작품 '독일통일의 추모 제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묵직한 옷장 한 개와 여러 개의 장식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식품으로는 야구방망이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보라색과 흰색 무늬의 애도 화환 두 개가 있고, 매듭 위에는 '독일 통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30년 후 통일의 모습을 한탄하는 작가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시다. 나우만이 한국을 위해 보여준, '다름 속의 같음'과 '기대하지 못한 이상한 아름다움'이라는 비전이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SESSION5-2.

남북 문화교류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남북문화교류

박계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Ⅰ. 남북문화교류의 의미

다시 물어야 할 것 같다. 문화교류는 왜 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은 진정한 통일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라는 질문과 연동되어 있다. 통일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70여년의 세월동안 적대적을 살아온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발생할 사회적 갈등이, 경제적 이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의 해결은, 남과 북 사이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마음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문화교류는 마음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속성이 있다. 익숙한 시선으로 낯선 것을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문화를 중심으로 다른 문화를 배타적으로 수용하곤 한다. 따라서 문화는 가치의 문제 이전에 경험과 이해가 주요하다. 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문화적 접촉의 접촉면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문화적 이질화는, 통일 이후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것이다. 이를 완화하고 민주적인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주민의 일상 문화를 비롯한 심리 및 의식문화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문화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Ⅱ. 제도의 정비

이 과정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 다양성과 그 공존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 형성 과정의 축적하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지속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남북문화교류의 대부분은, 이벤트적인 단발성 사업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류의 단절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발성의 만남 자체가 다시금 소중해지기 마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이벤트의 꽃과 같은 존재로서만 사고한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반성해봐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간 남북문화교류는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사업중단 반복, 개별 분야별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되어온 결과,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협력기반 구축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로 정부 주도로 민간교류분야 정책이 수립되어 교류 당사자인 민간 단체들의 현장 경협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정책결정구조를 갖고 있었다. 민간단체 역시 주로 개별적으로 활도하여 상호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협소했었다.
남북문화교류의 지속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내부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개선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북사회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한다. 민관정책협의기구의 성격으로 민간이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 또한 사회문화교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민관 상호 소통 공간으로 구축해서, 다양한 분야별 플랫폼을 설치하고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분야 사업자들간 상호 소통 및 정보 공유 활성화를 견인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사회문화거버넌스는 지자체까지 포함한 공공조직, 교육자치단체나 지방의 문화단체, 언론, 문화기업들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로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 사이의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공동의 준거를 틀을 만들고, 상호간에 법적 권한은 부여함으로써 제반 교류가 일시적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남북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의 형식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점차적으로 분야별 논의 채널을 분명히 하고 제도화해나가면서 사회문화교류협정체결과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을 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III.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언어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겨레말큰사전' 사업,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협력사업 재개 및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경우 언어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업이지만, 남한, 북한,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쓰는 언어를 포괄하고 있다. 같은 나라 일본에서 살아가더라도, 남한과 친한, 또는 북한과 가까운 동포의 언어는 각기 다르게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러한 언어 각각이 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해외교포를 포함한 한민족을 하나의 동일한 언어체계로 귀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만나서 다르게 변화되어 온 모습 모두를 존중하는 사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문화교류를 통해 지향하고 있는 '민족 동질성'회복이란, 단일민족이라는 혈통주의에 근거한 협소한 의미의 민족주의가 아닌 동시대의 세계문화와 소통하는 민족문화로서의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교류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 삶 속에 살아있는 열린 전통, 무형문화유산 교류

이러한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남북문화교류는 매우 소중하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란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것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세대를 통해 전승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속에서 정체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공존이라는 관점과, 과정 중심적 입장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이러한 무형문화유

산이 세대에서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승되기 위해서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창조적 계승 및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치로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김치 담그기'가 보호되고 진흥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김치'를 사람들이 계속 삶 속에서 먹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계속 '김치'를 사랑하려면 당연히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현대인이 사는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김치의 맛도 변화하고 재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서면,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이 그 전통이 서로 같더라도, 분단 이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데올로기, 이에 따른 미학적 견해가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 사이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통이 계승 발전될 수 있으며, 그 전통 모두 소중하다는 전제가 가능하다.

남쪽의 전통이 정통성을 갖고, 북쪽에서 전승된 조금 다른 모습의 전통이 '짝퉁'이 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사회에서 동시대의 다양한 문화들과 호흡하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계승된 전통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맥락 안에서 남북간의 문화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김정은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비물질문화유산 교양거점으로서 '민속거리'에 대한 강조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된다. '민속거리'는 김정일시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사리원시에 민속거리를 만들었다. 이 곳에는 고조선시기의 고인돌무덤을 옮겨다 놓기도 하였으며, 경주에 있는 첨성대 등과 같이 물질문화유산의 모형도 만들어 놓았지만 이와 더불어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윷놀이, 장기, 바둑놀이 등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배치하였고, 찰떡집, 지짐집 등 민속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유식 장소로도 기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남한 경주에 있는 첨성대가 놓여있는 점이 시선을 끄는데, 남북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김정은은 '민속거리'의 경우에도 평양에 대대적인 민속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동시에 각 도별로 지역적 특색있는 비물질문화유산을 결합시킨 도별 민속거리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단고기 요리 경연', '전국 김치 전시회', '전국 민족음식 전시회', '전국 조선옷 전시회', '전국 바둑 애호가 경기', '대황소상 전국 민족씨름 경기대회', '동지죽 경연대회' 등을 매년 개최하면서 '조선민족제일주의'와 '애국주의'를 적극적으로 교양시켜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인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비물질문화유산)' 남북문화교류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DMZ 민속거리 남북무형문화유산센터 건립

현재 남북한 장인들을 통해 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장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에서는 단절된 전통이 북한에서는 전승되고 있고, 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남한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로 중요한 장인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전수자가 없어서 무형무화유산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다.

남한 무형문화재의 북한 전수자에게 계승, 북한의 비물질문화유산을 남한의 전수자에게 계승하는 상호

전수를 통해, 남북한 전통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문화로 민족공동체를 복원해내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 때 현재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는 '민속거리', 남한의 '민속촌' 컨셉을 적용시킬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각 지방적 특색이 있는 민속거리를 각 도별로 만들 것을 독려하고 있음으로 이 정책의 매락에서 DMZ민속거리를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 시도하고 있는 '민속거리'에는 북한의 다양한 종류의 무형문화유산이 접목되어있다.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만드는 여러 민속 음식, 술, 민속 놀이, 공예, 한의와 관련된 뜸과 침, 마사지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직접 민속거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를 보다 확장하여 민속거리를 조성하고 국내외 사람들이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민속거리 안에는 무형문화유산센터를 조성하여, 전주에 있는 '한국무형유산원'처럼 무형유산에 대한 전시, 연구, 조사, 아카이브 센터 등을 운영한다.

2)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매개로) 남북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 구축 사업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은 매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 관련 남북문화교류사업에서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남북간의 문형문화유산에 대한 파악이다.

한국에 사무소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총괄하는 유네스코 기관인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의 활동 지원을 통해 남북 무형문화유산아카이브를 구축 한다. 남북한 무형문화유산 지속적인 협의 테이블을 국제기구 산하에 마련함으로써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를 통해, 북한의 비물질유산의 보호 및 목록화 기록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에 존재하는 무형무화유산을 보호하고 실태를 파악한다. 이는 통일을 대비한 체계적 준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바처럼 현재 북한은 비물질문화유산의 '자료기지화'라는 이름으로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국제화'의 강조를 통해 국제기구 특히 유네스코와의 관계에 매우 적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본 사업을 제안한다. 남북 무형문화유산 교류사업은,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의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에서 체계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몇몇 사례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남과 북에 남아있는 '서도민요' '남도민요' 등도 이름은 같아도 내용에서 많이 다른 형식으로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남과 북이 무형문화유산 목록을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감상하고 조사하여 내용에 다가가는 것도 매우 절실히 요구되는 요소이다. 따라사 영상이나 사진 자료 등 다양한 매체을 집적하는 아카이브화가 필요하다.

현재 남과 북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아카이브의 정보 교류는 비대면 상태에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과 같은 외부상황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아태센터를 매개로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공동구축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과 북의 무형문화유산을 동아시아 공통의 자산으로 이해하는 국제적 관점의 복원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신뢰 구축을 토대로 향후 남북한이 함께 운영하는 무형문화유산센터 건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 한다.

IV. 해외거점을 활용한 문화교류

1. 중립국 거점 공간을 통한 문화교류

중립국에 한반도 뮤지엄을 만들어서 남북의 문화를 소개하고, 제3국에서 교류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K문화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독일처럼 북한이 공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나 도시에서 주도적으로 남북문화교류를 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베를린 자유대에서 한국의 전통 서원을 연구를 위해 북한 현지를 조사하며 연구하고 있는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확대해내는 방식, 북한의 학생들이 자유대학교로 연수를 나왔던 프로그램들은 좋은 예를 제안하고 있다. 자유대학교의 예처럼, 한국과 북한과 독일과 그 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교류하고 연구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남북문화공동체가 세계의 청년들과 함께 복원되고 창조된다는 점에서, 개방성과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독정부를 비롯하여 관련 국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 체제 또한 매우 중요할 것이다.

2. 해외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교류 : '코리아관' 운영

무형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유산간의 교류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김일성시대부터 전통문화를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여 봉건지배계급의 문화 예술은 척결해야 하고, 민중들의 문화예술은 계승할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관점은 꽤 오랜 시간동안 지켜졌으나, 소련의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의 진행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부각되자 북한의 김정일은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전통문화를 계급주의 관점에서 파악하던 정책을 폐기했다. 동시에 그동안 척결하고자 했던 봉건지배계급의 문화예술을 복권시켰다. 동시에 북한의 현대예술가들 중에서, 문인화와 같은 봉건시대 지배계급의 문화예술을 계승해서 현대적으로 창조해내고자 했다가 비판받고 사라졌던 1950-1960년대 전반기의 북한의 문화예술인들 또한 1990년대에 다시 복권시켜냈다. 이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작품들은 현재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남북한 간에 거의 차이점이 없다. 이에 따라

전통문화예술의 남북간 교류에서 이데올로기에 때문에 발생하는 걸림돌은 거의 없다. 따라서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었던 국보급 북한 전통문화작품 전시와 같은 교류전시 및 관련 학자들간의 인적교류의 활성화는 매우 소중하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가 아닌 해외의 유수의 뮤지엄에서 남북문화교류를 시도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K문화의 우수성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북한 또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지녔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한반도가 우수한 문화공동체임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 다양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을 비롯하여 등 독일, 미국 등 해외 소재 박물관 내 한국실(24개국 68개처)을 통한 남북문화유산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해외 박물관 한국관이 처한 문제는 전시할 국보급 문화재가 없어서 이를 시급히 발굴해야 하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담당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남북문화교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북한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해외박물관에서 전시함으로써, 남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아름다운 무형문화유산을 해외전시를 통해 국내외 관람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민족의 문화적 우수성 및 통일의 의지를 대내외에 홍보한다.

현재 우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영박물관 한국관 등 해외 박물관 한국관의 인력 파견 지원 프로그램을 북한의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적용하여, 이 기금을 통해, 해외 박물관이 북한의 전문인력들을 해외박물관에 초청하는 방식이다.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전문인력들이 해외문화교류사업에 파견되어 현지에서 해외박물관 인력들과 함께 중 장기간 일을 수행케함으로써 발달된 박물관 시스템 및 유물 보존 및 전시에 대한 실질적인 견물을 보고 익힘으로써 귀국 후 자국 내에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성장시키며, 동시에 해외문화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하는 것이다.

V. 평화예술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는 남북간의 문화교류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전세계 문화예술인들과 남북이 함께 교류하는 방향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전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예술인들과의 연대를 통해 드러내는 활동이다. 이를 문화예술작품으로 창조해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다. 관련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며, 관련된 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그 성과를 2,3년만에 드러내는 예술제 형식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평화의 개념을 생태 전반으로 확장해내는 것도 매우 유의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최근 평화를 추구하는 전세계 예술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화두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담대한 구상'에서 밝히고 있는 '그린 데탕트' 정책과 연동되어 DMZ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의 성과들을 2,3년에 한번씩 문화예술인들이 결합하여 접경지역마을에서 지역주민들과 함

께 드러내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분단의 현장에서 세계 평화예술인들이 연대하고, 이들이 우리의 분단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고민한 흔적들을 드러내고 축제의 장을 벌여서, 한반도를 세계시민들의 평화의 공론장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DMZ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 및, 인문학 및 자연과학의 분야들을 콜라보레이션하는 형태의 국제평화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 언어가 다른 세계시민들과의 마음의 연대를 이뤄내고 창조적인 미래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남한에서 시작되겠지만, 국제 DMZ평화예술제를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것을 지행하고, 북한의 참여를 통해 문화로 DMZ 남북을 물리적으로 연결해낸다.

VI. 문화아카이브 구축

한반도의 상황은 갈등과 분쟁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비평화 상태가 일상화, 습관화되어 현재의 비평화 상태가 평화상태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국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박주화는 이러한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상적, 무형적, 유토피아적인 상상의 수준에서 평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평화를 달성하는 방식 및 내용이 부족하다. 특히 분쟁상황에서 성장한 세대는 분쟁의 삶 이외에 다른 삶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삶, 평화로운 삶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추사적 상상의 삶으로 치부되기 쉽다. 결국 구체적이고 현실적, 그리고 일상의 삶과 유리되지 않는 평화의 삶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극복하고 평화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공동체에 대한 상상 이전에, 지난 남북교류과정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생활했던 역사를 호출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만만들어진 일상문화를 아카이브화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남북문화아카이브는, 단순히 남북문화예술교류나 북한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아카이브를 넘어, 경제교류를 포함한 모든 남북교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상문화간의 교류에 대한 아카이브를 함께 하여야 한다.
'만월대 발굴', '개성공업지구의 예'에서와 같이,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예를 통해 남과 북이 평화로운 일상문화를 만들어냈던 예들을 발굴하고 문화아카이브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물성을 토대로 도래할 평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보편적 단어인 '평화'가 특수한 개념의 '평화'로 인지되는 계기점을 발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단절되었다 지속되었다는 반복하더라도, 5년, 10년 이상 지속된 남북교류 과정은 통일의 공간이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일상문화가 서로 부딪혔고, 오래와 갈등을 만들었으며, 동시에 어떠한 새로운 일상문화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일상사 관련 문화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휘들을 수집하고, 개성공단의 일상생활 물건들을 수집하는 등 일련의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롭게 남과 북이 함께 일상을 살아갔던 삶들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은 먼저 온 통일의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에도 토대가 될 것이다. 문화아카이브 구축은, 이를 토대로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예술작품을 제

작함으로써, 자신들의 꿈꾸는 도래할 공동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남북교류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일상문화아카이브 구축뿐만 아니라,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남북문화교류는 지속성이 매우 중요한데, 남북 및 국제정치적 관계가 지속성을 담보하기가 싶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의미를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아카이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토대가 구축되어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남한에서의 다양한 대체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영상 자료와 화보집 등이 아카이브화 되고 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화질의 영상자료, 미술작품들, 포스터 등에 이르기 까지 아카이브화가 요구된다.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다방면의 문화예술작품들이 아카이브화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 감수성은 정서적 측면만을 함양시키는 것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음.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인지적 일관성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감정을 서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이 획득한 지식과 정보는 개인의 감정적 선호에 영향을 주며, 이는 다시 가치 평가로 이어져, 신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동시에 평화 감수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은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인지적 측면에 변화를 초래하여서, 그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 관심을 유발시켜내기도 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문화아카이브 구축은, 이러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유효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VII. 북한 문화예술 방송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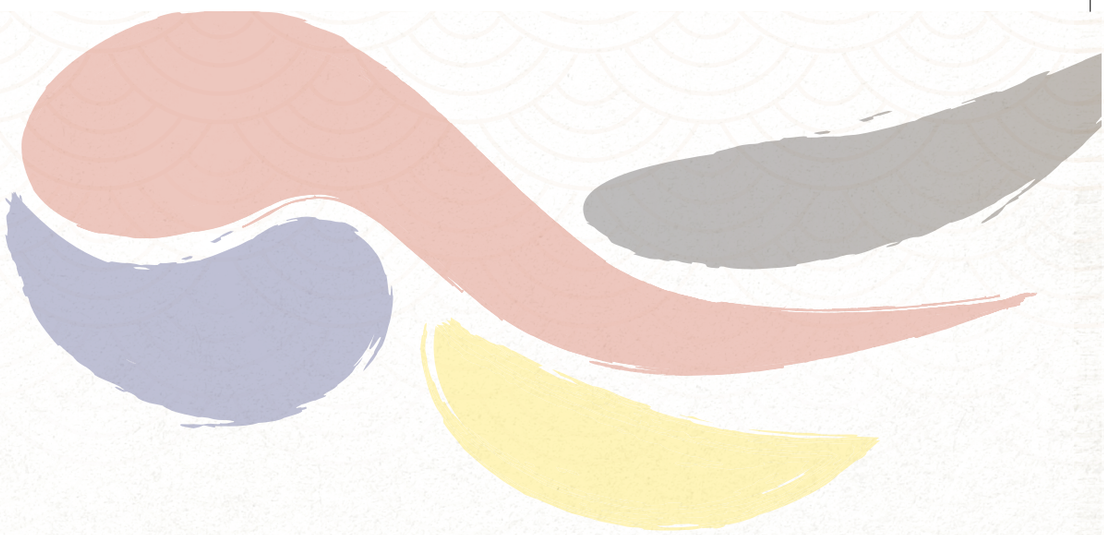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북한의 일상문화와 문화예술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매체가 북한 방송이다. 관련 방송과 언론, 출판 등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민족동질성 회복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매체보다는 일방향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대중적인 매체인 방송부터 개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출판 문화의 개방이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동시에 상호 개방하여야 상호 이해와 공감대가 효과적으로 동작되겠지만, 남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개방을 시도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 이후 북한의 남한 방송 개방을 통해 상호 개방이 이루어지고, 이후 인터넷 환경에서의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남북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체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방송개방이 남한 사회의 북한 혐오를 확대해낼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북한주민들이 한류 드라마나 음악 중 선호하는 작품들이 있다는 것은, 남과 북이 70년을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밑에서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동시대적 감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한이 선제적으로 중앙TV와 같은 대표적인 방송을 개방되면,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로부터 북한 방

송에 대한 여러 평가들이 자유롭게 국내 환경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북한 방송 편성이나 연출기법에 암암리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이 남북이 그동안 이질화된 문화의 현실을 파악하고 동시에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VIII. 인터넷 환경에서의 남북문화교류 플렛폼 구축

문화교류의 특징 중 하나는 인적 교류 없이 콘텐츠 교류가 가능하다. 미래세대가 친숙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렛폼구축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재미와 의미가 결합된 디지털 속에서 남북의 문화교류가 가능한다. 남북간의 분단이라는 것은 물리적 지경학적인 경계의 의미가 강하다. 더 이상 앞으로 걸어나갈 수 없는 분단선이 남과 북을 막고 있다는 것이 통일을 막는 경계의 출발점에 있다. 따라서 인터넷 세상은 물리적인 경계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인터넷 세상에 진입한 순간 분단은 무력화된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인터넷에서의 쌍방 소통을 우리 삶의 매우 익숙해져있다.
'줌'프로그램을 통해 만나고, 각자 자신의 집에서 연주를 해서 독일에 있는 연주자들과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낼 수 있다. 인터넷에서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아바타가 나타나 나의 연주를 들려줄 수도 있다. 예술교류는 제작자보다는 그가 만든 작품에 소통이 더 중요하다. 제작자가 만은 작품의 의도 보다는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그 작품에 대해 받은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수용미학은 이미 학계에서 고전적인 미학틀이 되어져 있따. 이러한 예술교류의 특징은 인터넷 환경 안에서의 남북교류가 매우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플렛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먼저 문화에술아카이브가 토대로서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남북문화교류에 대해 비약하나마 논의를 해보았다. 다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겠다. 남북문화교류는 왜 해야 하는가? 남북의 국민들이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70년간 이질적이고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밑에서 살아온 남북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통합'이라는 과제는 쉽지 않은 숙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통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남북문화교류가 지속성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다양한 방안들이 더 많이 토론되고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SESSION 1 I Aktuelle Entwicklungen

SESSION 1-1.

(Kr)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Rich tung der Nordkorea-Politik der neuen Regierung

Kim Jun Pyo, Referent für politische Zusammenarbeit beim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Die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ie Vereinigungs- und Nordkorea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o Meine Damen und Herren, ich bin **Kim Jun Pyo**, **Referent für politische Zusammenarbeit beim Ministerium für Wiedervereinigung.**

o Ich gratuliere herzlich zur 11.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o Ein besonderer Dank geht an Herrn Carsten Schneider und andere Gäste, die trotz ihres vollen Terminkalenders aus Deutschland nach hierher geflogen sind.

o In diesem Vortrag werde ich über **die wichtigen Punkte der Vereinigungs- und Nordkorea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für die nächsten fünf Jahre sprechen.

Inhaltsverzeichnis

I.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I.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III. 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 Zuerst werfen wir einen Blick auf **di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 Danach gehe ich kurz auf **die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ein, **vor denen wir stehen.**
- Als Letztes erläutere ich **die 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I. Aktuell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o Nun kommen wir zur **internationalen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sowie zur **Situation in Nordkorea**.

1. Internationale Situation um die koreanische Halbinsel

| Verschärfung der strategischen Konkurrenz zwischen den USA und China

Stärkere Solidarität im liberaldemokratischen Lager vs. Neue internationale Ordnung, vorangetrieben von China

| Fragmentierung der Weltpolitik um Großmächte nach russischem Angriff auf die Ukraine

| Zunahme unkonventioneller Bedrohungen
- Bedrohungen für die Sicherheit, die kein Land allein lösen kann

o Bei den jüngsten internationalen Angelegenheiten geht es um die **Verschärfung der strategischen Konkurrenz zwischen den USA und China** und die Zunahme der daraus resultierenden **unkonventionellen Bedrohungen** für die Wirtschaft, öffentliche Gesundheit und das Klima.

o Nachdem die USA während der Regierung Trump die **Politik der Abschreckung gegen China verstärkt** hat, setzt die **Regierung Biden** darauf, auf der Basis der **Solidarität in der liberaldemokratischen Gemeinschaft** China in Schach zu halten.

o Gleichzeitig diversifiziert **China** seine Politik, um eine **chinazentrierte wirtschaftliche sowie politische Ordnung** zu schaffen, etwa durch Wirtschaftswachstum, AIIB, 'OB1O'.

*(Deng Xiaoping) seine Zeit abwarten (韜光養晦)→(Jiang Zemin) einen Unterschied machen (有所作爲)→(Hu Jintao) friedlicher Aufstieg (和平崛起)→(Xi Jinping) neue Großmachtbeziehung

o Hinzu kommt, dass der **russisch-ukrainische Krieg**, der seit Februar dieses Jahres (bis heute) andauert, die **globale Fragmentierung um die Großmacht** weiter verstärkt.

o Diese strukturellen Variablen können entweder für uns, die eine progressive innerkoreanische Beziehung leiten müssen, ein Hindernis oder eine strategische Chance darstellen.
- Die Richtung ist noch unklar, aber durch **strategisches Handeln** können wir eine für uns **günstige Dynamik** schaffen.

2. Situation Nordkoreas: Intern

| 10 Jahre Regierung Kim Jong-un
Verstärktes System durch Kontrolle über die Partei, Politik und das Militär

| Verstärkung asymetrischer Macht wie Massenvernichtungswaffen
- Erklärung zur Vervollständigung der Atomwaffen (Nov. 2017), Verbesserung der Raketentechnik
  * Im laufenden Jahr: Vorbereitungen für den 7. Atomtest abgeschlossen, 22 Raketen und Marschflugkörper abgeschossen
- Entwicklung taktischer Atomwaffen, Bedrohungen gegen Südkorea

| Wirtschaftslage verschlechtert seit Verschärfung der Sanktionen
- Wirtschaftsgröße (nominales BIP): 16,3 Milliarden USD im Jahr '21 *1 % Südkoreas, 2 % für BIP pro Kopf
- Wirtschaftswachstum: 2017 –3,**5 %**, 2018 (-4,1), 2019 (0,4), 2020 (-4,5), 2021 (-0,1)
  * Im Jahr 2021 leicht verbessert durch Basiseffekt
- Seit 2020 hat sich das Leben der Bevölkerung verschlechtert wegen COVID-Sperrmaßnahmen

o Als nächstes möchte ich die **interne**, **externe sowie innerkoreanische Situation Nordkoreas** erläutern.

o Erstens, was die Politik in Nordkorea betrifft, müssen wir in Betracht ziehen, dass **Kim Jong-un in den letzten zehn Jahren das System aufrechterhalten hat**, mit gewisser **Kontrolle über die Partei, die Regierung und die Armee**.

- Am Anfang hat er seine Kontrolle verstärkt durch Mittel wie die **Hinrichtung von Jang Sung-taek**, aber in jüngster Zeit scheint es, als würde er durch **offizielle Institutionen** regiert.

- Wie bei der 5. Generalversammlung des Zentralkomitees der Partei (8.-10. Juni) werden die **Schlüsselpositionen** der Partei häufig **ersetzt** (als Strafe).

- Es geht darum, die **interne Kontrolle zu stärken** und die **innere Disziplin zu etablieren**.

o Der nächste Punkt betrifft den **militärischen** Bereich im Zusammenhang

mit **nordkoreanischen Atomwaffen und Raketen**.

- Trotz der internationalen Sanktionen hat Nordkorea die **Entwicklung von Atomwaffen und Raketen weiter vorangetrieben** unter dem Vorwand der **notwendigen "Selbstverteidigung"**.

- Bisher wurden **vier der sechs Atomtests** Nordkoreas während der **Amtszeit von Kim Jong-un** durchgeführt.

- Nachdem er **2017 die "Atomwaffenvervollständigung**" erklärt hat, hat er die militärischen Spannung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verstärkt, indem er das **Atomwaffenarsenal durch Diversifikation und Miniaturisierung ballistischer Raketen ständig verbessert hat**, während er gleichzeitig die Möglichkeit von **einem Einsatz von Atomwaffen** sowie **taktischen Waffen** erwähnt hat.

- Allein in diesem Jahr hat Nordkorea **mehr als 20 Raketen** abgefeuert, darunter 16 ballistische Raketen, zwei Marschflugkörper und vier Raketenwerfer.

- Darüber hinaus wird derzeit vermutet, dass die **technischen Vorbereitungen für den siebten Atomtest schon abgeschlossen** sind.

- Insbesondere zeigen die Entwicklung taktischer Atomwaffen durch Nordkorea sowie die bedrohlichen Äußerungen zu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dass **Nordkoreas Atomwaffe die größte Bedrohung für unsere Sicherheit darstellt und unser Problem ist**.

o Als Letztes ein paar Worte zur **wirtschaftlichen Lage Nordkoreas**.

- Die Gesamtwirtschaft Nordkoreas belief sich (im Jahr) 2021 auf rund **16,3 Milliarden* US-Dollar** (Pro-Kopf-BIP 637 US-Dollar), **weniger als 1**

% der Wirtschaft Südkoreas im selben Jahr (1,6465 Billionen US-Dollar).

* Quelle: UN-Statistik 2021

- Die Wirtschaftswachstumsrate lag zu Beginn der Regierung Kim Jong-uns bei etwa 1 %, und hat sich seit 2017 wegen der Sanktionen negativ entwickelt.

- **Die Auswirkungen der verschärften Sanktionen** seit 2017 und **der drastische Rückgang des Außenhandels aufgrund der Grenzsperrung** wegen COVID-19 in den letzten zwei bis drei Jahren haben die **Probleme mit Rohstoffen** verschärft. Dieses Jahr kommt die **interne Sperrung** hinzu, was das **Leben der Bevölkerung schwieriger** macht.

3. Situation Nordkoreas: Extern und innerkoreanisch

| [USA] Fordern Ende der feindseligen Politik und verfolgen das Prinzip "Auge um Auge, Zahn um Zahn"

US-Nordkoreanische Gipfel (2018-19) scheiterten -> Wechsel zur harten Linie, Fortsetzung von Atom- und Raketentests

| [China und Russland] Bemühung um die Bildung eines Lagers durch eine enge Beziehung

- Öffentliche Unterstützung seitens Nordkoreas für China zugenommen (2016 0, August 2022 50)
  * Auf der Website
- China und Russland waren gegen Sanktionen, als Nordkorea im März ICBM getestet hat

| [Südkorea] Beziehungen seit 2019 abgebrochen

- Kim Jong-un hat von "Feindlichkeit gegen Südkorea" in seiner Rede vom 27. Juli gesprochen
  * Drohungen von Kim Yo-jong am 10. und 18. August

- Demontage der südkoreanischen Einrichtungen am Berg Geumgang (seit März 2022)

o Als nächstes kommen wir zu der **externen und innerkoreanischen Situation.**

o Nordkorea hat nach seiner Erklärung über **die** "Vervollständigung der Atomwaffen" seine Bereitschaft gezeigt, seine **Außenbeziehungen im Interesse des wirtschaftlichen Wiederaufbaus zu verbessern**.

- Die Beziehungen zwischen Nordkorea und den USA schienen sich durch den Nordkorea-USA-Gipfel in Singapur am 18. Juni zu verbessern, aber **nach dem Scheitern des Hanoi-Gipfels 2019 wurde wieder eine harte Linie verfolgt**.

  * Aufruf zur Aufhebung der feindseligen Politik gegen Nordkorea und Einhaltung des Grundsatzes "Auge um Auge, Zahn um Zahn"

o In Bezug auf **China und Russland** setzt Nordkorea auf eine **enge Nord**korea-**China-Russland-Beziehung**, um seine **strategische Position** in der Stimmung eines neuen Kalten Krieges auszubauen.

- Nordkorea hat kürzlich seine Unterstützung für die diplomatischen

Positionen Chinas und Russlands durch sein Außenministerium zum Ausdruck gebracht und schickt häufiger offizielle Briefe an hochrangige Persönlichkeiten.

- Darüber hinaus zeigt sich ein Trend zur **Stärkung der Beziehungen mit China und Russland**, wie z. B. bei der **Entsendung von Arbeitern in die ukrainische Donbass-Region**.

o Was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betrifft, **so** fanden 2018 **drei Gipfeltreffen** statt, aber seit dem **Scheitern der Nordkorea-USA-Gespräche in Hanoi im Februar 2019 liegen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weiterhin auf Eis.**

- Mittlerweile hat Nordkorea, **das seit fast 80 Tagen seit der Einführung der neuen südkoreanischen Regierung geschwiegen hat**, **seine Kritik verstärkt**, und **Kim Jong-un hat eine öffentliche Drohung** bei der Feier des Waffenstillstandsabkommens geäußert.

- Kim Yo-jong hat ihre harte Rhetorik gegen Südkorea fortgesetzt, indem sie am **10. August** unsere **Flugblätter** für die Einschleppung von COVID-19 verantwortlich machte und **mit Vergeltungsmaßnahmen drohte,** und am **18. August** ihre **Ablehnung der「kühnen Initiative」** zum Ausdruck gebracht.

II.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o Ich werde jetzt kurz auf die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eingehen, vor denen wir derzeit stehen.

Herausforderungen und Aufgaben

| **S**trategische Konkurrenz zwischen den USA, China und Russland und Festigung der beiden Koreas

Gegenseiteiger positiver Zyklus der Denuklearisierung und der Aufbau von Vertrauen -> Koexistenz, die auf Wiedervereinigung ausgerichtet ist

- Die koreanische Halbinsel von einem Konfliktherd von USA, China und Russland zu einer Kooperationsplatform verwandeln

| Internationalisierung der Korea-Frage

- Wir müssen unsere Rolle stärken
  * Mit der "kühnen Initiative" beginnen

| Wenig Interesse an Wiedervereinigung innerhalb Südkoreas, Inkonsistenz der Nordkoreapolitik

- Schaffung einer Basis für eine überparteiliche Nordkoreapolitik
- Ausbau einer Wiedervereinigungs-Kommunikationsplatform für die 2030er-Generation

o Erstens besteht gegenwärtig die Sorge, dass sich die Teilung zwischen Nord und Süd **verlängern und festigen wird**, da die internationalen Dynamiken – wie die strategische Konkurrenz zwischen den **USA, China und Russland** – kompliziert verflochten sind.

- Und wie bereits erwähnt wurde, stärkt Nordkorea seine Atomkraft und seine diversifizierte Raketenkapazitäten, und **auch die Konfrontationsstruktur zwischen Nord und Süd** wird gestärkt.

o Unsere oberste Priorität in dieser Situation ist:

① Uns dafür einzusetzen, dass die Entnu**k**learisierung und der Aufbau von Vertrauen in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zu einem gegenseitig positiven Zyklus werden, so dass die Beziehunge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auf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ausgerichtet werden.

② Die zweite politische Herausforderung ist, dass

- unser **Bewegungsradius** in den Angelegenheiten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es Norden schrumpft, da die Lösung der

Nordkorea-Frage ständig **internationalisiert** wird.

- Es stimmt, dass die Beziehungen zwischen den USA und Nordkorea eine Schlüsselrolle bei der Lösung der nordkoreanischen Atomfrage sind, aber es ist nicht der richtige Ansatz, das Problem **lediglich auf die Tagesordnung der USA und Nordkoreas zu setzen**; wie können es auch **nicht einfach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überlassen**.

- **Auf der Grundlage einer engen Koordinierung mit der robusten Allianz Korea-USA** müssen wir **einen größeren politischen Raum schaffen**, indem wir unsere **proaktiven Bemühungen bei der Lösung der nordkoreanischen Atomfrage verstärken** und **gemeinsame Projekte durchführen**.

③ Schließlich gibt es das Problem, dass unsere Wiedervereinigungspolitik **nicht konsequent vorangetrieben werden kann**, aufgrund einer allgemeinen Verschlechterung des Bewusstseins unserer Bürger, insbesondere der **jungen Generation**, und innenpolitischer Konflikte.

o Nur wenn das öffentliche Interesse an **der** Wiedervereinigung wächst, kann die Wiedervereinigungspolitik wieder an Schwung gewinnen.

- Insbesondere müssen wir das **Bewusstsein für die Wiedervereinigung** unserer Bürger, einschließlich der jungen Generation der 20**er**, 30er Jahre, stärken.

III. 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o Unter diesen politischen Erwägungen möchte ich über die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sprechen.

1. Grundlage der Nordkoreapolitik
International + Innenpolitisch

Robuste südkoreanisch-amerikanische Allianz
Internationale Solidarität auf **der** Basis von Freiheit und Menschenrecht**en**

Überparteiliche Nordkoreapolitik und "Staffellauf"

o Zunächst werde ich auf die Grundlagen der von der Regierung Yoon Seok-yeol verfolgten Politik gegenüber Nordkorea eingehen.

1.

o Es geht darum, einen Konsens und Vertraue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zu schaffen, auf der Grundlage einer solidarischen Allianz mit den USA und der Solidarität auf der Basis von Freiheit und Menschenrechten.

- Wenn die Vereinigungspolitik auf der Zusammenarbeit zwischen den USA und Südkorea beruht, wird sie an Wirksamkeit und Dynamik gegenüber Nordkorea gewinnen können.

o Darüber hinaus bietet die Allianz zwischen den USA und Südkorea eine konstruktive Grundlage für die Zusammenarbeit mit Nordkorea, auch in den Beziehungen mit China.

- Wir müssen auch mit China einen Rahmen für die weitere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in Nordkorea-Fragen schaffen.

- China wird mit uns beim Thema Nordkorea ernsthafter und konstruktiver zusammenarbeiten, wenn die Kooperation zwischen Südkorea und den USA stark bleibt. In dieser Hinsicht ist die Allianz mit den USA sehr wichtig.

2.

o Beim nächsten Punkt geht es um die interne Grundlage; nämlich die Notwendigkeit einer parteiübergreifenden Nordkoreapolitik.

- Wir brauchen eine kohärente Nordkoreapolitik, um eine Änderung der Haltung Nordkoreas herbeizuführen.

- Das ist auch der Ausdruck, den unser Minister so oft verwendet: "Staffellauf".

- Um dies zu erreichen, müssen wir über die ideologische Unterscheidung zwischen Liberalismus und Konservativismus hinausgehen und **zwar** die Grundsätze einhalten, aber eine überparteiliche Nordkore**ap**olitik praktischer und flexibler gestalten.

2. 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uk-yeol

Vision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auf der Basis einer liberaldemokratischen Grundordnung: Entnuklearisierung + Frieden + Wohlstand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Grundsätze
1. Nicht-Toleranz militärischer Provokationen
2. Gegenseitig vorteilhafte innerkoreanische Beziehungen
3. Schaffung einer Grundlage für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5 Hauptaufgaben
1. Positiver Zyklus von Entnuklearisierung und Vertrauensbildung
2. Normalisi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auf der Basis von gegenseitigem Respekt
3.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sowie Minderung des Leids der Teilung für die Nordkoreaner
4. Restaurierung der ethnischen Homogenität durch Offenheit und Kommunikation
5.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zusammen mit den Bürgern und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o Vor dem Hintergrund dieser politischen Grundlage erläutere ich die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eok-yeol.

1.

o Die Vision der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Yoon Seok-yeol ist, durch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auf der Basis einer demokratischen Grundordnung eine koreanische Halbinsel der Denuklearisierung, des Friedens und des Wohlstands zu verwirklichen.

2.

o Um dies umzusetzen, haben wir drei Grundsätze festgelegt:

o Der erste lautet: die Nicht-Toleranz gegenüber militärischen Provokationen.

- Jegliche militärischen Provokationen seitens Nordkoreas werden nicht toleriert, und wir sind gegen eine unilaterale Veränderung des Status Quo.

- Über diese Abschreckungspolitik hinaus brauchen wir auch eine Nichtangriffsvereinbarung, Denuklearisierung und **den** Aufbau von militärischem Vertrauen.

o Der zweite ist die Entwicklung einer Win-win-Beziehung zwischen den beiden Koreas.

- Durch Kommunikation und ein flexibles Prinzip der Gegenseitigkeit sollen Nord-Süd-Beziehungen entwickelt werden, die für beide Seiten vorteilhaft sind.

o Der dritte ist die Schaffung einer Grundlage für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 Statt einer Wiedervereinigung, bei der ein Land das andere absorbiert, wird auf einen Ansatz auf **der** Basis von Vertrauen gesetzt, um die interne sowie externe Grundlage für die Wiedervereinigung zu schaffen.

3.

o Angesichts einer solchen Vision und solchen Prinzipien hat die Regierung fünf Schlüssel-Aufgaben festgelegt.

- Erstens, ein positiver Zyklys von Denuklearisierung und Vertrauensförderung zwischen den beiden Koreas.

- Zweitens, Normalisi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die auf gegenseitigem Respekt beruhen

- Drittens,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sowie Minderung des Leids der Teilung für **die** Nordkoreaner

- Viertens,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als ein Volk durch Offenheit und Kommunikation

- Fünftens,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zusammen mit den Bürgern und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1. Positiver Zyklus von Entnuklearisierung und Vertrauensbildung

| "Kühne Initiative"
Substantielle Entnuklearisierung Nordkoreas <-> Politische, militärische, wirtschaftliche Gegenmaßnahmen
- Lösung der politischen, militärischen Konfrontationsstruktur, gemeinsamer Wohlstand durch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 Gemeinsame Wirtschaftsentwicklung in drei Hauptbereichen: Infrastruktur, Wohlfahrt und Investition
  * 5 Hauptprojekte wie Infrastrukturunterstützung für Energieerzeugung, Energieübertragung

| Großzügige Unterstützung während der frühen Phasen der Entnuklearisierungsverhandlung**en**

| Unsere Rolle verstärken der Zusammenarbeit mit den USA

o Nun komme ich zu den fünf zentralen Aufgaben der Wiedervereinigungspolitik der Regierung.

o Erstens, den virtuellen Zyklus der vollständigen Entnu**k**learisierung Nordkoreas und des Vertrauensaufbaus zwischen Nord und Süd vorantreiben.

- Die Regierung will die nukleare Bedrohung Nordkoreas wirksam verhindern und das Kalkül Nordkoreas durchkreuzen, indem sie Sanktionen und Druck einsetzt, während sie strategische Bedingungen schafft, um Nordkorea durch Dialog und Diplomatie an den Verhandlungstisch für die Entnuklearisierung zu führen.

o Bei diesen Prozessen ist der entscheidende die "kühne Initiative", die der Präsident am 15. August veröffentlicht hat.

- Die "kühne Initiative" ist ein Gesamtkonzept, das den wirtschaftlichen,

politischen und militärischen Bereich umfasst und gleichzeitig den Entnu**k**learisierungsprozess in die Wege leiten und umsetzen will.

- "Kühne Initiative" besteht sowohl aus Programmen, die nicht zur tatsächlichen Denuklearisierung gehören, und die in der Anfangsphase durchzuführen sind, als auch welchen, die in der vollständigen Denuklearisierung umgesetzt werden sollen.

- Zum Beispiel können die "Austauschprogramme für Ressourcen und Nahrungsmittel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oder die Unterstützungsprogramme für medizinische Behandlung, Trinkwasser und die Forstwirtschaft auch während der frühen Phasen der Denuklearisierung umgesetzt werden, wenn nur Nordkorea zustimmt.

- Wenn in diesem Prozess ein umfassender Konsens um die Atomfrage erzielt wird und ein tatsächlicher Prozess der Denuklearisierung in Gang gesetzt wird, werden die fünf Hauptprojekte in Infrastruktur für Energieerzeugung **und** -übertragung vorangetrieben in den drei Bereichen Infrastruktur, Wohlfahrt und Investition, um die Wirtschaftslage sowie das Leben Nordkoreas drastisch zu verbessern.

o Im heutigen Vortrag habe ich mich darauf konzentriert, welche Weise der Denuklearisierung Nordkoreas wir anstreben, und auch welche Wirtschaftsentwicklung aus Sicht Nordkoreas notwendig ist.

- Da die Punkte sowohl für **eine** politische als auch militärische Zusammenarbeit bereits ausgearbeitet sind, könnten wir die Pläne für alle drei Bereiche besprechen, sobald der Dialog beginnt.

o Darüber hinaus werden wir, in stabiler Kooperation mit den USA, als Hauptakteur in der Atomfrage die führende Rolle übernehmen und in enger Zusammenarbeit mit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die Initiative kühn umsetzen.

o Am 1. August hat Kim Yo-jong in einer aggressiven Rede die "kühne Initiative" verhöhnt, kritisiert und abgelehnt: dies war aber zu erwarten.

- Nichtdestotrotz wird unsere Regierung Bedingungen schaffen, um Nordkorea an den Verhandlungstisch zu bringen, indem wir entschlossen und konsequent unseren Weg zur Entnuklearisierung Nordkoreas gehen.

2. Normalisi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auf der Basis von gegenseitigem Respekt

Innerkoreanische Beziehung**en**

| Diskussion und Zusammenarbeit bei gegenseitig vorteilhaften Themen
- Themen wie Entnuklearisierung, Zusammenführung getrennter Familien, entführte Menschen in Nordkorea und Gefangene **ausgewogen behandeln**

| Entsprechend der nationalen Würde
- Entschlossen und nach konsequenten Grundsätzen
- Bei Fehlverhalten Korrekturmaßnahmen und die Verhinderung einer Wiederholung verlangen

| Einhalten von Vereinbarungen
- Verfestigung einer Struktur, bei der das Vereinbarte auch eingehalten wird

Innenpolitische Maßnahmen
| Normalisierung von Prozessen zu Kontakten und Gipfeltreffen mit Nordkorea
- Nach dem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o Zweitens, werden wir auf der Basis **gegenseitiger Achtung** die Nord-Süd-Beziehungen **normalisieren.**

o Auf der Basis der **Gegenseitigkeit** wollen wir nachhaltige innerkoreanische Beziehung**en**, die zur **nationalen Würde** unseres Landes passen.

- **"Gegenseitigkeit"** bedeutet, dass wir bei einer Wiederaufnahme von Gesprächen nicht nur über die Themen, die Nordkorea wünscht, wie zum Beispiel Austausch und Unterstützung, reden, sondern auch **über** Entnuklearisierung, **Verankerung des Friedens, Partnerschaft, humanitäre Hilfe, Zusammenführung getrennter Familien, entführte Menschen in Nordkorea und Gefangene**, auf eine Weise, die gegenseitig vorteilhaft ist.

- **Bei** den **Nord-Süd-Beziehungen, die der nationalen Würde entsprechen,** handelt es sich um die Entschlossenheit, auf **ein Fehlverhalten Nordkoreas**, wie die Bombardierung des Verbindungsbüros, **entschieden zu reagieren** und **Korrekturmaßnahmen und die Verhinderung einer Wiederholung zu verlangen**.

- **Nachhaltige Nord-Süd-Beziehungen** werden umgesetzt, indem die **von**

den beiden Koreas vereinbarten Strukturen eingeführt werden, wobei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nach konsequenten Grundsätzen** geführt werden.

o Wir werden auch Kontakte sowie Gipfel mit Nordkorea verantwortungsvoll **im Einklang mit den relevanten Gesetzen, wie dem Gesetz über die Entwickl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führen, und **auf transparente Weise in Konsultation mit den zuständigen Ministerien**.

3.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sowie Minderung des Leids der Teilung für **die** Nordkoreaner

| Konsequente humanitäre Hilfe

- Zusammenarbeit im Gesundheitswesen schrittweise ausweiten

| Durchbruch finden in Fragen **wie die der** getrennten Familien, Kriegsgefangenen, Entführten und Vertriebenen

- Angesichts ihres Alters ist dies die letzte Chance
  * Von 113.147 getrennten Familienmitgliedern, die sich für die Suche angemeldet haben, leben nur **noch** 44.014 (Durchschnittsalter 82 Jahre, monatlich 400 Sterbefälle)
- Eine grundlegende Lösung finden, entsprechende gegenseitige Maßnahmen wie Lebensunterstützung unternehmen

|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der Nordkoreaner, Etablierung der Menschenrechtsstiftung **für** Nordkorea

- Direktor auswählen und beratenden Ausschuss bilden

o Drittens, die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und die Minderung des durch die Teilung bedingten Leids der Nordkoreaner**.

o Die humanitäre Zusammenarbeit mit der nordkoreanischen Bevölkerung soll **ohne politische oder militärische Erwägungen konsequent** vorangetrieben werden, und die Zusammenarbeit im Gesundheitswesen wird schrittweise ausgebaut.

o Was die Frage der **getrennten Familien, der Kriegsgefangenen, Entführten und Vertriebenen** betrifft, ist **angesichts deren fortgeschrittenen Alters die fünfjährige Amtszeit** der Regierung Yoon Suk-yeol tatsächlich die letzte Chance auf eine Lösung.

Die Regierung will, angesichts dieser ernsten Erkenntnis, einen Durchbruch durch eine grundlegende Lösung erreichen, die alles in Betracht zieht, was wir tun können, einschließlich bilateraler Maßnahmen im Gesundheitswesen und in der Wohlfahrt.

o Auch über die **Gründung der Nordkoreanischen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setzen wir **uns** dafür ein, dass der Direktor der Stiftung gewählt wird und ein beratender Ausschuss für die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innerhalb dieses Jahres ins Leben gerufen werden kann. Dazu arbeiten wir auch mit dem Parlament **zusammen**.

4. Wiederherstellung der Einheit als ein Volk durch Offenheit und Kommunikation

| Sozi**ok**ulturellen Austausch konsequent fördern
- Austausch und Unterstützung in Kultur, Geschichte, Kunst und Sport
  * Das große Volkswörterbuch, Kaesong-Manwoldae, Austausch in sieben Richtungen des Buddhismus

| Aktivitäten zur Nachrichtenvermittlung schrittweise öffnen
- Rundfunk, Presse, Kommunikation, etc.
- Gegenseitiges Verständnis und Empathie verbessern

| Projekt Nord-Süd-Green-Entspannung
- Zusammenarbeit in Forstwirtschaft, Trinkwasser und Sanitärversorgung -> umweltfreundliche Zusammenarbeit auf Dorfebene, Katastrophenhilfe -> Aufbau einer Klima- und Umweltkooperationsinfrastruktur

o Viertens werden wir die **ethnische Homogenität durch Offenheit und Kommunikation zwischen Nord und Süd wiederherstellen**.

- Selbst vor der Entnuklearisierung werde ich mich aktiv für **den** Austausch und **die** Zusammenarbeit zur Wiederherstellung der ethnischen Homogenität einsetzen.

o Wir werden den **soziokulturellen Austausch konsequent fördern, wie**

beim großen Volkswörterbuch Kaesong-Manwoldae, und die **Unterstützung verstärken** für einen aktiven soziokulturellen Austausch um **Ethnizität, Geschichte, Religion und Kultur**.

o Wir werden die **Aktivitäten zur Nachrichtenvermittlung (Rundfunk, Presse, Kommunikation etc.) schrittweise öffnen**, um **gegenseitiges Verständnis zu erweitern** und die **ethnische Homogenität wiederherzustellen**.

o **Die Nord-Süd-Green-Entspannung** fördert zunächst die Zusammenarbeit in den Bereichen **Forstwirtschaft, Trinkwasser und Sanitärversorgung.**

- Wir werden uns auf **eine umweltfreundliche Zusammenarbeit auf Dorfebene, Katastrophenhilfe und den Aufbau einer "Klima- und Umweltkooperationsinfrastruktur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ausdehnen.

5.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zusammen mit den Bürgern und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 Wiedervereinigung mit dem Volk und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 Wiedervereinigungsgrundlagen für die Umsetzung von Artikel 4 der Verfassung
* "Die Republik Korea strebt nach der Wiedervereinigung und wird eine friedliche Vereinigungspolitik, die auf der liberaldemokratischen Grundordnung beruht, etablieren und durchführen."

| Verbesserung der "Maßnahmen zur Wiedervereinigung der ethnischen Gemeinschaften" auf der Basis eines nationalen Konsens

| Teilnahme von Jugendlichen an den Diskussionen zur Wiedervereinigung
- Von nationaler Pflicht zu einem zukunftsorientierten, praktischen Ansatz auf **der** Basis einer liberalen Demokratie

o Der letzte Punkt ist die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mit dem Volk und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o Es geht um:

Erstens, die 1994 angekündigten Maßnahmen zur Wiedervereinigung der ethnischen Gemeinschaften durch nationalen Konsens fortzusezten und weiterzuentwickeln.

Zweitens**,** Förderung des Rahmengesetzes über die Schaffung einer Friedens- und Vereinigungsgrundlage, um die institutionellen Grundlagen für die Umsetzung von Artikel 3 und 4 der Verfassung zu schaffen und die Grundlage für die Bereitstellung des Nord-Süd-Zusammenarbeitsfonds zu schaffen.

Drittens, Maßnahmen, mit denen der internationale Konsens über die Politik der Regierung zur Vereinigung und Nordkorea ausgebaut werden k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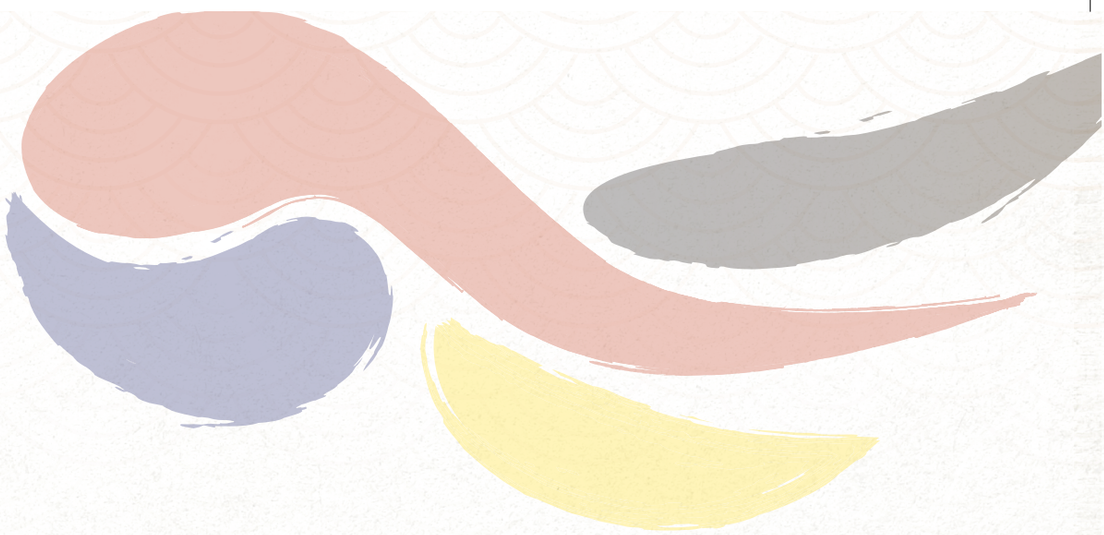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 Insbesondere werden wir eine Austauschplattform für die Wiedervereinigung für die **künftige Generation 2030** schaffen und uns dafür einsetzen, mithilfe von Medien, die der jüngeren Generation vertraut sind, wie Metaverse, Neue Medien, den Konsens im Hinblick auf eine Wiedervereinigung zu verbreiten.

Ministerum für Wiedervereinigung

o Damit beschließe ich meinen Vortrag.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o Nun werde ich mich gerne Ihren Fragen stellen.



SESSION 1-2.

(De) Überblick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Matthias Platzeck, ehem. Ministerpräsident Brandenburg

Anrede,
32 Jahre, mehr als eine Generation, liegt die Vollendung der Deutschen Einheit mittlerweile zurück und ich bin gebeten worden, heute einen kurzen Überblick zum Stand dieses Prozesses aus meiner Sicht zu geben.

Man kann diesen Stand mit nüchternen Zahlen beschreiben, so dass zum Beispiel die Wirtschaftskraft der ostdeutschen Länder mittlerweile bei ca. 80% des Bundesdurchschnitts liegt oder die Arbeitslosigkeit, die in Teilen Ostdeutschlands zeitweise über 20% lag, mittlerweile überall im einstelligen Bereich angekommen ist.

Wichtiger noch als diese Zahlen sind aber aus meiner Sicht Ereignisse und Entwicklungen der letzten Zeit, wie die milliardenschweren Ansiedlungen der TESLA Gigafactory, der Intelchipfabrik, der größten Lithiumraffinerie Europas oder grosser Batteriehersteller in den ostdeutschen Bundesländern - das kann der ganzen, seinerzeit deindustrialisierten Region einen grossen Schub geben und auch zu einer Trendumkehr in der demografischen Frage beitragen.

Wir konnten in den letzten beiden Jahren bereits erste positive Wirkungen sowohl bei den ökonomischen Zahlen als auch in der Stimmung im Osten spüren.

Der Vollständigkeit halber muss allerdings angemerkt werden, dass sowohl der weitere, noch nicht vorhersagbare Verlauf der Corona-Pandemie und nochmehr die Unkalkulierbarkeit der Folgen des russischen Krieges in der Ukraine den aufkeimenden Optimismus durchaus bremsen können.

Ich möchte Ihnen aber über diese Zahlen hinaus, die ja auch in den Unterlagen der Regierung gut nachlesbar sind, zum Beginn unserer Konferenz einige Einschätzungen über gesellschaftliche Prozesse, über vorhersehbare aber auch so nicht erwartete Entwicklungen in den letzten drei Jahrzehnten näher bringen.

In den vergangenen Jahren hat sich die Kommission der Bundesregierung „30 Jahre Friedliche Revolution und Deutsche Einheit“, der ich vorstehen durfte, intensiv neben den ökonomischen vor allem den kulturellen, mentalen und emotionalen Gesichtspunkten der Transformation gewidmet. Im Ergebnis wurden der Bundesregierung 54 Handlungsempfehlungen für die weitere Ausgestaltung des Zusammenwachsens übergeben.

Die zweifellos wichtigste ist aus meiner Sicht die Empfehlung, ein „Zukunftszentrum für Europäische Transformation und Deutsche Einheit“ zu bauen. Mit diesem Zentrum soll eine Institution mit breiter interdisziplinärer Kompetenz für die Herausforderungen der Tranformationsprozesse in Deutschland und Europa entstehen. Es soll ein Ort der Begegnung, der Diskussion und der Problemlösung werden, der international anerkannt zu Fragen von gesellschaftlicher Transformation tragfähige Antworten entwickelt.

Wir haben uns bei dieser Empfehlung davon leiten lassen, dass die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zwar eine wirklich fundamentale Transformation beinhaltet hat, aber zum Beispiel der Klimawandel oder die damit zusammenhängende Energiewende auf anderen Feldern mindestens so tiefgreifende Veränderungen unseres Lebens auf dieser Welt mit sich bringen wird. Also werden wir uns mit solchen Herausforderungen künftig vermehrt auseinandersetzen müssen.

Je besser wir diese Entwicklungen verstehen und durchdringen, um so beherrschbarer werden sie sein und um so besser hoffentlich die Ergebnisse bei ihrer Gestaltung.

Ich könnte mir vorstellen, dass dieses Zentrum auch für Sie ein künftiger Partner für Austausch und Zusammenarbeit sein kann. Die Bundesregierung hat den Standortwettbewerb für den künftigen Ort bereits auf den Weg gebracht, schon in Kürze soll die Arbeit eines Aufbaustabes beginnen.

Ich erwähne dieses Vorhaben auch deshalb, weil wir bei der Analyse der zurückliegenden Jahrzehnte zu dem Schluss gekommen sind, dass wir über die Mechanismen und Auswirkungen von Transformationsprozessen in den betroffenen Gesellschaften noch deutlich zu wenig wissen.

Als der große Sozialwissenschaftler Ralf Dahrendorf 1990 davon sprach, dass staatliche und wirtschaftliche Reformen schon nach einigen Jahren erste Erfolge verzeichnen können, aber die Schaffung umfassender sozialer Grundlagen für eine wetterfeste Demokratie wohl 60 Jahre dauern werden,
wurde er von vielen ungläubig angeschaut - ich gehörte auch zu den Ungläubigen.

Wir dachten damals, wir haben eine gemeinsame Sprache, zu grossen Teilen eine einheitliche Geschichte, vermeintlich die gleiche Kultur - da kann doch nichts schief gehen und ewig dauern wird es auch nicht.

Heute wissen wir, weiss auch ich es besser. Die beiden Teile Deutschlands hatten sich in dem historisch gesehen kurzen Zeitraum von 40 Jahren weiter auseinanderentwickelt, als ich es selbst wahrgenommen habe. Und dabei muss man noch beachten, dass es trotz des rigiden Grenzregimes zwischen Ost und West immer Kontakte zwischen Verwandten gab und westdeutscher Rundfunk sowie westdeutsches Fernsehen in nicht wenigen DDR-Haushalten zum Alltag gehörten.

Vor 30 Jahren kamen viele, am Ende glückliche Umstände zusammen, die die Deutsche Einheit und den Fall des eisernen Vorhangs in Europa ermöglicht haben.

Die Großmacht Sowjetunion büßte zunehmend an wirtschaftlicher Kraft ein, der ruhmlose Abzug der Sowjettruppen aus Afghanistan liess die innere Moral zerbrechen, Konflikte unterschiedlicher Nationalitäten innerhalb der UdSSR mehrten sich und mit

Michail Gorbatschow gab es glücklicherweise zum ersten Mal einen Generalsekretär der KPdSU, der dem tradierten Mittel der Gewaltanwendung gegenüber aufmüpfigen Satellitenstaaten abgeschworen hatte. Dazu kamen sich seit Jahren formierende Bürgerbewegungen, besonders in Polen, der Tschechoslowakei und Ostdeutschland. In Ungarn hatten Reformpolitiker sogar die Staatspartei gekapert. Die Hauptthemen der Bürgerbewegungen waren seinerzeit die Einhaltung der Menschenrechte, der Erhalt des Friedens und der Umweltschutz.

Die kommunistische Ideologie war für die meisten Bürger Osteuropas längst zu nichtssagenden Worthülsen verkommen, allerdings hielten die Regimes weiterhin noch alle Machtmittel in ihren Händen.

Ich habe selber 36 Jahre in der DDR gelebt, habe dort gemeinsam mit Gleichgesinnten den ersten unabhängigen Umweltverband „Grüne Liga" gegründet, war 1989 Mitglied am Zentralen Runden Tisch der DDR und 1990 Minister in der Regierung der Nationalen Verantwortung unter Hans Modrow.

Diese Regierung bildete der damalige Premier Modrow Anfang 1990, weil aus seiner Sicht die DDR endgültig zu zerfallen drohte. Er berief in die bestehende Regierung der alten Macht acht Vertreter der Bürgerbewegungen - die Hauptaufgabe war, die ersten freien Wahlen in der Geschichte der DDR zu organisieren. Das wir plötzlich mit den Leuten am Kabinettisch saßen, die uns noch wenige Wochen vorher verhaften wollten, hatte einen ganz besonderen Reiz.

In den Achtzigerjahren hatten wir uns im Osten auf einen langen Weg hin zu mehr Freiheit und Demokratie eingestellt, dass wir bereits wenige Jahre später in einem vereinigten Deutschland leben würden, hat niemand vorhergesehen oder auch nur für möglich gehalten.

Entsprechend unvorbereitet waren alle Seiten und mit Blick auf diese Ausgangsbedingungen ist vieles am Ende doch sehr gut gegangen. Für uns am Runden Tisch war während der Friedlichen Revolution 89/90 der wichtigste Punkt, dass es nicht zur Anwendung von Gewalt kommt, das jedenfalls ist glücklicherweise gelungen.

Das Kernmotto „Keine Gewalt" in die Tat umzusetzen ist ein ja immer aktuelles Thema bei gesellschaftlichen Umbrüchen und würde ein eigenes Seminar verdienen.

Da die Deutsche Einheit letztendlich für alle überraschend möglich wurde, gab es weder eine Blaupause noch ein nachzuahmendes Modell. Es war an vielen Stellen die Methode „Versuch und Irrtum" angesagt.

Ich kann hier nur einiges davon anreissen, von dem ich vermute, dass es auch für unsere koreanischen Kollegen von Interesse sein könnte. Und es sind Punkte, die bis heute in ihren Wirkungen spürbar sind und deshalb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Also schon mal ein Stück praktische Transformationsforschung :-).

Wir hatten uns in der ersten und letzten freigewählten Volkskammer der DDR und später im Bundestag viele Gedanken gemacht, wie man ohne zu grosse Verwerfungen die Volkswirtschaften zusammenführen kann. In zwei wichtigen Punkten haben wir meiner Meinung nach keine guten Lösungen gefunden. Beide haben negative Langzeitwirkungen entfaltet.

Das eine war der Grundsatz „Rückgabe vor Entschädigung". Alteigentümer bzw. oftmals bereits ihre Erben, die teilweise schon seit Jahrzehnten in der Bundesrepublik oder sonstwo auf der Welt wohnten, konnten Rückgabeansprüche an Betrieben, Grundstücken und Häusern geltend machen. Das erzeugte unzählige Gerichtsverfahren, Investitionsverzögerungen und grosse gesellschaftliche Spannungen z.B. bei vielen Hausbesitzern, die aus ihrer Sicht rechtmäßig vor vielen Jahren in der der DDR das

Eigentum erworben hatten und jetzt ihr Heim verlassen mussten.

Das zweite war der Handlungsgrundsatz der Treuhandanstalt, die die DDR Betriebe übernommen hatte. Der Grundsatz lautete Privatisieren vor Sanieren und wurde erst spät revidiert.

Das führte Anfang der neunziger Jahre zum Zusammenbruch der ostdeutschen Industrielandschaft und in der Folge zu hunderttausenden Arbeitslosen. Dieser Zusammenbruch war aufgrund fehlender Wettbewerbsfähigkeit und des Wegbrechens wichtiger Märkte wie der Sowjetunion bestimmt nicht völlig vermeidbar. Aber eine deutlichere Sanierungsorientierung hätte ihn dämpfen und entschärfen können.

Es zeigte sich auch, wenn industrielle Kerne erstmal völlig verschwunden sind, ist es schwer bis unmöglich, sie wiederzubeleben.
Wenn es aber gelingt, ein Grundgerüst zu erhalten, ist eine spätere Expansion auf neuem Niveau deutlich einfacher.

Dieser Zusammenbruch der ostdeutschen Industrie ist eine prägende Erfahrung für die gesamte ostdeutsche Gesellschaft, die bis heute fortwirkt und politisch beachtet werden muss.

Nicht wenige Soziologen sehen darin sogar eine Ursache für die Wiederbelebung einer ostdeutschen Identität jenseits der DDR. Das Erlebnisschema der Betriebsstilllegung, der sogenannten Warteschleifen, der Kurzarbeit, der Arbeits - und Perspektivlosigkeit glich sich in allen Regionen des Ostens und bestimmte über Jahre die Erzählungen im Freundes- und Familienkreis.

Den Gegensatz dazu stellte die zeitgleich florierende westdeutsche Wirtschaft dar, die im Osten zumindest temporär auf nicht wenigen Gebieten auch noch einen neuen, leicht zu

bearbeitenden Absatzmarkt gefunden hatte

Eine der Folgen ist eine beispiellose Abwanderung hunderttausender junger, gut ausgebildeter Menschen aus dem Osten. Auf der Suche nach Arbeit gingen sie nach Westdeutschland und in die ganze Welt, nur die wenigsten kehrten zurück. Das dadurch bis heute erzeugte Problem ist vielschichtig.

Zum einen weist Ostdeutschland u.a. dadurch einen noch größeren Fachkräftemangel auf als andere Regionen Deutschlands, zum anderen ist eine ältere Gesellschaft per se nicht mutiger und für angstmachende, populistische Einflüsterungen ein Stück weit empfänglicher .

Lassen Sie mich einen dritten Punkt anführen, der nicht im ökonomischen, sondern eher im gesellschaftspsychologischen Bereich angesiedelt ist.

Wir haben seinerzeit nicht hinreichend berücksichtigt, dass es eine besondere Herausforderung für jeden einzelnen Menschen ist, wenn sich sein gesamtes soziales Umfeld von einem Tag auf den anderen gravierend ändert. Zur Beschreibung dieser Situation gab es damals den sarkastischen Spruch, dass ausser den vier Jahreszeiten alles plötzlich völlig ganz anders war. Im Betrieb, in der Schule, in den Verwaltungen galten andere, den meisten unbekannte Regeln - viele tradierte und eingeübte Sozialtechniken waren plötzlich wertlos.

Auch diese einschneidende Erfahrung hätte etwas entschärft werden können, wenn wir den Menschen der kleineren, gesellschaftspolitisch unterlegenen Gesellschaft einige mentale Haltegriffe auf ihrem Weg in die deutlich grössere und per se erfolgreichere Gesellschaft mitgegeben hätten.
Haltegriffe, die dazu beitragen, dass sie sich im neuen Gemeinwesen wirklich angenommen und aufgenommen fühlen können.

Gemeint sind damit Strukturelemente des alltäglichen Lebens in der DDR wie z.B. die öffentliche Kinderbetreuung, die Ganztagsbeschulung oder die Organisationsform des Gesundheitswesens. Entkleidet von ihrem ideologischen Ballast waren sie durchaus verwendbar und hätten den Ostdeutschen das Gefühl gegeben, wir haben auch etwas sinnvolles in das neue Gesamtdeutschland eingebracht. Jahre später wurde vieles davon in der Bundesrepublik eingeführt - aber eben nicht mehr als Beitrag der Ostdeutschen.

Was hat das eigentlich alles mit dem Heute zu tun, warum führe ich das hier noch einmal auf:

Diese und andere Punkte gehören zu dem allerdings noch komplexeren Ursachengefüge, dass wir noch 3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damit konfrontiert sind, dass sich bis zu zwei Dritteln der Ostdeutschen in Deutschland als Menschen zweiter Klasse behandelt fühlen.

Erhebliche Teile der ostdeutschen Gesellschaft stehen dem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System der Bundesrepublik skeptisch gegenüber,
rechtsradikale Parteien und Bewegungen erzielen in den ostdeutschen Ländern größere Erfolge als im Westen - dies und weiteres kann uns nicht kaltlassen und muss bei politischen Entscheidungen Berücksichtigung finden.

Hier schließt sich noch einmal der Kreis zum geplanten Zukunftszentrum für Europäische Transformation. Wir sind nicht nur im Osten Deutschlands mit so seinerzeit nicht erwarteten Entwicklungen konfrontiert. Wenn man sich politische Entwicklungen in unseren Nachbarländern Polen oder Ungarn anschaut, so treffen wir auch dort auf durchaus beachtenswerte Vorgänge.
Während in Polen deutlich nationalistische Aspekte in der Politik der letzten Jahren sehr in den Vordergrund treten, verkündet der ungarische Ministerpräsident als Ziel seiner

Politik die Schaffung einer illiberalen Demokratie...

Es zeigt sich auf jeden Fall, dass tiefgehende Transformationen in den Gesellschaften vielfältige, oft von uns nicht vorhergesehene und dadurch nicht einkalkulierte Prozesse hervorruf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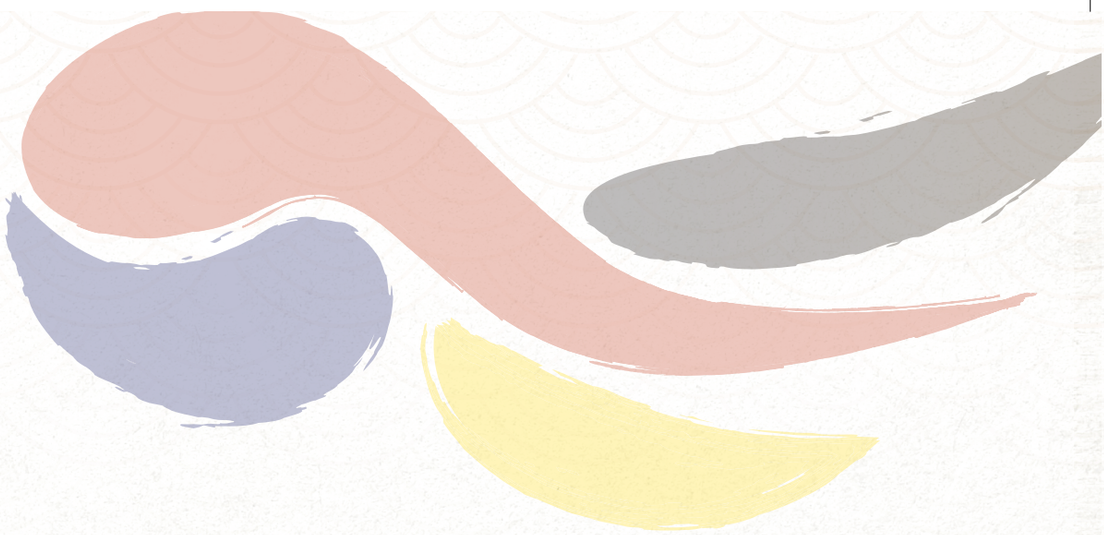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Erste, noch nicht ausdiskutierte Erkenntnisse, weisen zum Beispiel daraufhin, dass es nicht klug ist, Gesellschaften mit unterschiedlicher Geschichte, Kultur und Mentalität alle in das gleiche Schema künftiger Entwicklung pressen zu wollen, und sei es in bester Absicht.

Forscher weisen zum Beispiel daraufhin, dass niemand frohen Herzens nur ein Imitat eines anderen sein möchte - er möchte bei allen Veränderungen sich selbst auch noch wahrnehmen und erkennen. Imitate werden unglücklich und schlimmeres.

Wenn man auf Osteuropa nach 1990 schaut und die Entwicklungen bewerten will, sollte man diese Erkenntnis berücksichtigen.

Wenn wir die auch in Zukunft nötigen Entwicklungen und Transformationen, ob politisch oder ökonomisch bedingt, erfolgreich gestalten wollen, müssen wir uns ohne Scheuklappen und Wunschdenken mit diesen Prozessen auseinandersetzen. Das muss in einem bisher in der Wissenschaft nicht üblichen engen und vorurteilsfreien, ständigen Austausch mit den betroffenen Gesellschaften stattfinden. Wenn man so will, eine Wissenschaft neuen Typs. Deshalb soll das Zukunftszentrum auch aus den drei Säulen Wissenschaft, Dialog und Begegnung sowie Kultur bestehen.

Soweit einige Gedanken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ich danke für Ihre Aufmerksamkeit.



SESSION 2 I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der DDR und Nordkorea**

SESSION 2-1.

(De) Aufgaben und Roll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Hans-Hermann Lochen, ehem. Oberregierungsrat in der Ständigen Vertret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DDR

Hans-Hermann Lochen
Ministerialrat im BMJ a.D.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I. Zur Vorgeschicht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2

1. Der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2

2. Die Rechtsschutzstelle des Gesamtdeutschen Ministeriums 3

II.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4

1. Ihre Entstehung 1961 4

2. Ihre Aufgabenstellung 5

3. Ihre Rechtsgrundlagen 6

4. Ihre Informationsquellen 7

5. Ihre Ausstattung 10

6. Die Kriminalisierung der Mitarbeiter durch die DDR 10

7. Der Streit um den Fortbestand der Erfassungsstelle 11

8. Ihre Bedeutung für die DDR 12

9. Ihre Abschlussbilanz 1992 13

10. Die Nutzung der Akten nach 1990 13

III. Zur politischen Bedeutung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14

Vorbemerkung: Wer sich mit politischen Zusammenhängen im Deutschland der 50er und 60er Jahre beschäftigt, begegnet unvermeidlich der damals üblichen Sprache des Kalten Krieges: Im Westen wurde die DDR zum Beispiel als Ostzone bezeichnet, ihre Regierung als Pankower Regime, ihre Westgrenze als Demarkationslinie oder Zonengrenze. Die SED nannte das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srecht „die Alleinvertretungsanmaßung der westdeutschen Bundesrepublik“, CDU-Politiker „Bonner Ultras“ usw. In meinem Referat verwende ich derartige Begriffe nur bei der Wiedergabe wörtlicher Zitate und wenn es zum besseren Verständnis einer Aussage notwendig erscheint. Im Übrigen benutze ich die in der Bundesrepublik ab Herbst 1969 gängigen offiziellen Bezeichnungen.

I. Zur Vorgeschichte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Spätestens nach dem endgültigen Bruch der Anti-Hitler-Koalition im Frühjahr 1948 entstand im Westen Deutschlands das Bedürfnis, **Gewaltakte und Unrechtsurteile unter kommunistischer Herrschaft** in Ostdeutschland **zu registrieren und zu dokumentieren**. Das Ziel war, derartig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möglichst entgegenzuwirken und sie nach der damals erwarteten baldigen Änderung der politischen Verhältnisse zu ahnden und wiedergutzumachen.

Die Initiativen dazu gingen sowohl von Privatleuten wie von öffentlichen Stellen aus: Neben etlichen Institutionen wie den sogenannten Ostbüros der Parteien, dem Diakonischen Werk der evangelischen Kirche, dem katholischen Caritasverband und dem Deutschen Roten Kreuz bemühte sich eine ganze Reihe privater Vereine und Organisationen intensiv um Informationen zum politischen Geschehen im anderen Teil Deutschlands. Zwar ging es meistens in erster Linie darum, etwas über das Schicksal von politisch Inhaftierten in Erfahrung zu bringen und sie und ihre Familien konkret zu unterstützen. Dabei fiel aber zwangsläufig auch eine Unmenge von Nachrichten über die handelnden Akteure im Partei- und Staatsapparat an.

Diese Informationen möglichst vollständig zu sammeln, in Karteien und Akten zu systematisieren, auszuwerten und für konkrete praktische Schritte zu nutzen, machten sich insbesondere zwei Stellen zur Aufgabe, die als **Vorläufer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gelten können und daher hier Erwähnung verdienen:

1. Der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Etwa zeitgleich mit der Staatsgründung der DDR im Oktober 1949 etablierte sich im Westteil Berlins der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UfJ). Dies war ein privater Zusammenschluss überwiegend aus dem Osten übergesiedelter Juristen, die sich zur Aufgabe machten, der ostdeutschen Bevölkerung rechtliche Hilfe zu leisten, ihr rechtsstaatliche Prinzipien nahe zu bringen, die „freie Welt“ über Unrechtsmaßnahmen in der Verantwortung der sowjetischen Besatzungsmacht und der Sozialistischen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aufzuklären und für westliche Dienststellen gutachterlich tätig zu werden.

Im Laufe der nächsten zehn Jahre suchten etwa 500.000 Ostdeutsche und Ost-Berliner die Zentrale des UfJ in der Zehlendorfer Limastraße 29 auf. Dort bekamen sie

unentgeltlich Rat und Auskunft vor allem in zivil-, arbeits- und strafrechtlichen Angelegenheiten. Insbesondere von seinen Besuchern erhielt der UfJ internes Material zu amtlichen Vorgängen und staatlichen Anordnungen in der DDR und in Ost-Berlin, die mit den Grundsätzen der Menschlichkeit und der Rechtsstaatlichkeit unvereinbar waren. Die Daten der daran beteiligten Staats- und Parteifunktionäre wurden registriert und in eine Kartei aufgenommen, die im April 1961 bereits etwa 123.000 Namen umfasste.

Ins Visier des UfJ gerieten insbesondere Strafrichter und Staatsanwälte, Gefängnisaufseher, Angehörige des Ministeriums für Staatssicherheit (MfS) und der Volkspolizei, denen nach Aussagen Betroffener und unabhängiger Zeugen die Verletzung rechtsstaatlicher Prinzipien vorzuwerfen war. Flohen diese Personen später in den Westen, wurden sie hier zur Rechenschaft gezogen.

1969 löste sich der Untersuchungsausschuss Freiheitlicher Juristen auf. Einen Teil seiner etwa 80 Mitarbeiter sowie umfangreiche Unterlagen, insbesondere auch die Namenskartei mit zahllosen Hinweisen, übernahm das Gesamtdeutsche Institut, eine Bundesanstalt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iums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2. Die Rechtsschutzstelle des Gesamtdeutschen Ministeriums

Das genannte, ursprünglich als 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 bezeichnete Ressort unterhielt seit Anfang der 50er Jahre in West-Berlin eine sogenannte „Rechtsschutzstelle“. Dabei handelte es sich um ein **Anwaltsbüro**, dessen Rechtsanwälte, wenn sie von politischen Strafverfahren in der DDR erfuhren, den Beschuldigten kostenlos juristischen Beistand leisteten. Dazu schalteten sie örtliche Korrespondenzanwälte ein und übertrugen ihnen das Mandat, die Strafverteidigung zu übernehmen und nach einer Verurteilung ein Gnadengesuch zu stellen.

1963 bot der offiziell vom Generalstaatsanwalt der DDR bevollmächtigte Ost-Berliner Rechtsanwalt Wolfgang Vogel der Rechtsschutzstelle an, politische Gefangene gegen beträchtliche Valutabeträge aus DDR-Strafanstalten freizukaufen. Nachdem Bundeskanzler Konrad Adenauer (CDU) aus humanitären Gründen zugestimmt hatte, auf diesen Handel einzugehen, mussten in kurzer Zeit die über **12.000 Haftakten der Rechtsschutzstelle** durchgesehen werden, um eine sachgerechte Auswahl

treffen zu können. Der **Häftlingsfreikauf** wurde in den folgenden Jahren über zwei Anwaltsbüros in West- und Ost-Berlin abgewickelt. Bis zum Herbst 1989 kamen auf diesem Weg mehr als 33.000 politische Gefangene frei. Die ostdeutsche Seite erhielt dafür Waren im Wert von insgesamt ca. 3,5 Mrd. Deutsche Mark.

1972 wurde die Rechtsschutzstelle aufgelöst. Die dort tätigen Rechtsanwälte arbeiteten weiter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die in West-Berlin Anwaltsbüros für Freikauf und Familienzusammenführung, zur Vermittlung von Strafverteidigern in der DDR und für Zivilrechtsfälle mit Bezug zum DDR-Recht unterhielt. DDR-Bürger, die etwa als Alters- oder Invalidenrentner in den Westteil Berlins fahren durften, erhielten hier unentgeltlich Auskunft, Rat und Hilfe.

II. Die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1. Ihre Entstehung 1961

Der Bau der Berliner Mauer am 13. August 1961 hatte zur Folge, dass etliche Ost-Berliner und Ostdeutsche nun erst recht versuchten, noch „im letzten Moment“ in den Westen zu gelangen. In wenigen Wochen musste die West-Berliner Polizei etwa 50 Ermittlungsverfahren führen, weil Flüchtende durch Schusswaffen getötet oder verletzt worden waren. Dies veranlasste den Regierenden Bürgermeister von Berlin (West) **Willy Brandt**, später Bundeskanzler und Friedensnobelpreisträger, den Regierungschefs der anderen Bundesländer vorzuschlagen, die *„organisatorische Grundlage für eine bundeseinheitliche und umfassende Strafverfolgung der Untaten der Gewalthaber der SED ... zu schaffen.“*

Dabei war es ein signifikanter Ausdruck des Kalten Krieges, dass Brandt die Registrierung von Gewaltmaßnahmen unter kommunistischer Verantwortung der seit 1958 bestehenden „Zentralen 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zur Aufklärung nationalsozialistischer Verbrechen“ in Ludwigsburg übertragen wollte: Er begründete dies mit *„der nahezu völligen Identität der jetzt vom SED-Regime in der Zone und in Ostberlin angewandten Methoden mit denen des Nationalsozialismus“.*

Die Konferenz der westdeutschen Justizminister (JuMiKo) entschied sich im Oktober 1961 zwar für die von Brandt angeregte systematische Erfassung der Gewaltakte *„von Anhängern und Dienern des Pankower Regimes“,* beauftragte aber das Land Niedersachsen, das die längste Grenze zur DDR hatte, mit der **Einrichtung einer**

eigenen Stelle. Der niedersächsische Justizminister verfügte daraufhin, dass die neue Behörde die Bezeichnung „Zentrale Erfassungsstelle der Landes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mit Sitz in den Räumen des Amtsgerichts Salzgitter-Bad erhielt. Dort nahm sie am 24. November 1961 ihren Dienst auf.

2. Ihre Aufgabenstellung

Auch wenn die Erfassungsstelle von einem Staatsanwalt geleitet wurde, war ihre Aufgabe nicht die unmittelbare Strafverfolgung der Täter, sondern zunächst nur eine **Registrierung und Dokumentation von Straftaten** jenseits der innerdeutschen Grenze. Es ging also zunächst noch nicht um die Ergreifung der Täter, deren man ja vorläufig ohnehin nicht habhaft werden konnte. Vielmehr sollte die zentrale Stelle **als Vorermittlungsbehörde** Fakten sammeln und Beweise sichern und damit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spätere Strafverfolgung der Täter durch die zuständigen Stellen schaffen. Musste nach Abschluss der Vorermittlungen ein normales Ermittlungsverfahren initiiert werden, zu dessen Einleitung die Erfassungsstelle ja nicht befugt war, führte sie über den Generalbundesanwalt eine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herbei, der ein Landgericht und damit die bei diesem bestehende Staatsanwaltschaft für zuständig erklärte.

Die so definierte Vorermittlungszuständigkeit der Erfassungsstelle beschränkte sich zunächst auf Gewalttaten rund um West-Berlin und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Diesen Aufgabenbereich erweiterte die JuMiKo im Oktober 1963 auf Anregun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Registriert werden sollten nun:

- **Tötungen, Körperverletzungen und Freiheitsberaubungen**, die unter Missachtung der Menschenwürde **ohne gerichtliche Verfahren** zur Durchsetzung politischer Ziele der SED angeordnet oder geduldet wurden.

- **Gerichtsentscheidungen („Terrorurteile“)**, die aus politischen Gründen zu exzessiven Strafen gelangten, die mit den Grundsätzen der Menschlichkeit und Rechtsstaatlichkeit nicht zu vereinbaren waren.

- **Misshandlungen**, die **im Ermittlungsverfahren** oder unter dem Deckmantel strafgerichtlicher Ermittlungen begangen wurden oder denen Verurteilte **im Strafvollzug** ausgesetzt waren, wenn sie *„als Ausdruck des politischen Gewaltsystems der DDR erkennbar“* waren.

3. Ihre Rechtsgrundlagen

Die Zuständigkeit der Erfassungsstelle beschränkte sich auf solche Vorgänge, die im Westen als Straftaten verfolgt werden konnten. Ob diese Voraussetzung vorlag, beurteilte sich nach den **Grundsätzen des interlokalen Strafrechts**. Danach galt bei voneinander abweichenden Normen innerhalb eines Rechtsgebiets (zum Beispiel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grundsätzlich das **Recht des Tatorts**. Dieser Grundsatz fand jedoch im Verhältnis zur DDR dann keine Anwendung, wenn deren Recht mit den Rechtsgrundsätzen (dem ordre public) der Bundesrepublik unvereinbar war. In diesem Fall konnte auf systemkonforme, politisch motivierte Straftaten in der DDR bundesdeutsches Recht angewendet werden.

So diente zum Beispiel der bis heute nicht aufgefundene schriftliche Befehl, auf Flüchtlinge zu schießen, der Durchsetzung des Ausreiseverbots und verstieß damit gegen das fundamentale Gebot der Verhältnismäßigkeit staatlichen Handelns. Denn da das Grundrecht auf Leben im freiheitlich-demokratischen Rechtsstaat höher zu bewerten ist als eine Vorschrift zur Grenzsicherung, konnte nach westlicher Rechtsauffassung der DDR-**Schießbefehl** die Tötung flüchtender Menschen nicht rechtfertigen. Eine derartige Gewalttat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war daher in Westdeutschland als Mord oder Totschlag zu ahnden und wurde in Salzgitter entsprechend erfasst.

1968 definierten die Justizminister des Bundes und der Länder den Begriff **„Gewaltakte“** neu und endgültig als *„Tötungshandlungen jeder Art einschließlich der Versuchshandlungen, die im Zusammenhang mit der Beschränkung der Freizügigkeit oder unter Missachtung der Menschenwürde zur Durchsetzung der Ziele des (DDR-) Regimes begangen, angeordnet oder geduldet werden.“*

Als weiteres Delikt kam die 1951 aus gegebenem Anlass in das Strafgesetzbuch aufgenommene **Verschleppung von Personen** (§ 234a) hinzu. Für die in den 50er Jahren noch häufigen gewaltsamen **Entführungen von Westdeutschen und West-Berlinern in die DDR** (insgesamt etwa 400 Fälle) gab es auch in den 60er Jahren Planungen des MfS, die aber nicht mehr zur Ausführung kamen. Diese Verbrechen spielten daher in der Praxis der Erfassungsstelle keine Rolle mehr.

Ferner fiel jetzt auch die **politische Verdächtigung** nach § 241a des westdeutschen Strafgesetzbuchs in die Zuständigkeit von Salzgitter. Diese ebenfalls 1951 durch das Gesetz zum Schutz der persönlichen Freiheit eingeführte Strafvorschrift betrifft **Denunzianten**, die andere der Gefahr einer politisch motivierten Verfolgung aussetzen. Darunter fiel jede Verfolgung, der eine Rechtsgrundlage fehlte oder deren Rechtsgrundlage rechtsstaatlichen Grundsätzen widersprach und die sich als Gewalt- oder Willkürmaßnahme erwies. Ungeachtet der vermutlich sehr hohen Dunkelziffer registrierte die Erfassungsstelle fast 3.000 Fälle zu diesem Delikt.

Die Erfassung staatlicher Unrechtsakte der DDR änderte sich durch den **Grundlagenvertrag zwischen beiden deutschen Staaten vom Dezember 1972** nicht. Danach war zwar die Hoheitsgewalt jedes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auf sein Staatsgebiet beschränkt. Der Bundesgerichtshof entschied jedoch 1980, dass die westdeutsche Justiz weiterhin eine Schutz- und Obhutspflicht gegenüber den Menschen in der DDR habe. Daher konnten Gerichte der Bundesrepublik in der DDR begangene Straftaten weiterhin nach westdeutschem Strafecht ahnden, wenn die Tat auch in der DDR mit Strafe bedroht war.

Nach 1968 erweiterten die Justizministerien die Zuständigkeiten der Erfassungsstelle nicht mehr - ab 1973 wohl mit Rücksicht auf die Festlegungen im Grundvertrag. Dies wirkte sich aus, als 1975 Fälle von **Zwangsadoptionen** in der DDR bekannt wurden. Betroffen waren meist kleinere Kinder, deren Eltern wegen Fluchtvorbereitungen oder gescheiterten Fluchtversuchen in Haft gerieten; die Kinder wurden von Staats wegen zur Adoption freigegeben und in parteitreue Pflegefamilien integriert. In den Folgejahren wurden sie ihren leiblichen Eltern, zu denen sie keinerlei Kontakt hatten, in der Regel völlig entfremdet. Die Anregung des Leiters der Erfassungsstelle, deren Zuständigkeit auf diese Fälle zu erstrecken, lehnte die JuMiKo im März 1976 ab. Die Recherch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kamen zu dem Schluss, dass in diesen oft tragischen persönlichen Schicksalen keine Wiedergutmachung mehr möglich war.

4. Ihre Informationsquellen

Die Erfassungsstelle bediente sich ausschließlich **legaler Quellen**:

(1) Ausgewertet wurden die täglichen **Lageberichte des Bundesgrenzschutzes**, welche die Zentralstelle von den vier Grenzschutzkommandos (Küste, Nord, Mitte,

Süd) erhielt und sorgfältig auf Anhaltspunkte für strafrechtlich relevante Vorkommnisse durchsah. Die Berichte bezogen sich auf die **innerdeutsche Grenze**. Zwischenfälle im Zusammenhang mit den Selbstschussanlagen an den Grenzzäunen und den Minenfeldern im Todesstreifen hatten zuvor regelmäßig beim Grenzschutz großen Ermittlungsaufwand ausgelöst und wurden nun von der Erfassungsstelle weiterbearbeitet. Wegen der Länge der Grenze (1.378 km) konnten die Berichte der Grenzschutzpatrouillen naturgemäß kein vollständiges Bild der Situation geben.

(2) Für die Aufnahme von **Vorfällen an der Berliner Mauer** (Gesamtlänge 156,4 km, davon 43,7 km Sektorengrenze zu Ost-Berlin) war die dortige **Schutz- und Kriminalpolizei** zuständig. Sie lieferte der Erfassungsstelle das reichhaltigste und erschütterndste Foto- und Dokumentationsmaterial.

(3) Vielfach bekam Salzgitter auch durch **Medienberichte** Kenntnis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unter kommunistischer Herrschaft. Aus dieser Quelle stammten Zeugenaussagen sowie Erkenntnisse über Opfer und Tatbeteiligte und vor allem eine Fülle von Bildmaterial.

(4) Auch einzelne **Bürger der DDR** ließen der Erfassungsstelle Informationen übe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ihrem Umfeld zukommen. Dies konnte natürlich nur auf Umwegen über Bekannte und Verwandte geschehen, weil in Ostdeutschland derartige Kontakte zu Behörden des „Klassenfeindes“ zumindest als „ungesetzliche Verbindungsaufnahme“ nach § 219 StGB DDR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bedroht waren (wenn nicht sogar als Staatsverbrechen nach den §§ 99 oder 100 StGB DDR mit weit höheren Strafdrohungen).

(5) Von besonderem Erkenntnisgewinn für die Zentrale Stelle waren die **Aussagen geflüchteter Soldaten der Grenztruppen** der Nationalen Volksarmee, die in den Westen überliefen und über verhinderte Fluchtversuche und eventuell daran beteiligte Todesschützen berichteten. Für ihre Befragung, meist durch nachrichtendienstliche Stellen, hatte die Erfassungsstelle einen speziellen Fragebogen entworfen, der ihr ausgefüllt zurückgesandt wurde.

(6) Detaillierte Informationen über politisch gesteuerte **Entscheidungen der ostdeutschen Scheinjustiz** erhielt die Behörde in Salzgitter hauptsächlich von den **aus DDR-Haft freigekauften politischen Gefangenen**, die bei ihren Vernehmungen

in den Notaufnahmelagern Gießen und Berlin-Marienfelde in der Regel ausführlich über ihre Verurteilung, die daran beteiligten Richter, Schöffen, Staatsanwälte, (Pflicht-) Verteidiger, Vernehmer des MfS, Denunzianten, Strafvollzugsbedienstete und Mitgefangene berichteten. Diese Angaben wertete die Erfassungsstelle gründlich aus, verglich sie mit den schon vorliegenden Aussagen von Mithäftlingen und kam so zu belastbaren Beweisen gegen beschuldigte Verfahrensbeteiligte.

Wer in Ostdeutschland aus politischen Gründen im Gefängnis gewesen war, zeigte sich im Umgang mit bundesdeutschen Stellen meistens aufgeschlossen. Dies hatte vor allem zwei Gründe:

- Zum einen waren Verurteilte bestrebt, ihre **Vorstrafen** aus der DDR möglichst schnell in einem rechtsstaatlichen Verfahren **annullieren zu lassen**,

- zum anderen hatten sie nach Beseitigung des Strafmakels **Anspruch auf eine Eingliederungshilfe** (Entschädigung) nach dem Häftlingshilfegesetz.

Die Bestätigung, dass die Vollstreckung der DDR-Strafe aus rechtsstaatlichen Gründen unzulässig war, musste der ehemalige Häftling nach dem Gesetz über die innerdeutsche Rechtshilfe in Strafsachen bei der Generalstaatsanwaltschaft beantragen. Für die Entscheidung über die Haftentschädigung war die Verwaltungsbehörde des Bundeslandes zuständig, in dem er seinen Wohnsitz genommen hatte.

In diesen behördlichen Verfahren erwies es sich als misslich, dass politische Häftlinge aus der DDR fast ohne Unterlagen in den Westen entlassen wurden. Normalerweise hatten sie nur zwei amtliche Dokumente bei sich: Das eine bescheinigte ihre **Entlassung aus einer Strafvollzugseinrichtung der DDR** (ohne Angaben zum Grund der Inhaftierung), das andere - nach 1967 - die **Entlassung aus der Staatsbürgerschaft der DDR** (sie waren dadurch nicht staatenlos geworden, da sie nach westdeutschem Recht die „gesamt-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besaßen).

Weil die Verurteilten also keine Belege für ihr in der DDR erlittenes Schicksal hatten, fragten die westdeutschen Ämter regelmäßig in Salzgitter an, ob dort Erkenntnisse über die Antragsteller vorlägen. Dies war häufig der Fall, so dass die Erfassungsstelle mit Auskünften Amtshilfe leisten konnte. Soweit sie durch die Behördenanfrage erstmalig von dem konkreten Vorgang erfuhr, nutzte sie die neuen Informationen zu den üblichen Vorermittlungen im Rahmen ihrer Zuständigkeit.

5. Ihre Ausstattung

Die Erfassungsstelle war eine sehr kleine Behörde, der außer dem Leiter, einem (Ober)Staatsanwalt, nur ein weiterer Staatsanwalt, drei Justizbeamte und zwei Schreibkräfte angehörten. Sie unterstand der Aufsicht des Generalstaatsanwalts beim 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 Für das Jahr 1989 betrug ihr Etat 250.000 Deutsche Mark (knapp 128.000 Euro).

Kernstück ihrer täglichen Arbeit waren die Führung sowie die ständige Ergänzung und Erweiterung der Namenskartei, in der zunächst auf verschiedenfarbigen Karteikarten Geschädigte, Beschuldigte und Zeugen notiert wurden. Ab 1977 erleichterte eine elektrisch betriebene Karteitrommel die Arbeit mit den Karteikarten, 1990 „brach das Computerzeitalter an“ und der gesamte Datenbestand wurde elektronisch gespeichert.

6. Die Kriminalisierung der Mitarbeiter durch die DDR

Bis zur politischen Wende in der DDR im Herbst 1989 wurde die Erfassungsstelle von der ostdeutschen Regierung als **„Feindorganisation“** bekämpft. Schon im Oktober 1962 richtete der Ministerrat der DDR beim Generalstaatsanwalt eine Arbeitsgruppe mit der Aufgabe ein, „alle friedensgefährdenden direkten und indirekten Aggressionshandlungen gegen die DDR zu erfassen und die Voraussetzungen für deren systematische Ahndung zu schaffen.“

Wie 1986 durchsickerte, waren in dieser „Erfassungsstelle“ (die tatsächlich Teil des MfS war) etwa 40 Mitarbeiter damit beschäftigt, politische Gegner des Regimes in drei „Gefährlichkeitsgrade“ einzustufen und dementsprechend in Karteien zu registrieren. Erfasst wurden auch westdeutsche Politiker, Journalisten, Richter, Staatsanwälte, leitende Beamte, Justiz- und Polizeiangehörige, aktive Mitarbeiter von Flüchtlings- und Vertriebenenverbänden sowie alle Personen und Einrichtungen, welche die DDR-Verantwortlichen aus irgendeinem Grund als gegen ihre Interessen gerichtet ansahen.

Offenbar speziell mit Blick auf die Mitarbeiter der Behörde in Salzgitter erließ die DDR 1966 das „Gesetz zum Schutz der Staatsbürger- und Menschenrechte der Bürger der DDR“, dessen § 1 in modifizierter Fassung in das Strafgesetzbuch der

DDR von 1968 aufgenommen wurde. Der dortige § 90 lautete in der bereinigten Fassung von 1977 wie folgt:

„Wer im Widerspruch zum Völkerrecht maßgeblich oder mit besonderer Aktivität daran mitwirkt, unter Ausdehnung der Gerichtshohei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ürg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wegen der Ausübung ihrer verfassungsmäßigen Staatsbürgerrechte zu verfolgen, zu ihrer Verfolgung aufzufordern oder die Verfolgung anzuordnen oder zu veranlass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ehn Jahren bestraft, soweit nicht nach anderen Gesetzen eine höhere Strafe verwirkt ist.“

Aufgrund dieser Strafdrohung durften die Angehörigen der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weder nach Ostdeutschland noch in Länder des kommunistischen Einflussbereichs reisen, mit denen die DDR Auslieferungsabkommen geschlossen hatte. Selbst die Transitwege nach und von Berlin (West) waren ihnen versperrt, weil ihre Namen im Fahndungsbuch der DDR ganz vorn standen.

7. Der Streit um den Fortbestand der Erfassungsstelle

Wie bei der Darstellung der Rechtsgrundlagen (oben unter 3.) erwähnt, waren schon in den 70er Jahren **rechtliche** Zweifel entstanden, ob die Arbeit der zentralen Stelle mit Artikel 6 des Grundlagenvertrags vereinbar war. Danach hatten zwar beide deutsche Staaten die Unabhängigkeit und Selbständigkeit des Vertragspartners in inneren und äußeren Angelegenheiten zu respektieren. Die Justiz in beiden Teilen Deutschlands sah sich dadurch jedoch nicht zu einer Änderung ihrer jeweiligen Rechtsprechung veranlasst. Auch die Erfassungsstelle arbeitete - abseits öffentlicher Aufmerksamkeit - unverändert weiter.

Allerdings geriet sie im Oktober 1980 schlagartig ins Zentrum der innenpolitischen Diskussion im Westen, als SED-Generalsekretär Honecker bei einer Parteiveranstaltung in Gera eine Verbesserung der innerdeutschen Beziehungen von der Erfüllung von **vier Forderungen** durch die Bundesregierung abhängig machte. Dabei verlangte er auch die **Schließung der Erfassungsstelle in Salzgitter**.

Dies nahmen in den folgenden Jahren insbesondere führende Deutschlandpolitiker der SPD, aber auch der FDP, zum Anlass, sich für eine Abwicklung der Behörde auszusprechen. Schließlich stellten 1988/89 sechs SPD-regierte Bundesländer ihre

Beitragszahlungen zur Finanzierung der Erfassungsstelle ein. Die von Bundeskanzler Helmut Kohl (CDU) geführte Bundesregierung verdoppelte daraufhin die Zuwendungen des Bundes auf 100.000 Deutsche Mark und sicherte damit den Fortbestand der Erfassungsstelle.

8. Ihre Bedeutung für die DDR

Ein wesentlicher Aspekt der geschilderten Auseinandersetzung war die Frage, welchen politisch-psychologischen **Einfluss die Arbeit der Erfassungsstelle in Ostdeutschland** hatte. Denn sie sollte ja nicht nur ein Zeichen der Hoffnung für die Gegner des SED-Regimes sein, sondern auch mögliche Täter im Staatsapparat der DDR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abschrecken. Diese Erwartung begegnete allerdings im Laufe der Jahre zunehmender Skepsis.

1984 bezeichnete die SPD-Bundestagsfraktion die Erfassungsstelle in einem einstimmigen Beschluss als „wirkungslos und überflüssig“. Nach der Wiedervereinigung nannten es prominente Politiker wie der SPD-Vorsitzende Hans-Jochen Vogel einen Fehler, die Abschaffung der Erfassungsstelle gefordert zu haben.

Ob und inwieweit die Salzgitter-Stelle in den Jahren des Kalten Krieges allein durch ihre Existenz ostdeutsche Partei- und Staatsfunktionäre von rechtsstaatswidrigen Entscheidungen und Übergriffen abgehalten hat, wird sich wohl nie zuverlässig klären lassen.

Immerhin beweist nicht nur ihre Aufnahme in Honeckers Geraer Forderungen, dass sie der DDR-Führung ein Dorn im Auge war. Schon 1974 hatte das DDR-Ministerium für Auswärtige Angelegenheiten, sekundiert von Artikeln in der sowjetischen Presse, die Erfassungsstelle als „Spionagezentrale“ attackiert, die mit *„einer offen revanchistischen Konzeption ... in schreiendem Widerspruch zum Völkerrecht steht.“* Und wie immer wurde jeder Versuch von außen, Vorgänge in der DDR transparent zu machen, mit dem Standardvorwurf der „Einmischung in innere Angelegenheiten“ quittiert. Der jahrelange Kampf der DDR-Führung gegen die Erfassungsstelle könnte dafür sprechen, dass sie wohl doch nicht wirkungslos war.

9. Ihre Abschlussbilanz 1992

Bis 1989 gelang es die Erfassungsstelle, 121 Todesfälle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sowie 80 in und um Berlin zu dokumentieren (tatsächlich starben allein an der Berliner Mauer mindestens 140, bei Fluchtversuchen über die Ostsee wohl mehr als 800 Menschen). Bei ihrer Auflösung im Jahr 1992 überlieferte die Erfassungsstelle 32 Kubikmeter Akten mit Material zu rund 42.000 Fällen. Ihre Zentralkartei enthielt die Namen von ungefähr 70.000 Opfern und etwa 10.000 Beschuldigten. Wie inzwischen bekannt ist, erfasste die Salzgitter-Behörde nur einen Bruchteil der in ihrer Zuständigkeit liegend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iese Einschränkung kann allerdings die politische Bedeutung der personell und finanziell spartanisch ausgestatteten Zentralen Stelle nicht schmälern.

10. Die Nutzung der Akten nach 1990

Nach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dienten die Unterlagen der Erfassungsstelle unter anderem zur Strafverfolgung der Täter, zu Auskünften in Kassations-, Rehabilitierungs- und Entschädigungsverfahren, zu Ermittlungen geg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wegen Rechtsbeugung sowie zur Sicherheitsüberprüfung von Ostdeutschen, die sich um Stellen im öffentlichen Dienst bewarben.

Auch bei den sogenannten **Mauerschützenprozessen** waren die Auskünfte aus den Salzgitter-Akten zum Dienst im Kommando Grenze der Nationalen Volksarmee von erheblicher Bedeutung. Wegen der Schüsse auf Flüchtlinge mussten sich in Berlin und Potsdam 246 Angeklagte vor Gericht verantworten. Fast die Hälfte von ihnen wurde freigesprochen, 132 Personen erhielten Freiheits- oder Geldstrafen, darunter zehn Mitglieder der SED-Führung, 42 hohe Militärs und 80 Soldaten. Von weiteren 31 in Neuruppin angeklagten Todesschützen wurden 19 verurteilt.

Erkenntnisse der Erfassungsstelle spielten ferner eine Rolle, wenn wegen des **Verdachts der Rechtsbeugung gegen Richter und Staatsanwälte** ermittelt wurde. Indessen ist die Bilanz hier sehr ernüchternd: In 40 Jahren verurteilte die DDR-Strafjustiz ca. 250.000 Personen wegen politischer Delikte. Nach 1990 wurden deshalb 12.000 Ermittlungsverfahren eingeleitet, von denen nur 274 zu einer Anklage führten; alle anderen wurden alsbald eingestellt. Von den 274 Verfahren endeten lediglich 59 mit einem Urteil, davon 32 mit einem Freispruch, zwei mit einer

Geldstrafe, 23 mit einer zur Bewährung ausgesetzten Freiheitstrafe und nur zwei mit einer Gefängnisstrafe ohne Bewährung. Diese Bilanz erscheint angesichts der Vielzahl rechtsstaatswidriger Verurteilungen unbefriedigend.

Seit 2007 befinden sich die Akten der Erfassungsstelle im **Bundesarchiv**. Sie stehen dort zu Forschungszwecken zur Verfügung und spielen bis heute eine Rolle bei de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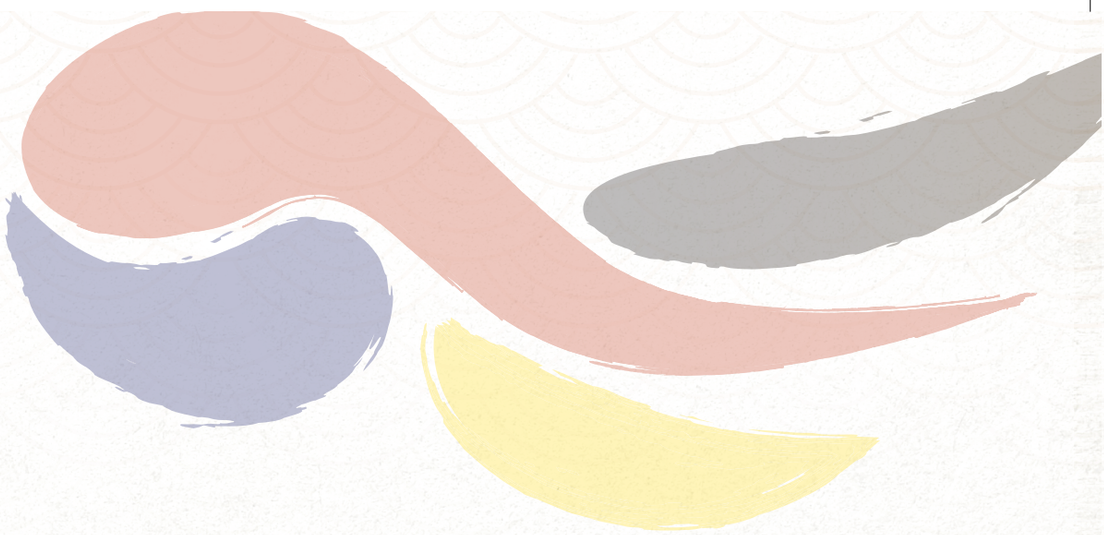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III. Zur politischen Bedeutung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Dass die zuständigen Stellen eines Rechtsstaats eklatante Verstöße gegen Gebote der Menschlichkeit und der Rechtsstaatlichkeit möglichst genau erfassen, registrieren, verfolgen und ahnden müssen, ist ein evidenter Grundsatz der Gerechtigkeit. Diese Erkenntnis galt auch in den Jahren des Kalten Krieges in Europa und vor allem im geteilten Deutschland. Da die Bundesrepublik sich dabei - getreu dem Wiedervereinigungsgebot in der Präambel des Grundgesetzes - auch immer in der Verantwortung für die Deutschen in der DDR sah, erscheint die Gründung der Zentralen Erfassungsstelle der Justizverwaltungen in Salzgitter auch aus heutiger Sicht richtig.

Zwar nahm an ihrer verdienstvollen Arbeit die breite Öffentlichkeit nur sporadisch Anteil - sie bekam erst im Juli 1988 einen Pressesprecher in Gestalt ihres stellvertretenden Leiters. Doch war die Erfassungsstelle denen, die es anging, stets präsent. In wie vielen Einzelfällen sie durch ihre Existenz Flüchtlinge vor Tod und Verletzung oder Regimekritiker vor Zersetzung, Strafverfolgung und Verhaftung bewahrt hat, wissen wir nicht. Entscheidend ist, dass in der Aufgabenstellung und Tätigkeit der Erfassungsstelle immer auch - meist unausgesprochen - die Hoffnung mitschwang, dass sich die politischen Verhältnisse in Deutschland eines Tages normalisieren könnten und staatliches Unrecht dann keinen Bestand haben werde.

Diese Hoffnung erfüllte sich 1990 mit der Wieder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in Frieden und Freiheit.

NOTE



SESSION 2-2.

(Kr)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Nordkorea und Politik der neuen Regierung zu den Menschenrechten im Norden

Lee Kyu Chang, leitender wissenschaftlicher Mitarbeiter am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ichtungen und Aufgaben für die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politik

Lee Kyu-chang (Senior Research Fellow, Unification Research Institute)

I. Konzepte der Menschenrechte und ihre ideologische Grundlagen in Nordkorea

Am 9. April 2009 änderte Nordkorea die Verfassung, und die Klausel „Achtung und Schutz der Menschenrechte" wurde festgelegt (Art. 8). Schon davor verfügte Nordkorea über Klauseln, die die Menschenrechte festlegten, etwa in Gesetzen wie dem Rechtsanwaltgesetz (1993 erlassen)[1] und dem Strafprozeßrecht (1992 erlassen)[2]. Darüber hinaus erlässt Nordkorea weiterhin Gesetze im Zusammenhang mit Menschenrechten, wie die Garantie der Frauenrechte (2010), die Garantie der Kinderrechte (2010) und das Gesetz zum Schutz der Rechte und Interessen von Koreanern in Übersee (2022). Es scheint, dass auch Menschenrechtsschulungen durchgeführt werden. Laut dem von Nordkorea für die 2. Allgemeine Regelmäßige Überprüfung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im Jahr 2014 vorgelegten Länderbericht widmete Nordkorea seinen Errungenschaften beim Schutz und bei der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große Aufmerksamkeit.[3] Insbesondere im Bereich der Menschenrechtsbildung werden neben den Menschenrechtsschulungen an regulären Bildungseinrichtungen und Ausbildungsstätten für Juristen verschiedene Sonderseminare durchgeführt. Darüber hinaus werden Gesprächssendungen mit renommierten Menschenrechtswissenschaftlern ausgestrahlt und internationale Menschenrechtsgesetze sowie Menschenrechtslehrbücher veröffentlicht. Außerdem stellt Nordkorea am Tag der Menschenrechte, am Internationalen Frauentag, am Internationalen Kindertag und am Internationalen Tag der Behinderten wichtige Inhalte und Grundsätze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dokumente über die Medien vor.[4] Das Konzept der Menschenrechte, auf das sich Nordkorea bezieht,

---

[1] Nordkorea Rechtsanwaltsrecht Par. 2: In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garantieren** Anwälte **die Menschenrechte gründlich** und verteidigen das staatliche Rechtssystem durch Interessenvertretung und Rechtshilfe.

[2] Nordkorea Strafprozessordnung Par. 6: Der Staat **garantiert die Menschenrechte** bei der Behandlung und Abwicklung von Strafsachen umfassend.

[3] UN Doc. A/HRC/WG.6/19/PRK/1 (30. Januar 2014), paras. 30-124.

[4] Ibid., paras. 20-22.

unterscheidet sich jedoch stark vom Konzept der universellen Menschenrechte.

1. Menschenrechte aus totalitärer Sicht

Erstens, während das universelle Konzept der Menschenrechte die Rechte und Freiheiten „des Einzelnen" betont, betont Nordkorea die Menschenrechte als „Ganzes". Mit anderen Worten basieren die Rechte und Pflichten der Bürger in Nordkorea auf dem kollektivistischen Prinzip „Einer für alle, alle für einen" (Nordkoreanische Verfassung, Art. 63). Nordkorea erklärt im am 13. September 2014 veröffentlichten „Bericht der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Folgendes:

„Während es bei Menschenrechten um die Frage geht, ob sie die Rechte des Einzelnen oder die Rechte der Gruppe sind, geht es bei der Frage der Rechte des Individuums um die Rechte des Individuums als Mitglied einer Gruppe. Von den Rechten isolierter, individueller Menschen, die von einer sozialen Gruppe getrennt sind, kann keine Rede sein."[5]

2. Mit Basis auf der Juche-Ideologie

Zweitens basiert Nordkoreas Sicht der Menschenrechte auf der Juche-Ideologie.[6] Die Juche-Ideologie fungiert als die regierende Ideologie der nordkoreanischen Gesellschaft, nachdem Nordkorea 1972 die Sozialistische Verfassung verabschiedete und sie als Leitfaden für ihre Handlungen festlegte (Art. 4). In Nordkorea wird dies „die Juche-Theorie der Menschenrechte" genannt. Als am 11. April 2019 die Verfassung geändert wurde, wurde die Juche-Ideologie (und der Militarismus) durch die „Ideologie von Kim Il-sung und Kim Jeong-il" (Art. 3 der Nordkoreanischen Verfassung) ersetzt. Die Juche-Ideologie und „Ideologie von Kim Il-sung und Kim Jeong-il" bilden die Grundlage der Satzung der Arbeiterpartei und des 10-Punkte-Prinzips. Um diese Idee aufrechtzuerhalten und weiterzugeben, kontrollieren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und die Arbeiterpartei die Glaubens- und Gewissensfreiheit, die Rede- und Pressefreiheit, die Versammlungs-

---

[5]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sstudie, „Bericht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sstudie, (Pjöngjang: Koreanische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sstudie, 2014), S. 8.

[6] Derselbe Bericht von oben, S. 7.

und Vereinigungsfreiheit und die Wahlfreiheit. Um das sozialistische System zu schützen, kontrolliert die Regierung die Bevölkerung durch die Nationale Sicherheitsbehörde und Soziale Sicherheitsbehörde und betreibt politische Gefangenenlager, um das System aufrechtzuerhalten. Durch die Verabschiedung des Geumsusan Sonnenpalastgesetzes (2013), des Gesetzes gegen die Kultur der Widerstandsideologie (2021) und des Gesetzes zur Bildungssicherung der Jugend (2021) wird die ideologische Kontrolle der Bevölkerung kontinuierlich gestärkt. Die Staatsanwaltschaft und das Tribunal, das die letzte Bastion des Schutzes der Menschenrechte sein sollte, machen auch „Souveränität und die Sicherheit des sozialistischen Systems" zu einer ihrer Hauptaufgaben (Art. 156 und 162 der Nordkoreanischen Verfassung). Das Notfallsquarantänegesetz (2021), das erlassen wurde, um den Zustrom und die Ausbreitung von COVID-19 zu verhindern, sieht eine maximale Todesstrafe für Verstöße gegen die Epidemieordnung (Art. 65 und 68) vor.

3. Mit Betonung der Souveränität: Einmischung in innere Angelegenheiten und Verknüpfung mit der nationalen Souveränität

Drittens betont das Konzept de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den Aspekt der nationalen Rechte, d.h. der Rechte des Staates. Nordkorea erklärt dies in Verbindung mit seiner Souveränität über den Staat. Mit anderen Worten sei die Frage der Menschenrechte eine Angelegenheit, die zur Souveränität des Staates gehört, und nicht Gegenstand einer Einmischung in innere Angelegenheiten.

„Menschenrechte sind durchaus eine Angelegenheit innerer Angelegenheiten, sie sind Menschenrechte unter der Bedingung, dass die Souveränität des Staates gewährleistet wird, und sie können niemals Gegenstand einer Einmischung in innere Angelegenheiten oder ein Instrument zur Rationalisierung einer Einmischung in innere Angelegenheiten sein.

Daraus argumentiert die Republik, dass Menschenrechte der Souveränität des Staates entsprechen.

Wenn wir sagen, dass Menschenrechte die Souveränität des Staates sind, meinen wir

dabei die nationale Souveränität."[7]

II. Reaktion und Haltung Nordkoreas in Menschenrechtsfragen

1. Übergang zu einer offensiven Reaktion auf systembezogene Menschenrechtsfragen nach der Veröffentlichung des COI-Berichts (Commission of Inquiry)

Als die Rigorosität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sfrage bekannt wurde, wurden in den frühen 2000er Jahren verschiedene Aktivitäten zur Verbesserung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e durchgeführt. Die ehemalige UN-Menschenrechtskommission hat von 2003 bis 2005 die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resolution verabschiedet, und der UN-Menschenrechtsrat, der 2006 gegründet wurde, um die ehemalige UN-Menschenrechtskommission zu ersetzen, vertritt dieselbe Resolution seit 2008 und die UN-Generalversammlung seit 2005. Darüber hinaus wird seit 2004 der Sonderberichterstatter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ernannt. Auf nationaler Ebene erließen 2004 die Vereinigten Staaten den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und im Jahr 2006 erließ Japan das „Gesetz über den Umgang mit dem Entführungsproblem und ander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die nordkoreanische Regierung". Südkorea hat 2016 das „Nationale Menschenrechtsgesetz zu Nordkorea" erlassen.

Nordkorea, das nicht viel auf die Kritik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in Menschenrechtsfragen reagiert hat, ist seit der Veröffentlichung des UN-COI-Berichts über die Menschenrechte in Nordkorea im Februar 2014 zu einer offensiven Reaktionshaltung übergegangen. Der Grund dafür ist, dass der COI-Bericht die strafrechtliche Verfolgung nordkoreanischer Beamter erwähnt, die für Verletzungen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e verantwortlich sind. Der COI kommt zu dem Schluss, dass systematische, weitreichende und schwere Menschenrechtsverletzungen von Nordkorea durch nordkoreanische Institutionen und Beamte verübt wurden.[8] Insbesondere wurde festgestellt, dass das Ministerium für Nationale Sicherheit (derzeit

---

[7] Der Selbe Bericht von oben, S. 9.

[8] UN Doc. A/HRC/25/63(7. Februar 2014), para. 80

die Nationale Sicherheitsbehörde), das Ministerium für Volkssicherheit (derzeit die Soziale Sicherheitsbehörde), die Staatsanwaltschaft und das Gerichtssystem, die Volksarmee Joseons, die Arbeiterpartei Joseons und die Nationale Verteidigungskommission (derzeit der Staatsrat) institutionell rechenschaftspflichtig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sind.[9] Der COI verlangt, dass Straftäter vo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strafrechtlich zur Verantwortung gezogen werden, und schlug vor, dass der UN-Sicherheitsrat die nordkoreanische Situation an den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IStGH) weiterleitet oder ein Ad-hoc-Tribunal bei den Vereinten Nationen einrichtet. Vor allem bezog sich der detaillierte Bericht des COI auf 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s „obersten Führers" Nordkoreas, Kim Jeong-eun, indem gesagt wurde, dass der „oberste Führer" getrennt von der Arbeiterpartei und der Nationalen Verteidigungskommission als unabhängiges Entscheidungsgremium handelt.[10] Seitdem geht die Diskussion über die Rechenschaftspflicht (accountability) i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weiter.

Der Verweis des COI-Berichts auf den IStGH bei den nordkoreanischen Beamten oder die Einrichtung eines UN-Sondergerichtshofs verstößt gegen die Souveränität Nordkoreas und das Nichteinmischungsprinzip in seine inneren Angelegenheiten. Der Verweis des COI-Berichts auf die internationale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hochrangiger Beamter, insbesondere des „Obersten Führers", wurde wie nie zuvor stark abgelehnt, in dem Sinne, dass er eine Beleidigung der höchsten Würde darstelle und man das nordkoreanische System stürzen wolle. Diese Haltung wurde unmittelbar nach der Veröffentlichung des COI-Berichts wiederholt, einschließlich der offiziellen Antwort Nordkoreas, der Bemerkungen des Sprechers der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einer Erklärung vom „Komitee für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des Vaterlandes" und der Bemerkungen des nordkoreanischen Außenministers.

Erstens sagte am 21. desselben Monats, direkt nach der Veröffentlichung des COI-Berichts am 17. Februar 2014, ein Sprecher des nord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in einem Interview mit einem Reporter der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dass der COI-Bericht vollständig wertlos sei, und wies den Inhalt wie folgt zurück:

„Die Opposition gegen die Republik mit unvernünftiger und erzwungener Anwendung

[9] UN Doc. A/HRC/25/CRP.1(7. Februar 2014), paras. 1166–1190

[10] UN Doc. A/HRC/25/CRP.1(7. Februar 2014), para. 1191

der Menschenrechte als Vorwand, um den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 oder den UN-Sicherheitsrat anzurufen, ist eine äußerst gefährliche politische Provokation, um die Würde unserer Republik zu untergraben und unser System durch zunehmenden Druck zu erschüttern …"

Zweitens antwortete ein Sprecher der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am 13. September 2014 auf eine Frage eines Reporters der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dass die Veröffentlichung des COI-Berichts, „die antirepublikanische Menschenrechtsverschwörung noch verschlimmert habe" und erklärte den Hintergrund und Zweck der Veröffentlichung des Berichts der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wie folgt:[11]

„Die feindlichen Kräfte missbrauchen die Menschenrechtsfrage, um die Würde unserer Republik zu beflecken und die von unserem Volk gewählte Ideologie und das System zu vernichten. Deshalb hat die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einen Bericht veröffentlicht, um die Wahrheit aufzudecken und über die tatsächliche Menschenrechtssituation in unserer Republik zu informieren."

Drittens kritisierte das „Komitee für di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des Vaterlandes" (Chopyeongtong), Nordkoreas Geheimdienst gegen Südkorea, die Erwähnung der nordkoreanischen Atomfrage und der Menschenrechtsfragen durch die ehemalige Präsidentin Park Geun-hye in einer Rede vor der Generalversammlung der Vereinten Nationen am 26. September 2014 wie folgt: „Es ist eine direkte Herausforderung unserer Würde und unseres Systems und eine äußerst gefährliche Provokation, die die prekär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in eine vollständige Katastrophe gestürzt hat." Darüber hinaus nahm der damalige Außenminister Yun Byung-se am 23. September 2014 in New York an einem hochrangigen Treffen zum Thema Menschenrechte in Nordkorea teil, das von US-Außenminister John Kerry geleitet wurde, und sagte, dass „Nordkoreas Behauptung, es entwickle Atomwaffen zum Schutz der Menschenrechte, widersprüchlich" sei.

Der nordkoreanische Außenminister Ri Su-yong sagte am 27. September 2014, er lehne „alle Versuche und Aktionen, das System eines bestimmten Landes zu stürzen, entschieden ab".

---

[11]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13. 9. 2014.

Nordkorea zeigte darüber hinaus eine neue Seite, etwa die öffentliche Fragestellung in systembezogenen Menschenrechtsfragen. Zum Beispiel schickte die Forschungs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Joseons am 23. November 2016 einen ungewöhnlich öffentlichen Berief an die Vereinten Nationen, in dem sie die am 15. November 2016 vom Dritten Ausschuss der Generalversammlung der Vereinten Nationen verabschiedete Resolution zu den Menschenrechten in Nordkorea scharf verurteilte und ihren Widerruf forderte.[12] Am 7. Dezember 2016 erhöhte die Gesellschaft auch das Niveau der Offensive, indem sie über einen öffentlichen Untersuchungsbrief im Namen des „Instituts für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dazu einlud, nach Nordkorea zu kommen, um die Realität de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aus erster Hand zu erleben.[13] Seitdem hat Nordkorea sich ununterbrochen beschwert, dass seine Souveränität und seine höchste Würde verletzt würden, wenn es um Probleme geht, die sich aus Sicht des Nordens negativ auf die Aufrechterhaltung des Regimes auswirken wie Hafteinrichtungen, darunter beispielsweise politische Gefangenenlager und Justizvollzugsanstalten, die Erörterung der Rechenschaftspflicht (Erörterung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r nordkoreanischen Führung) usw. Ein Sprecher des nordkoreanischen Außenministeriums äußerte sich über die neue UN-Sonderberichterstatterin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Elizabeth Salmon, die am 2. September 2022 Südkorea besuchte: „Wieder wagte sie es, inakzeptable Bemerkungen zu machen, die unser (nordkoreanisches) heiliges System und unsere nationale Souveränität verletzten." „Wir (Nordkorea) werden die antirepublikanische Menschenrechtsverleumdung der Vereinigten Staaten und ihrer Anhänger, die versuchen, das System zu stürzen, nicht tolerieren."[14]

2. Aktive Haltung gegenüber Themen der Unterprivilegierten und der SDGs

Andererseits zeigt Nordkorea eine aktive Haltung gegenüber Menschenrechtsfragen im Zusammenhang mit schutzbedürftigen Gruppen wie Frauen, Kindern und Behinderten. Erstens wurden hinsichtlich der Rechte der Frauen am 30. Juni 2015 einige Inhalte des Sozialistischen Arbeitsrechts und des Gesetzes zur Gewährleistung der Rechte der Fraug geändert, sodass der vorherige Mutterschaftsurlaub, der 60 Tage vor und 90 Tage nach der Geburt betrug, auf 60 Tage vor und 180 Tage nach der Geburt verlängert wurde. Am

[12]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23. 11. 2016

[13]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7. 12. 2016

[14] Nachrichtenagentur "Joseon Joongang Tongshin", 2. 9. 2022.

23. November 2015 wurden zwei der drei Vorbehaltsbestimmungen des Übereinkommens zu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Frau zurückgezogen, und am 11. April 2016 wurden dem Ausschuss der Vereinten Nationen für die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Frau der 2. 3. und 4. Integrierte Bericht vorgelegt.

Zweitens wurde in Kinderfragen nach Inkrafttreten des Kinderrechtsschutzgesetzes im Jahr 2010 am 10. November 2014 das „Fakultativprotokoll zum Übereinkommen über die Rechte des Kindes hinsichtlich Kinderhandel, Kinderprostitution und Kinderpornografie" ratifiziert, und am 13. Mai 2016 wurden der 5. und 6. Integrierte Bericht der UN-Kinderrechtskonvention dem UN-Kinderrechtsausschuss vorgelegt.

Drittens hat Nordkorea bezüglich der Rechte von Behinderten am 3. Juli 2013 das Übereinkomm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unterzeichnet, am 21. November 2013 das Gesetz zum Schutz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überarbeitet, am 23. November 2016 das Übereinkommen über die Recht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ratifiziert, am 6. Dezember 2018 die Ratifizierungsurkunde beim UN-Sekretariat hinterlegt und am 19. Dezember der UN-Behindertenrechtskommission den ersten Bericht zur Umsetzung der UN-Behindertenrechtskonvention übergeben. Obwohl der Besuch des Sonderberichterstatters der Vereinten Nationen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und des Sonderberichterstatters des US-Außenministeriums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nicht gestattet war, war der Besuch des UN-Sonderberichterstatters für die Rechte von Behinderten im Mai 2017 erlaubt. Nordkorea nahm an den Paralympischen Sommerspielen 2012 in London, den Paralympischen Spielen in Asien 2014 in Incheon, den Paralympischen Spielen in Rio 2016 und den Paralympischen Spielen in Pyeongchang 2018 teil.

Viertens übernimmt Nordkorea eine aktive Rolle bei den Zielen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Bezug auf die Umsetzung der SDGs hat Nordkorea im Juni 2021 einen „Freiwilligen nationalen Überprüfungsbericht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erstellt und dem Hochrangigen Politischen Forum der Vereinten Nationen vorgelegt. Nordkorea beschreibt darin 17 Hauptziele, 95 detaillierte Ziele und 132 Indikatoren gemäß den SDGs der Vereinten Nationen. Insbesondere legt der VNR-Bericht konkret Ziele für die Gleichstellung der Geschlechter und die Stärkung der Rolle der Frau in „Ziel-5" fest.

3. Selektive Akzeptanz und Koordinierung der Menschenrechtsmechanismen der Vereinten Nationen

Seit der Amtseinführung von Kim Jong-un ist Nordkorea seiner Verpflichtung zur Vorlage von Berichten als Vertragspartei der Konvention über die Rechte des Kindes, der Konvention zu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Frau und der Konvention über die Rechte von Behinderten nachgekommen. Im Vergleich dazu wurde der Umsetzungsbericht zum „Internationalen Pakt über bürgerliche und politische Rechte (Pakt über die Rechte der Freiheit)" seit dem Jahr 2000 nicht mehr vorgelegt. Der Umsetzungsbericht des „Internationalen Paktes über wirtschaftliche, soziale und kulturelle Rechte (Pakt über die Soziale Rechte)" wurde seit 2002 ebenfalls nicht mehr vorgelegt. Das Übereinkommen zur Beseitigung der Rassendiskriminierung, das Übereinkommen zur Verhütung von Folter und das Römische Statut des Internationalen Strafgerichtshofs, die zur Verbesserung de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notwendig sind, wurden noch nicht einmal ratifiziert.

Eine solche selektive Akzeptanz und Kooperation durch Nordkorea zeigt sich auch in der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Bis heute gab es 3 UPRs für Nordkorea (2009 , 2014 und 2019). Nordkorea hat die Empfehlungen der UN-Mitgliedstaaten mal akzeptiert, dann teilweise akzeptiert, geprüft und abgelehnt. Insgesamt wurden Empfehlungen zur Aufrechterhaltung des Systems und zur Identifizierung der Rechenschaftspflicht abgelehnt und Empfehlungen für Angelegenheiten akzeptiert, die relativ wenig mit der Aufrechterhaltung des Systems zu tun hatten.

Name des Vertrags	Beitritt/Ratifizierung (Basierend auf dem Datum der Benachrichtigung/Einzahlung)	Vorlage von Berichten	Bemerkungen
Pakt über Freiheitsrechte	14. 9. 1981 Beigetreten	Erster Bericht: 24. 10. 1983. 2. Bericht: 20.3.2000	
Pakt über soziale Rechte	14. 9. 1981 Beigetreten	Erster Bericht: 18. 12. 1984. 2. Bericht: 12. 4. 2002	
Übereinkommen über Kinderrechte	21. 9. 1990 Ratifiziert	Erster Bericht: 13. 02. 1996. 2. Bericht: 16. 05. 2002. 3. und 4. Intergrierter Bericht: 10. 12. 2007 5. und 6. Intergrierter Bericht: 13. 5. 2016	
Übereinkommen zu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27. 2. 2001 Beigetreten	Erster Bericht: 9. 11. 2002. 2. 3. und 4. Intergrierter Bericht: 11. 4. 2016	Art. 29 Abs. 1 Vorbehalt

Frau			
Übereinkommen über die Rechte von Behinderten	6. 12. 2016. Ratifiziert	Erster Bericht: 19.12.2018	

<Tabelle 1> Stand des Beitritts / der Ratifizierung wichtiger internationaler Menschenrechtsverträge durch Nordkorea und Vorlage von Berichten

4. Implikationen: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 Akzeptanz Nordkoreas

Die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politik hat viele Attribute. Auf der Grundlage des Konzepts der Menschenrechte gibt es ein Problem, bei dem der Aspekt des freiheitlichen und sozialen Rechts stärker betont wird. Das Konzept der Menschenrechte erstreckt sich auf die 3. Generation der Menschenrechte, wie das Recht auf Frieden, auf Entwicklung und auf Selbstbestimmung. Es gibt eine Politik, die auf das nordkoreanische Regime abzielt, und es gibt eine Politik, die auf das nordkoreanische Volk abzielt. Neben Nord- und Südkorea gibt es vielfältige Akteure, die mit Menschenrechten in Nordkorea zu tun haben, darunter die Vereinten Nationen,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einzelne Länder sowie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NGOs. Im Inland befassen sich verschiedene Ministerien wie das Ministerium für Vereinigung, das Außenministerium und das Justizministerium sowie die Nationale Menschenrechtskommission mit Menschenrechtsangelegenheiten in Nordkorea. Um das Endziel der Verbesserung der Menschenrechte von Nordkoreanern zu erreichen, besteht die Aufgabe, eine wirksame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politik zu etablieren und zu fördern. Es ist erforderlich, eine Strategie zu entwickeln, wie das Problem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e, das viele Attribute aufweist, angegangen werden kann, wobei sich verschiedene Akteure die Rollen teilen.

Die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politik sollte auf der Grundlage der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etabliert und gefördert werden. Im Hinblick auf Rechenschaftspflicht und Übergangsjustiz (Transitional justice) sollten Untersuchungen zu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die vom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s" des Vereinigungsministeriums und von den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des Justizministeriums verübt werden, aufgezeichnet und aufbewahrt werden.

Auch die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die durch das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gesetz vorgeschrieben ist, soll so schnell wie möglich ins Leben gerufen werden.Auf der anderen Seite besteht die Aufgabe, die kulturelle Relativität und die Besonderheiten der Nord-Süd-Beziehungen mit der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in Einklang zu bringen. Die „Wiener Erklärung mit Aktionsprogramm", die 1993 auf der Wiener Weltmenschenrechtskonferenz verabschiedet wurde, weist darauf hin, dass es notwendig ist, die nationalen und regionalen Besonderheiten zu berücksichtigen und gleichzeitig der Universalität der Menschenrechte Gewicht zu verleihen. In diesem Zusammenhang sieht das Nordkoreanische Menschenrechtsgesetz in Südkorea vor, dass der Nord-Süd-Menschenrechtsdialog in wichtigen Fragen der Förderung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e fortgesetzt werden sollte, wobei der Dialog zu einer Pflicht und nicht zu einer willkürlichen Angelegenheit wird (Art. 7 Absatz 1). Die Reaktion und Haltung Nordkoreas zu Menschenrechtsfragen zeigt, dass im innerkoreanischen (Menschenrechts-)Dialog die Akzeptanz Nordkoreas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

Ⅲ. Parallele Bemühungen zur Förderung der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e, zur Entwicklung der Nord-Süd-Beziehungen und zur Schaffung von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Bei der innerkoreanischen Green Détente wird zunächst die Zusammenarbeit in den Bereichen Forstwirtschaft, Trinkwasser und Abwasserentsorgung gefördert. - Wir werden dies um die umweltfreundliche Zusammenarbeit auf Dorfebene, die Katastrophenzusammenarbeit und die Einrichtung der „Infrastruktur für die Klima-Umwelt-Kooperation der koreanischen Halbinsel" erweitern. (Arbeitsbericht 2022 des Ministeriums für Vereinigung)

Art. 2, Absatz 2 des nordkoreanischen Menschenrechtsgesetzes in Südkorea legt fest, dass „der Staat zusammen mit den Bemühungen zur Förderung de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Anstrengungen unternimmt, um die Nord-Süd-Beziehungen zu entwickeln und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 schaffen". Menschenrechte, Entwicklung und Frieden gelten als die 3 Säulen der Vereinten Nationen, und das Konzept der Menschenrechte erstreckt sich auf die 3. Generation der Menschenrechte, wie das Recht auf Entwicklung oder auf Frieden. In dieser Hinsicht müssen wir eine Agenda festlegen,

die mit der Verbesserung der Menschenrechte des nordkoreanischen Volkes, der Entwicklung der Nord-Süd-Beziehungen und der Schaffung von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vereinbar ist. In diese Kategorie fallen beispielsweise die Projekte, welche die innerkoreanische Zusammenarbeit zur gemeinsamen Reaktion auf Klimawandel, Katastrophen und Infektionskrankheiten mit der innerkoreanischen „Green Détente" und der Grenzzusammenarbeit kombinieren.

Der Klimawandel ist ein globales Problem, das nicht nur das Ökosystem und die Umwelt betrifft, sondern auch wichtige Bereiche des menschlichen Lebens wie Gesundheit, Infektionskrankheiten, Wirtschaft, Wohnen und Trinkwasser. Der Klimawandel führt zu einer Zunahme der Häufigkeit und Intensität von Katastrophen, neuerdings ist der Begriff Klimakrise in aller Munde, aber auch der Begriff „Klimakatastrophe" wird verwendet.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nimmt die Auswirkungen des Klimawandels auf die Menschenrechte wahr und arbeitet daran, darauf zu reagieren. Am 28. März 2008 beschloss der Menschenrechtsrat der Vereinten Nationen, dem Hohen Kommissar der Vereinten Nationen für Menschenrechte (OHCHR) über die Beziehung zwischen Menschenrechten und Klimawandel Bericht zu erstatten, und stellte fest, dass der Klimawandel ein globales Problem ist und eine globale Lösung erfordert. Am 15. Januar 2009 veröffentlichte der OHCHR den „OHCHR-Bericht über den Zusammenhang zwischen Klimawandel und Menschenrechten".[15] Seitdem hat der UN-Menschenrechtsrat am 25. März 2009, 30. September 2011, 22. Juni 2017, 5. Juli 2018 und 12. Juli 2019 „Resolutionen zu Menschenrechten und Klimawandel" nachhaltig verabschiedet. Insbesondere hat der UN-Menschenrechtsrat durch die Annahme einer Resolution am 8. Oktober 2021 den „Sonderberichterstatter für die Förderung und den Schutz der Menschenrechte im Kontext des Klimawandels" (im Folgenden „der Sonderberichterstatter der Vereinten Nationen für Klimawandel") mit einer Amtszeit von 3 Jahren eingesetzt.[16] Der UN-Sonderberichterstatter für den Klimawandel stellte auf der 50. Sitzung im Juni 2022 seinen ersten Bericht mit dem Titel „Initial Planning and Vision for the Mandate" vor.[17] Der Sonderberichterstatter nennt in dem Bericht Bereiche, die im

---

[15]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 Doc. A/HRC/10/61 (15. Januar 2009).

[16] Human Rights Council,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UN Doc. A/HRC/RES/48/14 (13 Oktober 2021), para.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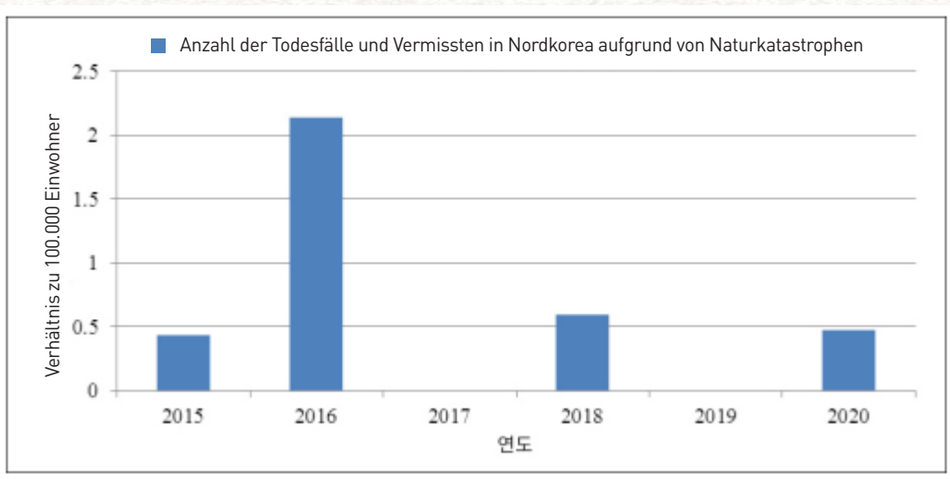
[17] Human Rights Council, *Initial planning and vision for the Mandate*, UN Doc. A/HRC/50/39(3 June 2022).

Mittelpunkt künftiger Tätigkeiten stehen werden.[18]

Nordkorea reagiert auf Katastrophen, indem es am 27. Juni 2014 das Katastrophenverhütungs-, Rettungs- und Wiederherstellungsgesetz erließ. Nordkorea ist jedoch bei der Katastrophenbewältigung weitaus anfälliger als andere Länder und stärker vom Klimawandel betroffen. Laut der INFORM-Umfrage für 2022 belegt Nordkoreas mangelnde Katastrophenreaktionsfähigkeit mit einem Wert von 6,3 den 38. Platz von 191 untersuchten Ländern. Näher an 10 Punkten bedeutet, dass seine Reaktionsfähigkeit abnimmt. Darüber hinaus belegte die nordkoreanische Risikoexposition gegenüber Katastrophen mit 4 Punkten den 71. Platz und die Anfälligkeit für Katastrophen mit 4,9 Punkten den 50. Platz.[19]

Klimawandel und Klimakrise wirken sich auch auf die Menschenrechte von Nordkoreanern aus. In dem im Juni 2021 eingereichten 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erklärt Nordkorea, dass eine Reihe von klimabedingten Naturkatastrophen das Leben, die Gesundheit und di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r Menschen ernsthaft beeinträchtigt haben.[20] Insbesondere hat Nordkorea die Anzahl der Todesfälle und vermissten Menschen durch Naturkatastrophen im VNR 2021 identifiziert, und laut dem Bericht wird die Zahl der Todesfälle am häufigsten durch Überschwemmungen verursacht.[21] Das Recht auf Leben der Nordkoreaner wird also durch Naturkatastrophen beeinträchtigt, die durch den Klimawandel und die Klimakrise verursacht werden.

< Abbildung-1> Anzahl der Todesfälle und Vermissten in Nordkorea aufgrund von Naturkatastrophen



Quelle: Demokratische Volksrepublik Korea, „Freiwilliger Nationaler Überprüdfungsbericht", S. 40.

Die durch den Klimawandel und die Klimakrise verursachte Wasserfrage ist zu einem Faktor im Streit zwischen Nord und Süd geworden. Bislang hat Nordkorea bei mehreren Gelegenheiten durch unbefugte Einleitungen in einen Fluss, der in beiden Gebieten liegt, in Südkorea Menschen- und Sachschäden verursacht, und dadurch wurden Südkoreas Lebens- und Eigentumsrechte verletzt. Im Juni 2022 forderte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eine Vorankündigung der Öffnung der Schleusentore des Whang-gang-Staudamms in Nordkorea, aber Nordkorea gab keine Mitteilung ab.

Nordkorea zeigt jedoch Anzeichen einer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Ratifizierung des „Rahmenübereinkommens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UNFCCC)" im 1994, Ratifizierung des „Kyoto-Protokolls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im 2005, Ratifizierung des „Pariser Abkommens" im Jahr 2016" und Vorlage des „National festgelegten Beitrags". Dies kann als Reaktion auf den internationalen Trend des Klimawandels interpretiert werden. Innenpolitisch und rechtlich reagiert Nordkorea auch auf den Klimawandel, indem es in der Klausel Nr. 3193 des Präsidiums der Obersten Volksversammlung vom 29. Mai 2013 das „Regenerationsenergiegesetz" erließ. Im VNR 2021 werden drei Zukunftspläne zur Reaktion auf den Klimawandel vorgestellt: Umsetzung des nationalen Plans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Umsetzung der nationalen Politik zur Reduzierung des Katastrophenrisikos und Sensibilisierung für den Klimawandel.[22] Die gemeinsame Nord-Süd-Reaktion und Zusammenarbeit bei Klimawandel, Klimakrise und Katastrophen steht im Einklang mit der Entwicklung der Nord-Süd-Beziehungen und des Friedens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sowie dem Schutz der Menschenrechte der Menschen in Nord- und Südkorea.

IV. Ausweitung des Informationsflusses und des Rechts auf Selbstbestimmung für Wandel in Nordkorea

[22] Der Selbe Bericht von oben, S. 41.

„Darüber hinaus werden wir durch die schrittweise Öffnung und Verbreitung der Nachrichten (Presse, Verlagswesen, Rundfunk usw.)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und den Konsens erweitern und die nationale Homogenität wiederherstellen." (Arbeitsbericht 2022 des Ministeriums für Vereinig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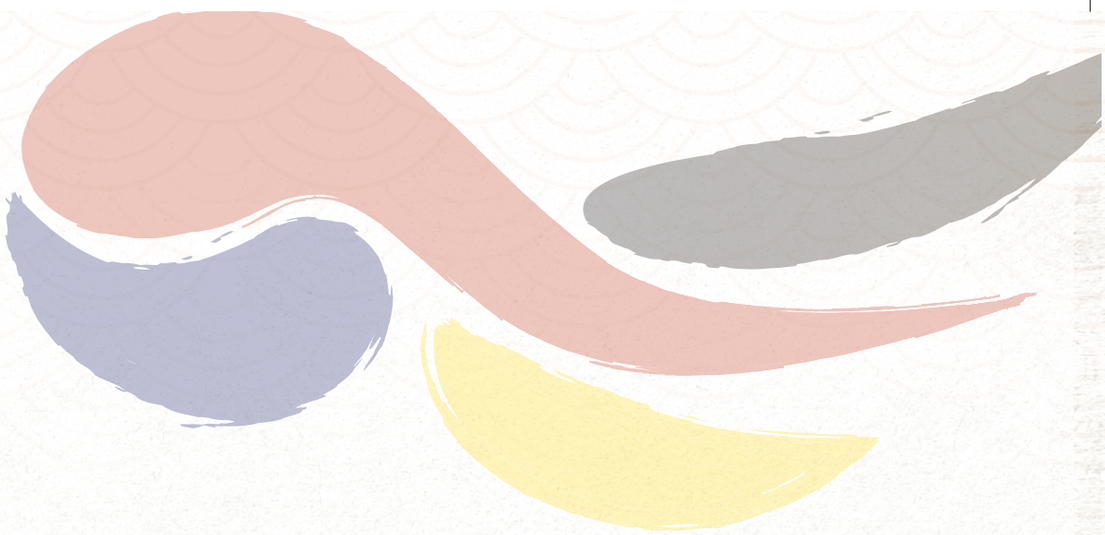
Menschenrechtsprobleme, die in Haft- und Justizvollzugseinrichtungen wie politischen Gefangenenlagern, Haftzentren, Arbeitslagern und Arbeitsvollzugsanstalten auftreten; Menschenrechtsfragen in Bezug auf Glaubens-, Gewissens-, Meinungs-, Versammlungs- und Vereinigungsfreiheit; Menschenrechtsprobleme nordkoreanischer Überläufer. Um alle diese Probleme zu verbessern ist eine grundlegende Änderung der nordkoreanischen Behörden erforderlich. Veränderungen im nordkoreanischen System erfordern nicht nur externe Beteiligung, sondern auch interne Veränderungen durch Verbesserung des Bewusstseins der Menschen. Zu diesem Zweck sollte das Recht der nordkoreanischen Bürger auf Zugang zu Informationen durch den Zustrom externer Informationen und Kultur gestärkt werden. Es ist keine Übertreibung zu sagen, dass der Schlüssel zur Transformation Nordkoreas der Zugang zu Informationen ist. Denn Nordkorea hat sich bekanntlich abgeschottet und der Zugang zu Informationen der einfachen Menschen wird streng kontrolliert.

Auch für eine „friedliche Wiedervereinigung auf der Grundlage einer freiheitlichen und demokratischen Grundordnung", wie es in Artikel 4 der Verfassung heißt, sei die Ausweitung des externen Informations- und Kulturflusses nach Nordkorea notwendig. Eine der Lehren, die uns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lehrt, ist, dass die Wiedervereinigung friedlich durch die Ausüb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urch das Volk der DDR erreicht wurd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hat lange Zeit vor der Vereinigung über „Wandel durch Annäherung", also durch Austausch, Kooperation und Rundfunkstrahlung, Voraussetzungen und ein Klima geschaffen, sodass die ostdeutschen Einwohner ihr Selbstbestimmungsrecht wiedervereinigungsfreundlich wahrnehmen konnten, und das Ergebnis war der Fall der Berliner Mauer. Die deutsche Wiedervereinigung im Jahr 1990 wurde erreicht, als die ostdeutschen Bürger durch Wahlen für den Beitritt in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stimmten. Um eine friedliche Vereinigung auf der Grundlage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zu erreichen, muss die Vereinigung von Nord und Süd letztlich eine sein, bei der sich die Nordkoreaner für das südkoreanische System entscheiden. Mit anderen Worten sollte die Vereinigung durch die Ausüb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der Nordkoreaner erreicht werden. Denn die Vereinigung ist nur durch die Herzen der Menschen möglich, nicht

durch die Integration von Institutionen, Ideologien und Gesinnungen.

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 des Volke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bezieht sich auf das Recht der in einem bestimmten Gebiet lebenden Völker, das politische und rechtliche System eines Territoriums zu bestimmen, unabhängig davon, ob sie sich dafür entscheiden, einen eigenen Staat zu gründen oder Teil eines anderen Landes zu werden. Um das Recht des nordkoreanischen Volkes auf wiedervereinigungsfreundliche Selbstbestimmung auszuüben, also seine Affinität zum Süden zu stärken, bedarf es einer Politik in zwei Richtungen. Erstens sollte das Recht des nordkoreanischen Volkes auf Zugang zu Informationen durch den kontinuierlichen Zustrom externer Informationen und Kultur nach Nordkorea gestärkt werden. Dadurch sollte das nordkoreanische Volk selbst die Realität Nordkoreas und die Überlegenheit des liberalen demokratischen Systems Südkoreas erkennen. Dazu ist es notwendig, den Nord-Süd-Rundfunkaustausch und die menschlichen Kontakte auszubauen. Es muss zunächst darüber überlegt werden, wie wir aus Südkorea den Rundfunkmarkt Schritt für Schritt proaktiv öffn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ermutigend zu sehen, dass das Vereinigungsministerium in seinem Arbeitsbericht 2022 als eine der zu fördernden Aufgaben darlegt,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und den Konsens durch die schrittweise Öffnung der Presse (Medien, Publikation, Rundfunk)“ voranzutreiben. Auch die Abschaffung des Nationalen Sicherheitsgesetzes, insbesondere der Versammlungs- und Kommunikationsdelikte sowie der Lobes- und Ermutigungsdelikte, sollte im gesellschaftlichen Konsens angestrebt werden. Zweitens müssen wir die Herzen des nordkoreanischen Volkes durch humanitäre Hilfe, Austausch und Zusammenarbeit gewinnen und dies ständig weiter ausbauen.

NOTE



SESSION 3 I Sportaustausch während Teilung

SESSION 3-1.

(De) Stand der innerdeutschen Sportbeziehungen

Berno Bahro, Mitarbeiter am Lehrstuhl Trainings-und Bewegungswis senschaft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Die innerdeutschen Sportbeziehungen

Dr. Berno Bahro
Universität Potsdam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Ebenen der deutsch-deutschen Sportbeziehungen

- der „kleine Sport-Grenzverkehr“
- der offizielle innerdeutsche Sportverkehr
- der sportliche Systemwettstreit auf internationaler Bühne

Ausgangslage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usgangslage

westliche Besatzungszonen und Bundesrepublik	sowjetische Besatzungszone und DDR
unabhängiges Sportsystem auf der Basis eines freien Vereinswesens	
1950: Landessportbünde, Fachverbände; an der Spitze: ***Deutscher Sportbund*** (DSB) als nationaler Spitzenverband	
demokratische Entscheidungsfindung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usgangslage

westliche Besatzungszonen und Bundesrepublik	sowjetische Besatzungszone und DDR
unabhängiges Sportsystem auf der Basis eines freien Vereinswesens	weisungsgebundenes Sportsystem auf der Basis von Sportgemeinschaften und Sportclubs
1950: Landessportbünde, Fachverbände; an der Spitze: ***Deutscher Sportbund*** (DSB) als nationaler Spitzenverband	ab 1957: DTSB-Kreis- und Bezirksorganisationen; an der Spitze: ***Deutscher Turn- und Sportbund*** (DTSB) als nationaler Spitzenverband
demokratische Entscheidungsfindung	zentralistische „Befehlskette“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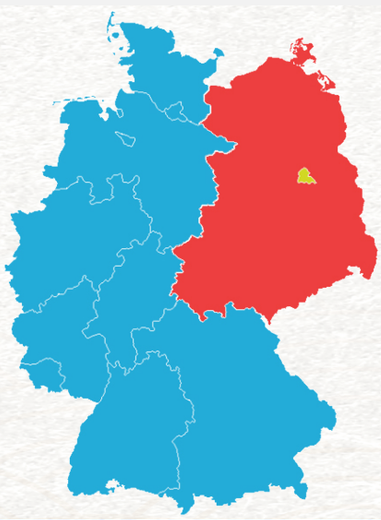
Phasen der innerdeutschen Sportbeziehungen

1. „kleiner Sport-Grenzverkehr“ bis 1961
2. relative „Funkstille“ 1961-1973
3. „Sportkalender“ 1974-1989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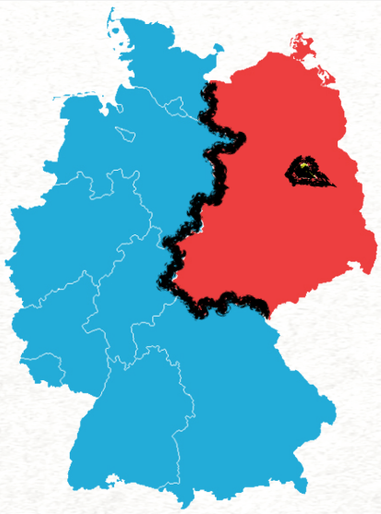
„kleiner Sport-Grenzverkehr“ bis 1961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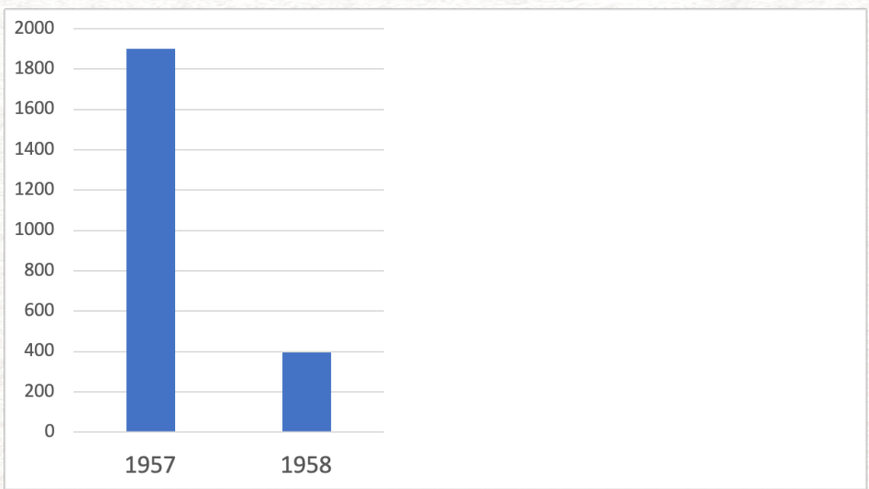
„kleiner Sport-Grenzverkehr“ ca. 1949/1950



eigene Veranschaulichung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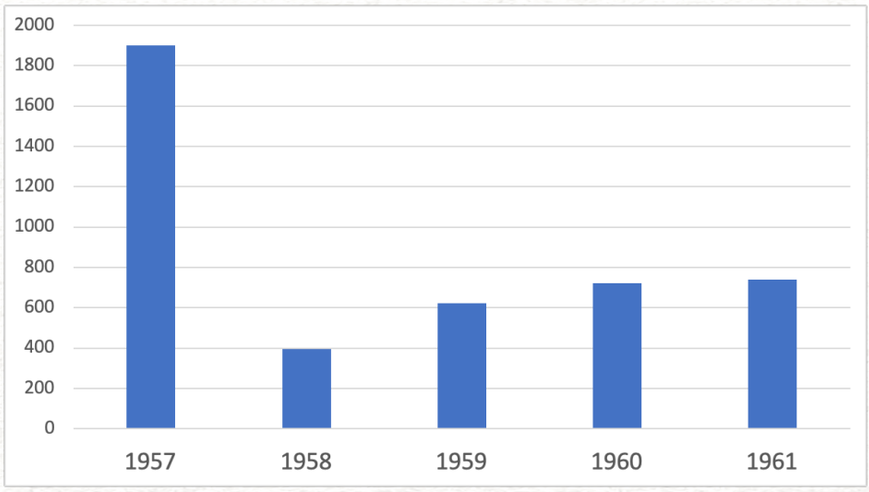
Entwicklung der Sportbegegnungen 1957-1961



eigene Darstellung, Daten nach: Pabst, Sport – Medium der Politik.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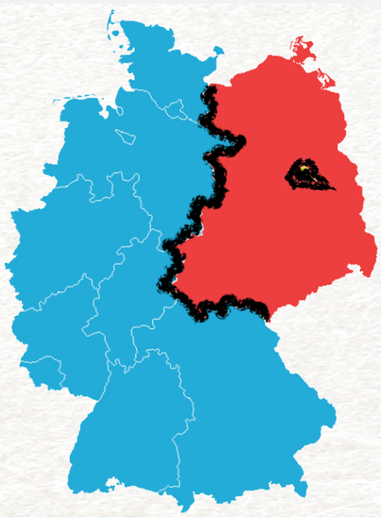
Entwicklung der Sportbegegnungen 1957–1961



eigene Darstellung, Daten nach: Pabst, Sport – Medium der Politik.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kleiner Sport-Grenzverkehr“ ca. 1949/1950



eigene Veranschaulichung

Universität Potsdam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eigene Veranschaulichung

Universität Potsdam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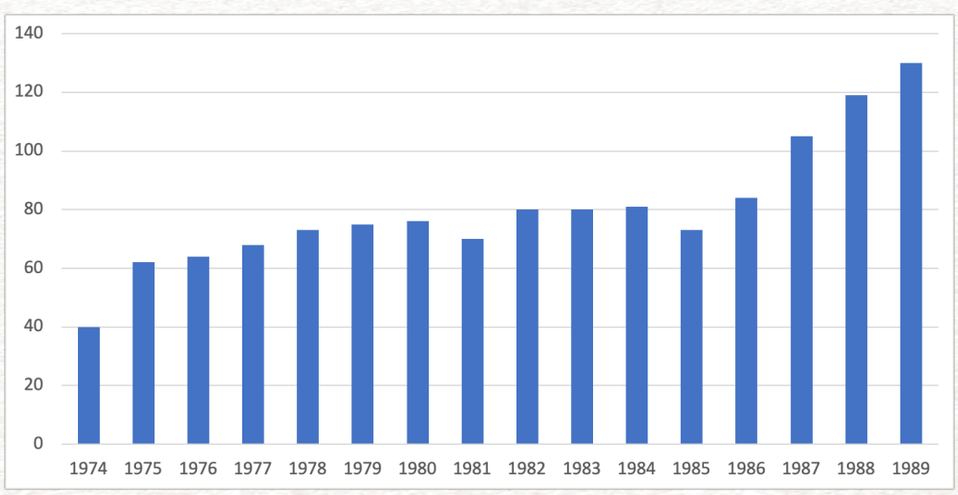
relative „Funkstille“
1961–1973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Sportkalender“ 1974–1989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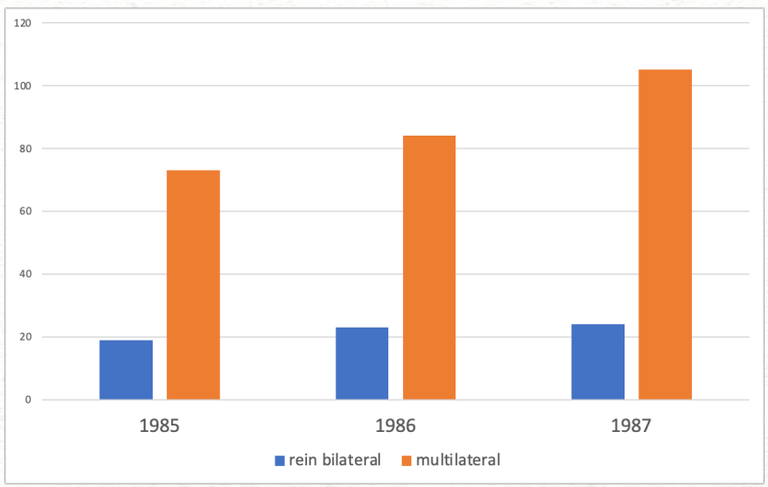
innerdeutsche Sportbegegnungen 1974–1989



eigene Darstellung, Daten nach: Krebs, das deutsch-deutsche Sportprotokoll.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innerdeutsche Sportbegegnungen 1985–1987



eigene Darstellung, Daten nach: Braun, Klassenkampf im Flutlicht.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Die Praxis der innerdeutschen Sportbegegnungen im Rahmen des „Sportkalenders“

„Vergleichskampf“ oder „Auswahlspiel“





Programmhefte zum Fußballspiel bzw. Rückspiel Ost-Berlin vs. West-Berlin, links: 25.12.1953, rechts: 26.12.1954

Humanwissenschaftliche Fakultät
AB Trainings- und Bewegungswissenschaft

Fazit

NOTE

SESSION 3 I Sportaustausch während Teilung

SESSION 3-2.

(Kr)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Seong Mun Jeong, ehem. leitender Wissenschaftler am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09. 2022.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Seong Mun-jeong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01
Bedeut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02
Eigenschaften des innerkoreanischen Sportverkehrs



03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beziehungen

04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1
Bedeut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Bedeut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01 Folgen nach 70 Jahren Teilung

- Zunehmende Heterogenität in allen Bereichen wie Kultur und Sport
- Größeres Niveaugefälle zwischen beiden Koreas im Sportbereich
  - Süden: Wettbewerbsfähigkeit auf Weltspitzenniveau basierend auf Sportwissenschaft
  - Norden: Förderung von Sportarten, die großen Wert auf körperliche und geistige Leistungen le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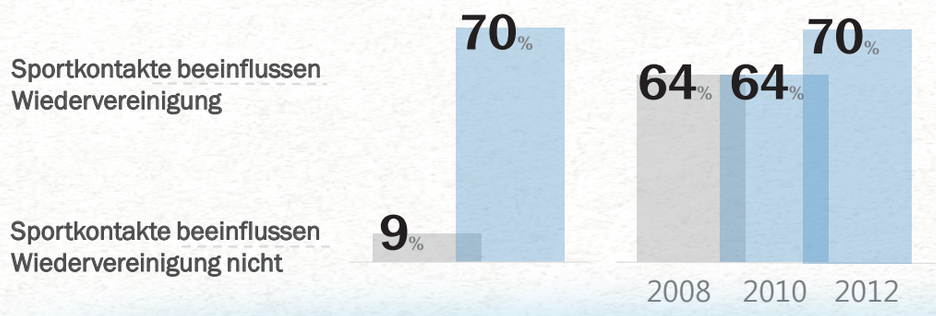
02 Sport als Alternative zur Überwindung von Entfremdung

- Sport: weltweit einheitlich
  - beide Koreas: Dieselben Regeln gelten, nur in unterschiedlichen Begriffen
- Zuschauer: Mit einer Geste Freude und Leid ausdrücken
  - Wiederherstellung des koreanischen Volkes durch gemeinsame Anfeuerungen

Bedeut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03 Öffentliches Bewusstsein für d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2012 Umfrage zum Breitensport



02 Eigenschaften des innerkoreanischen Sportverkehrs



Merkmale des innerkoreanischen Sportverkehrs

Geschichtlichkeit

Erhaltung der Tradition von kulturellen und sportlichen Ereignissen
- Fußballspiel Kyungsung FC vs. Pjöngjang FC (1929)
- Aufstellung einer einheitlichen 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Winterspielen 2018 in Pyeongchang

Popularität

Öffentliches Interesse am Sport
- Wichtiges vertrautes Thema im Alltag
- Über 20 % der Einschaltquote bei Nord-Süd-Fußballspielen

Gleichartigkeit

Dieselben Regeln als Eigencharakter des Sports
- Sportverkehr stellt körperliche Ausdrücke gemäß den Regeln dar
- Einfacher Sportaustausch auf Basis der Homogenität

Vermittlung

Innerkoreanischer Austausch, doch internationale Sportorganisationen können eine Vermittlerrolle übernehmen
- IOC: Gemeinsamer Auftritt bei Olympischen Spielen, Koordination der Bildung eines einheitlichen Teams
- FIFA: Genehmigung und Unterstützung bei Bildung einheitlichen Teams

03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beziehungen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01 Entwicklungen

1. Wichtige Gespräche

1960 Erste Gesprächsrunden bezüglich Olympischer Spiele 1960 in Rom

1964 Olympische Spiele 1964 in Tokio
(1. Gespräch in Lausanne, 2. und 3. Gespräch in Hongkong) : gescheitert
– Ankündigung des IOC: Sollte Südkorea in Gesprächen fehlen, würde Nordkoreas individuelles Team teilnehmen.

1979 35. Tischtennis-WM in Pjöngjang (vier Gesprächsrunden in Panmunjeom)
- Diskussion über die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gescheitert

1984 Olympische Spiele 1984 in Los Angeles
(drei Gesprächsrunden in Panmunjeom)
- Diskussion über die Bildung eines einheitlichen Teams: gescheitert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1985-87 Olympische Spiele 1988 in Seoul (vier Gesprächsrunden in Lausanne)
- Sportgespräche zur Beteiligung Nordkoreas an der Ausrichtung der Olympischen Sommerspiele sowi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gescheitert

1989-90 Asienspiele 1990 in Peking (neun Gesprächsrunden in Panmunjom)
- Diskussion über die Bildung einer gesamtkoreanischer Mannschaft: gescheitert

1990-91 Olympische Spiele 1992 in Barcelona (vier Gesprächsrunden in Panmunjom)
- Diskussion über die Bildung einer gesamtkoreanischer Mannschaft: gescheitert

1991 41.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Japan (Chiba) sowie
6. U-20-Fußballweltmeisterschaft in Portugal (Lissabon)
- Teilnahme als erstes gemeinsames Team (zwei Veranstaltungen)

2007 Olympische Spiele 2008 in Peking (vier Gespräche in Kaesong)
- Nach 4. Runde zur Aufstellung einheitlicher Mannschaft abgebrochen
- Teilweise Vereinbarungen über Bedingungen für bevorzugte Auswahl: Athletinnen und Athleten, die sich für die Olympischen Spielen qualifizierten bzw. entsprechende Kriterien erfüllten oder Sportlerinnen und Sportler von Weltrang

2018 **Sechs** erfolgreiche Veranstaltungen, darunter Olympische Winterspiele in PyeongChang und Asienspiele von Jakarta-Palembang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2. Gemeinsamer Auftritt & Anfeuerungen

- Olympische Sommerspiele 2000 in Sydney – Para-Asienspiele 2018 in Jakarta
  elf Veranstaltungen
  - Vereinbarung zwischen Präsidenten der jeweiligen Nationalen Olympischen Komitees (Süden:Kim Un-yong, Norden: Jang Woong) als Beginn
  - Olympische Sommerspiele 2000 in Sydney, Asienspiele 2002 in Busan, Ostasienspiele 2005 in Macau, Asienspiele 2006 in Doha: Gemeinsamer Auftritt nur bei Eröffnungszeremonie

- Abbruch seit Olympischen Spielen 2008 in Peking
  - Gemeinsame Anfeuerungen an der Basis (ca. 400 südkoreanische, 500 nordkoreanische Teilnehmer)

- Wiederaufnahme seit Olympischen Spiele 2018 in Pyeongchang
  - Teilnahme von ca. 500 Anfeuerern und Künstlern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3. Erfolgreiche Auftei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für internationale Wettbewerbe (acht Ereignisse)

- 1991 Gewinn bei der Tischtennis-WM in Japan, Halbfinale der U-20-Fußball-WM in Portugal
- 1999 Viertelfinale der U-20-Fußball-WM in Nigeria
- 2011 Sieg beim Peace and Sports Cup in Doha (Tischtennis)
- 2018 Olympische Spiele in Pyeongchang (Frauen-Eishockey)
  Asienspiele Jakarta-Palembang (u. a. Frauen-Basketball, Drachenboot, Kanu)
  Para-Asienspiele in Jakarta (Schwimmen, Tischtennis)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Halmstad, Schweden (Bronze für Damenteam)
  Korea Open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Daejeon
  26. Handball-Weltmeisterschaft der Männer in Kopenhagen (erster Sieg)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4. Gegenseitige Teilnahme an Wettbewerben auf nord- und südkoreanischem Boden (insgesamt elfmal)

- Gesamtwettbewerb: Asienspiele 2002 in Busan
  Sommer-Welthochschulspiele 2003 in Daegu
  Asienspiele 2014 in Incheon
  Olympische Winterspiele 2018 in Pyeongchang
- Einzelwettbewerb:
  2019 Jugend- und Junioren-Asienmeisterschaft in Pjöngjang
  2019 Fußball-Weltmeisterschaft–Qualifikation in Pjöngjang
  2018 Korea Open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Daejeon
  2018 Sportschießen-Weltmeisterschaften 2018 in Changwon
  2017 Taekwondo-Weltmeisterschaften 2017 in Muju
  2017 Eishockey-Weltmeisterschaft der Frauen
  2017 Qualifikation für Fußball-Asienmeisterschaft der Frauen
  2013 Asian Cup and Interclub Weightlifting Championship
  2013 Fußball-Ostasienmeisterschaft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5. Austausch zwischen Kommunen

- **Jeju**
  - 2003 Volksfeste für Frieden und Wiedervereinigung
- **Provinz Gangwon-do**
  - innerkoreanische Eishockey-Freundschaftsspiele (2006), Taekwondo-Demonstrationen (2007, 2018), U-15-Jugendfußballturnier Ari Sports Cup (2018) und andere
- **Stadt Incheon, Provinz Gyeonggi-do**
  - 2013, 2015 U-15-Jugendfußballturniere
- **Provinz Jeolla-do, Stadt Seoul**
  - Einladung der nordkoreanischen Mannschaften zum Nationalen Sportfestival: abgelehnt

※ Regionale Regierungen haben die Verordnung über den innerkoreanischen Austausch und Kooperation erlassen und finanzielle Mittel aufgebracht.

Entwicklungen und Grenz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kontakte

5. Andere freundschaftliche Sportbegegnungen

- **Fußball**
  - Fußballspiele zur Wiedervereinigung (1990 in Pjöngjang und Seoul, 2002 in Pjöngjang, 2005 in Seoul), Fußballspiele der Arbeiter zur Wiedervereinigung (1999, 2001, 2007, 2015, 2018), U-15-Jugendfußballturniere (2007 in Seoul und anderen, in Pjöngjang, 2008 in Kunming)
- **Basketball**
  - Basketballspiele zur Wiedervereinigung (1999 in Seoul und Pjöngjang, 2003 im Jong Ju Yong Indoor Stadium in Pjöngjang, 2018 in Pjöngjang)
- **Taekwondo-Demonstrationen**
  - Austausch von Taekwondo-Demonstrationsteams (2002 in Seoul und Pjöngjang), gemeinsamer Auftritt (2018 in Pyeongchang und Seoul), gemeinsame Demonstration (2019 in Wien und Genf)
- **andere Disziplinen**
  - Boxen (2007 in Kaesong), Bogenschießen (2015 in Nanjing), Marathon (2019 in Kunming)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Entwicklungen und Grenzen innerkoreanischer Sportkontakte

02 Bewertung der Austauschprojekte nach Zeitraum

1. Sportaustausch bis 1990

- Auf Sportgespräche ausgerichteter Austausch, der sich auf Vorschläge zur Aufstellung eines gesamtkoreanischen Teams konzentrierte
- 1960er Jahre: Erster offizieller Kontakt zwischen den beiden Koreas in allen Bereichen, einschließlich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und Kultur seit dem Koreakrieg (Erste Sportgespräche fanden unter Druck des IOC vor den Olympischen Spielen 1964 in Tokio fand: Bei Abwesenheit Südkoreas bei Gesprächen sollte Nordkorea individuell an den Olympischen Spielen teilnehmen.)
- 1970er Jahre: Wiederaufnahme nach Bekanntmachung der Gemeinsamen Erklärung vom 4. Juli 1972 (Bekanntmachung der Gemeinsamen Erklärung zum Sport im September 1972, Einigung auf Einladung der Vertreter der beiden Koreas nach Seoul und Pjöngjang für Sportgespräche)
- 1980er Jahre: Weitere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meinsamen Mannschaft, zur gemeinsamen Veranstaltung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84 in Los Angeles, den Olympischen Spielen 1988 in Seoul und den Asienspielen 1990 in Peking

- **Auswertung**
  - Bei Sportgesprächen wurden die Bildung eines gemeinsamen Teams und Freundschaftsspiele im Fußball besprochen, aber der Abbruch wiederholte sich aufgrund des mangelnden gegenseitigen Vertrauens
  - Zu dieser Zeit wurden die Sportbegegnungen aufgrund des innerkoreanischen Systemwettbewerbs als Instrument bei ideologischer Konfrontation verwendet, was keine sichtbaren Ergebnisse brachte

Entwicklungen und Grenzen innerkoreanischer Sportkontakte

02 Bewertung der Austauschprojekte nach Zeitraum

2. 1990er–Anfang 2000er Jahre (Regierungen Kim Young-sam, Kim Dae-jung, Roh Moo-hyun)

- Beginn des aktiv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mit der ersten erfolgreichen Aufteilung d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1991 Tischtennis, Jugendfußball)
- Verschiedene innerkoreanische Austausch- und Zusammenarbeitsprojekte nach der Bekanntmachung der Erklärung vom 7. 7. 1988 und des Plans zur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Gemeinschaft zur Lösung der Konfrontation und der Feindlichen Beziehungen
  - Freundschaftsspiele im Fußball und Radrennen zwischen Seoul und Pjöngjang sowie Staffel-marathon zwischen Busan und Sinuiju wurden vorgeschlagen, Nordkorea nahm den Vorschlag für ein Fußballspiel an und im Oktober 1990 wurde das Fußballturnier zur Wiedervereinigung in Seoul und Pjöngjang abgehalten
- Regierung Kim Dae-jung: Wiederbelebung des Sportaustausches dank aktiver Politik für Austausch und Kooperation mit Nordkorea
- Regierung Roh Moo-hyun: Fortsetzung der Politik für Förderung von Frieden und gemeinsamen Wohlstand zwischen den beiden Koreas

• Auswertung

- Erste Sportbegegnungen auf ziviler Ebene über Austauschprojekte unter der Kontrolle der Zentralregierung hinaus
- Mit Volksfest für Frieden und Wiedervereinigung auf Jeju im Oktober 2003 wurde die erste groß angelegte innerkoreanische Sportveranstaltung an der reinen Basis ausgetragen. (Teilnahme von 190 nordkoreanischen Athleten)

Entwicklungen und Grenzen innerkoreanischer Sportkontakte

02 Bewertung der Austauschprojekte nach Zeitraum

3. 2000er Jahre (Regierungen Lee Myung-bak, Park Geun-hye, Moon Jae-in)

- Abbruch des Austausches wegen des härteren Kurses gegenüber Nordkorea der Regierungen Lee Myung-bak und Park Geun-hye
  - Zeitweise gab es Sportkontakte, die aber nur zur Erfüllung der Pflichten als Mitglied einer internationalen Sportorganisation stattfanden
- Versuch der Regierung Moon Jae-in, die festgefahren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aufzutauen, durch Teilnahme der nordkoreanischen Mannschaft an den Olympischen Winterspielen in Pyeongchang und Aufstellung der gesamtkoreanischen Frauen-Eishockey-Mannschaft
  - Kontinuierlicher sportlicher Austausch durch Aufstellung eines gemeinsamen Teams bei Veranstaltungen wie Asienspielen in Jakarta und in Einzelwettbewerben in Tischtennis und Handball
- Die Staats- und Regierungschefs der beiden Koreas einigten sich im September 2018 mit der „Gemeinsamen Erklärung von Pjöngjang“darauf, ein einheitliches Team für die Olympischen Spiele 2020 in Tokio zu bilden und die Olympischen Sommerspiele 2032 gemeinsam auszurichten

• Auswertung

- Aufgrund der Aufrechterhaltung internationaler Sanktionen gegen Nordkorea und Schwierigkeiten bei den Verhandlungen zwischen den USA und Nordkorea sind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ins Stocken geraten und die meisten Sportveranstaltungen wurden ausgesetzt (der Hauptgrund war die Abwesenheit Nordkoreas)
- Trotz der weiteren Bemühungen, den Austausch wieder aufzunehmen, erinnert die derzeitige Lage an die Worte des ehem. IOC-Mitglieds Jang Woong: Was die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anbelangt, steht die Politik über dem Sport

Entwicklungen und Grenzen innerkoreanischer Sportkontakte

03 Schlussfolgerung

- Geringe Anzahl der rein innerkoreanischen Sportbegegnungen wegen Fokussierung auf gemeinsame Auftritte und auf Aufstellung eines gemeinsamen Teams in nur wenigen Sportarten bei Mega-Sportveranstaltungen
  - Der Anteil der rein bilateralen Kontakte im Rahmen des innerkoreanischen Freundschaftsaustausches beträgt nur etwa 38 %, was sich im Mängel an Kommunikation zwischen den beiden Koreas durch Sportbegegnungen niederschlägt
- Freundschaftsaustauschprojekte auf ziviler Ebene sind ebenfalls auf bestimmte Themen und Disziplinen beschränkt
  - Verband für d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Fußballveranstaltungen, Nordkoreas 4.25-Sportmannschaft
  - Konzentration auf nur wenige Sportarten wie Fußball, Tischtennis, Basketb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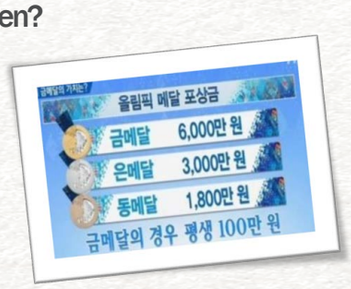
- Maßnahmen sind zu ergreifen, um zur Fortsetzung des Austausches menschliche Kontakte auszuweiten
  - Das Koreanische Sport- und Olympische Komitee und nationale Sportorganisationen spielen kaum eine Rolle
- Kommunalverwaltungen sollten als Lokomotive für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fungieren
  - Im November 2019 wurden Maßnahmen zur Nutzung der Kommunalregierungen, die zu Unterstützern für Nordkorea erklärt wurden, entwickelt
- Entwicklung institutioneller Mittel wie „Abschluss eines Abkommens für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zur Stabilisierung des Austauschs
  - Falls erforderlich, wird das Gesetz zur Förderung vo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und Zusammenarbeit erlassen, um Entschädigungsmaßnahmen für diejenigen, die bei der Aufstellung einer gemeinsamen Mannschaft ausgeschieden sind, zu entwickeln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Ergänzung: Vielleicht ist das der Grund?>

➢ Warum ist es schwierig, sich bei Sportgesprächen auf die Aufstellung eines gemeinsamen Teams zu einigen?

- Südkorea: Siegprämien (Militärdienstbefreiung, Rente usw.) werden nicht garantiert
- Nordkorea: besteht Sportleistung ignorierend darauf, dass die Anzahl der südkoreanischen und nordkoreanischen Athleten soll gleich sein



<Vereinbarung zur Aufstellung einer gemeinsam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2008 in Peking>

- Nachgeben Südkoreas: Fußball, Basketball, Volleyball, Baseball
- Vereinbarung zwischen den beiden Seiten über Bedingungen für bevorzugte Auswahl:
  Athletinnen und Athleten, die sich für die Olympischen Spielen qualifizierten bzw. entsprechende Kriterien erfüllten oder Sportlerinnen und Sportler von Weltrang



04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Lehren von d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in Pyeongchang

01 Andere Meinungen zur Teilnahme

- Minister für Kultur, Sport und Tourismus: war für die Bildung einer gemeinsamen Frauen-Eishockey-Mannschaft
- Präsident Moon: fordert die Teilnahme des nordkoreanischen Teams an den Olympischen Spielen
- IOC-Mitglied Jang Woong: zeitlich schwierig
- IOC-Präsident Bach: Die Teilnahme ist im Einklang mit dem Geist des IOC
- Vereinbarungen zwischen Präsidenten Moon und IOC-Präsidenten Bach: Die innerkoreanische Versöhnung ist der olympische Geist
- Neujahrsansprache des Führers Kim Jong-un: äußerte die Absicht zur Teilnahme

02 Auswirkungen

- Gemeinsames Team: zum ersten Mal bei den Olympischen Spielen
- Rahmenprogramm: gemeinsame Aufführungen, Taekwondo-Demonstrationen
- Effekte

- Verbessertes Bewusstsein: Gegen die Teilnahme 72.9% ⇒ Positive Ereignisse 56.8 %
- Veränderte Wahrnehmung gegenüber Nordkorea: Abgrenzung oder Feinde 41.0% (2017) ⇒ 33.7% (2018). Anstieg von 7.3%p
- Das gemeinsame Team bei den Olympischen Spielen 2018 in Jakarta, den Olympischen Spielen 2020 in Tokio und eine gemeinsame Ausrichtung 2032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1 Schaffung der Grundlagen für den führenden Austausch: Wiederherstellung und -aufnahme

- **Wiedervereinigung-Fußball: Beginn mit Kyungsung-Pjöngjang-Spielen, viele Erfahrungen wie in Jahren 1990 und 2005**
  - Austauschbesuche von National-, Profi- und Geschäftsmannschaften sind erforderlich
  - Viel Austauscherfahrung durch innerkoreanische Jugendfußballturniere 2013, 2014, 2015, 2017 und 2018
  - Fortsetzung des Arbeiter-Fußballturniers: 1999 (Pjöngjang), 2007 (Changwon), 2015 (Pjöngjang), 2018 (Seoul)
  - Kyungsung-Pjöngjang-Spiel wurde aufgrund der großen Anzahl ähnlicher Projekte nicht genehmigt. Die Stadt Seoul wurde zur Unterstützer für Nordkorea erklärt. Eine Wiederaufnahme ist wahrscheinlich.
- **Wiedervereinigung-Tischtennis: Anfang mit Weltmeisterschaft 1991 (Japan)**
  - 2011 Sieg beim Peace and Sports Cup in Doha
  - 2018 Korea Open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Daejeon
  - 2018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Halmstad (Bronze für das gemeinsame Damenteam)
  - 2020 Hohe Wahrscheinlichkeit, bei den Weltmeisterschaften in Busan ein gemeinsames Team aufzustellen
- **Wiedervereinigung-Basketball:** 1999 (Pjöngjang, Seoul), 2003 (Pjöngjang), 2018 (Pjöngjang).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1 Schaffung der Grundlagen für den führenden Austausch: Wiederherstellung und -aufnahme

- **Marathon: Sportarten, die es Vereinsmitgliedern und Athleten ermöglichen, an gemeinsamen Veranstaltungen teilzunehmen**
  - Etwa 1.600 Menschen aus 30 Ländern nahmen jedes Jahr im April am Pyongyang International Marathon teil. Südkoreanische Athleten und Vereinsmitglieder müssen teilnehmen. (Eine Absichtserklärung zur Teilnahme der Stadt Changwon wurde im Jahr 2019 eingereicht, ist aber abgelehnt.)
  - Nordkorea muss zur Teilnahme am ab 2018 stattfindenden Bürgermarathon von Seoul-Pjöngjang (in Seoul abgehalten) eingeladen werden
  - Die Einladung des nordkoreanischen Teams zum 60 Jahre alten traditionellen Gyeongbu-Staffel-Marathon und die Erweiterung der Routen bis Norden sind notwendig
- **Austausch zwischen Sportarten mit ähnlichen Leistungen wie Gewichtheben und Judo**
  - Gewichtheben und Judo: Ähnliche internationale Wettbewerbsfähigkeit zwischen den beiden Koreas, wie bei den Olympischen Spielen
  - Gewichtheben: Teilnahme an den Pjöngjang-Spielen 2013 und 2019 und Aufführung der Nationalhymne in Pjöngjang (Jugend- und Junioren-Gewichtheberasienmeisterschaften 2019: Nordkorea – 55 Goldmedaillen, Südkorea – 14 Goldmedaillen)
  - Judo: Olympische Spiele 2012 in London (Süden: 2 Gold, 1 Bronze, Norden: 1 Gold), Olympische Spiele 2016 in Rio (Süden: 2 Silber, 1 Bronze, Norden: 1 Gold)
  - Es ist notwendig, technischen Austausch und gemeinsames Off-Season-Training zwischen den beiden Koreas durchzuführen und von Geschäftsteams eingeladene Veranstaltungen auszuführen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1 Schaffung der Grundlagen für den führenden Austausch: Wiederherstellung und -aufnahme

➢ Austausch in Volkssportarten wie Taekwondo und Ssireum

Taekwondo: Nordkorea behauptet, das Gastgeberland zu sein (basierend auf der Grundlage, dass der Geburtsort von Go Joseon Pjöngjang war)

- Nordkorea, ein Mitglied der ITF, kann wegen der Vertiefung der gegenseitigen Heterogenität zwischen ITF und WT nicht an Taekwondo-Spielen bei den Olympischen Spielen teilnehmen
- Dennoch wurden der innerkoreanische Austausch und gemeinsame Demonstrationen fortgesetzt

Ssireum: UNESCO immaterielles Kulturerbe der Menschheit zum ersten Mal gemeinsam von Nord- und Südkorea gelistet (26.11.2018)

- Südkorea: Viele Wettbewerbe, wie z. B. der Cheonha Jangsa Wrestling Competition
- Nordkorea: wies Ssireum in den 1960er Jahren als nationales Sportereignis aus und veranstaltete einen nationale Wrestling-Wettbewerbe um den Great Bull Award
- Es ist notwendig, an Feiertagen wie Chuseok innerkoreanische Wrestling-Wettkämpfe abzuhalten und gegenseitige Besuche bei regionalen Wettkämpfen usw. durchzuführen

➢ Aufbau einer Vertrauensbasis durch gemeinsames Training

-Gemeinsames Training für Skifahrer wurde vor den Olympischen Winterspielen 2018 in Pyeongchang durchgeführt (Masikryeong Ski Resort. 1.31.~2.1.)

- Die Nutzung Südkoreas fortschrittlicher sportwissenschaftlicher Technologie und des geografischen Umfelds in Nordkorea sind von Bedeutung
- Langfristig: Gemeinsames Off-Season-Training durch Infrastrukturaufbau (Samjiyeon, Gaema-Plateau, DMZ)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2 Startmittel zur Diversifizierung der Austauschbereiche

➢ Austausch von Kommunalverwaltungen

- Nordkorea: Es gibt eine Einschränkung, dass es keine Regierungen sind, die unabhängige Entscheidungen treffen, aber der Austausch muss gefördert werden
- Wintersport-Wettbewerbe in Gangwon (2006) kann wiederhergestellt, erweitert und reproduziert werden (Gleichzeitiger Auftritt, Nutzung der Flagge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Durchführung am Chuncheon-Eisstadion. (Spiele von nord- und südkoreanischen Auswahlteams)
- Fokus auf Volkssportturniere mit der Reduzierung der Investitionskosten für Einrichtungen, indem die vorhandene Infrastruktur wie die Einrichtungen in Pyeongchang und das Masikryeong-Skigebiet genutzt wird

➢ Austausch von Sportorganisationen

- Einrichtung der Infrastruktur für Breiten Sport in Nordkorea durch die Sports Promotion Foundation: Die Benennung eines Unterstützers für Nordkorea ist eine Voraussetzung
- Unterstützung für die Einrichtung von Sportanlagen für Freizeit wie Turnhallen für Arbeiter im Industriekomplex Kaesong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2 Startmittel zur Diversifizierung der Austauschbereiche

➢ Austausch der nord- und südkoreanischen Olympischen Komitees

- Einladungen zum gemeinsamen Training
- Organisation und Führung des Inter-Korean Sports Development Council: Regelmäßiger Austausch von Führungskräften, Sportlern und Sportwissenschaftlern
- Weiterhin soll ein gemeinsamer Auftritt zu internationalen Wettbewerben und die Aufstellung eines gesamtkoreanischen Teams gewährleistet werden

➢ Organisation und Betrieb von Zivilorganisationen und einem Verband für globalen koreanischen Sportlern

- Ausweitung des menschlichen Austauschs durch die Unterstützung der Gründung globaler koreanischer Sportorganisationen unabhängig von der nord- und südkoreanischen Nationalität
- Regelmäßige Einladung von innerkoreanischen Sportorganisationen oder Organisierung zum Austausch von Wettkämpfen nach Region und Land
- Förderung der gemeinsamen innerkoreanischen Ausrichtung des World Korean Festival (Kaesong-Paju, Goseong in Nord- und Südkorea)

➢ Austausch zwischen wissenschaftlichen und Forschungsinstituten

- Das Korea Institute of Sports Science und die North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cientists (Sportwissenschaftler) veranstalten gemeinsam eine Konferenz (August 2005, Internationale Akademische Konferenz zum Gedenken an den 60. Jahrestag des Sieges im Krieg gegen Japan. Yanbian University)
- Durchführung von Forschungsarbeiten zur Standardisierung der Regeln koreanischer Volksspiele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Rolle und Funktionen des Sports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03 Beitrag zum Frie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d zur Bildung des Gefühls, ein Volk zu sein

➢ Schaffung eines Umfelds für Versöhnung und Zusammenarbei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 ein wichtiges Mittel zur Umsetzung des Grundabkommens und der Gemeinsamen Erklärung
- Fortsetzung des ständigen Kontakts zwischen den beiden Koreas zur Vorbereitung auf die Ausrichtung der Olympischen Spiele in Seoul und Pjöngjang
- Minderung der Bedrohung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für die erfolgreiche Ausrichtung der international angekündigten Olympischen Spiele
- Die Auswirkung des kontinuierlichen Austauschs und der ständigen Anwesenheit von innerkoreanischem Fachpersonal für den Bau und die Renovierung von Stadien

➢ Beitrag zur Bildung von Geminschaftsgefühl und Homogenität

- Überwindung der Entfremdung zum anderen Land durch gemeinsame Auftritte und Anfeuerung
- Wiederherstellung des Gefühls, ein Volk zu sein, durch den Austausch bei Volkssportarten wie Ssireum und Taekwondo
- Letztlich Überwindung ethnischer Heterogenität und Beitrag zur Wiederherstellung der Homogenität

KSPO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Herausforderungen der innerkoreanischen Sportbegegnungen



Fazit

- **Die Entwicklung institutioneller Maßnahmen für einen nachhaltigen innerkoreanischen Austausch ist notwendig**
  - Abschließung einer Vereinbarung über d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und Erlassen eines Gesetzes zur Unterstütz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s
  - Institutionalisierung verschiedener Angelegenheiten wie gemeinsame Auftritte, gemeinsame Ausbildung, Aufstellung eines gemeinsamen Teams und gemeinsame Nutzung finanzieller Ressourcen
  - Entwicklung von Entschädigungsmaßnahmen für diejenigen, die bei der Aufstellung einer gemeinsamen Mannschaft ausgeschieden sind
- **Die Etablierung eines starken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Austausches ist auch erforderlich**
  - Nationale Olympische Komitees der beiden Koreas, IOC, UNO, Sortexperten sollen sich gemeinsam an Governance beteiligen
  - Garantierte Unterschriften von Nationalversammlungen Nord- und Südkoreas sowie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wie den Vereinten Nationen und dem IOC
  - Verwirklichung des innerkoreanischen Friedens durch Sport, Förderung der regionalen Entwicklung, Gewährleistung der gemeinsamen Teilnahme an internationalen Sportveranstaltungen



SESSION 4-1.

(De) Transformations-und Vereinigungsprozess der Sportpolitik in der BRD und DDR

Rainer Hipp, ehem. Hauptgeschäftsführer des Landessportverbandes Baden-Württemberg

Die deutsche Sporteinheit: Der sportpolitische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prozess

von Rainer Hipp

Es gilt das gesprochene Wort !

Im Einigungs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wurde in Artikel 39 bestimmt, dass die Strukturen des Sports im Beitrittsgebiet „auf Selbstverwaltung umgestellt“ werden sollen: „Die öffentlichen Hände fördern den Sport ideell und materiell nach der Zuständigkeitsverteilung des Grundgesetzes.“ Damit war ein Institutionentransfer für den organisierten Sport festgeschrieben. Nicht nur die staatliche Sportadministration wurde auf der Ebene der Kommunen, der Länder und des Bundes nach dem bundesdeutschen System neu eingerichtet. Auch die Organisationsstruktur des Sports in der Bundesrepublik sollte auf die DDR übertragen werden: Gründung von Landessportbünden, Landesfachverbänden, Kreis-und Stadtsportbünde.
Durch diese Transformation wurde – zumindest formal – eine schnelle Strukturanpassung der staatlichen Sportadministration und der Sportverbände im Zuge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erreicht.

Das Organisationssystem des deutschen Sports in Vereinen und Verbänden (Sportselbstverwaltung) in der Bundesrepublik

Nach der Vereinigung sind die ostdeutschen Sportvereine und Sportverbände in die Autonomie entlassen und auf Selbstorganisation angewiesen.
Die **Autonomie** des Vereins erlaubt ihm, seine eigenen Belange selbst zu regeln. Korrigierende Eingriffe von außen (Staat und /oder Politik) sind weitgehend eingeschränkt.
Selbstorganisation bedeutet Eigenfinanzierung (Haushaltsplanung, Mitgliedsbeiträge, Spenden, Mäzenatentum,Sponsoring) , eigene Administration (Mitgliederbetreuung, Personalgewinnung, Vereinsrecht, Versicherungen, Sportgeräte, Sportstätten, Sportbetrieb).
Personalsystem
Das Personalsystem beruht auf dem Prinzip der ehrenamtlichen Führung und des ehrenamtlichen Engagements. Weniger in der Administration mehr im Trainings- und Sportbetrieb wird die ehrenamtliche Arbeit durch nebenberufliche, in geringem Umfang durch hauptamtliche Tätigkeit unterstützt.

Haftungsprivileg der für ihn Handelnden
Wer für den Verein handelt, etwa Verträge abschließt, braucht – soweit er sich an vereinsinterne Beschlüsse hält – persönlich, mit seinem Privatvermögen nicht haften.
Gemeinnützigkeit
Die Sportvereine und Sportverbände dienen dem Gemeinwohl (nicht auf Gewinn ausgerichtet, sondern sozialen Aufgaben dienend) und werden dadurch steuerrechtlich begünstigt und genießen das Privileg der Gemeinnützigkeit.
Dazu kommen die **Selbständigkeit aller Mitgliedsorganisationen**, föderale Strukturen (fünf neue zu elf alten Bundesländern) und die **politische Neutralität**.
Der bundesdeutsche Sport beruht auf dem Prinzip der **Subsidiarität:** Staatliche Institutionen greifen nur ein, wenn die Möglichkeiten des Sportvereins/Sportverbandes allein nicht ausreichen.

DDR-Sport

In der DDR gab es dieses Sportsystem nicht. Die ehemaligen Sportgemeinschaften waren den jeweiligen Territorial- und Zweigorganisationen des Deutschen Turn- und Sportbundes (DTSB) unterstellt. Sie waren eingebunden in die Organisationsstruktur ihrer Trägereinrichtungen. Das waren Betriebe und Produktionsgenossenschaften, von denen den Sportgemeinschaften personelle und materielle Ressourcen zur Verfügung gestellt wurden. Dadurch waren die Sportgemeinschaften einerseits von der Förderung ihrer Trägereinrichtungen abhängig, die als betriebliche Planungsgröße festgelegt wurde. Andererseits waren sie von den Aufgaben der Selbstorganisation entlastet.
Die nun zu gründenden Sportvereine hatten einschneidende Strukturbrüche zu bewältigen. Dies alles unter schlechten Vorbedingungen. Die Sportstätteninfrastruktur war quantitativ und qualitativ defizitär. Die Sportanlagen waren seit Jahren nicht mehr saniert oder gar modernisiert worden. Die ökonomische Lage der ehemaligen DDR war geprägt von einkommensschwachen privaten Haushalten, öffentlichen Haushaltsengpässen und der generellen Schwäche der privaten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Beeindruckend waren die Erfolge der DDR im Leistungssport, auf den ich später noch näher eingehen werde. Seine gesellschaftliche Dominanz und seine staatstragende Funktion wurden weltweit beachtet. Der Leistungssport wurde in der DDR mit zwei Dritteln des Sporthaushaltes gefördert.
Hervorzuheben sind der Schulsport und der in der Bundesrepublik unbekannte Lehrlingssport. Der Schulsport hatte im Gegensatz zur Bundesrepublik immer einen festen Platz im Stundenplan. Seine gesundheitsfördernden und prophylaktischen Funktionen wurden erkannt und

hatten einen gesicherten gesellschaftlichen Stellenwert. Für das gute Schulsportprogramm stand eine Vielzahl an Sportlehrern zur Verfügung , die an den zahlreichen Instituten eine hervorragende Ausbildung erhielten.

Leistungssport in der DDR

Eine besondere Betrachtung bei der Wiedervereinigung verdient der Leistungssport der DDR. Der erfolgreiche bundesdeutsche Fechttrainer Emil Beck (Tauberbischofsheim), besonders erfolgreich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88 hier in Seoul, brachte es auf den Punkt: „Der Leistungssport wird in der DDR so geführt wie hier (in der Bundesrepublik) die Wirtschaft. Bei uns wird der Leistungssport so geführt wie drüben (in der DDR) die Wirtschaft.“
Die Athleten sollten für den Sieg des Sozialismus kämpfen. Man nannte sie die „Diplomaten im Trainingsanzug“. Autorität war oberstes Gebot. 10.000 hauptamtliche Mitarbeiter arbeiteten an der „Produktion von Medaillen“. Knapp 3000 Funktionäre leiteten fast 5000 Trainer und Techniker an. Sichtung und Förderung von Talenten in Nachwuchsleistungszentren, in Kinder-und Jugendsportschulen, eine universitäre Trainerausbildung, sportwissenschaftliche Forschung mit Leistungsdiagnostik und Trainingslager auf der ganzen Welt beeindruckten nicht nur die Bundesrepublik sondern den ganzen Westen und die „sozialistischen Bruderländer“. Medaillen der DDR waren identitätsstiftend für die Bevölkerung. Die Sportpolitiker und die Funktionsträger im damaligen Deutschen Sportbund (DSB) waren anfänglich höchst interessiert, dieses System in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zu transformieren, oder besser, zu retten. Man sah sich schon mit den USA und der damaligen Sowjetunion auf einem Level. Wie sich später herausstellte, gelang „die Rettung des Leistungssportsystems“ nur bedingt. Von dem einst Gelobten ist nicht mehr viel übrig. Nur Rudimente des Systems existieren noch. Zu heterogen waren die Prämissen. Die Bundesregierung, die Regierunge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und die jeweiligen Parlamente wollten sich weder finanziell noch personell in dem Maße einbringen, wie es die DDR-Regierungen bisher im Leistungssport praktiziert hatten.

Der Athlet als Repräsentant der Nation oder des Systems

Die Reisemöglichkeiten in den Westen waren für die DDR-Athleten eine wichtige Motivation und ein Privileg in einer „eingesperrten Gesellschaft“. Jeder Athlet hatte eine Perspektive. Die hieß Elite, Weltklasse. Angst um berufliche Ausbildung und soziale Absicherung kannte man nicht. Das System fing jeden Leistungssportler nach Beendigung seiner Karriere auf. Je erfolgreicher desto sicherer die persönliche Zukunft. Gesellschaftliche Anerkennung, finanzielle Vorteile, hoher sozialer Status und das

Kennenlernen des Westens verschafften Wohlstand und sportliche Motivation zugleich. Wohlstand, der Normalbürgern in der Mangelwirtschaft verwehrt war.
Das System war ideologisch überfrachtet. Mitte der siebziger Jahre begann in der DDR die gezielte Dopingforschung. Ein Thema, das noch heute über jedem DDR-Athleten und seinen Erfolgen wie ein Damoklesschwert schwebt. Zudem kamen die freiwillige und unfreiwillige Zusammenarbeit von Athleten, Trainern, Funktionären und Betreuungspersonal mit der Staatssicherheit (Stasi). Doping und Stasiprotokolle sind die vorherrschenden Themen, wenn es um die Bewertung des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prozesses der deutschen Sporteinheit geht.

Der Transformations -und Vereinigungsprozess

Einige Sporthistoriker meinen, der Vereinigungsprozess habe schon 1972 mit dem Abschluss des Grundlagenvertr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begonnen.
Begegnungen zwischen ost- und westdeutschen Sportvereinen gab es seit den 50er-Jahren. Doch allein die Termini zeigen die Schwierigkeiten dieses Prozesses: Gesamtdeutscher Sportverkehr – 50er-Jahre. Innerdeutscher in den 60er-Jahren. In den 70er-Jahren spricht der Deutsche Sportbund (DSB) vom „deutsch – deutschen“ Sportverkehr. Der DTSB der DDR beharrt auf „internationaler“ Sportverkehr, weil er sich zwischen den Sportorganisationen zweier unabhängiger, international politisch anerkannter Staaten vollzieht.
Ein brisantes Thema dabei ist der Status von Berlin. Am 8.Mai 1974 wird das „Protokoll über die Regelung der Sportbeziehungen zwischen dem DSB und dem DTSB“ abgeschlossen. Darin verpflichten sich die beiden deutschen Sportbünde , … „jährlich einen Plan über Durchführung von Sportveranstaltungen zu vereinbaren“, und „ ...ihre sportlichen Beziehungen entsprechend den Bestimmungen und Gepflogenheiten des Internationalen Olympischen Komitees und der internationalen Sportorganisationen und , was Berlin (West) betrifft, auch in Übereinstimmung mit den Bestimmungen des Viermächte-Abkommens vom 3.September 1971 zu regeln“.

Der Mauerfall

Der 9.November 1989 wird alle Vereinbarungen, Verträge, Protokolle zur Makulatur werden lassen. Die Mauer fällt, und für Sportler und Sportorganisationen auf beiden Seiten der Mauer gibt es kein Halten mehr. DDR-Bürger haben bei einer Befragung das gemeinsame Sporterleben ganz oben auf ihrer Wunschliste. Die Aktivitäten, Begegnungen, Hilfs- und Unterstützungsmaßnahmen explodierten. Die Kontrolle ging den bundesdeutschen Dachorganisationen des Sports total verloren. Eine

Koordination des Vereinigungsprozesses war dringend notwendig. Deutscher Sportbund, Landessportbünde und Spitzenverbände waren gefordert.
Die Geschäftsführer der elf Landessportbünde trafen sich mit dem DSB , um eine Abstimmung und Koordination der Beratungs- und Unterstützungsmaßnahmen vorzunehmen. Es hatte sich gar eine Binnenkonkurrenz der Unterstützer ergeben. In Berlin (Führungsakademie des deutschen Sports) und in Frankfurt a.M. (Sitz des DSB) trafen sich erstmals die Geschäftsführer der Landessportbünde mit den Kollegen aus der DDR. Es prallten zwei Sportwelten aufeinander:
Die selbstbewussten bundesdeutschen Vertreter der föderalen, autonomen und hierarchiefreien Mitgliedsorganisationen („Landesfürsten“). Im Osten die hoch professionellen , aber auf Grund der Umstände unsicheren Kollegen, die zentralistisch, hierarchisch, beinahe autoritär, von ihrer Dachorganisation , dem DTSB, geführt und gesteuert wurden.
Nach vielen Diskussionen, einem gegenseitigen Informationsaustausch und persönlichem Kennenlernen wurde eine Konzeption mit folgendem Programm vereinbart:

1. Im Zeitraum der Länderbildung in der DDR werden dort entsprechende Landessportbünde entstehen. Die Vereinigung des Sports in Berlin vollzieht sich durch den Beitritt des Turn- und Sportbundes Berlin (Ost) zum Landessportbund Berlin.
2. Die Landessportbünde in der DDR beantragen im Benehmen mit dem DTSB ihren Beitritt zum Deutschen Sportbund. Die Aufnahme wird nach der staatlichen Vereinigung wirksam.
3. Der DTSB nimmt bis zur staatlichen Vereinigung seine Funktion wahr und beschließt dann entsprechend den Statuten seine Auflösung.
4. Als Voraussetzung für die Aufnahme der Landessportbünde der DDR in den Deutschen Sportbund muss dessen Satzung geändert werden. Eine Strukturkommission des DSB bereitet diese Änder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r demokratischen Mitwirkungsmöglichkeiten der neuen Mitglieder vor.
5. Die Spitzenverbände und die übrigen Mitgliedsverbände des DSB vereinigen sich mit den Verbänden in der DDR zu unterschiedlichen Zeiten und in unterschiedlicher Form, aber so zügig wie möglich – im Hinblick auf ihre internationalen Bestimmungen und Verpflichtungen.
6. Nach dem Spitzengespräch zwischen DSB und DTSB wird eine gemeinsame Koordinierungskommission - soweit erforderlich - zusammentreten.

Ergänzend wurden die Arbeitsergebnisse der seit Januar 1990 eingesetzten vier Fachkommissionen

- Strukturen/Verwaltung/Finanzen/Organisation
- Breitensport
- Leistungssport

– Bildung/Ausbildung/Wissenschaft/Gesundheit

zusammengefasst und in die Koordinierungsgespräche zwischen DSB und DTSB eingebracht.
Die Mitglieder der Fachkommissionen waren Experten aus den Spitzenverbänden, den Landessportbünden, Sportvereinen und den damals noch existierenden Dachorganisationen Deutscher Sportbund und Nationales Olympisches Komitee – seit 20.Mai 2006 Deutscher Olympischer Sportbund (DOSB).
Die Ergebnisse dieser Arbeitsgruppen waren die rechtliche und ökonomische Grundlage für die Aufnahme der fünf neuen Landesportbünde in den Deutschen Sportbund sowie für die Vereinigungen der Spitzenverbände.

Zwischenzeitlich wurden allein im ersten Halbjahr 1990 bereits 10.000 Begegnungen zwischen Sportvereinen aus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durchgeführt. Durch Städtepartnerschaften gab es seit einigen Jahren Kontakt zwischen bundesdeutschen und DDR-Sportvertretern, die aber auf kommunale Ebene begrenzt waren. Das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unterstützte diese Begegnungen finanziell.

Fast alle elf Landessportbünde des DSB vereinbarten Partnerschaften, manche sogar Patenschaften zu den Bezirken des DTSB. Die Landessportbünde sind für die überfachlichen Aufgaben zuständig. Sie steuern die Sportpolitik und sind für die öffentlichen Geldflüsse innerhalb ihres Zuständigkeitsbereiches verantwortlich. Die „alten“ Landessportbünde halfen nun beim Aufbau der Landessportbünde in den entstehenden „neuen“ Ländern. Die Partnerschaften und die Beratungen durch die „alten“ Landessportbünde erwiesen sich als effizient und hilfreich für die weitere Zusammenarbeit im DSB. Die Aus - und Fortbildungsmaßnahmen (Beratungen) hatten Vereinsrecht, Steuerrecht, Führung und Organisation, Personalwesen, Finanz- und Haushaltswesen zum Inhalt. Gegenseitige Besuche erhöhten die Sensibilität für das Anliegen der anderen. Dies war von Bedeutung, da man sich auf Augenhöhe und nicht als „Besserwisser aus dem Westen“ begegnen wollte und sollte. Dadurch konnten Berührungsängste abgebaut werden.
Die Spitzenverbände von DSB und DTSB, die olympische und nichtolympische Sportarten vertreten , führten parallel dazu Vereinigungsgespräche und schlossen sich nach und nach zusammen. Das war notwendig, um den Athleten aus der DDR Startrecht bei internationalen Veranstaltungen zu gewähren.
Die einstimmige Aufnahme der fünf neuen Landessportbünde in den Deutschen Sportbund erfolgte auf dessen Bundestag (Mitgliederversammlung als höchstes Organ) am 15.Dezember 1990 in Hannover.
Der damalige Präsident des DSB sagte hierzu :“1950 stand der Deutsche

Sportbund vor dem Anfang. 1990 steht er wieder vor einem Neubeginn. Aus dem Bewusstsein heraus, in 40 Jahren eine große Leistung vollbracht zu haben, wird er sich zuversichtlich an die Lösung neuer Aufgaben heranmachen, die sich auch aus der neugewonnenen Gemeinsamkeit aller Deutschen ergibt.“

Das Zusammenwachsen der Sportorganisationen

1990 war das Jahr der Vereinigung. Es folgten die Jahre des Zusammenwachsens. Probleme blieben nicht aus. 1992 wurde mit dem **Goldenen Plan Ost** ein 15-Jahres - Programm für die fünf neuen Bundesländer vom Deutschen Sportbund verabschiedet. Die Situation des Sports nach der Wiedervereinigung im Beitrittsgebiet war gekennzeichnet durch

- Erfordernis des Aufbaus demokratischer Vereins – und Verbandsstrukturen
- nicht mehr verfügbare Trainer, Übungsleiter, Wissenschaftler
- fehlende Finanzmittel für den Übungs- und Wettkampfbetrieb
- Schließung von Sportstätten wegen fehlender Mittel für Folgekosten und Instandsetzungen und
  Überführung von Sportstätten der volkseigenen Betriebe und staatlicher Organe der DDR in kommunales Eigentum

Der **Goldene Plan Ost** des Deutschen Sportbundes fand im Zuge der Finanzierung der Vereinigung nur geringe Resonanz bei Regierungen und in den Parlamenten. Wobei die Regierungen und Parlamente der neuen Bundesländer eine höhere Affinität zum Sport hatten und haben als die alten Bundesländer. In Deutschland bezeichnet sich wohl jedes der 16 Bundesländer als „Sportland“, doch sind Zweifel ob dieser Selbsternennung angebracht.
Das Zusammenwachsen gestaltete sich schwieriger als der formelle Zusammenschluss. Doping- und Stasi-Aufklärung bestimmten und bestimmen viele Debatten in der Sportorganisation, in der Politik und in den Medien. Das ehemalige DDR-Sportsystem sieht sich einerseits einer geschichtsfälschenden Pauschalisierung andererseits einem überzogen Mythos gegenüber. Das spiegelt sich nach der Wende auch in persönlichen Begegnungen wider. Bei Aus-und Fortbildungsmaßnahmen in Sachsen, Thüringen und Berlin wurde ich beispielsweise mit dem jetzt devoten früheren Offizier der Nationalen Volksarmee und dem nun aggressiven damaligen Oppositionellen konfrontiert. An menschlichen Gegensätzen und Überzeugungen nicht zu übertreffen. Beider Vorstellungen über den zukünftigen Sport und die Sportpolitik in den neuen Bundesländern gerecht

zu werden war eine schwierige, manches Mal nicht lösbare Aufgabe. Viele hauptamtliche und ehrenamtliche Mitarbeiter der bisherigen DDR-Sportorganisation sahen sich um ihr Lebenswerk gebracht.
Im Leistungssport wurde von den bundesdeutschen Entscheidungsträgern viel zerstört, was heute bedauert wird. Man denke an die Kinder-und Jugendsportschulen, die Systematik der Talentsichtung und -förderung, die Kinder-und Jugendspartakiaden (heute in abgespeckter Form „Jugend trainiert für Olympia“), die Leistungszentren (heute kopiert als Olympiastützpunkte) , die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en beispielsweise an der legendären Deutschen Hochschule für Körperkultur (DHFK) in Leipzig. Einiges wurde zwischenzeitlich wieder aufgebaut oder begrenzt fortgeführt wie das Institut für Angewandte Trainingswissenschaft (IAT) in Leipzig oder das Institut für Forschung und Entwicklung von Sportgeräten (FES) in Berlin. Viele erfolgreiche Trainer und Sportwissenschaftler aus der DDR arbeiten heute in Australien, Großbritannien, Italien, Österreich oder in der Schweiz. Sie sind dem bundesdeutschen Leistungssport verlustig gegangen, was an den Medaillenerfolgen seit 1992 deutlich ablesbar ist.

Eine Wiedervereinigung setzt eine sachliche Aufarbeitung und Analyse voraus. Emotionale Auseinandersetzungen müssen ausgehalten und bewältigt werden. Rechtliche Verstöße selbstverständlich geahndet werden. Eine Gratwanderung ist die Autonomie der Sportorganisation und der gleichzeitige Wunsch nach öffentlicher Förderung.

Unabhängig von den genannten Begleiterscheinungen war die Vereinigung ein Geschenk für Deutschland. Der Sport und seine Organisationen haben dabei ihre Integrationskraft in den Dienst dieser deutsch- deutschen Vereinigung gestellt.

NOTE

SESSION 4-2.

(Kr) Richtung der Sportpolitik im Vereinigungsprozess

Kim Dong Sun, Professor bei der Abteilung Sportwissenschaft an d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im Wiedervereinigungsprozess

Kim Dong-sun (Professor für Sportwissenschaft
an der Kyonggi-Universität)

Ⅰ. Einleitung



Wie sollen die festgefahrenen Beziehung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wieder in Bewegung gebracht werden?

- **Positive Funktion des Sports zum Ausgleich der politischen Dysfunktion**
- **Das effektivste und wirkungsvollste Mittel zur Verbess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 **Sanktionen gegen Nordkorea als *wirksames Druckmittel (powerful lever)*, Sportaustausch zwischen Süd- und Nordkorea *cost effective means***
- **Die Förderung des sportlichen Austausches für die Softpowerentfaltung.**
- **Die Olympischen Winterspiele in Pyeongchang als Quelle der Versöhnung und Zusammenarbeit in einem verwüsteten Land.**
- **Untersuchung der Nordkorea-Politik und des Sportaustausches der bisherigen Regierungen**
- **Suche nach Ansätzen und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Harte Macht (Hard Power)	Weiche Macht (Soft Power)
Physische Macht, wie z. B. militärische oder wirtschaftliche Macht Harte Kompetenzen	Kulturelle Macht, einschließlich der rationalen und emotionalen Fähigkeiten des Menschen, wie Bildung, Kultur, Wissenschaft und Technologie Weiche Kompetenzen (Professor Joseph S. Nye an der Harvard-Universität)

II. Die Nordkorea-Politik der bisherigen Regierungen und der innerkoreanische Sportaustausch

Die Nordkorea-Politik der bisherigen Regierungen
Nordpolitik der Regierung Roh Tae-woo
Segyehwa-Politik (Globalisierungspolitik) der Regierung Kim Young-sam
Sonnenscheinpolitik der Regierung Kim Dae-jung
Politik des Friedens und der Prosperität der Regierung Roh Moo-hyun (Politik für Frieden und Zusammenarbeit in Nordostasien)
Politik der Ressourcen-Diplomatie der Regierung Lee Myung-bak (Kreative und pragmatische Außenpolitik)
Eurasien-Initiative der Regierung Park Geun-hye
Neue Nordpolitik der Regierung Moon Jae-in

Regierung Roh Tae-woo

- Als Mittel der Nordpolitik wurde der internationale Sportaustausch verstärkt
- Anlässlich der Teilnahme der Sowjetunion und der anderen kommunistischen Länder Osteuropas an den Olympischen Spielen 1988 in Seoul wurde der Schwerpunkt auf den Sportaustausch mit dem kommunistischen Block gelegt.
- Aufnahme der diplomatischen Beziehungen zu Ungarn, Polen, der Sowjetunion und China
- Die Bekanntmachung der Erklärung vom 7. 7. 1988 und des Plans zur Wiedervereinigung der koreanischen Gemeinschaft sowie der Vorschlag für ein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im Rahmen der Partnerschaft für gemeinsamen Wohlstand
- Verabschiedung des Gesetzes über den Austausch und die Zusammenarbeit zwischen Süd- und Nordkorea sowie des Gesetzes über den innerkoreanischen Kooperationsfonds (1990)
- Teilnahme als gemeinsames Team an der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Japan (Chiba) und der U-20-Fußballweltmeisterschaft in Portugal, Nationalhymne: Arirang, Name des teilnehmenden Landes: Korea (1991)
- Abbruch des Sportaustausches nach dem Überlaufen des nordkoreanischen Judoka Li Chang-su im August 1991

Datum	Inhalt
24. Januar - 26. Juli 1963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64 in Tokio (Lausanne) – drei Vollsitzungen und zwei Arbeitsgespräche
27. Februar - 12. März 1979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35. Tischtennis-Weltmeisterschaften in Pjöngjang (Panmunjom) – vier Gesprächsrunden
09. April - 25. Mai 1984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84 in Los Angeles (Panmunjom) – drei Gesprächsrunden
08. Oktober 1985 - 15. Juli 1987	Sportgespräche zur Beteiligung Nordkoreas an der Ausrichtung der Olympischen Sommerspiele sowi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88 in Seoul (Lausanne) – vier Gesprächsrunden
09. März 1989 - 07. Februar 1990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Asienspielen 1990 in Peking (Panmunjom) – neun Gesprächsrunden
29. November 1990 - 12. Februar 1991	Sportgespräche zur Aufstellung einer gesamtkoreanischen Mannschaf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92 in Barcelona (Panmunjom) - vier Gesprächsrunden
23. September 1990	Innerkoreanisches Sportministertreffen
29. November 1990 - 12. Februar 1991	Sportgespräche zur Teilnahme als gemeinsames Team an internationalen Meisterschaften – vier Gesprächsrunden
24. April - 06. Mai 1991	Teilnahme als gemeinsames Team an der 41. Tischtennis-Weltmeisterschaft in Japan (Chiba)
30.-14. Juni 1991	Teilnahme als gemeinsames Team an der 6. U-20-Fußballweltmeisterschaft in Portugal (Lissabon)

Regierung Kim Young-sam

- In seiner Antrittsrede 1993 brachte er seine Bereitschaft zum Ausdruck, die innerkoreanische Versöhnung und Zusammenarbeit zu fördern, und schlug unter anderem ein innerkoreanisches Gipfeltreffen vor.
- Nordkoreas Ablehnung der Inspektion von Nuklearanlagen, die Erklärung des Austritts aus dem Atomwaffensperrvertrag und der Tod von Kim Il Sung führten zu einer Verschlechterung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 Auch der sportliche Austausch zwischen Süd- und Nordkorea wurde aufgrund der nordkoreanischen Nuklearfrage und der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auf Eis gelegt.

Regierung Kim Dae-jung

- Streben nach Wandel, innerkoreanischer Versöhnung, Zusammenarbeit, Koexistenz und gemeinsamem Wohlstand durch Kontakt (Austausch und Zusammenarbeit), Angebot (Erst geben, dann erhalten) und Dialog (zwischenbehördlicher und ebenenübergreifender Dialog)
- Gipfeltreff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vom 15. Juni 2000
- Durch die Förderung des innerkoreanischen Austausches und der Zusammenarbeit wurde die feindliche Abhängigkeit in eine kooperative Abhängigkeit umgewandelt
- 1998 unterzeichneten Hyundai und das nordkoreanische Asien-Pazifik-Friedenskomitee eine zusätzliche Vereinbarung über die „Arbeitsteilung beim Bau von Turn- und Sporthallen (60 % südkoreanisches Design, 40 % nordkoreanische Arbeitskräfte)“
- Fußballspiele zwischen der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GFTUK) aus Nordkorea und d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aus Südkorea und die Basketball-Freundschaftsspiele zwischen Süd- und Nordkorea in Pjöngjang und Seoul, der erste Sportaustausch auf ziviler Ebene (1999)
-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Olympischen Sommerspiele 2000 in Sydney
-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Asienspiele 2002 in Busan und erstes Hissen der nordkoreanischen Flagge

Zeitraum/Datum	Inhalt
10.-14. August 1999	Fußballspiele süd- und nordkoreanischer Arbeiter mit dem Wunsch nach Wiedervereinigung (Pjöngjang)
27. September - 01. Oktober 1999	Hyundai-Basketball-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Pjöngjang)
22.-25. November 1999	Hyundai-Basketball-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Seoul)
26.-30. Juli 2000	Samsung-Tischtennis-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Pjöngjang)
15. September 2000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Olympischen Sommerspiele 2000 in Sydney (jeweils 90 Teilnehmer aus dem Süd- und Nordkorea)
01. Oktober 2000	Entzündung der Fackel am Berg Geumgang für den 81. nationalen Sportwettbewerb in Busan
14.-17. September 2002	Austausch von Taekwondo-Demonstrationsteams (Pjöngjang)
14. Oktober 2002	Austausch von Taekwondo-Demonstrationsteams (Seoul)
22. September - 15. Oktober 2002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Asienspiele 2002 in Busan, 316 Athleten und 288 Anfeuerer entsandt
01.-08. Februar 2003	Gemeinsamer Auftritt bei der Eröffnungs- und Abschlusszeremonie der Winter-Asienspiele in Aomori

Regierung Roh Moo-Hyun

- Frieden und Sicherheit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stehen im Mittelpunkt der Nordkorea-Politik
- Projekte zu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zwischen Süd- und Nordkorea, darunter Eisenbahn- und Straßenverbindungen, und Förderung der wirtschaftlichen Zusammenarbeit mit Nordkorea auf privatwirtschaftlicher Ebene
- Gemeinsame Erklärung vom 4. Oktober
- Die größte Anzahl von Gesprächen (171) und der aktivste innerkoreanische Sportaustausch in der Geschichte
- Kulturaustausch mit den USA im Sport und anderen Bereichen
- Teilnahme von 35 Spielern an den innerkoreanischen Eishockey-Freundschaftsspielen in Chuncheon, dem ersten Wintersport-Austausch seit der Teilung des Landes
-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sechs von sieben internationalen Wettbewerben, an denen sie teilnahmen; zu zwei internationalen Wettbewerben, die in Korea stattfanden, wurden nordkoreanische Anfeuerungstruppen entsandt.
- Die Anzahl der nordkoreanischen Anfeuerer, die zu internationalen Sportveranstaltungen in Korea entsandt wurden: Asienspiele 2002 in Busan (288), Sommer-Welthochschulspiele 2003 in Daegu (327) und Leichtathletik-Asienmeisterschaften 2005 in Incheon (124)

Datum	Inhalt
20. August - 01. September 2003	Gemeinsamer Auftritt von Süd- und Nordkorea bei den Sommer-Welthochschulspielen 2003 in Daegu, 197 Athleten und 288 Anfeuerer entsandt
06.-07. Oktober 2003	Eröffnungsfeier des Chung Ju-yung-Gymnasiums und Basketball-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23.-28. Oktober 2003	Anlässlich des Volksfestes für Frieden auf der Insel Jeju besuchten 190 Athleten aus nordkoreanischen Fußball- und Marathonmannschaften der Männer und Frauen Südkorea
13.-29. August 2004	Gemeinsamer Auftritt bei den Olympischen Spielen in Athen
31. August - 03. September 2005	Entsendung von 20 nordkoreanischen Athleten und 124 Anfeuerern zu den Leichtathletik-Asienmeisterschaften in Incheon.
31. Juli - 07. August 2005	Besuch von 65 nordkoreanischen Athleten in Südkorea anlässlich der 2. Fußball-Ostasienmeisterschaft (Daegu/Daejeon/Jeonju)
14.-16. August 2005	Innerkoreanische Fußball-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Seoul)
29. Oktober - 06. November 2005	Gemeinsamer Auftritt bei den Ostasienspielen in Macau
10.-26. Februar 2006	Gemeinsamer Auftritt bei den Olympischen Winterspielen in Turin
02.-05. März 2006	Anlässlich der innerkoreanischen Eishockey-Freundschaftsspiele in Chuncheon zur Umsetzung der Gemeinsamen Erklärung vom 15. Juni besuchten 35 nordkoreanische Athleten Südkorea
01.-15. Dezember 2006	Gemeinsamer Auftritt bei der Eröffnungs- und Abschlusszeremonie der Asienspiele in Doha
28. Januar - 04. Februar 2007	Gemeinsamer Auftritt bei den Asiatischen Winterspielen in Changchun
06.-09. April 2007	46 Mitglieder des nordkoreanischen Taekwondo-Demonstrationsteams besuchten Südkorea
29. April - 02. Mai 2007	Fußballspiele der süd- und nordkoreanischen Arbeiter zur Wiedervereinigung (Changwon) - etwa 60 nordkoreanische Spieler besuchten Südkorea
18. August - 09. September 2007	U-17-Fußball-Weltmeisterschaft 2007 - 38 nordkoreanische Spieler besuchten Südkorea
13.-25. September 2007	Anlässlich des 2. Internationalen Jugend-Fußball-Freundschaftsturniers in Gangjin in der Provinz Jeollanam-do besuchten 22 nordkoreanische Spieler Südkorea
09. November 2007	Anlässlich der Einweihung des Fußballstadions von Pyongyang Sports Club besuchten 145 Delegationsmitglieder aus Südkorea Nordkorea

Regierung Lee Myung-bak

- Die Lage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wurde aufgrund des härteren Kurses gegenüber Nordkorea zu einem Streitpunkt für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 Vision 3000: Denuklearisierung und Offenheit
- Erschießung der südkoreanischen Touristin Park Wang-ja durch einen nordkoreanischen Soldaten in der Ferienanlage am Berg Geumgang und Untergang des südkoreanischen Kriegsschiffes Cheonan
- Aussetzung des Tourismusprojekts am Berg Geumgang; in Kaesŏng, Einstellung des Betriebs der innerkoreanischen Eisenbahn, Reduzierung der Produktion im Kaesŏng-Industriekomplex, Verschärfte Maßnahmen zur Kontrolle des Landtransports für den Kaesŏng-Industriekomplex
- Nahrungsmittel- und humanitäre Hilfe auf der staatlichen Ebene wurde weitgehend eingestellt
- In dieser Zeit brachte der innerkoreanische Sportaustausch aufgrund der festgefahrenen Beziehung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keine sichtbaren Ergebnisse
- Die Kontinuität des sportlichen Austausches wurde unterbrochen, weil gute Gelegenheiten wie die innerkoreanische Umsetzungsvereinbarung im Zusammenhang mit den Olympischen Spielen 2008 in Peking und die gemeinsame Teilnahme an der Fußballweltmeisterschaft 2010 in Südafrika nicht genutzt wurden

Zeitraum/Datum	Inhalt
18. - 23. März 2008	Ringer-Asienmeisterschaften (Jeju) - 15 nordkoreanische Athleten besuchten Südkorea
26. - 27. April 2008	Judo-Asienmeisterschaften 2008 (Jeju) - 17 nordkoreanische Athleten besuchten Südkorea
26. März 2008 (Shanghai) 22. Juni 2008 (Seoul)	Dritte Qualifikationsrunde der Fußballweltmeisterschaft 2010 in Südafrika (Spiel zwischen Süd- und Nordkorea)
28. Juni – 01. Juli 2008	Innerkoreanische Taekwondo-Austauschveranstaltung 2008 (Pjöngjang)
10. September 2008	Letzte Qualifikationsrunde für die Fußballweltmeisterschaft 2010 in Südafrika (Shanghai) - Spiel zwischen Süd- und Nordkorea
10. – 14. August 2008	Koreanische Anfeuerungstruppe bei den Olympischen Spielen 2008 in Peking (etwa 400 Anfeuerer)
29. März – 02. April 2009	Letzte Qualifikationsrunde für die Fußballweltmeisterschaft 2010 in Südafrika (Seoul) – 43 nordkoreanische Athleten besuchten Südkorea
22. – 23. November 2011	Peace and Sports Cup (in Doha, Qatar) - 2 südkoreanische und 2 nordkoreanische Teilnehmer

Regierung Park Geun-hye

- Der Vertrauensprozess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 Dresdner Initiative, Wiedervereinigung-Bonanza-Diskurs, Gründung des Komitees zur Vorbereitung der Wiedervereinigung
- Die praktische Umsetzung der Dresdner Initiative umfasst die Ausarbeitung eines Plans zur Wiedervereinigung des koreanischen Volkes durch sportlichen Austausch
- Faktisch ausgesetzt wurde der innerkoreanische wirtschaftliche und soziokulturelle Austausch, der nach der Erklärung vom 7. Juli eingeleitet worden war. Humanitäre Hilfe und Unterstützung von Nichtregierungsorganisationen wurden ebenfalls verboten
- 41 südkoreanische Athleten nahmen an der Meisterschaft im Gewichtheben *Asian Cup and Interclub Weightlifting Championship* 2013 in Pjöngjang teil. Erstmals seit der Teilung des Landes wurde in Nordkorea die Nationalflagge der Republik Korea Taegeukgi gehisst und die südkoreanische Nationalhymne (Aegukga) gespielt.
- 273 nordkoreanische Athleten wurden zu den Asienspielen 2014 in Incheon entsandt. Die drei nordkoreanischen hochrangigen Führungsmitglieder Hwang Pyong-so, Choe Ryong-hae und Kim Yang-geon besuchten Südkorea.

Zeitraum/Datum	Inhalt
20.-28. Juli 2013	Fußball-Ostasienmeisterschaft 2013, 26 nordkoreanische Fußballspielerinnen besuchten Südkorea
12.-17. September 2013	Meisterschaft im Gewichtheben *Asian Cup and Interclub Weightlifting Championship* 2013 in Pjöngjang, 17 südkoreanische Athleten besuchten Nordkorea
19. September - 4. Oktober 2014	273 nordkoreanische Athleten nahmen an den Asienspielen 2014 in Incheon teil
18.-24. Oktober 2014	33 nordkoreanische Athleten nahmen an den Para-Asienspielen 2014 in Incheon teil
28.-31. Oktober 2015	Fußballspiele von süd- und nordkoreanischen Arbeitern mit dem Wunsch nach Wiedervereinigung (Pjöngjang), etwa 160 Südkoreaner besuchten Nordkorea

Regierung Moon Jae-in

- Als oberste Priorität sollte der Frieden auf der Grundlage gegenseitiger Achtung angestrebt und die Frage der koreanischen Halbinsel durch die Zusammenarbeit mit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allerdings unter Führung der Koreaner selbst, vorangetrieben und institutionalisiert werden, um die Nachhaltigkeit der Politik zu gewährleisten
- Entwurf eines neuen Wirtschaftsplans für die koreanische Halbinsel
- Berliner Initiative
- Erfolgreiche Ausrichtung der Olympischen Winterspiele in Pyeongchang

Zeitraum/Datum	Inhalt
24. – 30. Juni 2017	Vorführung des ITF-Demonstrationsteams bei den Taekwondo-Weltmeisterschaften 2017 in Muju
18.- 22. Dezember 2018	Das 3. internationale U-15-Jugendfußballturnier Ari Sports Cup (Kunming, China) – Teilnahme von zwei nordkoreanischen Mannschaften
09. – 25. Februar 2018	Gemeinsamer Auftritt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Olympischen Winterspiele in Pyeongchang, gemeinsames Frauen-Hockeyteam – 12 nordkoreanische Athletinnen
09. – 18. März 2018	Paralympische Winterspiele in Pyeongchang – Teilnahme von 24 nordkoreanischen Athleten und Delegationsmitgliedern
29. April – 06. Mai 2018	Tischtennis-Weltmeisterschaften in Halmstad, Schweden
18. Juni 2018	Innerkoreanische Sportgespräche (Friedenshaus in Panmunjom)
28. Juni 2018	Vierergespräche im Anschluss an innerkoreanische Sportgespräche (Jakarta)
03. – 06. Juli 2018	Basketball-Freundschaftsspiele zur Wiedervereinigung (Pjöngjang) – Teilnahme der südkoreanischen Männer- und Frauen-Nationalmannschaften
05. – 06. Juli 2018	Innerkoreanische Sportgespräche auf Arbeitsebene (Koryo Hotel in Pjöngjang)
10.– 12. August 2018	Fußballspiele von Süd- und nordkoreanischen Arbeitern mit dem Wunsch nach Wiedervereinigung (Seoul) - Teilnahme von 64 Nordkoreanern
15. – 18. August 2018	Das 4. internationale U-15-Jugendfußballturnier Ari Sports Cup (Pjöngjang) – Teilnahme von zwei südkoreanischen Mannschaften
31. August – 15. September 2018	Sportschießen-Weltmeisterschaften 2018 in Changwon – Teilnahme von 22 nordkoreanischen Athleten
20. – 27. September 2018	Judo-Weltmeisterschaften 2018 in Aserbaidschan – Bronzemedaille im Mixed-Team-Wettbewerb
06. – 13. Oktober 2018	Gemeinsamer Auftritt bei der Eröffnungszeremonie der Para-Asienspiele 2018 in Jakarta – gemeinsames Schwimmen- und Tischtennis-Team
25. Oktober – 03. November 2018	Das 5. internationale U-15-Jugendfußballturnier Ari Sports Cup (Chuncheon und weitere) – Teilnahme von zwei nordkoreanischen Mannschaften
02. November 2018	Beim innerkoreanischen Sportgespräch wurde vereinbart, dem IOC eine Absichtserklärung für die gemeinsame Ausrichtung der Olympischen Spiele 2032 vorzulegen, und die Frage der Teilnahme an den Handball-Weltmeisterschaften der Männer 2019 diskutiert.
10. – 27. Januar 2019	Die 26. Handball-Weltmeisterschaft der Männer (Gemeinsames Team von Süd- und Nordkorea)

Internationale Sportveranstaltungen während der Amtszeit von Präsident Yoon Suk Yeol

2022	2023
Olympische Winterspiele in Peking (4.-20. Februar, Peking)	Winter-Welthochschulspiele in Lake Placid (12.-22. Januar, Lake Placid)
World Games in Birmingham (7.-17. Juli, Birmingham, USA)	Internationale Asiatische Jugend-Winterspiele (23. Februar - 5. März, Kuzbass, Russland)
Internationale Jugend-Asienspiele (27. Juli - 8. August, Wladiwostok)	Sommer-Welthochschulspiele in Chengdu (28. Juli - 8. August, Chengdu)
Neuseeländische Winterspiele (27. August - 11. September, Queenstown/Wanaka)	Neuseeländische Winterspiele (Ende August, Queenstown/Wanaka/Naseby)
	Jugend-Ostasienspiele (Im August, Ulaanbaatar)
	Sommer-Asienspiele in Hangzhou (23. September - 8. Oktober, Hangzhou)
	World Beach Games (5. August - 12. August, Bali)
	Asian Beach Games in Sanya (Noch unbestimmt, Sanya, China)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17.-26. November, Bangkok-Chonburi)

2024	2025	2026
Olympische Jugend-Winterspiele in Gangwon (19. Januar - 2. Februar, Gangwon)	Winter-Welthochschulspiele (13.-23. Januar, Turin, Italien)	Olympische Winterspiele Mailand-Cortina (6. Februar - 22. Februar, Mailand-Cortina)
Olympische Sommerspiele in Paris (26. Juli - 11. August, Paris)	Winter-Asienspiele (noch unbestimmt)	Sommer-Asienspiele Aichi-Nagoya (19. September - 4. Oktober, Aichi, Nagoya)
Neuseeländische Winterspiele (Ende August, Queenstown/Wanaka/Naseby)	Asian Youth Games in Tashkent (Noch unbestimmt, Taschkent-Usbekistan)	Olympische Jugend-Sommerspiele 2026 (Noch unbestimmt, Dakar, Senegal)
Asian Beach Games (Noch unbestimmt)	Sommer-Welthochschulspiele Rhein-Ruhr (Noch unbestimmt, NRW, Deutschland)	
Die 8. Asiatischen Jugend-Sommerspiele (Noch unbestimmt)	Neuseeländische Winterspiele (Ende August, Queenstown/Wanaka/Naseby)	
	Asian Indoor & Martial Arts Games in Riad (Noch unbestimmt, Riad, Saudi-Arabien)	
	World Games (7.-17. August, Chengdu, China)	

Die Nordkorea-Politik der bisherigen Regierungen und die aus dem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gewonnenen Hinweise

- Die Regierungen Kim Dae-jung und Roh Moo-hyun konnten mit ihrer inklusiven Nordkorea-Politik und dem innerkoreanischen Gipfeltreffen nicht nur die innerkoreanischen Austausch- und Kooperationsprojekte, sondern auch den Sportaustausch vorantreiben
- Während der Regierungen Kim Yong-sam, Lee Myung-bak und Park Geun-hye, die eine passive Politik gegenüber Nordkorea verfolgten, wurden der innerkoreanische Kooperations- und Sportaustausch eingeschränkt
- Ein positiver Einstellungswandel von Nordkorea ist ein wichtiger Faktor
- Statt oberflächlicher Ergebnisse wie der wirtschaftliche Beistand Südkoreas für Nordkorea oder die Aufstellung eines gemeinsamen Teams sollten wir einen gegenseitig begünstigenden Kooperationsaustausch wie Leistungsverbesserung anstreben

Ⅲ.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im Wiedervereinigungsprozess



Eckpunkte zur Förderung des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es



- Einrichtung des Ausschusses für die Zusammenarbeit im sozialen und kulturellen Austausch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Unterausschuss für Kultur und Unterausschuss für Sport) (vorläufiger Name)
- Aufbau eines Systems zur Kooperation zwischen der Zentralregierung und lokalen Behörden
- Regelmäßige Gespräche auf Arbeitsebene und Schaffung rechtlicher und institutioneller Rahmenbedingungen
- Trennung von der politischen Situation
- Prinzip der Auswahl und Konzentration
- Von der Sportbranche geleitetes staatliches Unterstützungssystem
- Aufbau eines Netzwerks von Sportverbänden der Auslandskoreaner in Zusammenarbeit mit der Stiftung für Auslandskoreaner (Overseas Koreans Foundation)
- Fortsetzung der erfolgreichen innerkoreanischen Sportveranstaltungen der Vergangenheit

Sportaustausch



- Disziplinen, in denen ein innerkoreanischer Sportaustausch stattfand (z. B. Fußball, Tischtennis, Basketball)
- Disziplinen, in denen Süd- und Nordkorea international gleich wettbewerbsfähig sind
- Gemeinsamer Auftritt bei internationalen Wettbewerben und Bildung einer gemeinsamen Mannschaft
- Wiederaufnahme von Fußballspielen zwischen Kyungsung FC und Pyongyang FC
- Bemühung um eine gemeinsame Bewerbung und Ausrichtung für die Olympischen Sommerspiele 2036 mit Nordkorea

Kooperationsprojekte für den Sportaustausch



- Beseitigung der Ungleichheiten zwischen Süd- und Nordkorea (Schulsport, Alltags- und Profisport)
- Humanitäre Hilfe für sozial Schwächere (Sportausrüstung, Ernährung, medizinische Versorgung)
- Förderung von Kooperationsprojekten zur Entwicklung der nordkoreanischen Sportindustrie, um einen Beitrag zur Wirtschaftsentwicklung Nordkoreas zu leisten

IV. Faz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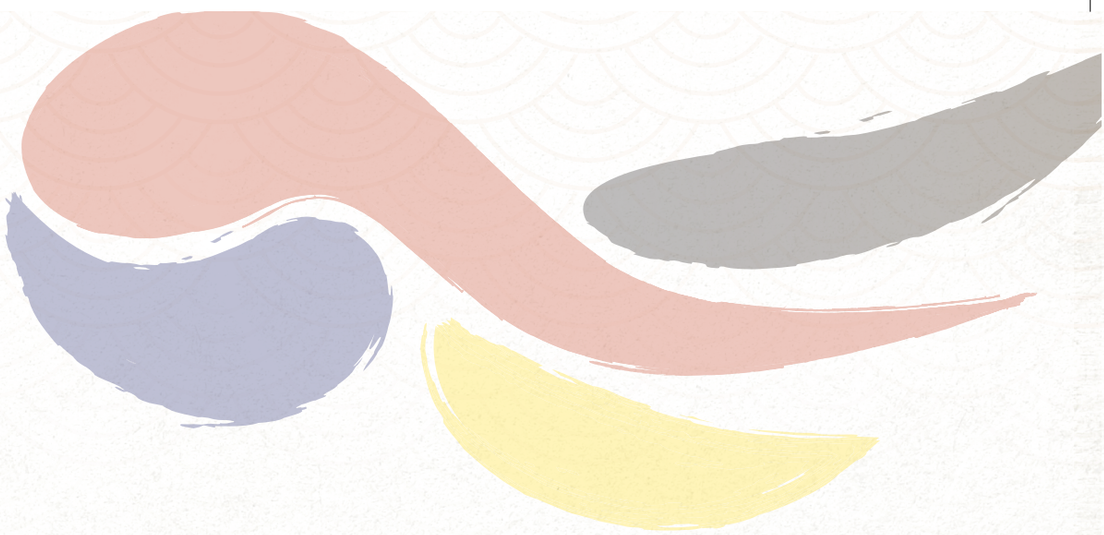


- **Die Wiedervereinigung ist Aufgabe, Realität und Zukunft des Volkes**
- **Der innerkoreanische Sportaustausch ist das effektivste Mittel im Wiedervereinigungsprozess**
- **Minimierung der Einmischung und Kontrolle der Regierung in Bezug auf die politisch-militärische Situation**
- **Sportaustauschprojekte sollten unter Berücksichtigung der Fortschritte in den innerkoreanischen Beziehungen und der Akzeptanz Nordkoreas vorangetrieben werden**
- **Der innerkoreanische Sportaustausch wurde von den Regierungen aktiv vorangetrieben, die Nordkorea auf der Grundlage einer Inklusionspolitik humanitäre Hilfe leisteten**
- **Während der Teilnahme Nordkoreas an den sportlichen Wettbewerben wurden Spannungen abgebaut und ein Zusammengehörigkeitsgefühl entwickelt**
- **Förderung von Kooperationsprojekten für den innerkoreanischen Sportaustausch**
- **Förderung des Sportaustausches in Verbindung mit anderen Bereichen wie Soziokultur, Gesundheitswesen, Wissenschaft und Wirtschaft**
- **Bemühung um eine gemeinsame Bewerbung und Ausrichtung für die Olympischen Sommerspiele 2036 mit Nordkorea**
- ***Sports has the power to change North Korea***



Vielen Dank für Ihre Aufmerksamkeit!

Thank you for listening!



SESSION 5 I Deutsch-Koreanischer Kulturaustausch zu Wiedervereinigungsfragen

SESSION 5-1.

(De) Innerdeutscher Kulturaustausch

Gitte Zschoch, Generalsekretärin des ifa

Deutsch-Koreanischer Kulturaustauch zu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 eine deutsche Perspektive

„Crash Landing On You" ist eines der erfolgreichsten koreanischen TV-Dramas, das je produziert wurde – nicht nur in Südkorea, sondern weltweit, mit insgesamt 1,75 Milliarden Views.[1] In der Serie (2020) geht es um eine südkoreanische, erfolgreiche Businessfrau, die bei einem Fallschirmsprung in einen Tornado gerät, der sie in der Entmilitarisierten Zone (DMZ) ausspuckt. Dort wird sie von nordkoreanischen Soldaten aufgesammelt – und es beginnt nicht nur ein Actionfilm, eine Komödie und eine Liebesgeschichte, sondern die Serie eröffnet auch Einblick in heutige gesellschaftliche Imaginationen über die Teilung Koreas, über Gleiches, Ungleiches, über Möglichkeiten der Vereinigung. „Wenn wir eines Tages wiedervereint sind, dann …" – so beginnen viele Sätze der Protagonistin. Was sich dahinter verbergen mag, ist, dass ihre Ohnmacht aufhören wird und sie damit ihre nordkoreanischen Kontrahenten besiegen kann. In Nordkorea aber ist sie ausgeliefert und abhängig. Gleichzeitig ermöglichen ihr ihre Intelligenz, ihre Schönheit und ihre Business-Skills, in Nordkorea zu überleben. Damit ist das Machtverhältnis direkt geklärt: Fortschrittlich, smart, attraktiv und zukunftsfähig ist natürlich Südkorea.

Um Nordkorea steht es allerdings auch nicht so schlecht, wie man es in früheren Filmen gesehen hat. Die Serie eröffnet dem nationalen und internationalen Publikum Vorstellungswelten über Nordkorea. Diese mögen weit von der Realität entfernt sein. Sie bieten aber trotzdem Einblick in das Land im Norden, zeichnen ein durchaus sympathisches – weil menschliches, humorvolles – Bild der Nordkoreaner, inklusive der Soldaten. Damit trägt die Serie zur gegenseitigen Kenntnis bei.
Zur gegenseitigen Kenntnis? Kann man in Nordkorea auch Crash Landing On You sehen?
In der Serie gibt es eine bezeichnende Szene. Ein Wachsoldat ist derart unaufmerksam, sodass die Protagonistin unbemerkt fast über die Grenze zurück nach Südkorea hätte fliehen können. Der Grund für seine schlechte Performance: Er ist abgelenkt. Denn er schaut sich gebannt auf einem 1990er-Jahre PC eine südkoreanische Serie an. Natürlich, so vermittelt uns die Serie, sind südkoreanische Kulturprodukte in Nordkorea verfügbar, meist über Kopien und mit einigen Jahren Verspätung. Die Serie kommentiert dadurch auch den immensen Erfolg der südkoreanischen Popkultur generell und der Kultur im speziellen – sie dringt bis in die DMZ vor. Koreanische TV-Serien und Musik werden dank Hallyu, der „Welle" koreanischer Popkultur, die seit den 1990er Jahren erst Asien, dann die Welt eroberte[2], global konsumiert. Seitdem Netflix 2018 koreanische Dramas

[1] Alle Zahlen von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rash_Landing_on_You#Ratings, Zugriff 24.08.2022.
[2] Die zurzeit weltweite erfolgreichste Musikband ist nach dem Global Music Report die koreanische Boyband BTS, deren bekanntester Song im Jahr 2022 Streams von 1,76 Milliarden erreichte.

in sein Programm aufgenommen hat, ist die Verbreitung noch einmal gestiegen. Crash Landing On You war speziell auch in China extrem erfolgreich, mit 460 Millionen Views für die letzte Episode. Und da die informellen Handelsrouten über die Grenze Chinas zu Nordkorea verlaufen, hat sicher Crash Landing On You seinen Weg in die nordkoreanischen Wohnungen gefunden.
Der große Erfolg der Serie zeigt das Interesse an Themen des geteilten Koreas in Südkorea, und vielleicht auch den Hunger danach, sich über die DMZ hinweg zu verständigen, in Kontakt zu kommen, über Nordkorea nachzudenken. Das ist ein hoffnungsvolles Zeichen. Denn Kenntnis voneinander, das ist eine der wichtigsten Argumente für den internationalen Kulturaustausch. So entsteht Vertrauen, und durch Vertrauen kann Zusammenarbeit entstehen.

Kulturaustausch – Geschichte, Europa, Ziele

Was verstehen wir unter Kulturaustausch? In Deutschland ist der Kultur- und Bildungsaustausch ein Teil des Politikfelds AKBP - Auswärtige Kultur- und Bildungspolitik -, das seit den 1960er Jahren als „Dritte Säule" zur deutschen Außenpolitik gehört und damit gleichberechtigter Bestandteil dieser ist – neben der Außenwirtschaftspolitik und der klassischen Diplomatie. Im englischen Sprachraum wird dieses Tätigkeitsfeld, angelehnt an „international relations", „cultural relations" genannt.
Im Papier des Deutschen Bundestags zum Thema von 2006 heißt es: „Verbunden ist damit nicht nur die Präsentation deutscher Kultur und Kunst im Ausland, sondern (die AKBP ist) zugleich ein Beitrag zur weiteren Entwicklung der eigenen Kultur und der Kultur insgesamt."[3]

Diese Vorstellung von Präsentation von Kultur, von „showcasing" oder Export von der Kultur, die man selbst im Land als besonders wichtig und wertvoll einstuft und die als „das Beste des Eigenen" der Welt zeigen will, hat sich seitdem gewandelt. So beschreibt eine Konzeption des Auswärtigen Amtes von 2000, dass die AKBP „Dialog, Austausch und Zusammenarbeit zwischen Menschen und Kulturen" fördert. Aber auch den „Dialog auf Augenhöhe" hinterfragt man zunehmend als patriarchales Konzept. Die AKBP diene ferner der „zwischenstaatlichen und zwischenmenschlichen Verständigung".[4] Das

[3] Weiter heißt es: „Bund, Länder und auch die anderen Akteure in der Auswärtigen Kulturpolitik gehen dabei zumeist von einem „erweiterten Kulturbegriff" aus, der außer Kunst und Kultur im engeren Sinn auch Bildung und Wissenschaft einschließt. Das zentrale Anliegen ist partei- und fraktionsübergreifend die Überwindung des – ohnehin nur scheinbaren Gegensatzes – von Außen- und Binnensicht, um neue Verbindungen zwischen den Menschen unterschiedlicher Regionen und Kulturkreisen zu schaffen. S. Wissenschaftliche Dienste des Deutschen Bundestages: Auswärtige Kultur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blick zentraler Problemstellungen einschließlich einer Auflistung der gegenwärtig vorliegenden Reformvorschläge, Deutscher Bundestag WD 10 - 053/07, 2007, S.3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414764/ 985e4f193867cc676bdc8dffb6480f1d/wd-10-053-07-pdf-data.pdf, Zugriff am 23.08.2022

[4] „Auswärtige Kulturpolitik – Konzeption 2000", von Auswärtiges Amt, Kulturabteilung.

zwischenmenschliche Element, so genannte „people to people" Ansätze der internationalen Beziehungen, wird zunehmend stärker. Heute geht es in der Arbeit der Kulturinstitute vielmehr um einen partnerschaftlichen, ko-produktiven Ansatz. Darum, gemeinschaftlich und über Landes-, Regions-, Identitäts- und Sprachgrenzen hinweg in Gestaltungsprozesse zu kommen. Daher sprechen wir im ifa zunehmend von transnationaler Arbeit, die sich vom bi-lateralen Prinzip (Deutschland vs. Gastland) entfernt.

Die Idee, internationale Kulturbeziehungen zu gestalten, ist eine europäische. Hier entstanden in der Zwischenkriegszeit die ersten Organisationen, die sich über die Kultur zum Weltfrieden bekannten, wie das ifa 1917 [5] - neben der ungarischen Akademie in Wien eine der ältesten solcher Organisationen -, oder der British Council 1934. Goethe-Institut und DAAD sind neben dem ifa weitere deutsche Organisationen, die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Kultur- und Bildungsbeziehungen fördern und pflegen. Denn die AKBP wird vom Auswärtigen Amt gesteuert, aber hauptsächlich von eigenständigen, privatrechtlich organisierten Organisationen – den so genannten Mittlern - durch über Rahmenverträge mit dem Auswärtigen Amt strukturierte und geregelte Zusammenarbeit, gestaltet. Diese Organisationen gehören zu den größten in Europa – das Goethe-Institut mit einem Netzwerk von knapp 160 Niederlassungen wird nur noch von dem französischen Netzwerk mit über 800 Niederlassungen übertroffen.

Das Modell, Kulturbeziehungen über private Träger zu den Zivilgesellschaften der Gastländer zu pflegen, hat sich als nachhaltig erfolgreich erwiesen. Es sorgt aufgrund der Unabhängigkeit für Glaubwürdigkeit und Vertrauen. „Building trust and understanding" („Vertrauen und Verständnis/Kenntnis aufbauen") ist das Motto der europäischen Kulturinstitute, die sich in EUNIC zusammengeschlossen haben.

Denn auch auf EU-Level wird Kultur in der Außenpolitik immer wichtiger, auch wenn es hier seit der Kommission von Ursula von der Leyen wieder immense Rückschritte zu verzeichnen gibt. Die EU-Strategie der internationalen Kulturbeziehungen ist eine zeitgemäße Strategie. Diese wurde 2016 veröffentlicht, nachdem ein Konsortium von europäischen Kulturinstituten, darunter das ifa, Empfehlungen dazu ausgesprochen hat. Die EU definiert die Werte, die ihrem Engagement in internationalen Kulturbeziehungen zugrunde liegen, wie folgt: „Kulturelle Vielfalt ist ein fester Bestandteil der Werte der Europäischen Union. Die EU tritt nachdrücklich für eine globale Ordnung ein, die auf Frieden, Rechtsstaatlichkeit, Meinungsfreiheit, gegenseitigem Verständnis und Wahrung der Menschenrechte beruht. Daher ist die Förderung von Vielfalt durch internationale Kulturbeziehungen ein wichtiges Anliegen der EU als globalen Akteur." [6]

[5] Die über 100-jährige Geschichte des ifa war wechselhaft und begann unter kolonialen Vorzeichen. Heute ist der in der Satzung festgehaltene Vereinszweck die „Förderung der Völkerverständigung, des interkulturellen Dialogs und des Verständnisses für Deutschland im Ausland, insbesondere durch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auf den Gebieten der Kunst und Kultur, der Medien, der Friedensförderung sowie der Information, Forschung und Fortbildung im Bereich der Auswärtigen Kultur- und Bildungspolitik." https://www.ifa.de/fileadmin/Content/docs/organisation/ifa_Satzung-Rahmenvertrag.pdf.

[6] Künftige Strategie der EU für internationale Kulturbeziehungen, 2016, siehe: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HTML/?uri=CELEX:52016JC0029&from=EN; Zugriff am 24.08.2022.

Die Strategie bezieht sich ausdrücklich nicht darauf, die Vielfalt der europäischen Kulturen zu verbreiten, sondern richtet sich nach folgenden Prinzipien: Einanderzuhören und Voneinanderlernen (mutual listening and learning), gemeinsamer Aufbau von Kapazitäten (joint capacity building), Zuschnitt der Maßnahmen auf jeweiligen Rahmenbedingungen (bottom-up principle), Reziprozität und Mitgestaltung. Es geht also, und damit wird nicht nur den Anforderungen von Kulturaustausch in postkolonialen Kontexten Rechnung getragen, um die Art des Arbeitens. Durch faire, transparente Zusammenarbeit vermitteln sich Werte ebenso wie durch die Inhalte. Und diese Werte ermöglichen, dass Glaubwürdigkeit und Vertrauen zwischen Menschen entstehen. Wichtige Grundvoraussetzungen dafür, das von Frieden und persönlichen Freiheiten und Rechten geprägte europäische Lebensmodell sowie den wirtschaftlichen Wohlstand in Europa zu erhalten.

Das deutsche Modell der AKBP ist in Gefahr: Außenpolitische Geisterfahrt

Es ist dieser Tage ein Bonmot, dass globale Krisen globale Lösungen brauchen, der Klimawandel ist nur ein Beispiel. Dazu müssen wir auf allen Ebenen der Gesellschaft, besonders der Zivilgesellschaft, aber auch und gerade junge Menschen, einander kennen, müssen international vernetzt sein. Wir brauchen Wissen über die Welt. Davon hängt ab, wie gut wir in Zukunft bestehen können. Deutschland war bisher sehr gut aufgestellt; nun ist aber das oben beschriebene Modell in Gefahr. Angesichts der Fokussierung der deutschen Politik auf innenpolitische Themen, die ihre absolute Berechtigung haben, wurden schon 2022 massive Kürzungen für den Kulturaustausch vorgenommen, und für 2023 sind weitere Kürzungen angedacht.

Als „außenpolitische Geisterfahrt" hat Michelle Müntefering, Vorsitzende des Unterausschusses für AKBP im deutschen Parlament, dieses Szenario kürzlich genannt. Das unterstreicht die Drastik dessen, was auf uns zukommt, wenn internationale Austauschprogramme in Kultur und Bildung massiv reduziert werden. „Für ein auf kluge globale Verflechtung angewiesenes Land wie Deutschland gibt es wenige Möglichkeiten, Geld besser zu investieren als in globalen wissenschaftlichen und kulturellen Austausch. Davon hängt zu einem beträchtlichen Teil die Zukunftsfähigkeit unseres Lebens- und Wohlstandsmodells ab. Das sollte auch die deutsche Finanzpolitik berücksichtigen. Denn: Wer hier mutwillig spart, begibt sich auf eine außenpolitische Geisterfahrt, entgegen aller Vernunft." [7]

[7] https://www.fr.de/meinung/gastbeitraege/aussenpolitische-geisterfahrt-91715263.html, Zugriff 23.08.2022

Schwierige Regimes

Gilt es, Menschen auch dort zusammen zu bringen, wo sie von diktatorischen oder anderen schwierigen Regimes beherrscht werden, wo es keine Meinungs- und Kunstfreiheit gibt? Solche Regimes haben ein großes Bedrohungs- oder Einschränkungspotential für eine friedliche Weltordnung. Daher ist es besonders wichtig, dort im Kultur- und Bildungsaustausch tätig zu sein. Es geht darum Kontakte zu schaffen, im Gespräch zu bleiben, über eine noch so minimale Öffnung Kenntnis von anderen Lebenswelten und Werten zu ermöglichen. Welche Rolle die Kulturinstitute dabei spielen können, zeigt Thomas Oberender, Theaterregisseur, der in Ost-Berlin aufgewachsen ist. Er verkehrte im dortigen Institut français und fand dadurch nicht nur Zugang zu französischer Literatur, sondern konnte seinen intellektuellen Horizont enorm erweitern. Über Kultur eröffnen sich Welten, Vorstellungen, Möglichkeiten – nirgends wird es deutlicher als in Regimes, die starke Zensur üben und hart kontrollieren, welchen Inhalten die Menschen ausgesetzt sind, die in ihrem Herrschaftsbereich leben. Man kann sagen, dass man dort die transformierende Kraft von Kreativität besonders gut verstanden hat, denn man will sie eindämmen. Was für uns von außen heißt, wir müssen alles versuchen, um sie zu fördern.

Informeller und formeller Kulturaustausch

Das kann auf informellen Wegen passieren. Ein Beispiel ist der Soldat aus der Serie „Crash Landing On You“, der offensichtlich auf klandestine Art Kulturprodukten habhaft werden konnte. Es kann auch auf formellen oder offiziellen Wegen passieren, wenn die Umstände es zulassen. Internationalen Akteuren, gerade Kulturinstitute, die durch zwischenstaatliche Abkommen abgesichert sind, fällt hierbei eine besondere Rolle zu, weil sie sich in einem Land wie Nordkorea weiterhin bewegen können. Während der Sonnenscheinpolitik war dies der Fall. Das Goethe-Institut hat 2004 einen Lesesaal in Pyeongyang eröffnet. In dem rund 130 Quadratmeter großen Lesesaal befanden sich etwa 4000 Bücher, die Hälfte technisch-wissenschaftlichen Inhalts. Täglich kamen etwa 20 bis 30 Besucher in die erste ausländische Kultureinrichtung in Nordkorea. Als über japanische Medien bekannt wurde, dass kritische Medien wie Tageszeitungen und Zeitschriften dort auslagen, wurden diese entfernt und das Goethe-Institut hat daraufhin den Lesesaal wieder geschlossen.

Seitdem läuft der Kulturaustausch über Projekte. Das Münchner Kammerorchester ist mehrere Male nach Korea gereist um gemeinsam mit nordkoreanischen Musiker:innen zu musizieren,[8] es gab Teilnahmen und Preise für deutsche Filme bei mehreren Ausgaben des Pye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und in den letzten Jahren ist als Teil der Arbeit des Goethe-Instituts eine Papierrestaurationswerkstatt in der zentralen Bibliothek in Pyeongyang entstanden. [9]

[8] Dieser Film von Nils Clauss von 2013 gibt einen guten Einblick in das gemeinsame Musizieren zwischen Nordkoreaner:innen und Deutschen: https://vimeo.com/55834030.

[9] Mehr Informationen zur Arbeit des Goethe-Instituts in Nordkorea finden sich im Interview von 2020 mit der dortigen Leiterin Marla Stukenberg, S. 24-27: https://kulturkorea.org/sites/default/files/2020-09/KulturKorea_2020-2.pdf.

Inhaltlich gibt es in Südkorea ein großes Interesse an Projekten, die sich mit der DDR, der Teilung und friedlichen Revolution beschäftigen. Die Ausstellungsreihe des ifa zu DDR-Fotografie – mit Sybille Bergemann, Barbara Klemm und Arno Fischer – wurde an mehreren Museen des Landes gezeigt, v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bis zum Goeun Museum of Photography in Busan. Arno Fischer war kürzlich in Busan und Seoul zu sehen. 183 Fotografien umfasst die Ausstellung. Sie zeigt einen Überblick über das außergewöhnliche Lebenswerk des 1927 in Berlin geborenen Fotografen und Fotografielehrers Arno Fischer. Bis heute sind seine Schwarz-Weiß-Bilder für Generationen von Fotografen, nicht nur im Osten Deutschlands, stilprägend. Den Ausgangspunkt der Ausstellung bildet seine frühe Arbeit „Situation Berlin", in der er die Vier-Sektoren-Stadt Berlin fokussiert und deren Publikation 1961 in Zusammenhang mit dem Mauerbau verboten wurde. Gezeigt werden auch seine Arbeiten für das ostdeutsche Kultur- und Modemagazin „Sibylle", sowie faszinierende Porträts von berühmten Persönlichkeiten wie Marlene Dietrich. Zahlreiche Reisebilder quer durch die DDR und das Ausland, von New York, Indien und dem afrikanischen Kontinent sind ein weiterer Schwerpunkt. Das ifa ist seit 1993 mit insgesamt 21 Tourneeausstellungen in Südkorea präsent.

Südkorea ist im internationalen Kunstsektor ein wichtiger Punkt auf der Weltkarte. 1995 und 1997 war die Gwangju Biennale jeweils die größte Kunstausstellung weltweit. Biennalen sind Orte, an denen Ideen und Konzepte lokal und international verhandelt werden, und in dieser Funktion unterstützt das ifa auch solche in Südkorea. Zuletzt die 13. Gwangju Biennale: Minds Rising, Spirits Tuning. Das ifa eröffnet so ein „Fenster zur Welt", für die Künstler:innen ebenso wie für die ausstellenden Institutionen, und setzt damit eine wechselseitige Reflexion in Gang. Wenn sich diese in der Regel auf einen begrenzten Kreis von Beteiligten beschränkt, so multiplizieren sich doch wie in einem Schneeball-System die Effekte: Künstler:innen – und Institutionen – knüpfen neue Netzwerke, gewinnen neue Erfahrungen, entwickeln neue Ideen, die sie wiederum an anderen Orten vorstellen. Der Austausch von teils unterschiedlichen Wertesystemen zwischen Künstler:innen und Publikum erweitert das Bewusstsein für andere Lebensrealitäten. Die oft kritische Auseinandersetzung mit sozialen und politischen Ungerechtigkeiten deckt Themen auf, die sonst verborgen geblieben wären.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findet sich auch in der Arbeit des Goethe-Instituts in Südkorea wieder. Jedes Jahr wird, so die Programmleiterin Melanie Bono, mindestens ein Projekt zu diesen Themen veranstaltet. 2021 war das „Borderline", eine dokufiktionale Theater-Koproduktion. Deutsche und koreanische Schauspieler*innen erzählen darin Geschichten von Flucht und Ankunft, von Trennung und Wiedervereinigung, und stellen die Frage, was Integration bedeutet. Entstanden ist das Stück nach mehrjährigen Recherchen

des Theaterkritikers und Autors Jürgen Berger in Deutschland, Thailand und Korea. In Zusammenarbeit mit der koreanischen Theatergruppe „Creative VaQi" und deren mehrfach ausgezeichnetem Regisseur Kyungsung Lee entstand das Stück während mehrerer Workshops.
Throwback89 ist ein Online-Projekt, das vom NDR für Instagram entwickelt wurde und das das Goethe-Institut für ein koreanisches Publikum adaptiert hat. Was wäre, wenn es Instagram schon 1989 gegeben hätte? „Throwback89" erzählt in Instagram-Stories die Geschichte der (fiktiven) Nora Sommerfeld, einer Schülerin aus Rostock, in den letzten Tagen vor dem Mauerfall. Das ist ein gutes Beispiel dafür, wie Inhalte aus beiden Ländern ausgetauscht werden und in den doch ähnlichen Kontexten funktionieren können.

Teilung in der Kunst und Kultur und im Kulturaustausch

Auch Projekte, die nicht im engeren Sinne von den Organisationen der Kulturbeziehungen durchgeführt werden, widmen sich den Themenkomplexen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Seit 2012 beschäftigt sich auch das Real DMZ Project[10] damit, Möglichkeiten für eine neue Zukunft für Nord- und Südkorea aus künstlerischer Perspektive aufzuzeigen und lädt Künstlerinnen und Künstler zu Residenzen nach Cheorwon in der Nähe der DMZ ein. Es gibt zudem mehrere Festivals und Residenzen, die das Wort DMZ im Titel führen, z.B. das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ie Busan Biennale hat sich – übrigens kuratiert von dem Deutschen Jörg Heiser, von Cristina Ricupero und Gahee Park aus Seoul – 2018 den Titel „Divided we stand" gegeben, während zeitgleich in Gwangju „Imagined Borders" das Thema war, was zeigt, wie stark das Thema weiterhin bewegt und internationale Resonanz erfährt. Grenzen und Grenzüberschreitungen sind auch weltweit immer wieder Thema in der Kunst. Kunst kann politisch sein, und zeigt auf andere – kreative oder verstörende – Art, welche Möglichkeiten sich Gesellschaften für ihre Zukünfte vorstellen können.

Gleich, und doch nicht gleich: Wiedervereinigung im Kulturaustausch

Dies tut Henrike Naumann (*1984), die zu den wenigen Künstlerinnen in Deutschland gehört, die sich mit der Problematik der Teilung und den beiden Deutschlands beschäftigen und damit internationale Anknüpfungspunkte finden. In „PROTO NATION", eine Arbeit, die sie für die 11. Seoul Mediacity Biennale 2021 entwickelt hat und die vom ifa gefördert wurde, findet sie für die Situation zwischen Nord- und Südkorea folgendes Bild: Schuhpaare. Gleich, und doch nicht gleich.
Auf den ersten Blick sieht die schwarz-weiße Fläche im minimalistischen Stil mit Pumps und Stiefeln auf Verkaufsständern aus wie ein echtes Schuhgeschäft. Bei genauerem

[10] http://www.realdmz.org

Hinsehen fällt jedoch auf, dass viele der Schuhe schwer anzuziehen sind, da ein Paar Pumps Salz- und Pfefferstreuer aus Keramik als Absatz hat und ein anderes Paar mit einem übergroßen Gürtel zusammengebunden ist. Die Stücke mögen Kunstliebhaber an frühe surrealistische Werke erinnern, die durch unerwartete Kombinationen von Objekten das Unheimliche erzeugten. Aber im Gegensatz zu diesen Werken hat „PROTO NATION" gesellschaftspolitische Konnotationen, wie ein Video in der „Boutique" andeutet. Das Video im stereotypen Format von Modewerbung zeigt Bilder von Mode der nordkoreanischen Elite zusammen mit Texten wie "ARDUOUS MARCH," "ETHNIC NATIONALISM" und "KOREAN WAVE."

Der „beschwerliche Marsch" bezieht sich auf eine Hungersnot in Nordkorea in den 1990er Jahren, während „ethnischer Nationalismus" die Ideologie hinter dem nordkoreanischen Regime und vielen südkoreanischen Politikern der derzeitigen Regierung ist, die argumentieren, dass die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das heiligste Ziel des koreanischen Volkes ist. Die „Schuhe", die durch das Zusammenfügen unterschiedlicher Materialien hergestellt werden, könnten „eine Visualisierung des Treffens oder der erzwungenen Vereinigung unvereinbarer Partner" sein, heißt es im Leitfaden der Biennale. Moon So-Young kommt im Joongang Daily zu folgendem Fazit über Henrike Naumanns Arbeit: „Daher könnte „PROTO NATION" die Meinung jüngerer Südkoreaner widerspiegeln, die wegen der großen Unterschiede zwischen ihnen skeptisch und besorgt über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Koreas sind. Aber gleichzeitig könnte die Arbeit die Möglichkeit unerwarteter und seltsamer Schönheit suggerieren, die durch die Wiedervereinigung entstehen könnte."[11]

Auch in Südkorea beschäftigen sich Künstler:innen mit der politischen Situation des geteilten Landes. 2018 entwickelte Minouk Lim, die auch für das „Real DMZ"-Projekt verantwortlich ist, für die Busan Biennale „It's a Name I Gave Myself". Die Arbeit ist eine Installation, die das Set eines Fernsehstudios voller kryptischer Erinnerungsstücke und Mannequins nachahmt. Auf dem Bildschirm laufen in Dauerschleife herzzerreißende Clips aus einer Fernsehsendung aus den 1980er Jahren, in denen Koreaner:innen zu sehen sind, die während des Koreakrieges als kleine Kinder von ihren Familien getrennt wurden. Sie halten Holztafeln mit einer Nummer in der Hand und haben weniger als eine Minute Zeit, um Fragen des Moderators zu beantworten, die Hinweise geben könnten, um ihre lange verlorene Familie zu finden. Die meisten wissen nicht ihr genaues Alter, ihren Namen oder viel über ihre Familie und antworten mit der Art von vagen Erinnerungen an Details, die einem Kind im Gedächtnis bleiben. Die endlos vorgetragenen Videos spiegeln den Dauermodus der derzeitigen Situation wider.

Kritische Reflektion der derzeitigen Situation wie in den Arbeiten von Henrike Naumann

[11]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2021/09/23/culture/artsDesign/Seoul-Mediacity-Biennale-Yung-Ma-SeMA/20210923171619538.html.
https://vimeo.com/641205313

und Minouk Lim, imaginierte Lebensrealitäten in Nordkorea – dies alles bewegt etwas im Bewusstsein der Südkoreaner:innen. Zugang zu nordkoreanischer Kunst und Kultur hingegen ist stark reglementiert; Kenntnis davon und Einordnungswissen ist aber ebenso wichtig. Sonst passiert, was wir aus kolonialen Kontexte kennen: Es führt zu seiner Setzung dieser Kunst als „anders", als „inadäquat", als weniger wertvoll. Daher ist es begrüßenswert, dass nordkoreanische Kunst - Chosonhwa-Malerei, gewaltige Tuschemalereien auf Reispapier, wilde Tiere, monumentale Schlachten, Staudammbaustellen mit dramatischen Fluchten und euphorisierender Lichtgestaltung - auf der Gwangju Biennale von 2018 ausgestellt wurde. Mit Mansudae hat Nordkorea übrigens ein Business-Modell, z.B. in den Ländern Afrikas monumentale Statuten zu produzieren.[12]

Gedanken zur „Wiedervereinigung"

Wiedervereinigung – ist das das richtige Wort? Vielleicht führt der Begriff in die Irre und es braucht einen realistischeren Blick darauf, wie zwei Teile eines Volkes, das über Sprache, Kultur und eine Jahrhunderte alte Geschichte verbunden ist, wieder zusammenkommen können. Es stellt sich bei all den Debatten die Frage, aus welcher Sicht Südkoreaner:innen über „Wiedervereinigung" sprechen. Denken sie, dass es später in Nordkorea genauso sein soll wie hier? Augenscheinlich hat der Norden eindeutig das weniger attraktive System und damit Leben. Es gibt auch andere Modelle, wie sich die Situation auflösen könnte, z.B. die Vorstellungen von „Wiedervereinigung durch Absorption" (흡수통일), oder von einem friedlichen Miteinander. Manche sprechen auch davon, dass nur durch ein „Wunder" (Ralph Wrobel)[13] eine Situation wie 1989 in Deutschland entstehen kann. Manche Menschen benutzen auch für die Vorgänge in Deutschland den Begriff „Angliederung". Dadurch könnte eine geeignetere Folie dafür entstehen, vorausschauende Lernerfahrungen aus dem deutschen Kontext zu übertragen. Im Bereich der Kunst und Kultur fallen dazu folgende Dinge ein. Die Prinzipien der EU-Strategie zum Kulturaustausch sind hier leitend.

- **Einanderzuhören: Erfahrungen von beiden Seiten sind gleichwertig**. Südkorea sollte noch besser über Nordkorea informiert sein, in allen Gebieten, gerade in der Kultur. Das ist die Grundlage dafür, dass gemeinsam an der Zukunft gearbeitet werden kann. Es ist natürlich so, dass in „Crash Landing On You" auch schiefe Vorstellungen von Nordkorea geweckt werden. Vielleicht ist das ein Anreiz, klug in Südkorea daran zu arbeiten, dass ein realistischeres Bild von Nordkorea herrscht. Und über zivil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dafür zu sorgen, dass auf

[12] https://m.faz.net/aktuell/feuilleton/kunst-und-architektur/kunst-und-rechtsradikalismus-15790012.amp.html ttp://www.realdmz.orgeser Film von Nils Clauss von 2013 gibt einen guten Einblick in das gemeinsame Musizieren zwischen Nordkoreaner:innen und Deutschen: https://vimeo.com/55834030.

[13] In Kultur Korea, Sonderausgabe 2020, S. 23.

informellen Wegen andere Bilder von Südkorea nach Nordkorea kommen. Als ich an 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meine Masterarbeit über den Dichter Yisang (1910-1937) geschrieben haben, waren aus Nordkorea stammende Autor:innen bzw. solche, die bestimmte politische Einstellungen hatten, nur mit Anmeldung und nur in Präsenz einsehbar. Solche Hürden selbst an der Universität machen es unnötig schwer, ein differenziertes Bild auf Nordkorea zu gewinnen. Das kann es heute beeinflussen, und es kann informell dafür sorgen, dass mehr und mehr Informationen nach Nordkorea kommen. So hat es die Bundesregierung auch getan – Wissen in die DDR zu bringen war aktiver Teil von Politik. Auch wenn beide Koreas derzeit keine Bürgerinnen und Bürger miteinander in Kontakt bringen, sollte dies das Ziel sein. Südkorea könnte als starker Partner den ersten Schritt machen und mutiger sein. Bei langsamer oder schneller Öffnung wird Nordkorea automatisch und sehr schnell von Südkorea lernen, aber auch das sollte klug begleitet werden.

• **Voneinanderlernen und gemeinsamer Aufbau von Kapazitäten**. Wichtig ist, gleichberechtigt Menschen aus dem Norden und Süden darüber entscheiden zu lassen, was mit Institutionen, Museen, Sammlungen, Gebäuden, Kinos etc. geschieht. Dazu gehört wahrscheinlich in einem ersten Schritt Geduld und Zuhören, in einem zweiten, Nordkoreaner:innen noch besser zu ermächtigen. Eine der schmerzhaftesten Erfahrungen für ostsozialisierte Menschen war und ist die geschehene Abwertung. Nordkoreanische Kunst und Kultur sollte daher nicht als weniger wert verurteilt werden, sondern ein differenzierter, kritischer und wertschätzender Blick den Umgang damit bestimmen. Internationale Expertise könnte helfen, um mit gesunder Distanz und Expertise von ähnlichen Kontexten zu lernen. Ein Beispiel: Das ifa kuratiert und produziert seit über 50 Jahren Tourneeausstellungen für Westdeutschland. 1991 wurde mit dem Einigungsvertrag vereinbart, dass es auch die übrigen Bestände des ZfK übernehmen sollte, des Zentrums für Kunstausstellungen, das für die DDR Tourneeausstellungen v.a. in den Bruderländern organisiert hat. Diese Institution existiert nun nicht mehr. Mit dem ifa gibt es nun eine Institution, die qua Übernahme der Sammlung das ZfK miterinnern kann. Vielen anderen Institutionen, wie dem Herder Institut der DDR, geht das nicht so. Allerdings hat sich seit 1991, also 30 Jahre lang, niemand für diese Geschichte und die ZfK-Sammlung interessiert. Die mehr als 11.000 Arbeiten, v.a. Papierarbeiten, lagern in unserem Depot in der Nähe von Stuttgart. Erst jetzt kommt eine neue Generation von Künstlern, Wissenschaftlerinnen und KuratorInnen, die sich für ostdeutsche Kunst interessiert – und differenziert auf diese Arbeiten blickt und mit ihnen arbeiten will. Denn auch ostdeutsche Kuratoren haben in der Vergangenheit abschätzig auf diese „Staatskunst" geschaut. Im Fall

einer Annäherung gehört folgende Erfahrung zu denen, die im koreanischen Kontext unbedingt vorausschauend vermieden werden sollte: Nämlich dass der Blick der dominanten Partei, in dem Fall Westdeutschlands, von Ostdeutschen absorbiert und unreflektiert zum eigenen gemacht wird. Diesen Blick hat Frantz Fanon im Hinblick auf die Auswirkungen von Kolonialherrschaft herausgearbeitet, und das Prinzip gilt auch hier. Das gelingt, in dem man die Kenntnis übereinander aktiv fördert, die Machtunterschiede offen benennt, und im Falle eine Annäherung über die Zukunft von Institutionen gemeinsam entscheidet und dabei beide Wahrnehmungen und Erfahrungen ernst nimmt.

- Bottom-up principle: Entscheidend sollte sein, was für Nordkorea und Nordkoreaner:innen gut ist. Und weniger das, was in Seoul, Beijing oder Washington als richtig erachtet wird.
- Mitgestaltung: Das System in Nordkorea ist in der heutigen Welt nicht kompetitiv. Einstellungen, Skillsets, Kenntnisse unterscheiden sich massiv von dem, was in der südkoreanischen Lebens- und Wirtschaftswelt gefragt ist. Es muss also darum gehen, in der Haltung widerzuspiegeln, dass ein gemeinsames Hinübergehen in die neue Situation gelingt. Benachteiligung der Nordkoreaner:innen – diese ist real – sollten durch gute Bildungschancen für alle Altersklassen kompensiert werden. Nordkorea wird schnell südkoreanische Gegenwart haben, weil Nordkorea nicht kompetitiv ist. Nordkorea wird v.a. kompensieren und sich das Leben mit Produkten erleichtern, wonach eine innere Leere eintreten könnte, wenn man den Angleichungsprozess nicht langsam steuert. Auch Kenntnisse über zivilgesellschaftliches Engagement, Demokratie sind wichtig. Empowerment dazu, selbst aktive BürgerInnen zu werden und eine Zivilgesellschaft aufzubauen. Hier kann man auf die Erfahrungen von Organisationen zurückgreifen, die in fragilen staatlichen Kontexten und in post-kolonial geprägten Ländern oder failed states tätig waren. Die Erfahrungen lassen sich aus anderen Kontexten übertragen, auch hier ist also eine Weitung des Blicks, ein Hinzuziehen internationaler Perspektiven von Vorteil. Südkoreaner:innen können sich aktiv fragen, welche Aspekte nordkoreanischer Gesellschaftsgestaltung wert sind, übertragen zu werden. Solche Prozesse können von Regierungsseite gestaltet werden, ähnlich wie di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üdafrika sehr schnell nach Ende der Apartheid eine Aufarbeitung dieser Zeit vorgenommen hat, mit breiter Beteiligung der Zivilgesellschaft auf allen Seiten.

Henrike Naumanns Arbeit auf der 2018er Busan Biennale beinhaltet einen „Traueraltar Deutsche Einheit“. Er besteht aus einem wuchtigen Schrank und mehreren Deko-Objekten wie Baseballschlägern und zwei lila-weiß gescheckten Trauerkränzen aus Plüsch, auf deren Schleifen steht: „Der Deutschen Einheit“. Hoffen wir, dass es für die koreanische Situation keine Künstlerin braucht, die 30 Jahre später den Zustand der Wiedervereinigung beklagt. Sondern dass sich die Vision bewahrheitet, die sie für Korea entwickelt hat: Gleiches im Ungleichen, und „unerwartete und seltsame Schönheit“.

NOTE

SESSION 5 I **Deutsch-Koreanischer Kulturaustausch zu Wiedervereinigungsfragen**

SESSION 5-2.

(Kr) Interkoreanischer Kulturaustausch

Park Carey, Professor am National Institute of Unification Education

Innerkoreanischer Kulturaustausch

I. Die Bedeutung d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Die Frage müsste wahrscheinlich anders gestellt werden: Warum sollte ein Kulturaustausch stattfinden?
Diese Frage ist mit der Frage verknüpft, wie eine wahre Einheit erreicht wird. Die Vereinigung kann uns wirtschaftliche Vorteile bringen. Aber wenn zwei Gruppen, die sich seit mehr als 70 Jahren feindlich gegenüberstehen, vereinigt werden, können die daraus resultierenden sozialen Konflikte nicht allein durch wirtschaftlichen Gewinn gelöst werden.
Die Lösung sozialer Konflikte wird möglich sein, wenn die Integration sowohl der Herzen des Nordens als auch des Südens gelingt. Wie kann eine Integration der Herzen erreicht werden? Ein Kulturaustausch sollte durchgeführt werden, um die Integration der Herzen vorzubereiten.
Kultur ist bereits intrinsisch konservativ ausgeprägt. Das liegt daran, dass Menschen es gewohnt sind, das Fremde durch die eigene Brille zu betrachten. Die meisten Menschen neigen dazu, andere Kulturen ausschließlich vor dem Hintergrund ihrer eigenen Kultur zu akzeptieren. Daher sind in der Kultur Erfahrung und Verständnis wichtiger als Werte. Der geeignetste Weg, kulturelle Vorurteile zu beseitigen, besteht darin, die kulturellen Kontaktflächen zu erweitern. Die psychologische und kulturelle Heterogenität der Bewohner Nord- und Südkoreas wird nach der Wiedervereinigung zu kulturellen Konflikten führen. Um dies zu lindern und eine Kultur der demokratischen Kommunikation zu schaffen, ist es wichtig, die Alltagskultur, Psychologie und Wahrnehmungsweise der Nord- und Südkoreaner zu erfahren und zu verstehen. Zu diesem Zweck ist die Wiederbelebung d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erforderlich.

II. Umstrukturierung des Systems

Eine Kontinuität des kulturellen Austauschs ist von größter Bedeutung, um die ethnische Homogenität wiederherzustellen, um die kulturelle Vielfalt sowie die Möglichkeit ihrer Koexistenz zu erfahren und um gegenseitiges Verständnis sowie Vertrauen aufzubauen. Hervorzuheben ist, dass es sich bei den meisten durchgeführten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en um einmalige Eventprojekte handelte. Je länger der Austausch

unterbrochen wird, desto wertvoller sind solche Treffen, wobei man darüber nachdenken sollte, ob diese Treffen in Wirklichkeit bei politischen Ereignissen nicht vielmehr als eine Dekoration anzusehen sind. Da der Nord-Süd-Kulturaustausch je nach Situation der Nord-Süd-Beziehungen wiederholt unterbrochen oder als nur einmal stattfindende Verstaltung in einzelnen Bereichen durchgeführt wurde, kann davon ausgegangen werden, dass dies nicht ausreicht, um eine nachhaltige Basis für die Zusammenarbeit im kulturellen Austausch aufzubauen. Zudem legte meist die Regierung die Richtlinien für den privaten Austausch fest, wodurch in der Entscheidungsstruktur die Felderfahrungen und Forderungen der am Austausch beteiligten privaten Organisationen nicht angemessen widergespiegelt wurde. Da außerdem private Organisationen überwiegend separat agierten, war der institutionelle Spielraum für gegenseitige Kommunikation und Beratung begrenzt.

Für eine bessere Kontinuität d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sollte man sich zunächst darum bemühen, diese strukturellen Einschränkungen innerhalb der Republik Korea systemisch zu verbessern. Zu diesem Zweck müssen wir zunächst eine soziale und kulturelle Nord-Süd-Governance etablieren. Dafür sollte der Privatsektor als öffentlich-privates Beratungsgremium politische Maßnahmen vorschlagen. Die Regierung sollte ebenfalls einen öffentlich-privaten Raum für Kommunikation schaffen, um Richtlinien zur Ausrichtung des sozialen und kulturellen Austauschs zu diskutieren und zu kommunizieren. Dadurch wird es notwendig sein, Plattformen für verschiedene Bereiche zu installieren und von Zeit zu Zeit Treffen abzuhalten, um die gegenseitige Kommunikation und den Informationsaustausch zwischen den Betreibern in den relevanten Bereichen zu fördern.

Eine solche soziale und kulturelle Nord-Süd-Governance sollte auf ein Governance-System ausgeweitet werden, das öffentliche Stellen wie Gemeinden, Bildungsorganisationen sowie lokale Kulturorganisationen, Medien und Kulturunternehmen umfasst.

Auf dieser Grundlage wird es notwendig sein, eine gemeinsame Organisation zwischen dem Norden und dem Süden zu bilden, einen Rahmen gemeinsamer Bezugspunkte zu schaffen und sich gegenseitig rechtliche Befugnisse zu übertragen, damit alle Austausche nicht nur vorübergehend, sondern kontinuierlich stattfinden. An dieser Stelle soll auf das Format des „Gemeinsames Komitees für innerkoreanische soziale und kulturelle Zusammenarbeit“ verwiesen werden, das nach dem Nord-Süd-Gipfel 2007 ins Leben berufen wurde. Wir sollten nach und nach die Diskussionskanäle in jedem Bereich klären sowie institutionalisieren und ein soziokulturelles Austauschabkommen abschließen sowie einen Nord-Süd-Unterausschuss für soziale und kulturelle Zusammenarbeit einrichten.

III.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Homogenität durch Öffnung und Kommunikation

Es müssen Wege gefunden werden, um Kooperationsprojekte wie das Projekt „das große Wörterbuch Gyeoremal" sowie das Ausgrabungsprojekt Gaeseong Manwoldae wieder aufzunehmen und um eine regelmäßige Zusammenarbeit zu fördern. Im Falle des Projekts „das große Wörterbuch Gyeoremal" handelt es sich um ein Projekt zur Wiederherstellung der sprachlichen Homogenität, aber es umfasst auch die Sprachen, die von Expats gesprochen werden und die in Ländern wie Südkorea, Nordkorea, China, Japan, Zentralasien usw. leben. Selbst unter den Expats, die jeweils näher zu Südkorea oder Nordkorea stehen, entwickelten sich die Sprachen anders, und dieses Wörterbuch umfasst auch solche Unterschiede. Der Zweck besteht nicht darin, das koreanische Volk, einschließlich der Koreaner in Übersee, ein und demselben Sprachsystem zuzuordnen. Vielmehr versucht dieses Wörterbuch, alle Aspekte der unterschiedlichen Lebensweisen des koreanischen Volkes in verschiedenen Ländern zu respektieren, die in den veränderten Sprachen widergespiegelt werden.
Die durch den kulturellen Austausch angestrebte Wiederherstellung der „ethnischen Homogenität" darf daher nicht zum Nationalismus im engeren Sinne werden, der auf einem nationalen Herkunftsprinzip basiert. Vielmehr sollte der kulturelle Austausch darauf abzielen, die Homogenität zwischen den beiden Koreas als nationale Kultur wiederherzustellen, die mit der aktuellen Weltkultur kommuniziert.

1. Offene Traditionen im Alltagsleben und Austausch von immateriellem Kulturerbe

In diesem Zusammenhang ist der innerkoreanische Kulturaustausch im Bereich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sehr wertvoll. Die UNESCO definiert immaterielles Kulturerbe wie folgt: „Immaterielles Kulturerbe, das von Generation zu Generation weitergegeben wird, wird ständig neu geschaffen, wenn Gemeinschaften und Gruppen auf ihre Umwelt reagieren und mit Natur und Geschichte interagieren, wodurch die kulturelle Vielfalt und der Respekt vor der menschlichen Kreativität gefördert werden, indem ihr eine Identität und Kontinuität verliehen wird." Mit anderen Worten wird betont, dass das Wesen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darin besteht, Identität und Kontinuität zu bewahren, während es kontinuierlich neu geschaffen und über Generationen weitergegeben wird.
Der Blickwinkel der Koexistenz kultureller Vielfalt ist wichtig, und immaterielles Kulturerbe sollte prozessorientiert identifiziert werden. Damit ein solches immaterielles Kulturerbe kontinuierlich von Generation zu Generation weitergegeben werden kann, muss es unter Beibehaltung seiner typischen Form kreativ vererbt und weiterentwickelt

werden. Bei Kimchi beispielsweise ist es wichtig, dass die „Kimchi-Zubereitung“als immaterielles Kulturerbe geschützt und gefördert wird, weil die Menschen in ihrem Alltag immer noch Kimchi essen. Damit die Menschen Kimchi weiterhin lieben können, muss es aus Zutaten hergestellt werden, die in den Gebieten, in denen die Menschen von heute leben, verfügbar sind, um ihrem Geschmack zu entsprechen. Dabei können sich der Geschmack von Kimchi und die Zutaten verändern. Unter Berücksichtigung dieses UNESCO-Standpunktes kann man davon ausgehen, dass – selbst wenn das immaterielle Kulturerbe des Nordens und des Südens von der gleichen Tradition stammen – diese Tradition sich nach der Teilung des Landes im Prozess unterschiedlicher Systeme, Ideologien und ästhetischer Ansichten in grundsätzlich voneinander abweichende Richtungen entwickeln kann und dass beide Traditionen wertvoll sind.

Die Traditionen im Süden besitzen ihre Legitimität – ebenso wie die im Norden in etwas anderer Form überlieferten Traditionen. Sie als „falsche“ Tradition zu bezeichen, wäre nicht richtig. Denn die Traditionen jeder Gesellschaft existieren neben einer Vielzahl anderer Kulturen und werden, von diesen wiederum beeinflusst, in etwas abgewandelter Form weitergegeben. Diese Erkenntnis ist insofern wertvoll, weil es sich um einen Prozess der Wiederherstellung der kulturellen Homogenität zwischen den beiden Koreas im Kontext der Koexistenz kultureller Vielfalt handelt.

In gleicher Weise ist auch die Betonung der „Volksstraße“ als Basis für ein „nicht-materielles“ Kulturerbe bemerkenswert, die Kim Jong-un kürzlich betont hat. Der Bau der „Volksstraße“ begann während der Ära von Kim Jong-il. So ließ Kim Jong-il in der Stadt Sariwon eine „Volksstraße“ errichten. Er verlegte auch die Dolmengräber der Gojoseon-Zeit dorthin und stellte Modelle des materiellen und kulturellen Erbes wie das Cheomseongdae-Observatorium aus Gyeongju aus. Darüber hinaus wurden Orte bereitgestellt, an denen Volksspiele im Zusammenhang mit immateriellem Kulturerbe wie Yutnori, Schach und Baduk gespielt werden können. Es wurden auch Restaurants geöffnet, die sich auf Volksgerichte spezialisiert haben, wie z. B. Chaltteok-Jip und Jijim-Jip, damit an diesen Orten die Menschen die Kultur direkt erleben können. Die Tatsache, dass sich das Cheomseongdae-Observatorium eigentlich in Gyeongju, Südkorea, befindet, zeigt das Potenzial, wie dieser ein Ort für den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 werden kann.

Hinsichtlich der „Volksstraße“ weist auch Kim Jong-un Pjöngjang an, mehrere Volksstraßen in der Hauptstadt zu planen und gleichzeitig provinzspezifische Straßen zu schaffen, die das immaterielle kulturelle Erbe, das für jede Provinz charakteristisch ist, mit lokalen Merkmalen verbinden. Darüber hinaus werden in Nordkorea ein „Nationaler Kochwettbewerb mit Hundefleisch“, eine „Nationale Kimchi-Ausstellung“, eine „Nationale

Volkslebensmittelausstellung", eine „Nationale Joseon-Bekleidungsausstellung", ein „Nationales Baduk-Liebhaber-Match", ein „Nationaler Ssireum-Wettbewerb" und ein „Dongji-Brei-Wettbewerb" jährlich abgehalten, um auf diese Weise Nationalismus und Patriotismus aktiv zu fördern.
Im Zusammenhang mit dieser Reihe von Maßnahmen können wir einen Nord-Süd-Kulturaustauschplan für das „immaterielle (nicht-materielle) Kulturerbe" vorschlagen.

1). Gründung der DMZ-Volksstraße und des Zentrums für nord- und südkoreanisches immaterielles Kulturerbe"
Das immaterielle Kulturerbe, das derzeit von Meistern in Nord- und Südkorea weitergegeben wird, weist Merkmale auf, die mit dem Tod der Meister verschwinden können. Infolgedessen werden Traditionen, die in Südkorea verschwunden sind, manchmal in Nordkorea weitergegeben und umgekehrt. Im Falle Südkoreas gibt es aus wirtschaftlichen Gründen keine Lehrlinge, die wichtige handwerkliche Fähigkeiten erlernen wollen, wodurch das immaterielle Erbe vom Verschwinden bedroht ist.
Durch die gegenseitige Interaktion, mit der das südkoreanische immaterielle Kulturerbe an nordkoreanische Lehrlinge und das nordkoreanische nicht-materielle Kulturerbe an südkoreanische Lehrlinge weitergegeben werden, beabsichtigen wir, einen Raum zu schaffen, um die Traditionen der beiden Koreas miteinander zu teilen und so die nationale Gemeinschaft durch Kultur wiederherzustellen.
Dabei können wir das Konzept der „Volksstraße" aus Nordkorea und des „Volksdorfes" aus Südkorea erproben. Da Nordkorea derzeit jede Provinz ermutigt, eine „Volksstraße" mit regionalen Merkmalen zu schaffen, kann auch eine „DMZ-Volksstraße" im Rahmen dieser Politik vorgeschlagen werden.
Die „Volksstraßen", die derzeit in Nordkorea gebaut werden, umfassen verschiedene Arten von immateriellem Kulturerbe aus Nordkorea. Auf der Volksstraße wird das immaterielle Kulturerbe in verschiedenen Bereichen – z.B. Essen, Spirituosen, Volksspiele, Kunsthandwerk und koreanische Medizin wie Moxibustion, Akupunktur und Massage – von den Volksmeistern selbst angeboten. Baut man die „Volksstraße" weiter aus, kann sie zu einem Ort werden, an dem Menschen aus In- und Ausland die Kultur unmittelbar erleben.
Und mit der Errichtung eines „Zentrums für immaterielles Kulturerbe" wie das „Korea Intangible Heritage Center" in Jeonju auf der Volksstraße kann ein Ort für Ausstellungen, Forschung, Untersuchung und Archivierung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entstehen.

2) Projekt zur Einrichtung des Archivs für nord- und sürdkoreanisches immaterielles

Kulturerbe (durch das UNESCO Asien-Pazifik-Zentrum für immaterielles Kulturerbe)
In einer Situation, in der die politische Situation zwischen dem Norden und dem Süden instabil ist, wird das Nord-Süd-Kulturaustausch- und Kooperationsprojekt durch internationale Organisationen im Kulturbereich eine sehr bedeutende Wirkung erhalten. Im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projekt zum immateriellen Kulturerbe geht es in erster Linie darum, das immaterielle Kulturerbe Nord- und Südkoreas zu erfassen.
Das Büro des Asien-Pazifik-Zentrums für immaterielles Kulturerbe der UNESCO, das die Region Asien-Pazifik umfasst, kann in Korea eingerichtet werden. Und mit dessen Unterstützung kann ein Archiv des innerkoreanischen immateriellen Kulturerbes eingerichtet werden. Indem wir einen Verhandlungstisch für die kontinuierliche Konsultation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zwischen dem Norden und dem Süden unter dem Dach internationaler Organisationen bereitstellen, schaffen wir ein stabiles System, das nicht von Veränderungen der politischen Situation betroffen ist.
Durch das Asien-Pazifik-Zentrum für immaterielles Kulturerbe können wir den Schutz und die Katalogisierung des immateriellen Erbes Nordkoreas unterstützen, um den Status quo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das in Nordkorea existiert, zu schützen und zu verstehen. Dies wird als eine Grundlage für eine systematische Vorbereitung auf die Wiedervereinigung dienen. Wie bereits erwähnt, zeigt Nordkorea jetzt ein politisches Interesse am Aufbau von Archiven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für die Bearbeitung als Datenbasis, und die nordkoreanische Betonung der „Internationalisierung" bestätigt, dass das Land an Beziehungen zu internationalen Organisationen, insbesondere der UNESCO, sehr interessiert ist.
Auf dieser Grundlage schlagen wir dieses Unternehmen vor. Das Projekt zum Austausch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Nord- und Südkoreas sollte systematisch damit beginnen, dass der Norden und der Süden die Liste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des jeweils anderen durch die Einrichtung von Archiven überprüfen.
Wie sich derzeit durch mehrere Fälle gezeigt hat, wurde bestätigt, dass „Seodo Minyo (West-Volkslied)" oder „Namdo Minyo (Süd-Volkslied)", die im Norden und Süden bewahrt wurden, in vielen verschiedenen Formen weitergegeben wurden, obwohl der Name derselbe ist. Während es für den Norden und den Süden wichtig ist, Listen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miteinander auszutauschen, besteht daher auch eine sehr dringende Notwendigkeit, sich den Inhalten zu nähern, indem sie die Realität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genau begutachten und untersuchen. Dementsprechend wird eine Archivierung benötigt, die verschiedene Medien wie Video- und Fotomaterial enthalten.
Der Austausch von Informationen der Archive, die bereits im Norden und Süden etabliert

sind, hat den Vorteil, Informationen auch ohne persönlichen Kontakt austauschen zu können, sodass man von externen Umständen wie z.B. Katastrophensituationen wie COVID-19 geringer betroffen ist. Durch dieses Projekt, das gemeinsam durch die Vermittlung des Asien-Pazifik-Zentrums ein Archiv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des Nordens und des Südens aufbaut, werden wir in der Lage sein, die internationale Perspektive des Verständnisses des immateriellen Kulturerbes des Nordens und des Südens als gemeinsames Gut Ostasiens wiederherzustellen. Basierend auf dem Aufbau von Vertrauen durch diesen Prozess erwarten wir, dass wir in Zukunft in der Lage sein werden, die Einrichtung eines Zentrums für immaterielles Kulturerbe voranzutreiben, das gemeinsam von Nord und Süd geleitet wird.

IV. Kulturaustausch über Auslandsbasen

1. Kulturaustausch durch neutrale Basen

Man könnte die Kultur Nord- und Südkoreas durch die Einrichtung eines „Museums der koreanischen Halbinsel" in einem neutralen Land und durch den Austausch in einem Drittland vorantreiben. Da die K-Kultur globale Aufmerksamkeit erhält, könnte diese einen signifikanten Effekt zeigen.

In einem Land oder einer Stadt, in der Nordkorea eine Botschaft hat, wie beispielsweise in Deutschland, könnte die Idee, an diesen Standorten eine Grundlage für die Fortsetzung d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mit südkoreanischer Unterstützung zu schaffen, ebenfalls wirksam sein. Die Art und Weise, wie die Freie Universität Berlin für die Erforschung traditioneller koreanischer Seowons (Lesehalle) die Feldforschung in Nordkorea systematisch ausweitete, sowie die Programme, in denen nordkoreanische Studenten die Freie Universität besuchten, sind gute Beispiele dafür. Wie im Fall der Freien Universität, wenn Studenten aus Südkorea, Nordkorea, Deutschland und anderen Nationalitäten ermutigt werden, sich auszutauschen und die koreanische Kultur gemeinsam zu studieren, wird es möglich sein, eine Offenheit und Dynamik zu schaffen, wodurch die innerkoreanische Kulturgemeinschaft wiederhergestellt und zusammen mit den jungen Menschen aus aller Welt entwickelt wird.

Damit dieser Prozess nachhaltig sein kann, wird auch ein System der engen Kommunikation und Zusammenarbeit zwischen den Regierungen der betreffenden Länder wie der Republik Korea und Deutschland sehr wichtig sein.

2. Kulturaustausch mit ausländischen Museen: „Pavillon Korea"

Der Austausch zwischen immateriellem und materiellem Kulturerbe ist natürlich

auch wichtig. Seit der Ära von Kim Il-sung hat Nordkorea die traditionelle Kultur aus hierarchischer Sicht beurteilt und das Prinzip aufgestellt, dass die Kultur und Kunst der feudalen herrschenden Klasse ausgerottet werden muss und dass die Kultur und Kunst des Volkes belebt werden sollen. Diese Ansicht wurde seit geraumer Zeit vertreten. Aber mit fortschreitender Reform- und Öffnungspolitik der Sowjetunion durch Gorbatschow wurde der Zusammenbruch der kommunistischen Regimes in Osteuropa eingeläutet. Kim Jong-il, der dies beobachtete, schaffte die Politik der Interpretation traditioneller Kultur aus hierarchischer Sicht unter dem Motto „Unsere Nation zuerst" ab. Gleichzeitig stellte er die Kultur und Kunst der feudalen herrschenden Klasse wieder her, die er auszurotten versucht hatte. Zur gleichen Zeit wurden unter den zeitgenössischen Künstlern Nordkoreas der 1950er bis Anfang 1960er Jahre wie Moon In-hwa, die versuchten, die Künste der feudalen herrschenden Klasse auf moderne Weise zu schaffen, in den 1990er Jahren wieder eingestellt. Diese Künstler sind inzwischen verstorben, aber die Werke, die sie hinterlassen haben, werden noch heute sehr hoch bewertet.

Fazit: Die Art und Weise, wie wir die traditionelle Kultur im Norden und Süden betrachten, weist seit der Ära von Kim Jong-un kaum noch Unterschiede auf. Dementsprechend gibt es nur wenige Hindernisse, die sich aus der unterschiedlichen Ideologie im innerkoreanischen Austausch von traditioneller Kultur und Kunst ergeben. Daher sind Austauschausstellungen, wie die Ausstellung traditioneller Kulturgüter Nordkoreas, die 2008 im Nationalmuseum von Korea ausgestellt wurde, und die Aktivierung des menschlichen Austauschs zwischen einschlägigen Wissenschaftlern von unschätzbarem Wert. Darüber hinaus wird der Versuch ein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in führenden Museen im Ausland vielfältigere Wirkungen erzielen. Da die Exzellenz der K-Kultur i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bereits bekannt ist, kann man mit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das Wissen teilen, dass Nordkorea ebenfalls eine ausgezeichnete Kulturtradition besitzt. Dies kann zu der Erkenntnis führen, dass die gesamte koreanische Halbinsel über eine ausgezeichnete kulturelle Gemeinschaft verfügt.

Es ist zudem möglich, Nord-Süd-Kooperationsprojekte für das Kulturerbe über die Korea-Hallen in Museen in Übersee (68 Standorte in 24 Ländern) wie Deutsch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sowie dem British Museum in London, England, vorzuschlagen. Das Problem, mit dem diese Ausstellungshallen konfrontiert ist, besteht darin, dass es keine Kulturgüter auf Ebene eines Nationalschatzes gibt, die ausgestellt werden können, und dass es an professionellem Personal mangelt. Wir wollen diese Probleme durch den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 lösen. Indem wir Nordkoreas ausgezeichnetes

kulturelles Erbe in Museen im Ausland ausstellen, können wir Besuchern im In- und Ausland die Möglichkeit bieten, das reizvolle immaterielle Kulturerbe Nordkoreas zu sehen, das nicht nur für Südkorea, sondern auch für die internationale Gemeinschaft praktisch unzugänglich war, und somit die kulturelle Exzellenz des koreanischen Volkes und den Willen zur Wiedervereinigung sowohl intern als auch extern fördern.
Derzeit führt die koreanische Regierung ein Förderprogramm für die Entsendung von Arbeitskräften für Korea-Hallen in ausländischen Museen, wie dem „Korea Room" im British Museum, durch, das ebenso für nordkoreanische Experten angewendet werden kann. Nach der Beschaffung von Geldern können ausländische Museen nordkoreanische Experten dazu einladen, Museen in Übersee zu besuchen. Wenn nordkoreanische Kulturerbe-Spezialisten zu ausländischen Kulturaustauschprojekten entsandt werden und mittel- oder langfristig mit ausländischem Museumspersonal vor Ort zusammenarbeiten, können sie praktisches Wissen über das fortgeschrittene Museumssystem und die Erhaltung sowie Ausstellung von Relikten erlernen. Nach ihrer Rückkehr nach Nordkorea werden sie in der Lage sein, das kulturelle Erbe in ihrem eigenen Land zu bewahren, während sie gleichzeitig Bildung und Unterstützung erhalten, um eine zentrale Rolle im kulturellen Austausch in Übersee zu spielen.

V. Friedlicher Kunst- und Kulturaustausch

Der innerkoreanische Kulturaustausch muss mit dem Austausch zwischen den beiden Koreas beginnen und sich in Richtung des Austauschs mit Kulturkünstlern aus aller Welt ausdehnen, die sich nach Frieden sehnen. Durch die Solidarität mit Künstlern, die sich für den Weltfrieden einsetzen, können wir zeigen, dass Frieden und Vereinig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zum Frieden in Ostasien, im Pazifik und in der Welt beitragen. Es ist sinnvoll, dies als ein Werk der Kultur und Kunst zu schaffen und es mit den Bürgern der internationalen Gemeinschaft zu teilen. Es ist auch möglich, die an den Aktivitäten beteiligten Künstler und die Form des Kunstfestivals zu unterstützen, indem die Ergebnisse in 2 oder 3 Jahren veröffentlicht werden. Internationale Residenzprogramme können ebenfalls betrieben werden.
Es wäre auch wichtig, das Konzept des Friedens auf die gesamte Ökologie auszudehnen. Dies wird eine sinnvolle Solidarität ermöglichen, da „Solidarität" in letzter Zeit zu einem sehr wichtigen Thema für Künstler auf der ganzen Welt geworden ist, die Frieden unterstützen. Verknüpft man dies mit der in der „Bold Initiative" offenbarten Politik der „Green Détente", so ist eine Methode denkbar, bei der Künstler alle zwei bis drei Jahre gemeinsam mit den Bewohnern des angrenzenden Gebiets die Ergebnisse von

Aktivitäten rund um die DMZ bekannt geben. Wenn sich Friedenskünstler aus aller Welt am Schauplatz der Teilung versammeln, ihre Sorge um die Lösung des Teilungsproblems zeigen und ein Festival veranstalten, wird die koreanische Halbinsel zu einem öffentlichen Forum für den Frieden in der Welt. Um die Wirkung der ortsgebundene Besonderheit der DMZ zu maximieren, kann ein internationales Friedenskunstfestival in Form einer Zusammenarbeit verschiedener Kultur- und Kunstbereiche Geistes- und Naturwissenschaften durchgeführt werden. Die Macht der Kultur und der Kunst kann im Prozess des Aufbaus einer Solidarität der Herzen mit anderen Bürgern der Welt und der Präsentation einer kreativen Zukunft entwickelt werden. Das Festival wird in Südkorea beginnen, aber das internationale Friedenskunstfestival DMZ wird gemeinsam von Nord- und Südkorea veranstaltet, und durch die Teilnahme Nordkoreas können die südliche und nördliche DMZ kulturell verbunden werden.

VI. Aufbau von Kulturarchiv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ist der „Nicht-Frieden" alltäglich und zur Gewohnheit geworden, da die Konfliktsituation seit langem andauert. Mit anderen Worten verspüren die Menschen nicht das Bedürfnis, den derzeitigen "nicht friedlichen" Zustand in einen "friedlichen" Zustand zu ändern.
Park Ju-wha sagt dazu: „Menschen, die in chronischen, langfristigen Konflikten leben, nehmen Frieden auf der Ebene abstrakter, unantastbarer und utopischer Vorstellungen wahr, sodass ihnen der Weg und der Inhalt fehlen, um Frieden speziell zu erreichen. In dem Sinne ist es leicht, das neue friedliche Leben, als abstraktes imaginäres Leben abzutun, dem es an Konkretheit und Realität mangelt. Denn die Generation, die in einer Konfliktsituation aufgewachsen ist, war bislang keinem anderen Leben als dem Leben des Konflikts ausgesetzt. Letztlich ist es nicht einfach, sich einem konkreten und realistischen Leben in Frieden zu nähern, das nicht vom Alltag getrennt ist." Um dies zu überwinden und das Gefühl des Friedens zu verbessern, ist es überaus wichtig, sich an die erlebte Geschichte der beiden Koreas durch den vergangenen innerkoreanischen Austausch zu erinnern, anstatt sich nur die zukünftige Gemeinschaft vorzustellen.
Dafür wird insbesondere die Archivierung der geschaffenen Alltagskultur dringend gefordert. Daher ist es im Prozess der Archivierung der innerkoreanischen Kultur notwendig, über die einfache Archivierung des kulturellen und künstlerischen Austauschs und der nordkoreanischen kulturellen und künstlerischen Werke hinauszugehen und auch den Austausch zwischen Alltagskulturen zu archivieren, der in allen innerkoreanischen Austauschvorgängen stattfindet, einschließlich des wirtschaftlichen

Austauschs.
Wie beim „Ausgrabungsprojekt Manwoldae“ und „Gaesong Industriepark“ können anhand von Beispielen des innerkoreanischen sozialen und kulturellen Austauschs Fälle dafür entdeckt werden, wie der Süden und der Norden eine friedliche Alltagskultur geschaffen haben, und als kulturelle Archive präsentiert werden.
Darauf aufbauend kann der Unterricht zur Friedenssensibilität eine Chance schaffen, „Frieden“ von einem universellen Konzept zu einem speziellen Konzept zu verändern.
Obwohl es mehrmals zu Unterbrechungen kam, schuf der Prozess des innerkoreanischen Austauschs, der mehr als 5 oder 10 Jahre dauerte, eine Basis für die Vereinigung. Dabei prallten Alltagskulturen aufeinander, sorgten für Missverständnisse und Konflikte, und gleichzeitig entstanden neue Alltagskulturen, worüber die kulturellen Archive informieren können. Die Sammlung von neuem Vokabular, das im Gaesong Industriepark generiert wurde, die Archivierung der Alltagsgegenstände des Gaesong Industrieparks und die Aufzeichnung des Lebens vom friedlichen Zusammenleben der beiden Koreas werden als eine Grundlage für die Analyse und Erforschung des frühen Vereinigungsprozesses dienen können. Der Aufbau eines kulturellen Archivs kann den Künstlern dabei helfen, auf dieser Grundlage eigene Werke der Kultur und Kunst zu schaffen und eine konkretere Vorstellung von den gewünschten Gemeinschaften anzubieten.
Neben dem Aufbau eines neuen Archivs der Alltagskultur, die während des innerkoreanischen Austauschs stattfand, ist es auch sehr wichtig, ein Archiv der nordkoreanischen Kultur und Kunst aufzubauen. Wie wir bereits besprochen haben, ist die Kontinuität des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s unverzichtbar. Und damit die innerkoreanischen und internationalen politischen Beziehungen ihre Bedeutung beibehalten können, muss sich ein großes Archiv nordkoreanischer Kultur und Kunst ansammeln. Denn die Grundlage muss da sein, damit auf dieser Basis verschiedene Alternativprogramme in Südkorea aktiviert werden können. Derzeit werden Videomaterial und eine Sammlung von Fotografien aus Nordkorea im Infozentrum des Ministeriums für Vereinigung archiviert, das jedoch weiter ausgebaut werden sollte. Die Archivierung verschiedener Materialien wie hochauflösendes Videomaterial, Kunstwerke und Poster ist erforderlich. Darüber hinaus sollten verschiedene kulturelle und künstlerische Werke archiviert werden, die die Realität Nordkoreas offenbaren.
Die Friedenssensibilität darf sich nicht darauf beschränken, nur den emotionalen Aspekt zu fördern. Nach der sozialpsychologischen „Theorie der kognitiven Konsistenz“ neigen Individuen dazu, ihre Emotionen mit dem in Einklang zu bringen, was sie wahrnehmen. Das Wissen und die Informationen, die von einem Individuum erworben werden,

beeinflussen die emotionalen Präferenzen des Individuums, was wiederum zu einer Bewertung führt, die wiederum die Bildung von Überzeugungen beeinflusst. Gleichzeitig ist es notwendig zu erkennen, dass emotionale Aspekte wie die Friedenssensibilität zu Veränderungen der kognitiven Aspekte in eine entsprechende Richtung führen können, Es weckt auch ein aktives Interesse daran, neues Wissen und damit verbundene Informationen zu akzeptieren. Der Aufbau kultureller Archive wird eine wichtige Rolle bei der Schaffung eines positiven Kreislaufs dieser emotionalen und kognitiven Aspekte spielen.

VII. Öffnung des nordkoreanischen Kultur- und Kunstrundfunks

Ein sehr wichtiges Medium im Zusammenhang mit Nordkoreas täglichen Kultur- und Kulturkunstarchiven ist der nordkoreanische Rundfunk. Es ist notwendig, das gegenseitige Verständnis und den Konsens durch die schrittweise Öffnung relevanter Sendungen, Medien, Veröffentlichungen usw. zu erweitern und gleichzeitig die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Homogenität zu fördern

Es ist besser, erst den Rundfunk zu öffnen, der ein beliebtes Medium ist, das Inhalte in eine Richtung liefert, dann das Internetmedium, das zwischen Produzenten und Verbrauchern in beide Richtungen kommuniziert. Danach könnte die Öffnung eines Publikationsbereichs folgen, das mehr Spezialwissen liefern kann. Obwohl gegenseitiges Verständnis und Konsens effektiv funktionieren werden, wenn sich der Norden und der Süden gleichzeitig füreinander öffnen, wird es auch als wichtig angesehen, dass der Süden versucht, sich zuerst zu öffnen. Wenn durch Nordkoreas Öffnung des südkoreanischen Rundfunks gegenseitige Offenheit erreicht wird, kann sich das Internet zu einem Medium ausdehnen, das eine wechselseitige Kommunikation zwischen Produzenten und Verbrauchern ermöglicht.

Natürlich gibt es Bedenken, dass die Öffnung der nordkoreanischen Sendungen den Hass auf Nordkorea in der südkoreanischen Gesellschaft schüren könnte, aber es sollte auch daran erinnert werden, dass es Werke unter den Serien und der Musik Südkoreas gibt, die von den Nordkoreanern gern konsumiert werden, was bestätigt, dass der Norden und der Süden immer noch gemeinsame Sensibilitäten teilen, obwohl sie seit 70 Jahren unter verschiedenen Ideologien leben. Wenn Südkorea erst repräsentative Sendungen wie das „Choonang-TV" zeigt, werden verschiedene Bewertungen nordkoreanischer Sendungen aus unseren Medien und der Öffentlichkeit frei durchgeführt, und diese Reaktionen werden sich natürlich implizit auf die Organisation und Leitung nordkoreanischer Sendungen auswirken. Dieser Prozess wird dazu

beitragen, die Realität der unterschiedlichen Kulturen im Norden und Süden zu erfassen und gleichzeitig die Homogenität wiederherzustellen.

VIII. Aufbau einer innerkoreanischen Kulturaustauschplattform im Internet

Eines der Merkmale des kulturellen Austauschs ist die Möglichkeit, ohne menschliche Kontakte zu kommunizieren. Mit neuen Medien, die zukünftigen Generationen vertraut sind, wie der Plattform unter Verwendung eines Metaversums, ist der innerkoreanische Kulturaustausch in einer digitalen Welt möglich, der Spaß mit Zweck verbindet. Die Teilung zwischen Süd- und Nordkorea ist vor allem als eine Teilung durch physische und geopolitische Grenzen zu verstehen. Die erste Grenze verhindert eine Vereinigung, weil die Trennlinie den Norden und den Süden blockiert und den Zugang erschwert. Da das Internet eine Welt ist, in der physische Grenzen verschwunden sind, wird in dem Moment, in dem jemand die Internetwelt betritt, die physische Trennung aufgehoben. Durch die Jahre mit Covid 19 haben wir uns sehr an die wechselseitige Kommunikation im Internet in unserem Leben gewöhnt.
Wir können uns nun über „Zoom" treffen, und wir können sogar in unserem eigenen Zuhause Musik machen und dabei gemeinsam mit den Musikern in Deutschland eine großartige Orchesteraufführung auf die Beine stellen. Wir können uns im Internet jederzeit treffen, ohne uns gegenseitig ins Gesicht sehen zu müssen. Zudem kann ein Avatar erscheinen und meine Musik aufführen. Beim Kunstaustausch ist die Kommunikation über das geschaffene Werk wichtiger als der Schöpfer selbst. Bei der „Ästhetik der Akzeptanz" handelt es sich um die Theorie, dass die Akzeptanz einer Arbeit durch diejenigen, die sie schätzen, wichtiger ist als die Absicht der Arbeit des Schöpfers. Diese Theorie ist bereits zu einem Klassiker in der Wissenschaft geworden. Die Merkmale eines solchen Kunstaustauschs beweisen, dass der innerkoreanische Austausch im Internetumfeld sehr effektiv sein kann.
Um eine solche Plattform aufbauen zu können, müssen natürlich zunächst die Kulturarchive als Grundlage gut aufgebaut sein.

Soweit habe ich versucht, den Nord-Süd-Kulturaustausch zu skizzieren. Nun muss ich zur wesentlichen Frage zurückkehren: Warum sollte ein innerkoreanischer Kulturaustausch stattfinden? Damit die Menschen des Nordens und des Südens eine Einheit der Herzen erreichen. Für die Menschen in Nord- und Südkorea, die seit 70 Jahren mit unterschiedlichen und feindlichen Ideologien leben, wird die Aufgabe, eine „Einheit im Herzen" zu erreichen, eine schwierige sein. Aber wenn wir dieses Problem

nicht lösen, wird eine wahre Wiedervereinigung nicht zu uns kommen. Der wichtigste Punkt ist daher, dass der Nord-Süd-Kulturaustausch an Kontinuität gewinnt. Wir sollten uns ihrer Bedeutung bewusst sein, und ich freue mich darauf, dass in der Zukunft verschiedene nachhaltige Maßnahmen weiterdiskutiert werden.

NOTE

2022 제11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11.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Bundeskanzleramt